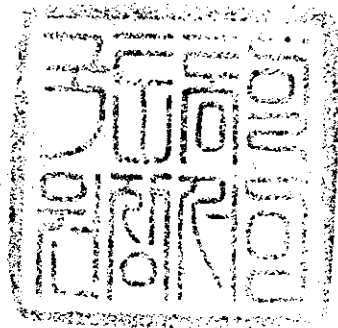


통일교육교수지침서

1971. 11



머 리 말

당위에서는 당원의 발족과 동시에 통일에 대비한 국민적 자세의 정립을 위한 "통일교육" "정책연구에 착수하였다. 1차년도인 1969년에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공교육의 문제점을 도출, 통일교육정책연구의 방향을 탐색하였고 2차년도인 1970년에는 전년도의 과업에 이어 통일교육의 일반목표와 통일교육내용의 범위를 확정하였다. 3차년도인 1971년에는 통일교육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한 통일교육내용을 선정하였고 이어 곧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조정된 다음 일반 통일교육교수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본서는 일반통일교육 교수지침서에 이어 두번째로 발간된 대학 및 전문가 훈련용 통일교육 교수지침서로 일반통일교육 교수지침서를 보다 발전시킨 것이며 전국민에 대한 통일교육의 지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재조정 되었다.

본서의 내용은 전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부에 한국의 전통적 가치, 제 2부에 민주주의, 제 3부에 공산주의, 제 4부에 민주·공산주의 대결, 제 5부에 통일을 위한 우리의 시명의 순으로 기술되어 있다.

요컨대 본서의 특징은 현행 반공교육의 문제점이라 볼 수 있는 실제위주의 교육내용을 지적 정의적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화, 현행 반공교육을 보다 강화시키면서 통일의식을 고취시키자는데 두고 있다.

비록 본서가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관계기관에서 널리 활용되어지기를 바라고 활용과정에서의 관계기관의 고견에 따라 수정 보완키 위해 한정판으로 발간하는바, 특단의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에 시종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린다.

목 차

거리말

제 1 부	한국의 전통적 가치	5
제 1 장	민족과 국가	7
I	민족의 형성과 국가의 성립	9
II	민족운동(대의항쟁)	19
III	국가의식	27
제 2 장	민족문화와 전통사회	37
I	민족문화와 민족문화의 종류	38
II	외래문화의 수용	47
III	전통사회의 가치관	53
제 2 부	민주주의	63
제 1 장	민주주의의 기본이념	65
I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	67
II	인간의 기본권리와 자유	77
III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86
제 2 장	민주적 제도와 과정	95
I	민주주의의 정치적 신념과 정치제도	97
II	개인의 정치 참여와 정치과정	106
III	자유경제 체제	116
제 3 장	민주적 생활양식	127
I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128
II	민족적 인성과 태도	139
III	갈등의 건설적 해결	147

제 3 부	공산주의	157
제 1 장	공산주의의 정의와 기본개념	159
I	공산주의의 정의	161
II	공산주의의 기본개념	169
III	전체주의의 이해올르기	180
IV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배경	188
제 2 장	공산주의의 변천과 모순	196
I	공산주의 분파작용	198
II	소비에트 공산주의	205
III	모택동 사상 (전략적 측면)	218
제 3 장	공산국가의 현실	227
I	정치 현실	229
II	사회 현실	238
III	북괴의 현실	247
제 4 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255
제 1 장	민주·공산주의 대결의 이론 및 양상	257
I	민주·공산주의 대결의 이론적 근거	259
II	대결의 양상	265
제 2 장	북괴의 도전	281
I	6.25 이전의 도전	282
II	6.25 동란	289
III	6.25 이후의 도전	296
제 3 장	민주·공산주의 대결의 전망	303
I	민주진영대 공산진영	305
II	대한민국과 북괴	315

제 5 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사명	321
제 1 장 한국의 분단과 통일의 요청	323
I 한국의 분단	325
II 통일의 요청	334
제 2 장 우리의 통일정책과 사명	343
I 남한과 북괴의 통일정책	345
II 통일을 위한 기본원칙과 여건 및 우리의 사명	351

제 1 부

한국의 전통적 가치

제 1 장 민족과 국가

한국민족은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안으로 밖으로 여러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단일민족으로 존속하여 왔다.

이것은 민족적인 독립심과 문화적인 독창성이 강하게 지속되어 왔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 어떠한 역사적 발전단계를 거쳐 민족적 신념위에 통일국가를 유지해 왔는가를 고찰해 보았다.

우선 민족의 형성과 국가의 성립이라는 주제아래 우리민족은 단일혈통으로 구성된 문화공동체로서 고대국가에서 근대국가로 발전하면서 싹터가는 민족적 요소를 추출해 보았다.

즉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는 민족의 형성을 세단계로 나누어 한국민족은 단일한 민족으로서 존립할 충분한 조건을 만족시켜 왔음을 강조하였다.

둘째로는 한국의 역사는 지리적인 조건으로 남달리 고난에찬 역사였지만 외세의 침략이 있을때마다 확고한 민족의식아래 단일민족으로 수천년동안 나라를 지켜온 원동력은 언제나 민중속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전통을 고찰하였다.

외세침략에 항거하는 민중의 자세나 그것을 추구하는 방향은 시대에 따라서 양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외부침략에 대한 항쟁은 항상 내부적 노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나간 큰 추진력이 되었던 것이다.

끝으로 국가의식이 시대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계속 민족의식과 결부되어 왔음을 살펴 보았다.

단군신화를 인식함으로써 민족의 독립정신 및 통일의식이 강화되고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였을때 전민족의 자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독립에 대한 민족의 굳은 신념과 전통을 찾을 수 있다.

I 민족의 형성과 국가의 성립

1 내용개요

(1) 민족의 정의 :

① 혈연과 문화의 상호관계와 작용에 의해서 스스로 변화하고 동화하는 인간의 역사적, 사회적 집단이다.

② 인간은 역사 과정에 있어서 원시단계에서 부터 군중생활을 하였다.

그 군은 혈연관계를 가져 일정한 종족적 단위를 이루었다.

③ 사회사적으로는 씨족—부족—민족으로 발전되었다.

(2) 한국민족의 계통 :

① 언어학상으로는 알타이어에 속하고 인종학상으로는 몽고로이드계 퉁구스족의 일파이다.

② 한국 최초의 정치적 사회는 북방문화권에 속하는 대동강 유역에서 나타났다.

③ 부족장급에 속하는 많은 세력가들이 산재해 있어서 이들은 각각 조그마한 규모에서나마 원시적인 국가형태를 갖게 되었다.

(3) 국가발달 과정 :

① 민족형성의 바탕—씨족사회부터 삼국시대까지

- 씨족공동체에서 친족공동체로의 분열, 가부장족의 성장 등의 사회변화에 상응하여 단군신화형에서 삼국시대 시조신화

형으로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

- 삼국시대는 부족국가시대부터의 전통을 가지는 지방지배의 세력기반을 가졌다.
- 삼국시대는 귀족사회로 정치적으로는 집권적 통치체제, 사회적으로는 가부장중심의 가족제도였다.
- 삼국은 동일한 종족으로 언어, 의복, 풍속, 행정의 유사하였다.

② 민족형성의 제 1기—신라통일시대

- 민족통일의 추진은 언제나 역사상의 임무였다.
- 신라의 통일은 민족모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종적, 문화적으로 하나가 된 최초의 계기이었다.
- 신라에서 골품제도가 성립되던 때와 비슷한 고대 신분제가 고구려나 백제에 성립된 이후에는 선민적 신분의 의미 외에 다른 요소가 가미되었다.

즉 층으로 표시되는 전제왕권에 대한 복속과 협력이 있는 한 지배계층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첨가된 것이다.

- 화랑은 종교적, 군사적, 교육적 성격을 띤 집단으로 신라의 통일 및 대외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 남당(南堂)에서 발전된 화백제도는 어느정도 민주적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왕실과 지배귀족계급의 영토욕, 권력욕, 지위욕등의 투쟁적인 이익 추구는 민족관념이 배제된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족통일의 추진운동이 되었다.

③ 민족형성의 제 2 기—고려시대

- 외세의 간섭없이 사회의 전환과 정권의 교체가 가능하였던 시기였다.
- 사회적 진통과정이 순조롭게 의곡되지 않고 전개되어 스스로의 진통속에서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자기능력을 자각하였고 그 역사적인 과제를 수행하였다는 민족사적 경험을 가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 고려시대는 신라시대와는 달리 왕실적인 이데올로기와 전국국적인 이데올로기를 구분 할 수 있도록 문화수준이 발달한 데서 형성되었다.
- 고려의 신분체제는 반체제(班體制)로서 왕조로서의 성격을 띠우고 정치적인 기능을 표준으로 한다.
- 태조의 훈요십조(訓要十條)는 자주적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
- 최승노(崔承老)의 시무(時務) 28 조는 고려시대 지식계급의 정치관을 대표하는 것이다.
- 과거제의 실시는 관의 등용문을 넓히는 것으로 문치주의(文治主義)로의 전환의 표시다.
- 여말의 충선왕과 공민왕의 개혁정책은 주권회복을 위한 노력이었다.
- 무신난(武臣亂) 이후는 신분제도가 붕괴되어 가족신분의 권위보다는 실력과 능력이 문제되었다.

④ 근대적인 민족의 완성—이조

- 여말의 쌍역수복(雙域收復)과 이조초 세종이 6진과 4군을 개척한 시기위의 일이다.
- 판도, 종족적 혼합에 있어서 최종적인 선을 그어 지연으로, 혈연으로 또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오늘의 한국민족의 전형을 이루었다.
-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정부(議政府)—비변사(備邊司)는 이조가 전제군주국가이면서 전제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군주의 독재권을 어느정도 고위관료층에 의하여 제약하고 있음을 내포하는 제도이다.
- 태종때 설치된 신문고는 민의창달의 의도에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적 요소를 내포한다.
- 성종때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최초의 법전으로서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 세종시의 집현전(集賢殿)은 이조 초의 정치제도. 문화등의 상부구조를 이끌어 온 정수분자를 대거 배출하였다.
- 주자학이 정치철학과 윤리규범의 기본원리로 채택됨은 이조사회를 양반관료국가로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 교수방법

제 1 장 민족과 국가 에서 목표로 하는것은

1. 민족이란 무엇인가?
2. 민족과 국가는 어떻게 다른가?

3. 우리는 왜 민족과 국가관이 동일시 되어왔는가?

4. 그 발달과정은 어떠하였는가?

5. 따라서 "우리민족은 통일의 달성을 지상과제로 삼는다"라고 하는 통일교육의 기본적 필요성을 역사를 통하여 살피는데 있다.

민족통일이 국토통일과 직결되는 이유는 역사적 배경을 제외하고 이해 할 수는 없다.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의 동일시는 우리민족이 가진 정신적 무기중에 가장 큰 것이며 민족의 혈연적 문화적인 상호작용과 그 전개과정은 이것을 증명해 준다.

자고로 민족통일은 신라의 삼국통일로 이미 완성된것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그후 줄기찬 노력의 과정이 없이는 오늘의 통일문화와 정치적 통일의 유지가 불가능 하였을 것이다.

제2차대전 이후 외국세력에 의하여 타율적인 분단을 갖어온 것이 우리 역사상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역사적 증거에 의하여 설파해야 할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李基白, 民族과 國家, 一潮閣, 1971.
- ② 韓國學 研究叢書, 成進文化社, 1970.
- ③ 孫寶基, 지체와 王權, 韓國思想의 基底, 東方學志 10집, 東方學 研究所, 1969.
- ④ 李光洙, 民族改造論, 李光洙全集 17. 1962.
- ⑤ 朴鍾鴻, 韓國思想研究의 構想, 韓國思想 1. 2 合本, 1959.

- ⑥ 李箕永，韓國的忠愍의 一傳統，韓國思想의 基底，東方學志 10 集 東方研究所，1969。
- ⑦ 張道斌，韓國의 혼，國史院，1957。
- ⑧ 咸秉春，韓國政治思想，韓國思想의 基底，東方學志 10 集，1969。
- ⑨ 함석헌，우리歷史와 民族의 生活信念，思想界，1966.5 月号
- ⑩ 金成植，韓國的 民族主義，思想界，1958,9。
- ⑪ 孫晉泰，韓國民族說話의 研究，民族說話의 文化史의 研究，韓國文化叢書 제 1 集。乙酉文化社，1954。
- ⑫ 崔南善，檀君古記箋釈，思想界，1954.2 月。
- ⑬ 李弘植，檀君 신화와 民族理念，國史上의 諸問題 1，1959。
- ⑭ 申相楚，檀君以來의 自由의 破綻，收拾，再建，思想界，1961,10。
- ⑮ 姜萬吉，李朝時代의 檀君崇拜，李弘植博士 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1970。
- ⑯ 金載元，檀君神話의 新研究，1947。
- ⑰ 李佑成，新羅時代의 玉土思想과 公田，趙明基紀念，佛教史學論叢，1965。
- ⑱ 趙芝薰，東方開國說話攷
- ⑲ 李丙森，高句麗國民의 氣象과 努力，開闢 第 6 卷 第 7 号，1925。
- ⑳ 金哲垓，羅末麗初의 社會轉換과 中世知性，創作과 批評，1968,겨울。
- ㉑ 金東華，佛教의 護國思想，李丙森紀念論叢，1956。
- ㉒ 李相佰，韓國文化史研究論集，韓國文化叢書，제 2 集，1948。
- ㉓ 李佑成，高麗詩人에 있어서의 文明意識의 形成，梨大史學研究 3，1969。
- ㉔ 金龍德，朱子學的 民族主義論，韓國史의 反省，新丘文化社 1968。
- ㉕ 千寬宇，「吳學」概念成立에 關한 史學史的 考察，李弘植博士回甲

紀念 韓國史學論叢 1970.

- ㉞ 千寬宇, 韓國實學思想史, 韓國文化史大系 V, 1970.
- ㉟ 千寬宇, 礪溪柳馨遠研究, 歷史學報 2, 3, 1952.
- ㊱ 韓佑勗, 李朝實學의 概念에 대하여, 震檀學報 19, 1958.
- ㊲ 千寬宇, 洪大容의 實學思想, 文理大學報 6 - 2, 1958.
- ㊳ 全海宗, 積實學, 震檀學報 20, 1959.
- ㊴ 金龍德, 朴齊家研究, - 朴齊家의 思想, 史學研究 10, 1961.
- ㊵ 李佑成, 李朝後期 近機學派에 있어서의 正統論의 展開,
歷史學報 31 집
- ㊶ 千寬宇, 韓國實學 思想의 構造와 發展, 思想界, 1966. 3.
- ㊷ 黃元九, 韓致 의 史學思想, 人文科學 제 7 집 延世大學校,
1962.
- ㊸ 金敬琢, 栗谷의 研究, 韓國研究叢書 7 집, 韓國研究圖書館, 1959.
- ㊹ 洪以燮, 丁若膺의 政治經濟思想研究, 韓國研究叢書(3),
韓國研究圖書館, 1959.
- ㊺ 盧啓鉉, 鎖國主義論, 思想界, 1966. 5.
- ㊻ 洪以燮, 旧韓末 外交史雜記, 思想界, 1961. 2.
- ㊼ 韓佑勗, 東學思想의 本質, 韓國思想의 基底, 東方學志 10 집,
1969.
- ㊽ 李光麟, 開化思想研究, 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1969.
- ㊾ 金容燮, 東學亂 研究論, 歷史教育 3, 1958.
- ㊿ 千寬宇, 甲午更張과 近代化, 思想界, 1954. 12 月

- ④③ 金龍德，東学思想研究，中央大論文集 9，1964.
- ④④ 주요한，韓國近代化百年記，經協 6. 7. 8，1969.
- ④⑤ 崔 垞，一進會의 言論活動分析，中央大論文集 7，1962.
- ④⑥ 李瑄根，韓國近代化의 歷史的過程，韓國社会科学論集 9，1969.
- ④⑦ 李鍾麟，韓末의 近代化運動，韓國社会科学論集 9，1969.
- ④⑧ 李丙森，東学教門과 그 發生의 諸導因，국사상의 계문제 6，1960.
- ④⑨ 韓佑勳，開港當時의 危機意識과 開化思想，韓國史研究 Ⅱ
韓國史研究会，1968.
- ⑤⑩ 李光麟，「易言」과 韓國의 開化思想，李弘植博士 韓國史學論叢
1970.
- ⑤⑪ 閔丙山，韓末의 思想的 狀況，韓國現代史 3，
新丘文化社 1969.
- ⑤⑫ 李瑄根，新文化 開化전후의 民族精神，思想界，1969. 3.
- ⑤⑬ 李弘植，開港，韓國現代史 1，1969.
- ⑤⑭ 李瑄根，甲午更張，韓國現代史 1，1969.
- ⑤⑮ 崔永禧，獨立協會，韓國現代史 2，1969.
- ⑤⑯ 朴性根，獨立協會의 思想的研究，李弘植博士 韓國史學論叢，1970.
- ⑤⑰ 趙容萬，六堂 崔南善，1964.
- ⑤⑱ 鄭寅普，丹齊斗 史學，蒼園 國學散藁，1955.
- ⑤⑲ 金龍德，日帝의 經濟的 收奪과 民擾(1910-1918) 上. 下.
- ⑥⑰ 金潤煥，勞動運動，韓國現代史 4，新丘文化社，1969.

- ⑥1 金基錫，獨立宣言書解義，自由，1969.1
- ⑥2 崔永植，日帝下 1920 年代의 言論運動，鄉土서울 32, 1969.
- ⑥3 日帝侵略下 韓國三十六年史，國史編纂委員會，1966.
- ⑥4 韓國獨立運動史 (1 - 3)，국사편찬위원회，1965.
- ⑥5 韓國近代化의 諸問題，後進社會問題 研究所，1965.
- ⑥6 洪以變，半世紀의 韓國精神史，思想界，1965.2.
- ⑥7 崔 竣，民衆言論의 旗手，思想界，1966.11
- ⑥8 柳光烈，民族受難의 証人 (青年運動)
思想界，1966.11.
- ⑥9 金鍾武，文化救國의 先黨 (新文學運動)
思想界，1966.11
- ⑦0 池明觀，近代精神의 象徵 (民族改造運動)，思想界，1966.11.
- ⑦1 崔東熙，生存權을 위한 革命，(民權運動)，思想界，1966.11.
- ⑦2 洪以變，韓國史의 方法，探求堂，1968.
- ⑦3 崔南善，歷史를 통하여서 보는朝鮮人，朝鮮歷史，1931.
- ⑦4 和田請，朝鮮民族의 發展，日本歷史 30. 1950.
- ⑦5 上田常吉，朝鮮人의 体型上의 特徵，朝鮮學報 1 名，1951.5 月.
- ⑦6 吳主惠，民族社會學，明玄書房，1965.
- ⑦7 上田常吉，朝鮮人의 体型上의 特徵，朝鮮學報 1 집，1951.5 月.
- ⑦8 井上秀雄，新羅政治體制의 變遷過程，古代史講座 4. 1962.
- ⑦9 三品彰英，新羅花郎의 研究，1943.
- ⑧0 池内宕，新羅의 花郎에 就いて，東洋學報 24-1，1936.

- ⑧1 今西竜，新羅骨品考，新羅史研究，1933。
- ⑧2 百鳥庫吉，百濟の起源仁就について，史学1，1947。
- ⑧3 未松保和，新羅建国考，新羅史の諸問題，1954。
- ⑧4 今西竜，高麗太祖訓要十卷に就いて，東洋学報 8-3，1918。
- ⑧5 麻生武亀，李朝の建国と政權の推移，青丘学叢5，1921。

Ⅱ 민족운동(대외항쟁)

1 내용개요

(1) 민족운동의 의의

- ① 역사에는 평화와 전란의 양면이 교차된다.
- ② 끊임없는 외민족과의 대립 또는 투쟁관계에서 민족의식은 존재하고 성장한다.
- ③ 타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물리치고 민족자체의 힘으로써 자립하려는 정치, 권력 면에서의 투쟁사와 민족, 국가의 안전을 위한 항쟁사가 있다.

(2) 지리적 요인은 더 많은 민족적 시련을 겪게 하였다.

- ①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 동북에 위치하여 북쪽은 대륙에 접하고 남쪽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서 항상 수동적 태세를 취하게 하였다.
- ② 지세는 서남쪽으로 낮은 평야가 전개되어 큰 하천이 모두 사면을 따라 흐르므로 일찍부터 농경생활을 영위하였다.
인구가 집중하고 생활기술의 향상과 더불어 평화 애호의 전통이 나타났다.

(3) 표면적으로 한민족 전체의 대외항쟁사는 통일신라부터 가능한 것 같지만 잠재적으로 그 이전부터 발생하고 있었다.

- ① 단일민족으로서 수천년동안 나라를 지켜온 한민족은 외세의 침략이 있을때마다 그에 대항하여 싸우고 나라를 지켜왔다.

- ② 예맥(濊貊), 고구려의 한(漢)과 낙랑(樂浪)에 대한 항쟁은 부족국가시대, 위진(魏晉)에 대한 고구려, 백제의 항쟁은 부족 동맹국 시대로, 한국민족 형성의 발단이 되었다.
- ③ 삼국시대까지도 엄밀한 의미의 민족이라는 공동의식이 없이 고구려, 신라, 백제가 별개의 집단 의식으로 뭉쳐 있었다.

(4) 대외항쟁의 주체세력

- ① 삼국시대의 특권 귀족층은 국가 권력에 의존하는 단순한 귀족이 아니라 일단 유사시에는 민중, 병사의 앞장이 되고 적침의 방패가 되는 용감한 전사들이었으며 그 대표적인 존재가 화랑이었다.
- ② 우리나라에는 옛부터 국난이 생기면 나라의 명령이나 소집을 기다리지 않고 민중속에서 자발적으로 무장을 갖추어 나타나는 전통이 있다.
- ③ 고려시대에는 귀족특권층 사이에서 보다 피지배층이 저항의 주체세력이었다.
- ④ 고려의 항몽사(抗蒙史)는 곧 삼별초(三別抄)의 대외사로서 외교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 ⑤ 이조시대의 대외항쟁의 주체세력은 의병(義兵)이었다.
- ⑥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의병은 승려, 농민을 중심으로 천민계급까지 포함되는 신분층으로 그들에게 민족적 적개심을 격발시켜 대외구국의 선두에서 분기하였다.
- ⑦ 의병의 활동은 민중의 에베르기를 십분 발휘하여 그 당시에는 무능한 정부당국자를 채찍질하여 가열한 항왜전쟁을 완수케 했으며 그후로는 내부의 부패한 지배계급에 저항하고

외부의 강폭한 침략세력에 항거하는 민중적 투쟁의 원동력이 되었다.

⑧ 의병은 대중의 정치의식의 성장을 의미한다.

⑨ 한말의 의병은 대규모적인 민중의 항쟁이었다.

국권회복의 정신으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 거족적으로 항쟁하였다.

⑩ 한말의 의병은 유교 이념이 지도적인 의식으로 작용하였다.

대중적 기반은 지방의 군대, 농민으로써 민족적인 자극이 컸고 이로써 민족적 각성을 행동으로 표시한 것이다.

⑪ 한말의 의병은 일제 침략에 있어 민족적 의식을 가장 강조하는 첫단계로서 한국민족의 한 집단 인원이 자발적으로 행동한데 큰 의의가 있다.

⑫ 국채(國債)보상 운동은 일제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저항 운동이었다.

⑬ 일제시대에는 의병세력의 일부가 만주로 이동하여 일시적인 패전으로 분산되었으나 독립운동으로 계승되어 정신적으로는 민중이 독립해야 한다는 의식적으로 계속 민족운동으로 잠재하였다.

⑭ 3.1 운동은 일제의 침략지배에 대한 최초로 최후적인 민족전원의 항쟁이다.

⑮ 6.10 만세 사건과 광주학생사건은 3.1 운동에 나타난 거족적인 운동이 시대적인 조건에 따라 분화되는 일면으로서 3.1 운동의 정신과 행동을 그대로 수계하였다.

(5) 결론적으로 민중들이 외부압력에 대해서 굳세게 저항하고 외압으로 부터의 해방을 열렬히 회구한 것은 그것이 자기들 자신의 계급적 내부적 해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외압에 항거하는 민중의 자세나 그것을 추구하는 방향은 시대에 따라 제가끔 달랐으나 외압과 이에 대한 항쟁은 항상 내부적 해방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끌고 나간 큰 추진력이 되었다.

(6) 민족운동과 통일수호의 역할

① 고대

- 을지문덕장군의 수군(隋軍)에 대한 격파는 고구려로 하여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륙진출을 가능케 한 것이다.
- 신라의 통일이 나당(羅唐)연합군에 의한 결과로 왜곡되기 쉽지만 김춘추는 통일의 무력적 방편으로 당(唐)과 결합한 것이지 통일이후에는 당세력을 축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 원효는 불교를 민중신앙으로 발전시켜 어느면에서는 민족운동의 주체적 정신을 확립하는데 공헌하였다.

② 고려

- 강감찬(姜邯贊), 하홍진(河洪振), 윤관(尹瓘)의 투쟁은 어느정도 영토확장을 가능케 하였으며 그들은 단순히 전쟁영웅만이 아니다.
- 묘청(妙淸)의 금정벌론(金征伐論)등의 배타의식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국가적 주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 충신왕(忠宣王), 공민왕(恭愍王)은 원(元)의 예속하에서도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기울인 왕이었다.

③ 조 선

- 세종시 김종서(金宗瑞)의 북진정책(北進政策)은 옛 영토를 회복하고 대륙에의 진출을 꾀한 것이다.
- 임진왜란시 이순신이나 의병의 활약은 민족적인 대왜투쟁으로 더욱 국가의식을 공고히 해주는 기틀이 되었다.
- 이러한 국가의식의 성장과정이 바탕이 되어 한말 또는 일제하의 항쟁과 해방후의 민족정신으로 연결된다.

2 교수방법

구체적으로 나타난 역사상의 민족운동과 통일수호에의 노력을 고찰하려는 것이 주안점이다.

우리나라의 지정적 요인을 바탕으로 시대에 따라 나타나는 제현상을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그 하나는 민족의 대외항쟁의 주체가 언제나 국민대중이었다는 역사적 전통과 다른 하나는 한국의 대외관계사가 피해로 일관된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병농일치, 민족적 국가관, 가족윤리의 국가적 확대등의 요인들이 국가를 자기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오래 지속되었고 이조 시대에 국난이 있을때 마다 나타난 범국민운동이 곧 의병이라는 것을 생각 할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가 자칫하면 단순한 전쟁사로 변하기 쉬우므로 전쟁에서 항상 피해만을 입어왔던것 같이 그릇 이해하던 구습을 버리고 통일 수호의 역군으로서의 조상들이 그 시대에 적응하여 어떤 방법으로 국가에 봉사하였는가를 살피고 그것으로 귀감을 삼으려는 태도를 길러주는 일도 중요하다.

3 참고문헌

- ① 趙芝薰, 韓國民族運動史, 韓國文化史大系 1.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64.
- ② 洪以燮, 歷史에 나타난 民衆勢力, 思想界, 1966. 4月号,
- ③ 曹佐鎬, 韓國民族의 自由鬪爭史, 思想界, 1966. 4月号,
- ④ 국방부 정훈국, 대의항쟁사, 1954.
- ⑤ 李瑄根, 民族의 抵抗, 中央, 7/8/9/10/11月, 1969.
- ⑥ 高一雄, 受難史를 통해 본 배달民族의 大理想, 常綠 (서울農大) 11, 1962.
- ⑦ 李基白, 三國의 外敵對抗, 民族과 歷史, 一潮閣, 1971.
- ⑧ 李基白, 北方民族의 侵入에 對한 抗爭, 民族과 歷史, 一潮閣, 1971,
- ⑨ 李基白, 日帝下의 民族의 試鍊과 反抗, 民族과 歷史, 一潮閣, 1971.
- ⑩ 姜晉哲, 高麗人의 外圧克服, 思想界, 1969. 3.
- ⑪ 金庠基, 女真關係의 始末과 尹觀의 北征. 국사상의 제문제 4. 1959.
- ⑫ 金庠基, 三別抄의 그외亂에 對하여, 東方文化交流史論報, 1948.
- ⑬ 申輿鎬, 麗末鮮初의 倭寇와 그 對策, 국사상의 제문제, 1959.
- ⑭ 韓佑勳, 壬辰亂 原因에 關한 檢討, 歷史學報 1, 1952.

- ⑮ 崔永禧，龜船考，史叢 3，1958.
- ⑯ 崔永禧，壬辰義兵의 性格，史学研究，8，1960.
- ⑰ 震檀学会，李忠武公，1950.
- ⑱ 金錫禧，壬辰倭亂의 義兵運動에 關한 一考，郷土서울 15，1962.
- ⑲ 金岸基，東洋史上으로본 忠武公의 偉勲，李忠武公 350 週紀念論叢 1950.
- ⑳ 李載浩，壬亂義兵의 一察，歷史學報，35,36 合輯，歷史学会，1967 年，12 月。
- ㉑ 崔永禧，任辰倭亂中 對明事大에 對하여 史学研究，18，1964.
- ㉒ 李崇寧，壬辰倭亂과 民間人被害에 對하여 歷史學報，17,18 合輯，1962.
- ㉓ 李丙燾，光海君의 對後金政策，국사상의 提문제 1，1959.
- ㉔ 李鉉淙，朝鮮人의 悲劇的抗拒，思想界，1969,3.
- ㉕ 金容燮，哲宗朝民亂發生에 對한 試考，歷史教育 1，1956.
- ㉖ 韓佑勛，東學亂，韓國現代史，1969.
- ㉗ 申爽鎬，韓末義兵의 概況，史叢 1，1955.
- ㉘ 朴成壽，義兵，韓國現代史 3，1969.
- ㉙ 李炫熙，韓末義兵抗日運動管考，高麗大 文理大學報 4，1959.
- ㉚ 朴成壽，1907 ~ 10 年間義兵戰爭에 對하여，韓國史研究 1，韓國史 研究会，1968.
- ㉛ 崔永禧，乙巳條約締結을 前後한 韓國民의 抗日運動，史叢，12,13 合，1969.
- ㉜ 玄相允，三·一運動勃發의 概略，思想界，1963. 3 月

- ③③ 金大商，鄭世鉉，韓國學生民族運動史，思想界，1969.16의 7.8.9.
- ③④ 申載洪，愛國義士，韓國現代史 5. 新丘文化社. 1969.
- ③⑤ 崔南善，朝鮮獨立運動史，1946.
- ③⑥ 朴殷植，朝鮮獨立運動之血史，1920.
- ③⑦ 金成植，學生運動，韓國現代史. 4. 1969.
- ③⑧ 崔永禧，3.1運動，韓國現代史 4. 1969.
- ③⑨ 李炳憲，3.1運動 필사. 1959. 愛國同志援護會，韓國獨立運動史 1956.
- ④⑩ 메켄지著，李光麟譯，韓國의 獨立運動，一潮閣，1970.
- ④⑪ 트루만. 테리 S，韓國分斷，韓國獨立，韓國戰爭，新東亞，1969.7.
- ④⑫ 劉彰順，赤字와 黒字와의 距離，--- 六.二五事變과 韓國經濟，思想界
1959.6
- ④⑬ 安秉直，三.一運動에 參加한 社會階層과 그 思想，歷史學報 41. 1969.
- ④⑭ 金基錫，三.一運動의 現代史的 意義，自由會論，1969.3.
- ④⑮ 李用熙，三.八線 劃定新攷，亞細亞學報 1. 1965.
- ④⑯ 金基錫，六.二五事變의 歷史的 性格，教育評論，1969.3月号
- ④⑰ 洪以燮，韓國動亂의 民族史的 檢討，韓國史의 反省，新丘文化社，1968.
- ④⑱ 盧明植，八.一五解放의 世界史的 意義，韓國史의 反省，新丘文化社 1968.
- ④⑲ 末松保和，朝鮮古代國家의 軍事組織，青丘史草 1，1964.
- ④⑳ 井上季雄，新羅軍制考，朝鮮學報 11.12. 1957 19
- ㉑ 池内岩，新羅人の 武士的 精神に就いて，史學雜誌，40-8，1929.
- ㉒ 池内岩，高麗恭愍王朝의 東寧府征代についての考，東洋學報 8-2, 1918.
- ㉓ 池内岩，高麗恭愍왕의 元에對する反抗의 運動，東洋學報 7-1, 1917.
- ㉔ 旗田巍，朝鮮史におけと 外圧と抵抗，朝鮮史의 諸問題，1953

Ⅲ 국가의식

1 내용개요

(1)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의 동일시과정

① 민족의식의 봉아(萌芽)

- 현대시민사회내지 국민국가 형성이전에 있어서도 민족은 그 가능상태로서 존재하였으며 민족의식도 잠재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 민족의식은 사회적 인간관계에서가 아니라 자연적 조건과 생활문화등의 기반 위에서 배양되어 갈 수 있다.
- 삼국시대까지도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동의식은 없었다.
- 삼국은 인종적 문화적으로는 동일계통이었으나 계가끔 민족을 이루려는 별개의 집단 의식으로 뭉쳐져 있었다.
- 삼국의 역사적 경과가 우리민족의 단일적 형성의 원류가 되어 신라가 지역적, 혈연적, 문화적으로 계승하여 삼국유민의 단합으로서 민족의식이 싹트게 되었다.
- 국가적 단합을 요구할 때에는 역사를 편찬하여 국민을 계몽하므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던 의도가 각 시대에 보인다.

② 신화에 대한 인식

- 고려시대에 와서 단군신화와 주몽을 결부시켜 단군을 한민족의 시조로 후대하여 민족의 독립정신 및 통일 의식을 상징하였다.

- 고려시대에는 우리민족이 통일민족을 형성하여가는 시기로서 고려는 특히 고구려를 재인식하여 평양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으며 사서(史書)에도 단군신화를 취급하였다.
- 묘청은 이러한 의식구조위에서 자기의 주장을 정치화한 사람으로서 부각되었다.
- 이조시대에는 단군의 역사적 의의가 더욱 확대되어 초기에는 단군실오 동방시조(檀君實謫 東方始祖)라 하여 단군사당을 평양에 처음으로 세워 제사지냈다.
- 명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조선에서 기자(箕子)에 대한 처우가 높아지지만 그것과 상대적으로 국조로서의 단군에 대한 숭배의도가 높아져서 교과서에도 단군다음에 기자를 배우도록 하였다. (동몽선습)
- 단군에 대한 숭배는 역사적 독립성을 강조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다.

③ 실학자들의 국가의식

- 실학은 유교의 전통적인 경학(經學)에 바탕을 두면서도 경학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경세치용(經世致用)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었다.
- 경세치용 학자들은 국제정세의 추이에 대한 주시와 증방(宗邦)의 우월성을 인식하면서도 과거를 소상(遡上)하여 민족의 걸어온 역정을 세심히 고찰하려는 역사에 관심이 높았고 나아가 독자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재구성하려 하였다. 삼한정통론(三韓正統論)

- 그들의 공통된 역사서술 방법은 단군조선에서 비롯한 우리나라 역사의 변천과정속에서 하나의 계통을 세워보려함과 한국역사시대의 상한을 높이코자 하였다.
-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민중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 민족적 자아의 재발견—역사, 지리, 언어, 제도에 걸쳐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탐구하기 시작하여 많은 서적을 저술하였다.

(2) 근대적인 민족국가 의식

① 개화기

- 폐국(鎖國)에서 개국(開國)이라는 대외관계의 전환과 의식의 확대속에서 외세의 침투에 대한 국가적위기의식—전민족의 자각—이 높아졌다.
- 이용후생의 자주개화사상(自主開化思想)—부국자강(富國自強)—이 대두하였다.
- 金玉均(金玉均) 등의 개화당은 자주적 근대화의 기수였다.
—(독립국으로서의 확보와 평등사상을 내세운점)
- 선진문명을 받아들여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 신교육으로 민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민족의식과 자각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 한말(韓末)의 학교는 새로운 학문의 전달과 항일의 정신교육이라는 이중의 짐을 지고 있었다.

② 국권과 민권운동

- 독립협회를 위시하여 자주와 민권을 외치는 여러 민간단체가 조직되었다.
- 민중의 참정운동을 전개하였다.
- 민간신문을 창간하여 국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 갑오개혁(甲午改革)의 긍정적인 면: 한국의 제도, 경제면의 근대화를 위한 발단이었으므로 종래의 뿌리박힌 봉건적제도와 조직을 점차 붕괴시키고 현대국가의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식을 나타낸 것이다.
- 일본의 결정적인 지배체제는 민중에게 민족을 자각케 하였다.
- 박은식(朴殷植)의 한국통사(韓國痛史), 최현배(崔鉉培)의 조선민족갱생의도(朝鮮民族更生의道), 신채호(申采浩)의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 정인보(鄭寅普)의 조선의 5천년간의 열(朝鮮의 5千年間의 열)들은 근대적 민족의식의 산물이다. —민족적 입장에서 국사학이 개척되었다.
- 동학운동은 3.1 운동에 주동역할을 하게끔 계승되었다.
- 언문(言文)일치의 문체가 보급됨에 따라 국가의식의 양양에 도움을 주었다.
- 자기나라의 사상, 감정은 그 나라 고유의 말과 글씨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자주 의식과 모든 지식과 의사의 교환은 일반민중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의식에서 언문일치운동이 전개되고 따라서 그 표기 수단으로 국어의 연구가 높아졌다.

- 국학의 존중은 단순히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고 나라를 위한 학문으로 승화 하였다.

2 교수방법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의 통일시 과정은 동양 여러 나라 중에서도 으뜸이 될만한 전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달단계는 서양사에서는 찾을 수 없고 소위 지방분권적 봉건체제하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과정이다.

독일에서 시작된 19세기의 민족운동은 이미 고려시대에서 조용하게 진행되어 이조시대에는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갔고 그 바탕은 일제에 대한 무서운 항쟁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의 반탁운동에 까지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식이 비단 국난에 처했을 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생성한 의식구조위에 세워진 것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단군신화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서 신화학적 분석을 외면하거나 유교의 국가관을 사대주의 일변도로 설명하는 재래의 방법들 매우 위험한 것이다.

역사적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은 복합적 의미를 가진 하나의 사실을 그 시대 안에서 고찰하는데서만이 정확한 해석과 인식을 얻을수 있다는데 지도자는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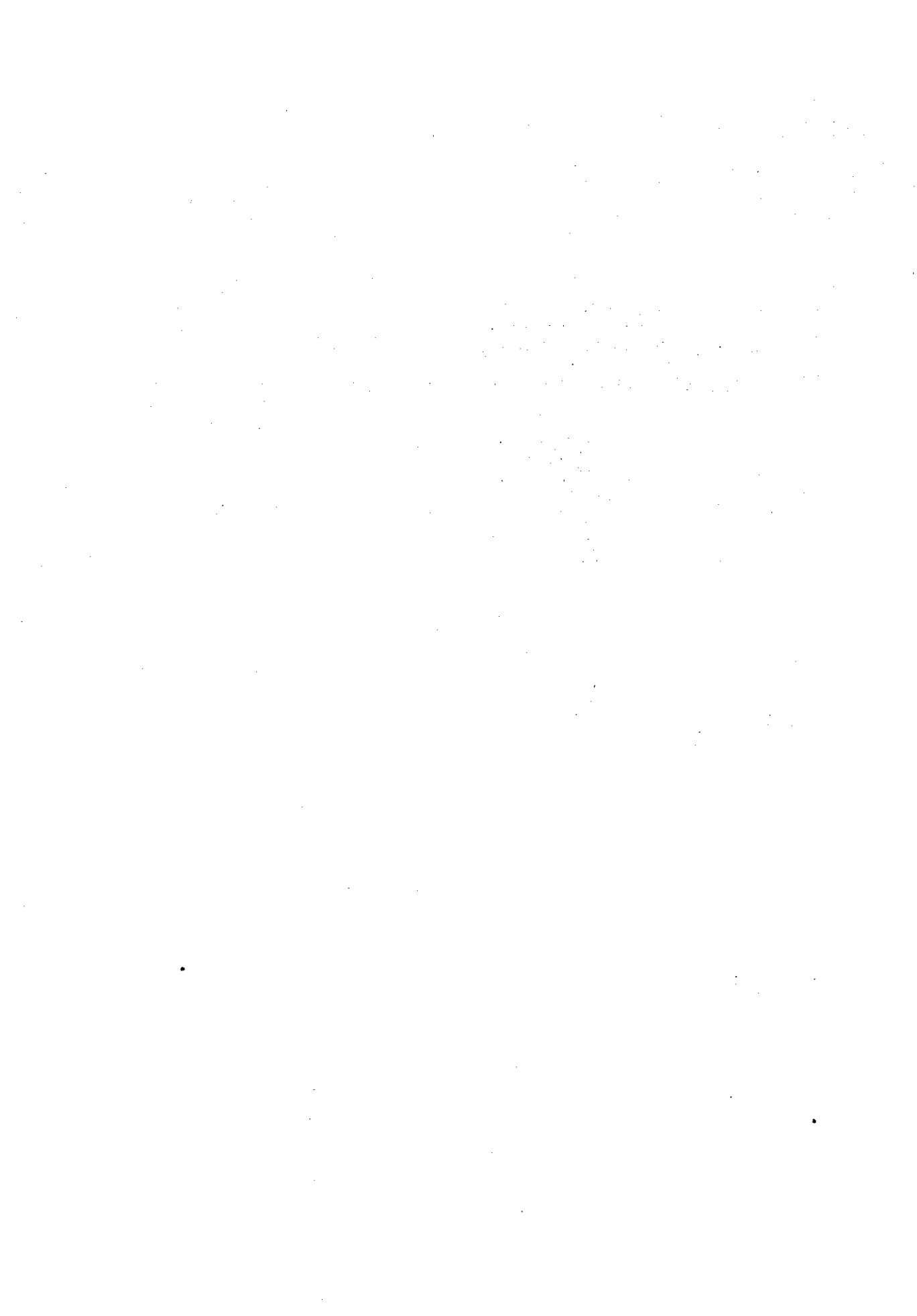
3 참고문헌

- ① 孫晉泰, 韓國民族史概論, 韓國文化叢書, 제 11 집, 乙酉文化社, 1954.
- ② 李基白, 民族과 歷史, 一潮閣, 1971.
- ③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67.
- ④ 韓佑勗, 韓國通史, 乙酉文化社, 1970.
- ⑤ 文一平, 朝鮮史話, 靑丘社, 1945.
- ⑥ 李相玉, 韓國史話, 世界史話全集 3, 東西出版社, 1970.
- ⑦ 李弘植,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1971.
- ⑧ 千寬宇, 民族史의 現段階, 東亞春秋 2-2, 1963.
- ⑨ 千寬宇, 내가본 韓國史의 問題點들, 思想界, 1963, 2月号.
- ⑩ 金海宗, 韓國史를 어떻게 보는가, 新東亞, 1966. 8月号.
- ⑪ 金延鶴, 韓國民族形成史, 韓國文化史大系 1, 1964.
- ⑫ 羅世振, 韓國民族의 體質人類學的研究, 韓國文化史大系, 1, 1964.
- ⑬ 金哲堧, 韓國古代國家發達史, 韓國文化史大系, 1, 1964.
- ⑭ 金永斗, 韓國政治思想史, 韓國文化史大系, 1, 1965.
- ⑮ 金哲堧, 韓國古代政治의 性格과 中世政治思想의 成立過程, 韓國思想의 基底, 東方學志, 10 집, 1969.
- ⑯ 韓佑勗, 古代國家成長過程에 있어서의 對服屬民施策, 歷史學報, 12, 13, 1960.
- ⑰ 이흥직, 고구려의 흥기, 국사상의 제문제 4, 5, 1959.
- ⑱ 이흥직, 백제건국에 관한 제문제, 국사상의 제문제, 6, 1960.
- ⑲ 이흥직, 신라의 勃興期, 국사상의 제문제 3, 1959.
- ⑳ 李丙森, 高句麗國號考, 서울大論文集, 人文社会科学 3, 1956.
- ㉑ 李丙森, 古代南堂考, 서울大論文集, 人文社会科学 1, 1954.

- ②② 安在鴻, 朝鮮上古史鑑, 2冊, 民友社, 1947.
- ②③ 안호상, 배달, 동이겨레의한 옛역사, 배달문화연구원, 1971.
- ②④ 金龍德, 新羅, 高麗, 李朝社會의 段階的 差異性에 對하여, 思想界 1955.
- ②⑤ 金哲垞, 新羅貴族勢力의 基盤, 人文科學 7, 1962.
- ②⑥ 金哲垞, 新羅時代의 新族集團, 韓國史研究 1, 1968.
- ②⑦ 李瑄根, 花郎道研究, 海東文化社, 1950.
- ②⑧ 金庠基, 花郎과彌勒信仰에 對하여, 李弘植博士 回甲記念韓國史學論叢, 1970.
- ②⑨ 李丙森, 高麗時代의 研究, 韓國文化叢書 제 4집, 乙酉文化社, 1952
- ③① 金庠基, 高麗時代史, 東國文化社, 1961.
- ③① 金庠基, 高麗太祖의 建國과經綸, 국사상의 제문제 1,2, 1959.
- ③② 辺太變,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 ③③ 李佑成, 高麗朝의 史에 對하여 歷史學報 23, 1964.
- ③④ 河炫綱, 韓國의 奴隸制社會와 封建制社會의 問題, 韓國史의 反省, 新丘文化社, 1968.
- ③⑤ 李基白, 高句麗의 局堂, 歷史學報 35.36 合輯.
- ③⑥ 辺太變, 高麗의 貴族社會, 韓國史의 反省, 歷史學會편, 新도文化社, 1968.
- ③⑦ 曹佐鎬, 아시아의 官人支配의 韓國의 傳統, 韓國史의 反省, 歷史學會편 新도文化社, 1968.
- ③⑧ 李載浩, 李朝台諫의 機能의 變遷, 論文集(釜山大) 4, 1963.
- ③⑨ 申奭鎬, 朝鮮王朝開國當時의 對明關係, 국사상의 제문제 1, 1959,

- ④① 李相佰, 李朝建国의 研究, 震檀學報, 4, 5, 7, 1937, 1949.
- ④② 車賤者, 李太祖의 建国百話, 開闢, 제편 제 6号, 1926.
- ④③ 李光麟, 韓國의 民主主義 發展에 대한 史的考察, 韓國史의反省, 歷史學會편, 新도文化社, 1968.
- ④④ 李光麟, 世宗朝의 集賢殿, 崔鉉培記念 論文集, 1954.
- ④⑤ 張潤植, 李朝暗行御史制度의 研究, 1959.
- ④⑥ 韓佑勳, 申聞鼓의 設置와 그 效能에 對하여, 李丙燾記念論叢, 1956.
- ④⑦ 柳洪烈, 朝鮮鄉約의 成立, 震檀學報 9, 1938.
- ④⑧ 高在国, 兩班制度論, 學風 13, 1950.
- ④⑨ 남만성, 大明律과 우리 古法典의關係, 法制月報 5권 8호.
- ④⑩ 全海宗, 上奏文의 格式, 內容 및 節次에 對하여, 李相佰記念論叢, 1964.
- ⑤① 崔承熙, 集賢殿研究, 歷史學報, 33집.
- ⑤② 李瑄根, 近世世道政治의 歷史的考察, 국사상의 제문제, 5, 1959.
- ⑤③ 申基碩, 韓末外交史研究, 淸韓宗屬關係를 中心으로, 1967.
- ⑤④ 金泳謨, 李朝三議政의 社会的背景, 韓國社会学 1, 1964.
- ⑤⑤ 金泳謨, 李氏王朝時代 科擧及第者의 社会的背景에 對한考察, 金斗鍾博士稀壽記念論文集, 1966.
- ⑤⑥ 大韓民國史, I. II, 國史편찬위원회, 1968.
- ⑤⑦ 千寬宇, 史料로 본 解放十年略史, 한국일보, 1955年8月15日~12月1日.
- ⑤⑧ 嚴詳燮, 解放十年政治史, 思想界, 1955, 9月.

- ⑤8 金哲峻, 後三国時代の 支配勢力の 性格에 對하여, 李相佰記念論叢,
- ⑤9 池内宏, 高句麗の 建国伝説と 史上の 事實, 東洋學報 28-2, 1941.
- ⑥0 小田省吾, 辛未洪景來亂の 研究, 1934.
- ⑥1 渡邊勝美, 朝鮮開國 外交史研究, 東光堂書店, 1941.
- ⑥2 申國柱, 韓國の開國, 日本外交史研究幕末, 維新時代, 1961.



제 2 장 민족 문화와 전통사회

한국사는 우리민족이 문화창조의 소질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민족문화의 전통은 무단한 창조활동 속에서 이어온 것이다.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문화의 전통은 형상화한 물질문화에서 받은 것도 있지만 무형문화속에 창조적 정신이 더 담겨져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한국문화와 민족은 단일한 것으로서 한국문화의 주류는 그 민중을 토대로 성장되어 왔다는 점과 각 형상화된 문화창조물을 통해 한국민족은 심미적(審美的)임을 증명하려 하였다

또 외래문화의 수용에 있어서도 강력한 민족의식을 통해 주체적인 입장에서 받아 들임으로써 그것을 토착화하여 민족문화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민족문화는 민족성 즉 민족 각자의 개성이 한국이라는 풍토적 환경과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집단생활을 영위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생활과 사고방식에 대한 공통된 바탕이다. 민족문화의 기반은 민족의 전통적 가치관의 변천과 동행하여온 것이므로 전통적 가치관의 이해는 내일을 지향하는데 기반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I 민족문화의 주류

1 내용개요

(1) 주 류

① 문화란 ,

- 인간성 일반의 표현이다 .
- 역사학에서의 문화란 지식이나 예술 등 특수분야의 상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狹意의文化)
- 문화는 사회적으로 누적된 경험으로서 한 종족이나 민족이 오랜동안에 걸쳐 이루어 놓은 생활양식으로 역사적 성격을 가지며 또한 한 민족이나 한 지역에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지역에 전파하는 성격을 갖는다 .

② 민족문화 ;

- 인간성의 일반적 표현속에서 각 민족의 특수한 개성이 표현됨을 일컫는다 .
- 언어 , 관습 , 문화의 공동체로서 장구한 동안 그 문화의 전승과 혹은 자연의 경향 , 관습에서 오는 생활감정 등이 융합, 발전되어서 하나의 민족적 체취 즉 성격을 이룰 수 있다 .
- 비록 정치적 정복을 받았을 경우라도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한 무슨 형태로든지 예술문화상에 민족성을 간직한다 .
- 민족문화의 전통은 형상화한 물건에서 받는것도 있지만 창조적 정신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
- 민족문화의 주체성은 단일한 것이 아니고 보다 다양한 것이면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파악해야 한다 .
- 민족문화는 동일시대의 여러성격의 문화를 서로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혹은 구성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또 시대적인 흐름과 그 발전과정에서 이해해야 한다.

- 민족문화란 문화인들의 공통되는 세계관이다.

③ 고유문화의 유무 ;

- 고유문화는 원시문화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민족문화의 주류가 즉 고유문화인 것이다.
- 흔히 문화는 이동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복합함으로써 발전되는 만큼 제 민족만의 순수한 고유문화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 그러나 어떤 문화가 토착화되어 그 문화에 민족적 표현이 내포되었으면 고유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④ 민족문화육성의 필요

- 민족문화의 발전은 즉 민족성 성장의 발현이다. 그러므로 민족문화는 민족의 단결심을 앙양한다.
- 민족문화는 그 국민의 정서적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서 민족의 장래는 민족문화발전의 방향위에 정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2) 한국문화의 성격

① 한국문화는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다.

- 민족이 단일함으로써 민족성을 내포하는 공통된 주류를 이루고 있다.
- 민중생활과 직결되어 창조된 문화이다.
- 한국문화는 보편적인 원시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을 특수하게 만든 어떤 다른 요소에 있다.

② 한국문화는 종교의 영향이 크다.

- 무현(巫覡) 신앙은 근대까지 한국사람의 사상을 지배하여 왔으나 특히 동학(東學)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다.
-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는 종교의 영향을 받아 고려시대까지 국교(國敎)로서 모든 국민이 신봉하였다. 사찰(寺刹), 불상(佛像), 탑자(塔姿), 부적(浮屠) 등은 물론이거니와 분묘(墳墓), 도자기(陶磁器), 예 이르기까지 불교적인 색채가 짙다.
- 이조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생활규범을 지배하기에 이룩했다.
- 현대는 기독교 문화와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할 수 있다.

③ 한국문화는 대중성을 띠고 있다.

- 한국문화가 비록 귀족중심적 색채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피 지배민중과 단절된 것은 아니다.
- 문화는 귀족계급만으로 생성될 수는 없었다는 것은 예술, 종교등을 통하여 여러가지 증거를 찾을 수 있다.

(3) 문화의 창조적인 면과 각시대의 특징

① 고대문화

- 그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몽고족, 토이기족, 일본족, 남방계족과 함께 인류공통적인 자연발생적 원시문화였다.
- 지방계, 남방계로 분포된다.

② 삼국시대의 문화

- 고구려의 고분(古墳)은 숨엄한 미를 가지고 있는 특수한 조형이다.
- 고구려, 고분의 석실구조만 하더라도 고구려인의 사상이나 기술이 고구려족의 견고성(堅固性), 용약성(勇躍性) 결백성을 표현하여 주었다.
- 백제의 탑은 우미한 비의 특이한 문양(紋樣) 형태와 우수한 기술을 가진 석조물이다.
- 백제인이 예술에 우수한 재질을 가졌던 것은 웅대한 구조와 화려한 채색으로서의 귀족예술의 발달은 대단하였다.
- 신라의 미술은 곡선미로서 고전적 조각적이다.

③ 통일신라시대

- 통일신라시대는 정치적 통일위에선 민족문화 창조의 시기이다.
- 향가는 신라인의 아름다운 독창적인 종교문학으로서 불도와 화랑의 사상을 담은 것이다.
- 신라의 예술은 불교예술이라 할 수 있다.
- 다보탑, 석가탑의 온용(溫容)한 형태감과 수려한 구성미는 우수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안정미, 웅건미, 단려미, 온아미(溫雅美)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석조이면서도 목조미를 방물케 한다.
- 석굴암의 조각은 정은하고도 율동성이 풍부하며 세련되고도 섬세교묘한 곡선미가 있는 것으로서 신라고유의 특질이며 창조이다.

- 설총(薛聰)이 국어 즉 한자의 음훈을 빌려 이두(吏讀)로써 경서를 훈독(訓讀)한것은 국한문 혼용의 최초의 시도였다.
- 거문고, 가야금, 비파, 피리는 독자적인 창조적역량을 발휘한 것이다.

④ 고려시대

- 고려시대의 문화는 불교의 영향이 강하여 사찰, 불상, 석탑, 동종등이 대표적이다.
- 대장경은 한국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문화재이다.
- 고려의 청자는 우리 민족 특유의 독창적인 기예를 발휘한 작품이다.
- 고려의 미술은 낭만적이며 회화적인 특징이 있다.
- 상감(象嵌)수법의 출현은 고대인 독자적 양식으로서 표면의 문양(紋樣)의 묘함과 함께 한국 도자기의 대표가 될 만하다.
- 주조활자는 금속활자의 시초이다.
- 고려악에는 아악(雅樂), 당악(唐樂) 및 속악(俗樂)의 삼종이 있는데 그중 아악은 궁중 음악이고, 속악은 교유의 음악을 일컫는다.
- 고려시대는 축적되어 온 한국인의 역량이 다방면으로 발산되었다.

⑤ 이조시대

-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한글과 과학의 발달과 개화기의 국문운동을 들 수 있다.

- 한글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국권회복을 위한 투쟁이었고, 측우기, 거북선등은 과학적 발명력을 과시한 것이다.
- 이조미술을 대표하는 것은 도자기와 회화다. 중기이후에는 이른바 백자가 성행하여 평민적이며 친밀감이 넘쳐흐른다.
- 단국(檀國), 혜원(惠園)등의 풍속도는 뛰어난 수법이다.
- 이조의 미술은 자연적, 음악적이라할 수 있으며 명당과 음영(陰影)과 소박도 시대적 특색이다.
- 연암(燕岩)의 문학은 민족문화의 명맥을 이어주는 것이다.
- 이인직(李人植)등의 문학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민족의 자주독립을 부르짖고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남녀평등이라는 새로운 윤리의 장을 제시하고 미신의 타파, 과학의 인식을 강조한 점에서 개화사상이 구현되고있다.
- 신교(新敎)의 찬송가에 힘입은바 큰 창가는 애국, 독립, 신문화, 교육을 주제로한 것으로서 당시 국민의 심금을 울려 준 신식 노래였다.

(4) 민족예술의 특수성

- ① 민족문화의 전통은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다.
- ② 고대는 가구(架構)에서 창조로 중세는 계승(繼承)에서 응결(繆結)로 근세는 반발(反撥)에서 추수(追隨)로의 과정을 밟아 왔다.
- ③ 조선민족은 심미적인 풍부한 감수성으로서 견고한 수법과 질적미, 청초한 색깔, 선의 유동성 정명한 조형을 창조해 내었

2 교수방법

민족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광범위의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형 무형의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의미(창조성, 고유성……)속에서 민족의 체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

과거에는 주로 민족의 자랑끼리를 익혀주는데 불과하였으나 이 장에서는 훌륭한 문화적 유산을 이어받은 후손으로서의 책임감까지 느끼게 하려는데도 목적이 있다. 문화창조가 외국의 영향을 받았건 아니건간에 국민들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한국의 민족문화는 민족성을 강하게 풍기면서 각시대를 이어오다가 일제시대에 크게 좌절당하였던 것을 이제 우리의 손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의욕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서는 전통을 미화시키기 보다는 전통문화속에 자신을 포함 시키는 경험도 필요할 것이다. 과거와의 대화는 이런 문화재를 매개체로 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자신을 인식하고 현대를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趙芝蕪, 韓國文化史序說, 探求堂, 1964.
- ② 李相國, 韓國文化史概觀, 現代社, 1955.
- ③ 金思燁, 李朝時代의 歌謠研究, 大洋出版社, 1954.
- ④ 文一平, 韓國文化, 乙酉文庫1, 乙酉文化社, 1969.

- ⑤ 金龜德, 韓國史의 探求, 乙酉文庫 1, 乙酉文化社, 1971.
- ⑥ 孫晉泰, 韓國民族文化의 研究, 1948.
- ⑦ 尹喜淳, 朝鮮美術史研究, 서울新聞社 出版局, 1946.
- ⑧ 高裕燮, 朝鮮美術文化史論議 서울新聞社出版局 1949.
- ⑨ 高裕燮, 韓國塔姿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8.
- ⑩ 李弘植, 韓國古文化論集, 乙酉文化史, 1954.
- ⑪ 宋錫夏, 韓國民俗考, 日新社, 1960.
- ⑫ 李憲求, 韓國音樂研究, 國民音樂研究會, 1957.
- ⑬ 李相佰, 韓國文化史研究論集, 乙酉文化社, 1947.
- ⑭ 高裕燮, 仏教가 高麗芸術 意慾에 끼친 影響의 一考察, 麗檀學報 8, 1937.
- ⑮ 金東旭, 新羅鄉歌의 仏教文化的考察, 白性郁記念 儒教學論文集, 1959.
- ⑯ 崔南善, 朝鮮文化의 研究, 宗商書方, 1965.
- ⑰ 金哲堧, 韓國文化에 나타난 後進性에 對하여, 東亞文化 5, 1966.
- ⑱ 李光麟, 鮮初의 四部學堂, 歷史學報 16, 1961.
- ⑲ 金東旭, 李朝學校風俗考, 中央大論文集 3, 1958.
- ⑳ 全沢憲, 獨立鬪爭史上에서 본 한글 運動의 位置, 思想界, 1954, 9
- ㉑ 洪以燮, 百濟史의 性格과 그 文化的 特質, 韓國思想, 1969, 9.
- ㉒ 金容燮, 18世紀 農村知識人의 農政觀, 創作과 批評 3의 4, 1968, 겨울.
- ㉓ 李佑成, 18世紀 서울의 都市的樣相, 鄉土서울 17, 1963.
- ㉔ 金元龜, 우리 古美術의 特色, 思想界, 1958.
- ㉕ 閔斗基, 熱河日記의 一研究, 歷史學報 20, 1963.
- ㉖ 盧道陽, 韓國文化의 地理的背景, 韓國文化史大系 1, 1964.

- ⑳ 李丙燾, 斗溪雜筆, 一潮閣, 1956.
- ㉑ 李基白, 民族文化의 傳統과 繼承, 民族과 歷史, 一潮閣, 1971.
- ㉒ 金允經, 한글학회와 한글운동의 역사, 白樂濬記念國學論叢, 1955.
- ㉓ 高裕燮, 松都古蹟, 博文出版社, 1955.
- ㉔ 金東旭, 韓國文學의 基底, 韓國史上의 基底, 東方學志 10 집, 1969.
- ㉕ 秋葉隆, 朝鮮の民俗に就いて, 朝鮮文化の性格, 京城帝大文學會, 1937.
- ㉖ 齋藤忠, 朝鮮古代文化の研究, 東京, 地人書館, 1943.
- ㉗ 李光奎, 文化人類學, 韓國文化人類學會, 1971.

Ⅱ 외래문화의 수용

1 내용개요

(1) 외래문화와 민족문화

- ① 타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진취적인 성격이야말로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필요한 요소이다.
- ② 외래문화를 주체적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민족문화가 된다.
- ③ 한 나라의 문화란 그 국민의 생활양식이나 감정 내지는 자연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니 한 문화의 연원이 다른 나라에 있고 다른나라 문화의 영향이 크다하더라도 결국에가서는 자기 민족의 것으로 화해 시켜야하는 것이다.

(2) 외래문화의 전래의 경로

① 중앙문화선 - 중국문화

- 남만주에서 한반도로 다시 일본에까지 파급한다.
- 주로 한국에서는 지성문화로 수용되었다.

② 서방아시아 문화

- 주로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오는 불교와 미술상의 「간다라」 미술의 조류를 일컫는다.
- 삼국시대의 불상 조각에서 「간다라」 미술의 풍모를 찾을 수 있다. 풍부한 천연석재와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여 찬연한 예술을 개화시킨 것이다.
- 이러한 경로는 종교문화 수용의 주류를 이루었다.

③ 지방문화선

- 이 계통의 문화는 지식이라든가 종교 방면보다는 장신구

같은 세속적인 유물에 많이 남은 것이다 - 생활문화.

- 월월문토기(櫛月文土器)는 이 계통의 문화이다.

(4) 해양문화선

- 광범한 서구문화를 일컫는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접촉이 많았다.
- 가락(駕洛)이나 신라의 신화전설에 인도, 제주도의 민속에 남양적 성격이있고 난류와 열대 과실의 표착등으로 미루어 보아 원시시대에 이미 교류가 있었던 것 같다.

(3) 외래문화의 수용조건

한국의 전통적인 「유대니즘」은 불교와 유교의 가치관과 종교적 조선에 의해 융합되었다.

-) 귀족사회와같은 정치상태는 아래로부터의 문화수용과 위로부터의 문화수용으로 갈라지는 요인이 된다.

③ 외국문화는 민족적 가치관에 의해 선택된 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였다. (예, 종교, 예술등)

④ 한국문화는 일본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 삼국중에도 백제는 일본 문화와 가장 밀접했으므로 정치상으로도 우호관계가 깊었다.
- 한국으로부터의 불교, 유교를 비롯하여 미술, 공예, 음악, 의학, 천문지리에 대한 전문가, 서적이 동류하였다.

(4) 외래문화의 수용상태

① 낙랑문화

- 고구려는 낙랑문화를 수용하여 자체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 낙랑문화는 한문화와 동일한 것들이며 한국인으로서는 이민족(異民族)의 문화에 틀림없으나 그 문화의 영향이 한국 남부는 물론 일본에까지 파급되었다.

② 불교문화

-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 올 때는 큰 충돌없이 토속신앙과 타협하였다.
- 불교가 신라에 전래 되었을 때 무조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새 종교에 대해 그들은 민족적인 각도에서 이것을 검토해 보려 하였다.
- 신라는 불교가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자 그들은 불교를 받아 들이게 된 것이다.
- 한국불교사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원효(元曉), 의천(義天), 지눌(知訥) 등은 모두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불교의 이론을 세우기에 노력한 인물이었다.
- 화랑도는 불교가 고유신앙과 융합하여 새로운 국민신앙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예다.
- 화랑의 후에는 고려시대에 계승되어 복진정책의 기수들이 되었다.

③ 유교문화

- 이조가 서면서 불교로부터 유교로의 전환은 밖으로 부터 강요된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 이조의 유교는 무조건 중국유교의 모방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같이 한국인의 치밀한 철학적 이론을 나타내 주는 면을 내포하고 있다.

④ 계 도

- 중국의 관제를 배워왔지만 우리정치 현실에 맞추어 개편 운영하였다. 이러한 예는 고려시대의 삼성육부(三省六部), 과거제,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흔히 한자로 된 중국적인 용어로 인해 중국것의 모방으로 잘못 인식된 것들이 많지만 그것은 왜곡된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口分田, 白丁 등)

⑤ 예술문화

- 예술면에는 중국, 인도에서 전파되어온 양식이 많으나 우리 전체의 독특한 체취와 기법이 가미되었다.
- 석굴암의 조각이 회람「간다라」 및 당의 영향 밑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지만 석굴암안의 여래, 보살, 라한(羅漢) 등을 대할 때 거기서 느끼는 것은 신라귀족의 체취인 것이다.
- 국문이 창제되기 전 한자의 사용을 민중화시키기 위해 이두(吏讀)가 만들어 졌다.
- 근대에는 서구문화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의 충돌로 여러 가지 갈등과 모순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참된 민족의식과 자각에 도달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었다.

⑥ 생활문화

- 중국화라는 것은 일부상층부, 관료층에만 한정하였고 일반민중에서는 민속적 문화가 잔존하고 있다.
- 조선의 기존문화중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문화가 전래하여 오면 그것은 순수한 형태로 수용된다.
- 고유의 유사물이 존재할 때는 고유의 방법으로 이해하여 실수한 결과 상층부에만 머물고 민중에게까지는 침투 못하

며 침투해도 표면적인 수용에 불과하다.

2 교수방법

선진문화의 도입과 고유문화의 육성보호의, 함수관계는 전통적 가치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외래문화에 대하여 지나친 기피증과 전통의 고집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고 외래문화의 지나친 숭상은 자주성을 잃고 건전한 민족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역사속에는 이러한 문화수용의 태도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많다. 각분야에 걸쳐서 조상들이 어떠한 수용태세를 갖추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지금까지 민족문화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주적인 입장보다는 우리 문화의 기원을 타지방에서 모색하는 식민지사관에 입각한 설명이 많았다. 근래에 와서 이러한 태도를 지양하고 민족사의 주체가 한국인이었음을 입증하는 연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부정적 태도보다는 긍정적 태도로 정통문화를 본다면 민족문화의 진면목이 타율적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은 민족과 더불어 성장하여 왔기에 민족과 더불어 설명되어야 하며 그 수용조건이 무엇이었던가를 해명하는 것은 전통을 이해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金庠基, 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서울, 1948.
- ② 李基白, 東洋文化안의 韓國文化, 思想界, 1961,

- ③ 李基白, 韓國文化와 外来文化, 民族과 國家, 一潮閣, 1971.
- ④ 李基白, 三國時代 佛敎傳來와 그 社會的 性格, 歷史學報 6, 1956.
- ⑤ 洪淳和, 韓國에 있어서의 佛敎儀式의 受容態度에 對한 考察
특히 燃燈行事를, 中心으로, 大邱大 十周年紀念論文集, 1958.
- ⑥ 安啓賢, 麗元關係에서 본 高麗佛敎, 黃義敦先生古稀紀念 史學論叢,
東國大學校 史學會, 1960.
- ⑦ 金斗鍾, 韓國醫學發展에 對한 歐美 및 西南方醫學의 影響, 韓國
研究叢, 제 9 집, 1960.
- ⑧ 金泳鎬, 西洋技術의 受容, 韓國現代史 3, 1969.
- ⑨ 金聖七, 燕行小攷, 歷史學報 12, 1960.
- ⑩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1970.
- ⑪ 朴泰華, 新羅時代의 密敎傳來考, 趙明基紀念 佛敎史學論叢, 1965.
- ⑫ 韓佑勳, 天主教 傳播와 李朝封建社會, 歷史學研究, 1949.
- ⑬ 全海宗, 清代學術과 阮堂, 大東文化研究 1, 1963.
- ⑭ 全相運, 새로운 技術文明, 韓國現代史 3, 1969.
- ⑮ 梅原末治, 古代日鮮間의 文物의 交流, 朝鮮學報 11, 1957.
- ⑯ 三上次男, 朝鮮의 古代文明と 外来文化, 古代史講座 3, 1962
- ⑰ 梅原末治, 古代朝鮮에 於ける 北方系 文物의 痕跡, 靑丘學叢, 7, 1932.
- ⑱ 末松保和, 新羅佛敎傳來傳説考, 新羅史의 諸問題, 1954.
- ⑲ 江田俊雄, 新羅의 佛敎受容에 關する 諸問題, 文化 2-8, 1935.
- ⑳ 內藤雋輔, 高麗風俗에 及ぼせる 蒙古의 影響에 就いて 桑原紀念 東洋史
論叢, 1930.
- ㉑ 稻葉岩吉, 麗末鮮初의 宗禮傳來及びその 意義, 靑丘學叢 23, 1936.
- ㉒ 依田千白子, 年中行事より見た 朝鮮에 於ける 中國文化의 受容形式에 對
하여의 一考察 朝鮮學報 52 집

Ⅲ 전통 사회의 가치관

1 내용개요

(1) 민족성

- ① 민족성이란 타민족에 대한 자민족의 생활에 있어서 늘 공동의식을 갖는 고유의 성질로서 정신적, 문화적요소를 갖춘 것이다.
- ② 민족성은 보편성있는 공통의 정신적 소산이다.
- ③ 한국사의 특성은 도덕적이다.

(2) 가치관

① 신분, 사회경제

- 가족과 촌락을 중심으로 하는 자급자족의 경제생활은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자급자족하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 민족, 부족사회에는 공동체적 인식이 강렬하였다.
- 삼국시대, 신라시대에는 가부장중심의 가족제도가 성립됨으로써 집권적통치제가 이루어 졌다.
- 고려는 귀족사회로서 족당(族党)의 관계가 중대한 의미를 갖고있다.
- 이조는 혈통을 중시하는 양반사회로서 신분제급의 구별이 엄중히 지켜져 모든 사회적 준비, 직관(職官)의 제수, (除授), 국역(國役)의 부담등이 이에 따라 배분되었다.
- 이조는 신분관계와 민족관계의 양면에서 가족배경을 파악할 때 아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회권을 형성하고 있다.

- 당파성의 문제는 파쟁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에 있다. 유교도덕을 기초로한 공통적인 특권의식은 그들로 하여금 어느정도 단결을 이루게 하였다.
- 이조말기에 이르러서는 양반과 천민과는 사회적 신분을 구별하는 관념상의 상하의 구획에 불과한 것이 되어 버렸다.

② 윤리관 (가족)

- 한국인은 인간관계를 서술하는데 있어 피아를 준별하기 싫어한다.
- 인간의 제일차적 의무가 서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에 대한 복종과 충성인 것과는 달리 한민족에 있어서는 다른 인간들 즉 가까운 직접적 인간관계로서 혈족, 친우 혹은 동향인에 대한 정이었다.
- 대윤(大倫)이라는 테두리속에서 정치와 가족생활이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정치윤리에 충실한 사람이 가족윤리에는 충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국가와 가족의 엄연한 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가족의 중심은 부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친자관계에 있으므로 부부관계는 친자관계에 비하면 제 2의적 의미밖에 갖지 못하고 있다.
- 소위 가정의 화목은 가족성원의 인격의 상호 존중에 의거하여 권리의무의 합리적인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하의 신분서열을 철저히 의식함으로써 유지된다.
-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는 초시간적 집단인 집의 유지, 존속이 가족원에 대한 지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가족원 개인의

자유, 독립, 발전은 전적으로 배척된다. 가족원 개인의 인격보다 중대하고 우위에 서있는 이 집 제도로 말미암아 강대한 가부장권이 생겼으며 친자관계 우위의 가치의식을 낳게 하였던 것이다.

③ 종교관

- 한국의 종교는 그 어느곳에서 보다 국가와 정치와 밀접한 연속적인 관계를 가졌다.
- 불교는 최초로 구세적인 윤리의 기준을 세워준 종교였다.
- 신라의 불교는 신라의 국가와 정치에 이념을 불어넣어주고 또한 실질적으로 종교가 지닌 초월적인 힘으로 국가나 정치를 지원해 주는 것이었다.
- 고려 광종시 불교사상계에 있어서 정신적인 자기극복과정에서 달성된 진전이 성종조에 와서 최승노(崔承老) 등 유자들의 수정과 타협을 보면서 중앙집권체제의 정비와 그 운영을 담당하는 고려의 중세지성이 성립되었다.
- 태조 이성제가 유교 특히 주자학을 근세조선의 지도이념으로 삼은 것은 그것으로 봉건·농경사회의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천지의 법칙과 도덕적규범의 연속성 밑에 인륜의 체계를 전개하는 그 교학은 풍부한 도덕적 정조를 지닌 한민족의 천성에 부합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 유교도덕은 고대의 씨족의식에 새로운 합리적 형식을 제공하여 동족간 단결과 협력을 형성하였다.
- 유교는 그것을 학습한 사람에게 크나큰 긍지를 주었으며 한말의 몰락기에도 장렬한 애국자가 모두 유림에서 나왔다.

- 동학은 후천개벽(後天開闢), 지상천국(地上天國)을 예언한다. 그것은 윤리와 사회질서의 파탄을 맹렬히 공박하고 동시에 기성의 전통을 단호히 거부하는데서 일어나게 마련이었는데 하나는 퇴폐된 양반사회 윤리와 질서에 대한 저항이고 하나는 새로 전파되는 외래의 서학에 대한 저항이었다.
- 동학의 기본사상은 동양고대의 도덕관과 경천사상에 기반을 둔 비세속적인 윤리의 체행(體行)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농민의 입장과 거의 다름이 없이된 천반계층(殘班階層)에 의해서 창도되어 불우한 신분계층을 대변하는 윤리적 저항을 의미한다.
-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독립과 개화를 쟁취하려는 염원에서 사회복음의 형태로 받아들여졌다. 원래 기독교는 유대교의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보편주의를 표방한데서 그 새로운 의의를 가지는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국가주의, 국가, 정치, 우선 또는 국가 정치 존재라는 도식속에서 토착화되어갔다.
- 유태기독교와 같은 종교를 갖지 않았던 한민족은 인간이 신과 더부러 갖는 관계보다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더 제1차적인 것으로 보아온 것과 동시에 추상적인 개념을 절대화하지 않았다.
- 결국 한국에서의 종교는 공동체의 운명이라는 문제에 가장 깊은 관심을 표현한 관계로 국가, 정치적 색채가 강하다.

(3) 사회개혁사상

① 실학파들의 지적개혁운동 (知的改革運動)

- 현실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여 민중의 생활에 깊은 관

심을 기울이게 되고 새로운 학문이 그 대상과 방법을 개척하게 되었다.

- 민족적 자아를 재발견됨에 따라 역사, 지리, 언어, 제도에 걸친 고유의 전통을 탐구하고 평민문학이 발생하여 서민의 고통을 호소함으로써 저변의 의식이 상승하는 기세를 나타냈다.
- 실학파들은 희망을 장래에 두고 그 해박한 경사(經史)에 관한 지식을 기초삼아 현실사회의 여러가지 문제를 직관, 비판하여 그들이 이상하는 정치의 도(道)와 지방제도, 토지제도, 재정경제, 과거제, 학제, 병제, 관제 등 제반문제에 관해 그들이 포부하는 이상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제시하였다.
- 세습적인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적인 차별을 없애므로써 능력이 있어도 혈통과 지벌(塲閥)에 억제되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던 세습형의 사회에서, 오직 자기 자신의 능력과 세력에 의하여 사회적 지위가 획득될 수 있는 성취형의 사회로의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의병운동

- 의병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척사위정론(斥邪衛正論)은 사학(邪學)을 물리치고 정학(正學)을 지킨다는 것이었다.
- 척사론(斥邪論)은 개화를 전제로 하면서 다만 안으로 먼저 힘을 충실하게 한 다음에 나라 문을 열고 열강을 맞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
- 의병은 동학운동에 가담했던 농민들이 기저세력을 이루면서 기성질서를 무시하고 현실개혁을 부르짖는 생각으로 나타났다.

③ 개화사상가들의 개혁

- 청에 대한 사대관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독립국으로서의 위신을 확보하려 하였다.
-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우고 인재를 등용하여 어느정도 근대적 민주주의를 암시하고 있다.
- 사회정책의 실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④ 동학의 개혁사상

- 동학은 조선왕조의 봉건적인 양반지배사회가 대내, 대외적으로 파탄의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 구질서의 종말과 새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였다.
- 동학은 기존의 모든 종교, 신앙, 사상을 부정하고 본원적인 인간윤리의 회복을 요구하여 이로서 내적, 외적상항을 초극하려는 하나의 새로운 종교사상이었다.
- 동학은 평등관에 의해 사회개혁을 수행하고 민족의식에 의해서 나라주권을 지키려는 운동이었다.

2 교수방법

전통적 가치관은 우리 민족이 결정과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왔는가를 찾아 보는데서 시작된다. 윤리, 도덕, 종교, 지성등에 나타난 한민족의 가치관은 오늘날 우리들의 사유형태(思惟形態)에도 뿌리깊게 박혀있다. 가족윤리의 광범하고도 강인한 존속은 비단 유교의 영향뿐 아니다. 과거의 좋지못한 습성은 모두 이조 오백년에 그 책임을 전가하여 버리는 것은 낡은 사관이라 할것이다.

오늘날 유교와 불교가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별로 반가운 현상이 아니라 한국 교육이 종교에 무관심한데도 문제가 있다.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시대적 가치관을 구성하는 주축이 있게 마련이다.

이 장에서는 앞서 배워온 한국의 민족, 정치의식, 문화적 성격등을 거이 종합하여 전통적 가치관속에 배합시켜 결론적인 단원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가치관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이것이 어떤것이냐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 사상(事象)이 없어서는 안된다.

민족적 가치관(집단적)과 개인적 가치관의 갈등과 그 동일시를 위한 학습계획과 기술이 또한 요청된다.

3 참고문헌

- ① 金三守, 韓國社会經濟研究, 韓國文化史大系 II,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64.
- ② 閔斗基, 事大主義論, 新世界, 1963, 6.
- ③ 黃性模, 民族性和 地理風土的條件, 新世界, 1963.
- ④ 金龍德, 國史의 基本性格, 思想界, 1953.
- ⑤ 李仁榮, 우리民族史의 性格, 國史要論, 1950.
- ⑥ 李基白, 事大主義論의 再檢討, 思想界, 1965.
- ⑦ 李光奎, 韓國의 家族構造, 李弘植, 韓國史學論義, 1970.
- ⑧ 金斗憲, 五服制度의 研究, 慶熙學報 5, 1936.
- ⑨ 孫晉泰, 三國遺事의 社會史的 考察 學園 2 - 2, 1949.

- ⑩ 丁仲煥, 新羅^{신라} 佛敎傳來와 그 現世思想, 趙明基記念, 佛敎史學論叢, 1965.
1965.
- ⑪ 辺太燮, 韓國古代의 經世思想과 祖上崇拜信仰, 歷史教育 3, 4, 1958
1959.
- ⑫ 李弘植, 新羅僧官制와 佛敎改策의 問題, 白性郁記念 佛敎學論文集,
1959.
- ⑬ 韓佑勗, 麗末鮮初의 佛敎改策, 서울大論文集 人文社会科学 6, 1957.
- ⑭ 趙明基, 新羅佛敎의 理念과 歷史, 新太陽社, 1962.
- ⑮ 成樂薰, 韓國儒敎思想史, 韓國文化史大系 Ⅶ, 1970.
- ⑯ 金東旭, 春香伝根源說話考, 春香伝의 比較的研究, 春香伝研究, 1965.
- ⑰ 成樂薰, 韓國黨爭史, 韓國文化史大系 2, 1965.
- ⑱ 金東華, 高句麗時代의 佛敎思想, 亞細亞研究 2 - 1, 1959.
- ⑲ 金東華, 百濟時代의 佛敎思想, 亞細亞研究 5 - 1, 1962.
- ⑳ 金東華, 新羅時代의 佛敎思想, 亞細亞研究 5 - 2, 6 - 1, 1962, 1963
- ㉑ 黃元九, 李朝禮學의 形成過程, 東方學志 6 集, 延世大學校, 1963.
- ㉒ 李乙治, 丁榮山의 經學思想研究, 東方學志 6 集, 延世大學校, 1963.
- ㉓ 韓佑勗, 世宗朝에 있어서의 對佛敎改策, 震檀學報 25, 26, 27, 1964.
- ㉔ 洪以燮, 國學에 나타난 國富論, 地方行政 17 的 10, 11, 12, 1969.
- ㉕ 閔泳珪, 春香伝三則, 人文科學 제 7 集, 延世大學校, 1962.
- ㉖ 崔在錫, 賤民家族의 權力構造研究를 위한 試論, 李弘植博士 화갑기
념 韓國史學論叢, 1970.
- ㉗ 李相佰, 儒佛兩敎交代의 機緣에 관한 一研究, 東洋思想研究 2-3,
1938, 1939.
- ㉘ 金容燮, 李朝後期에 있어서의 身分制의 동요와 農地占有, 史學研究
15, 1963.

- ② 韓佑勗, 18世紀 前半期에 있어서의 韓國社会經濟面에 對한一考察,
서울大論文集, 人文社会科学 7, 1958.
- ③ 韓佑勗, 富斗貴의 價值觀과 族譜의思想, 思想界, 1959, 8.
- ④ 金洸鎮, 高句麗社会の 生産様式, 普專学会論集 3, 1937.
- ⑤ 三品彰英, 新羅の姓氏に就いて, 史林 15-4, 1936.
- ⑥ 末松保和, 高麗初期の 兩班に ついて, 東洋學報 36-2, 1953.
- ⑦ 三品彰英, 朝鮮における仏教と民族信仰, 仏教史学 4-1, 1954.
- ⑧ 武田幸男, 高麗時代の百姓, 朝鮮學報 28, 1963.
- ⑨ 周藤吉之, 高麗末期より 李朝初期に至る 奴婢の研究, 歴史学研究
9-1, 2, 3, 4, 1939.
- ⑩ 秋葉隆, 朝鮮巫家の丹系的傾向, 小田記念 朝鮮論集, 1934.
- ⑪ 今西龍, 李氏朝鮮の學風の変遷, 支邦学 1-5, 1921.
- ⑫ 四方博, 旧來の朝鮮社会の 歴史的な性格について, 朝鮮學報 1, 2, 1951.
- ⑬ 高橋亨, 李朝儒學史に おける主理派, 主氣派の發達, 朝鮮支邦文化の
研究, 1929.
- ⑭ 石井寿夫, 理学至上主義, 李朝への天主教の排戦, 歴史学研究 12-6, 1944.
- ⑮ 山口正之, 近世朝鮮に おける西學思想の東漸と その發展, 小田記念朝
鮮論集, 1934.
- ⑯ 小田省吾, 李朝の 明党を 略して 天主教 迫害に 及ぶ, 青丘學叢
集 1집
- ⑰ 四方博, 李朝人口に関する身分階級別的 觀察, 朝鮮經濟の研究 3, 1938
- ⑱ 譽生永助, 朝鮮の姓氏と同族部落, 1943.
- ⑲ 金斗憲, 朝鮮の 同族部落に就いて, 青丘學叢 18, 1934.

제 2 부

민 주 주 의

제 1 장 민주주의의 기본이념

민주주의는 하나의 믿음으로 출발한다. 그 믿음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기본적인 가치를 토대로 민주주의와 관련된 모든 하위 가치, 개념, 이론들이 정립되고 있다.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에서 도출된 것이며 "자유"와 "평등"도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며 입헌, 대의정치, 선거제도 등의 정치제도도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든 통치체제인 것이다.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과 제도는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을 것이나 기본적인 이념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본장의 주제들에서는 민주주의가 성립하는 기본이념과 가치를 이해하는 문제들을 취급할 것이며 첫째 주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에서는 인간을 모든 것의 우위에 두는 기본가치 인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념, 개성, 존중, 최선아실현(最善我實現)을 위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등이 논의될 것이며, 둘째 주제 "인간의 기본권리와 자유"에서는 제1주제에서 논의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또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권리와 자유를 규명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권리와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하겠지만 극단적인 개인의 자유는 사회를 혼란케하는 무정부적 상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을 갖출 수 없

게 될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개인은 자기의 최선아실권을 위해 권리와 자유를 법이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본장의 마지막 주제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서 취급하게 될 것이다.

I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

1 내용개요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시키기 위한 본주제의 강의에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 그리고 하위가치(下位價值)들이 취급된다.

민주주의의 이념적 본질은 인간 개인의 존엄성을 믿는 신념에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이며 이 기본적 가치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모든 하위가치, 개념, 이론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정치학적, 경제학적, 그리고 교육학 내지 심리학적 관점의 중핵(中核)을 이루고 있다. 민주주의의 정치체제, 법률, 경제체제등도 결국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그리고 다음 주제에서 취급될 기본권리등을 보장하고 더욱 신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기본적 가치를 토대로 여러가지 하위가치들이 정립된다. 민주주의가 갖는 하위가치들의 이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강의에서 하위가치들의 개념을 활용하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해석이 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에서 파생되는 하위가치란, 인간의 목적성(目的性), 인간본질의 성선설(性善說), 진리의 상대성(相對性),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리, 개성존중, 최선아실현(最善我實現)을 위한 자결적 능력(自決的 能力)에 대한 신념,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념, 지성우위(知性優位), 도의적 책임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 모든 가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규정하

는 가치들이나 이들 가치를 하위가치라고 하는 까닭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에서 파생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들 모든 하위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이들 하위가치들의 개념을 설명하면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는 개인의 존재 가치를 무엇보다 가장 귀중하게 여기며 개인의 복지를 최고 목표로 여기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가치를 토대로 민주주의가 갖는 모든 하위가치가 성립된다. 즉 인간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인간을 목적으로 삼으며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인간의 본질을 선한 것으로 믿으며, 각개인은 자기나름의 최선아실현을 위한 자결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개인의 성장과 사고와 활동에 외부로부터 부터의 부당한 억압이 가해져서는 안되는 것으로 믿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리를 허용하고 장려하려 한다. 또한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믿으며 개인의 지적 성장 가능성을 장려하기 때문에 진리의 절대성(絶對性)을 부인하고 진리의 상대성의 장점을 믿는다. 따라서 개인의 지성과 이성을 높이 평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하는 창의적인 진리의 탐색을 장려하여 지적활동의 자유를 권장하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하위가치들의 개념으로 일괄해서 설명하려 한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 설명이나 먼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과 하위가치들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하여 간략히 언급한 정도이며 뒤에 계속해서 하

위 가치들의 중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의 의의를 규명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고 다른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이란 인간을 모든것의 우위(優位)에 두고 목적으로 대접을 받으며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간이 목적으로 대접을 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소중히 여긴다는 뜻은 인간을 신주처럼 단상에 모시고 무슨 보물처럼 창고나 금고속에 잘 간수하여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진의(真意)는 사람이 자기 가진바 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밖으로 부터의 무리한 구속이나, 억압, 제재를 가함이 없는 자유로운 풍토와 기회를 제공하여 각 개인으로 하여금 그에게 가장 만족스럽고 가치있는 생활과 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가능하도록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보장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자유로운 생활과 활동은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사람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으로 취급되는 한, 바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여하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본질을 비교하는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을 목적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반면, 공산주의는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한다. 공산국가에서의 개인은 국가라는 큰 기체에 따라 마지못해 돌아가는 부분품에 지나지 않으며 당이나 독재자의 내키는 생각에 따라 죽고 사는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소수인으로 구성된 공산

당이나 혹은 몇몇 집권자들이 흔히 내세우는 목적은 국가적 전체적 이익이라고 하지만 기실은 내세우는 명분에 지나지 않으며, 그 국가적 이익 내지 전체적 이익이란 소수 집권자들이 원하는 이익이며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은 소수인의 집권자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산국가에서 국민 개인은 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종의 구실만을 담당하는 것이며 인간 개인이 주인으로서의 대접과 존경을 받기를 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아실현을 위한, 자기 가치에 따른 행복을 추구할 자유나 개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란 전혀 허용되지 못한다.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개인의 존엄성을 설명하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 났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이며 그 권리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믿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의 인종, 문화배경, 소속하는 사회계층, 경제적 지위, 용모, 성별, 성격, 능력, 흥미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평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신념이며, 각 개인의 본분대로 또는 원하는 대로 최대한의 자기실현을 성취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그가 속하는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독특한 방법과 능력으로 공헌하고 참여하는데 기쁨을 느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신념인 것이다. 이러한 신념은 평등의 개념에 반영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이라 하겠다. 인간존중의 개념을 심리학적인 관점으로도 중요시 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행동에 관한 현대과학은 인간존중이 한 개인의 성장에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주는 것이며, 그것이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 인간 개인은 창의적 성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며 이러한 가능성의 최대한의 발달은 외부로부터의 구속이 가해지지 않을 때 가능한 것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인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민주교육의 기본 이념이기도 한 것이다. 개인의 성장가능성을 믿는 한 개인 나름의 최선의 성장을 위해 자유가 보장되고 권장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필수적이 된다.

창의적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개인이 그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자아실현의 과정에 필요한 여건은 자유로운 표현과 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 여건인 것이다. 인간 유기체의 생리적 욕구가 그 유기체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정서적, 지적, 사회적, 성장발달을 위해서 심리적 사회적 욕구의 충족도 필요한 것이다. 심리적 사회적 욕구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애정, 타인으로부터의 안정감, 존경감, 성취감, 공포로부터의 자유등이며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좌절에 부딪치게 된다면 인간이 지니는 성장가능성의 건전한 실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최대한의 자기실현을 위한 인간의 기본욕구의 적절한 충족과 표현, 그리고 그 충족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는 어떤 방해나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할 인간의 권리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권위도 그것을 억압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것으로 믿는 신념이 민주주의의 기본 신념의 본질인 것이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자아실현의 기회를 억압하거나, 박탈하게 되면 결국 그 사회 전체를 약화 내지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와 권리를 묵살하고 침해하고 억압한 사회나 국가의 운명은 길지 못했고, 개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억압한 전체적 군주로서 끝끝내 영광스러운 승리와 존경을 받은자 없음을 역사적 사

실을 들어 그 실증을 제시할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간략하게나마 인간존중 사상의 사적고찰을 해보는 것도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 사상이 발달되지 못한 시대의 사회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물건 값만치도 여기지 않았다.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을 못살게 굴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을 마구 부려 먹었고,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돈으로 팔고 사기도 하였다. 이렇게 사람이 노예나 종으로 취급되는 것을 못 마땅히 여겨 사람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은 역사상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인간존중사상의 발달사적고찰을 폭넓게 취급하려면 한이 없을 것이나 대충 큰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로 대표적인 사건만을 지적하면, 중세 로마법의 제정, 영국에서 있었던 대헌장(大憲章: 마그나·카르타: 1215년)의 제정과 모범국회(1295년)의 구성, 14세기 이태리를 중심으로 있었던 르네상스운동, 16세기 종교개혁운동, 17세기 영국의 민권운동, 18세기 계몽운동, 미국의 독립운동과 1776년에 있었던 "독립선언서", 1789년의 불란서의 혁명, 그리고 1948년 12월에 48개국이 모여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등등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건이라 하겠다.

2 교수방법

본 주제에 관한 강의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을 이해시키고 개인의 존재가치를 존중하는 태도와 신념을 갖게하여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이해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주제의 초점은 공산주의와 비교하여 민주주의의 우월성

을 강조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개념의 설명이거나 민주주의의 본질을 분석함에 있어서 강사 나름의 실례를 제시함이 좋을 것이고 항상 공산주의의 이론과 실례를 비교함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자유, 평등, 권리, 책임등의 개념과 결부시켜 설명함이 좋을듯 하다. 권리와 자유 그리고 책임에 관한 것은 다음 주제들에서 다루어질 개념들이기 때문에 뒤로 미루어도 좋으나 설명의 편의상 뒤에 취급될 개념을 여기서 간략히 언급할 필요를 느낄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개념은 보다 추상적인 개념이고 권리와 책임은 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설명함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주제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평등이라는 개념과 결부시켜 설명함에 초점을 두고 헌법이나 미국 독립선언서등에 반영된 기본 정신을 본문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개념의 철학적인 해석과 아울러 심리학적인 의의를 규명하는 것도 쉬운 이해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내용개요에서 약술한 비와 같이 개인의 창의적 성장가능성과 개인의 신장, 자아실현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가치관적인 신념과 또 실제 개인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표현과 활동이 허용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외부로 부터의 무리한 구속과 억압을 받게 되면 건전한 개인의 발달이 저해되는 실례를 제시함이 좋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을 비교함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신념을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로 삼고 있음에 반하여 공산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강조할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는 인간 개인을 목적으로 삼고 공산주의는 인간 개인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실례를 제시하면서 공산주의의 모순과 민주주의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대조적 실패를 현실에 중점을 두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나 역사적인 사실을 예로 제시함이 효과적일 것이다.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와 강사가 갖는 보충설명을 위한 자료의 범위에 따라 역사적 혹은 현실적 문제를 취급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나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점은 구체적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1) 민주주의는 인간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믿으며, 목적으로서의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제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2) 모든 인간은 독립된 개인으로서 인정되고, 개성이 존중되고, 개인은 스스로의 복지 추구를 위한 능력과 최선아실현을 위한 능력을 소지한 자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3)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동등한 대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점.

4)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고 장려된다는 점.

5) 개인 내지 집단의 활동은 공적 복지와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 어서는 안된다는 점.

6) 민주주의가 갖는 모든 하위가치, 즉 인간의 목적성, 인간본질의 성선설, 진리의 상대성, 자유와 평등, 인간의 기본권리, 개성존중, 최선아실현을 위한 자결적 능력에 대한 신념, 성장가능성에 대한 신념, 지성우위에 대한 신념, 진보발달에 대한 신념, 과학적, 창의적, 실험적 문제해결을 높이 평가하는 태도, 도의적 책임 등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토대로 형성된 가치라는 점.

7) 민주주의는 인간을 목적으로 삼아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다른 모든것은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나 공산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여 소수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

8) 공산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개성을 무시하고, 개인의 이성적 활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3 참고문헌

- ① 오천석, 민주주의의 참된 모습, 서울: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8
(Ⅱ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이념" pp. 67-68)
- ② 이극찬(역), 시민 정부론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0.
- ③ 이영덕 "민주주의 기본가치와 민주시민의 자질" 한국의 민주적 발전과 성인교육의 과제, 중앙교육연구소, 1966, pp. 23-28
- ④ 차기백, 제3장 "민주주의의 확립" 박종홍 유달영(편) 국민윤리 서울:삼화출판사, 1970, pp. 125-140
- ⑤ Becker, Carl L. Modern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 Press, 1942.
- ⑥ Coren, Carl (ed); Communism, Fascism, and Democracy: The Theoretical Foundations, New York: Random House, 1962.
- ⑦ Dewey, John, A Common Faith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34.

- ⑧ Ebenstein, W. et al., American Democracy, New York : Harper & Row 1967, (Chapter I "Democracy as a system of valves" pp. 3-33.)
- ⑨ Laslett, P.(ed) 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 Oxford, 1956.
- ⑩ Mayo, H. B. An Introduction to Democratic Theory, New York : Oxford Univ. Press, 1960.
(Two "The Problem of defining democracy" pp. 21-34)
- ⑪ Popper, Karl R. The open society and Its Economics, 3rd(ed.) 2 vol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7.
- ⑫ Rejai, M. Democracy : The Contemporary Theories, New York : Atherton Press, 1967.

Ⅱ 인간의 기본 권리와 자유

1 내용개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믿고 소중히 여기는 신념에 있다면 이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내지 생활원리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고 권장하는 것에 있다. 본장의 제일 주제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한말로 규정한 것이라면 본 주제의 “인간의 기본권리와 자유”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주제의 강의 내용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이들 개념의 이해는 물론 실제 생활상태에서 구현되는 권리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육성하는 일에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이다.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구현하고 최선아 실현을 가능케 함에 필요한 기본권리 중의 하나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다. 밖으로 부터의 부당한 구속이나 제재를 받음이 없이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개인이 원하는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일치하는 생활원리인 것이다.

인간이 자기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자기에게 바람직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건강, 교육, 경제적 안정등도 필요할 것이나, 그 중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이다. 자유없는 생활은 노예나 짐승과 같다. 자유없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도 없고 최선아

실현(最善我實現)도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자유없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자유란 개인의 사고 의사표시, 행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상위자, 법률, 정부, 단체등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자유란 외부의 권리를 부정하고 항거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무제한의 자유, 즉 개인이 원하는 무엇이나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무제한의 자유는 실상 남의 자유를 구속하는 무질서한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유의 제한과 개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는 다음 주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문제는 뒤에 가서 취급하되 자유의 개념을 설명할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자유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도 문제되는 것은 행동의 자유이다. 즉 개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유이다. 그러나 개인이 행하는 행동에는 타인과 무관한 순전히 개인적인 사생활 범위안에서 행해지는 행동도 있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사회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행동도 있다.

사회와는 관계없는 사적인 행동, 즉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행동은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될 것이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 행동은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로 삼으려는 것은 사회적 의미를 갖는 행동의 자유가 문제이다.

사회적 의미를 갖는 행동의 자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략 세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자격으로

우리는 시민적 자유, 국가 성원으로 우리는 정치적 자유, 그리고 생활을 하는 경제적 인간의 자격으로 우리는 경제적 자유로 나누어진다. 이중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다음 장의 주제에서 취급 될 것이기 때문에 약하고 여기서는 모든 자유의 기본적 자유인 시민적 자유의 문제만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시민적 자유는 자유의 주체로서 개인이 누리는 기본권적 자유이며 이 기본권적 자유에는 인간의 생명, 건강 및 거주와 이주에 대한 위협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신체적 자유와 양심, 신앙, 사상,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의미하는 정신적 자유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체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중 타인과는 무관한 사적(私的) 그리고 내면적 자유는 무제한으로 허용되나 이러한 내면적 자유가 외부로 표명되고 조직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때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며 어느 정도의 제한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정신적 자유중 외부로 부터 표명되고 조직되는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의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자유라는 개념에서 제외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는 개인 자신의 최선을 이룩할 수 있는 자유 즉 자유로이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러한 의미의 자유는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자유의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가장 좋고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부로 부터의 구속이나 억압을 받음이 없이 의식적으로 자유를 행사할때 자아의 최선의 생활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참된 자유의 가치를 구현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아의 최선의 생활과 성장의 자유를 실제 사회적인 상황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자유로운 사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 의사표시의 자유, 거주와 이주의 자유, 신앙의 자유등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가 요망되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법이 보호하고 장려하는 자유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누리는 기본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자유로운 사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 2) 신앙을 자의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3)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출판을 할 수 있는 권리.
- 4) 평화로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집회와 결사의 자유)
- 5)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
- 6)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7)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8) 노사간에 정당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 9) 자유경쟁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 10) 계약을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는 권리.
- 11) 자유선거와 비밀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12) 부당한 압박에 대한 호소를 할 수 있는 권리.
- 13) 범법자의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14) 국가로 부터 정당한 보호와 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15)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여기에 제시한 인간의 기본권리의 각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 실례를 제시하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기본권리를 허용하고 장려하는 민주주의와 그렇지 못하는 공산주의와를 비교하여 민주국가와 공산국가에 있어서의 국민의 실제 사회생활의 양상을 비교 검토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실제 강의에 있어서 강사 나름으로 다양한 실례를 들어 각항목에 제시된 기본권리를 폭넓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에 그 요지만을 일괄해서 설명해둔다.

개인에게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도록 허용하고 장려하는 민주주의의 생활원리는 개인이 자기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타인이 개인의 행복을 규정지워 줄 수는 없다. 따라서 개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가장 좋고 보람있는 생활을 택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사생활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양심, 사상, 그리고 신앙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 중 내면적 자유이며 이는 개인의 이성적 판단을 존중히 여기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일치되는 생활원리인 것이다. 이러한 내면적 자유를 구속하는 곳에 개인의 존엄성과 최선아실현을 믿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게 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적 생활과정과 정치과정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언론자유는 근본적인 신념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의견 중에서 가장 좋은 의견은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장려될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참된 의견은 많은 사람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오랫동안 살아 남을 것이라고 믿는 점에 있다. 결사의 자유는 사회 성원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사회 내지 정부에 반영시키기 위한 수단의 구실을 한다. 이 때 결사란 일정한 공동 목적과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의사는 사회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같은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여 단체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사회적 방법인 것이다.

거주와 이동의 자유 역시 앞서 지적한 사생활의 자유, 신앙, 언론, 결사의 자유와 같이 자유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

적 자유인 시민적 자유에 속하는 것이며, 사유재산의 소유와 처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자유경쟁을 통한 이익추구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등은 경제적 자유에 속하는 것이며 이에 관해서는 제2장의 주제 Ⅲ, 자유경제체제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취급될 것이다. 그리고 자유선거와 비밀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법에 의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은 제2장의 제I 및 Ⅱ주제들에서 다시 취급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논점은 약하나 본 주제의 강의에서는 이들 기본권의 의의만은 간략히 설명하여 그 진의를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 교수방법

본 주제는 천번재의 주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번재의 주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에서 취급된 내용을 상기시켜 그 요지를 다시 명시한 다음 본 주제의 요지를 지적하며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최고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과 개인의 최선아실현(最善我實現)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생활원리를 본 주제에서 문제삼고 있음을 사전에 주지시킬 것이 요망된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실현 없이 민주주의의 최고 이념인 최선아실현은 불가능한 것이며, 자유, 평등, 인권이 이 최선아실현이라는 최고이념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자유, 평등, 인권은 민주주의의 최고 이념의 실현을 위한 수단 내지 조건, 혹은 생활원리인 것임을 강조 해두어야 할 것이다. 흔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문제로서 자유와 평등을 민주주의의 근본

적 이념으로 생각하는 오해를 풀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내지 최고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과 최선아실현이며 이 이념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건 내지 생활원리로서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개념을 정의지우는 문제를 취급하기에 앞서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함에 있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중요성과 그 의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의 구현과 최선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가 보장되고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같은 대우를 받는 평등이 보장되고 각자가 갖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의의를 충분히 설명한 다음 자유, 평등, 그리고 인권등의 개념을 풀어 설명해주는 순서로 본 주제의 내용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두 개념은 서로 상충(相衝)하는 면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만약 자유를 절대화하여 무제한의 자유를 추구한다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질서한 약육강식의 경쟁적 혼란으로 이끌 것이고 이러한 곳에 평등은 있을 수 없게 되며, 반면에 평등을 절대화 하여 만인을 강제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려면 개인차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자유와 평등은 서로 상충되는 면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상충적 현상은 그것을 각기 절대시킬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절대적 최고 이념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최선아실현이라는 최고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조건이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 인권은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

현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의 생활원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관해서는 내용개요에서 간략히 언급 하였으나 강사나름의 예를 들어 깊은 이해를 추구함이 좋을 것이다.

시간이 허용되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신분적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봉건사회의 주종적 인간관계를 타파하고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건설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개관하고 독재적 공산국가에 있어서의 자유탄압의 실정을 예를 들어 비교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유 개념을 설명한 다음 내용개요의 마지막 부분에 요약 제시된 인간의 기본 권리를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극히 간략히 요약된 내용이기 는 하나 이해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기본 권리는 실생활에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장점과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공산국가의 주민생활과를 비교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생활모형(生活模型)을 토의의 형식으로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토의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대인관계 양식이나 개인 생활, 가정, 학교, 사회등의 실제생활 사태에서 이야기되는 문제점을 발견케 하고 이를 민주적 생활원리와 인권을 적용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각자가 지녀야 할 사고방식, 생활양식, 태도들을 육성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Barker, E. principles of Social and political Theory, London: Oxford Univ. Press, 1967.
- ② Coker, Francis W. (ed), Democracy, Liberty and proPerty New York : The MacMillan, 1942.
- ③ Hayek, F.A. 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Univ. of Chicago Press, 1960.
- ④ Hook, S. political, power and personal Freedom, New York : Criterion Books, 1959.
- ⑤ pounds, R. L. & J. R. Bryner, The School in American Society, New York : The MacMillan, 1959.

Ⅲ 민주 시민으로서의 사회적책임

1 내용개요

본 주제에서는 주로 자유의 제한과 그 의의를 규명하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건전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관계에서 지켜야할 사회적 제도의 형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극단적이고 무제한한 자유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파괴하는 결과가 되고 무질서한 무정부적인 혼란한 사회를 야기하는 결과가 된다. 극단적인 자유는 다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개인은 누구나 같은 정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생활원리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무제한의 자유와 권리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사회에서는 개인에게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원만한 공동생활과 사회적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타인과 어울려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점유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특정 개인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나아가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하여 자유는 제한되며 통제된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자유의 제한은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국민 개인에게 같은 정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이며 결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억압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 하고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하는 자유의 제한은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타인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 행동에 국한된다. 따라서 타인과는 전혀 무관한 순수한 사적 행동은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된다. 사회적 의미를 갖는 행동에 한해서만 제한과 통제를 가하게 되는것이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통제의 원칙이다.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통제를 가하지 않을수 없는 문제로 흔히 논의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통제, 그리고 경제적 활동에 대한 통제등을 들 수 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건임은 전 주제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지나쳐 타인의 존엄성을 손상한다든가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파괴한다든가, 사회의 미풍을 해친다든가 또는 민주주의적 이념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민주주의적 사회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만인의 자유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내지 통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사의 자유에 대한 통제도 어떤 결과 내지 단체가 조직된 힘으로 개인이나 다른 단체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민주적 질서를 교란 내지 부인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가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경제적 자유 역시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 이외에 만인이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물질적 제조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에 의한 통제는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진다.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통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 했으나 통제하는 정도의 방법에는

어려운 문제가 수반된다. 어느정도의 자유의 허용과 어느 정도의 통제가 개인의 존엄성을 손상함이 없이 만인을 위한 보호조치로 규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설정이 크게 문제 된다.

통제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국민을 억압할 가능성이 없지않으므로 이러한 악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여 자유를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통제 방법인 것이다.

정부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로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는 법적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법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이나 집단에 가하는 법적 제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집회와 출판의 허가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부로부터 받게하는 조치는 첫번째의 방법에 속하는 통제 방법이며 법의 제한을 위반한 행동에 대해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두번째 방법에 속하는 통제방법이다. 사전통제 방법과 사후처벌 방법중 전자의 방법이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해석하여 정부에 그 통제의 한계를 엄격히 규정해 주도록 조치하고 있다.

사전에 언론, 출판, 결사를 허용해 주지 않으면 위의 자유는 전혀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며 허가를 해 줄 사람의 해석 여하에 따라 부당하게 그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후 처벌의 방법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위법성을 판가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편견에 의한 부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게 된다.

본 주제에서 언론, 출판, 결사, 그리고 경제적 자유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는 없고 또 그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문제는 법률의 문제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법률이 규정하는 자유의 범위와 한계를 초월할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문제는 본 주제의 범위에 넘어서는 것으로 제외된다. 다만 여기서 강조 되어야 할 점은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자유와 인권의 보호에 있는 것이며 사회의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의 제한과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점은 법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법은 사회적 약속으로 형성된다. 개인의 기본권리와 자유, 그리고 평등을 보호하고 사회적 질서와 안전을 유지 하기 위하여 사회성원이 합의하여 약속한 것이 법이다. 법은 사회적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과 규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장려하며 만일이 규범과 규칙을 어길 때에는 벌을 가하는 강제성을 갖는다. 그러나 법의 적극적인 의미는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려는 것이다. 법이 갖는 소극적 의미는 법을 위반했을 때 개인이나 집단에 가하는 일종의 처벌의 전제이다. 법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법의 기본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그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 할 것이 요청된다.

법의 준수는 민주시민으로서 수행해야할 사회적 책임 중 가장 중요한 영역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먼저 법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고 규정된 법의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할 것이 요청된다.

만인의 권한과 자유를 동등하게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개인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지우는 것은 필요한 것이나 외적 규제에 의한 통제를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으로 여기지는 않는

다. 민주사회가 이상으로 여기는 것은 개인 스스로의 내적 규제에 의한 자율적 통제이다. 개인이 사회적으로 성장하여 사회의 기본목적을 자신의 목적과 동일시하고 사회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실천하는 자아의 합립이 민주적 시민의 사회적 책임의 바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사회가 바라는 이상(理想)이다.

개인은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과 동시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국가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행동의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개인이 자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예를 제시해 둔다.

1)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 최선아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사회의 도덕적 규범에 벗어나는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

3) 개인이 지닌 잠재능력과 기술을 최대한으로 발전시켜 그 개인의 행복한 생활을 추구함은 물론, 그의 모든 재능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해야 한다.

4) 개인은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타인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의 질서와 복지를 손상함이 없고 또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5) 국가의 비상시에 국가의 안전을 위해 개인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6)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에 있어 개인간 혹은 집단간에 협동과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나 정당한 방법에 의한 선의의 경쟁을 택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7) 사회사정에 정통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에 공헌할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

2 교수방법

본 주제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지워 주고 개인이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인식케 하여 최선아실현을 위한 노력은 물론 사회의 질서와 복지,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봉사와 협동의 정신을 육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적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태도를 육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두번째의 주제에서 취급된 내용을 간략히 상기시켜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유와 권리의 보장과 신장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민주주의는 무질서한 자유방임주의나 무정부 상태의 사회나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본 주제를 취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제로 당면하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자유와 통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면서 사회의 질서와 복지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그 이념을 실현하는 과정을 중요시 하는 것이며 완성된 기성품(既成品)으로도 보지 않으며 민주주의는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남에게 주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그것은 살아 있는 생명체 처럼 항상 돌보고 가꾸어야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한 시대 한 사회의 여러 여건에 따라 달리 표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정도의 차이를 갖는다.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에서도 완성된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는 없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비민주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그들도 수세기에 걸쳐 여러가지 여건을 개선하면서 이룩한 노력의 결과 그 정도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실정을 이해케 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신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기본적 조건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질서와 국가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에 어느 정도 통제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본 주제의 내용에서 지적한 바 있다.

자유와 통제를 조화시키는 문제는 국가의 사회적 실정과 크게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의 선진 민주국가의 예를 기준으로 자유와 통제의 조화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실정에서 초래하는 자유와 통제의 조화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이념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그 이념구현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자유와 통제의 조화문제를 사회여건과 관련하여 논의됨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본주제의 내용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하나는 사회의 질서는 복지,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에 통제를 가하는 경우이다.

사회 질서와 복지,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개인내지 집단의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본문에서도 충분히 설명한 바 있고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의 경제활동에 통제를 가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다소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적 자유는 개인적, 지역적 빈부의 격차를 크게 조장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빈부의 차이를 순전히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여서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보호와 간섭을 요청하는 소리가 높아져 종전의 "국가로 부터의 자유" 에서 "국가에 의한 자유"를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에 의한 자유" 라고 해서 국가가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되는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위한 참정권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은 아니며 국가는 다만 전통적인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최선아실 현을 위한 물질적 경제적 제 조건을 보장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자유 국가에 있어서도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관여와 기능을 확대시켜 국가는 경제계획을 통한 기본적인 경정정책과 생산 및 유통면만이 아니라 소득과 분배면까지 관여하는 경제적 자유에 통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적 자유의 국가에 의한 통제에 의하여 확대되고 있는 국가의 권력이 경제적 자유 이외의 기본적인 자유마저 침해하게 될 우려를 예상할 수 있으나 국민에게 주어진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인 참정권으로 정부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독재로의 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되어야 할 문제는 국민 개인이 민주시민으로서 저야할 의무와 책임문제인 것이다.

질서있고 안정된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의 제한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켜

야할 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해야 할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의 책임의 예를 본 주제의 내용개요의 끝 부분에 소개한 바 있다. 그밖에도 보다 구체적인 언행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활동을 위한 방법 몇가지를 예시해 둔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한계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역할극(役割劇)이나 모의극(模議劇) 같은 것이 꽤 효과적이나 그리고 내적규제 능력(자율, 극기)의 배양을 위해서 특수 사례를 취급하여 심층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3 참고문헌

- 1) Backer, Carl. Freedom and Responsibility in the American Way of Life, New York : Knopf, 1945.
- 2) N.E.A., The Education of Free Men in a Democracy, Washington :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1941.

제 2 장 민주적 제도와 과정

민주주의의 정치 및 경제 제도는 전장에서 논의한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실제적 통치체제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믿는 신념과 그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통치제도의 양측면에 의해서 규정된다. 민주주의는 이념을 중요시할 뿐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을 또한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념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과 과정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면 민주주의의 뜻은 상실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제 1장에서 취급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그리고 그 실현과정등의 문제를 취급하게 된다.

첫째 주제 “정치적 신념과 정치제도”에서는 먼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일치되고 정치제도를 도출케한 기본적인 정치적 신념인 “개인의 자치적 능력에 대한 신념” “주권재민에 대한 신념” “법에 의한 통치” 등을 규명하고, 이러한 신념을 토대로한 제도로서 입헌정치, 삼권분립, 대의정치등의 내용이 논의될 것이다.

둘째 주제 “개인의 정치에의 참여와 정치과정”에서는 제도의 운영과정과 개인 및 단체의 정치과정에서의 참여의 의의를 규명하게 될 것이다.

이 주제에서 다루어질 문제는 선거, 정당, 다수결원리, 여론형성 과정과 토의과정 등이며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의 역할등이 분석될 것이다.

경제체제는 정치제도와 분리될 수 없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제이나 취급되어야 할 내용이 분량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하나의 독립된 주제로 따로 취급하게 된 것이다.

본장의 마지막 주제 「자유 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의 「행복추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자유경제의 기본 전제와 민주주의 기본 이념과의 관련성, 개인의 복지 증진과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는 자유경제의 장점을 공산국가의 경제와 비교하여 검토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자유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경제적 조직과 단체의 권한 및 책임등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I 민주주의의 정치적 신념과 정치제도

1 내용개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든 통치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제도를 이해하기에 앞서 그 기본적인 이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 요망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장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념에 관한 문제를 취급한 것이다.

그러나 전장에서 논의한 민주주의의 이념은 비단 정치제도에서 뿐 아니라 사회의 제반 제도에서도 구현될 수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이념인 것이다.

민주적 정치제도도 전장에서 논의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체계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 그 기본적인 이념에서 도출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정치적 신념의 기반위에 정치제도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먼저 민주정치의 이념적 기초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인간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자치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 2)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에게 귀속된다.
- 3) 공무원은 국민 공복으로서의 책임을 갖는다.
- 4) 국민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여 정부를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개편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5) 정부는 사회복지를 증진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 6) 정부는 사람의 자의(恣意)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이념과 일치되는 정치적 신념을 몇가지로 요약

하여 제시했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 개인의 자치적 능력을 믿는 신념이다.

국민 개인의 자치적 능력을 믿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가 택하는 정치형태를 민주주의로 받아들인다. 민주주의 내지 민주정치의 정의로서 흔히 인용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 중에도 민주주의의 정치적 신념의 핵심은 “국민에 의한 정치”인 것이다. 그 까닭은 “국민에 의한 정치가” 국민 개인의 자치적 능력을 믿는 민주적 신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치”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반드시 민주정치에 특유한 속성은 아니며 “국민에 의한 정치”만이 민주정치의 중요한 특성이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국민 스스로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특성이며 이러한 민주정치의 특성은 국민 개인의 자치적 능력을 믿는 신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신념은 국민 개인의 존엄성을 믿는 민주주의 기본적인 이념에 입각한 것이다.

“국민의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라도 그것이 “국민에 의한 정치”가 아니면 민주정치는 아닌 것이다.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정치나 권위주의적 정치도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음에 유의하고 그들이 제아무리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에 의한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민주정치는 아닌 것이다.

민주정치도 물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의 지향성은 당연히 “국민의, 국민에 의한 정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국민에 의한 정치가 당연히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것을 믿는 신념을 민주주의는 중요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 개인의 존엄성과 자치적 능력을 믿기 때문에 국민의 자치적 정치가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이며 좋은 정치가 될 것을 믿고 또 바라는 것이다.

만일 국민의 자치적 정부와 국민을 위한 좋은 정부 중 택일하고 하면 민주주의는 외부와 일부 특수층의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완성된 정부보다 미완성된 정부라도 국민에 의해서 결정되는 국민의 자치적 정부를 택할 것이다.

민주정치는 모든 정치적 권력은 국민에게 있음을 믿는다. 즉 주권재민(主權在民)에 대한 신념이 민주정치의 특성이다.

모든 정치적 권력은 국민에 의해서 결정되며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믿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정부를 수립하고 또 국민의 필요에 따라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기존의 정부를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갖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상에 예시한 정치적 신념을 토대로 국가의 통치체제를 확립하게 된 것이 오늘날 민주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정치제도인 것이다. 국민의 자치적 능력을 믿으나 국민 모두가 행정부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를 운영할 사람을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권리를 대행케 하는 것이며 국민 스스로가 직접 입법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입법의 권리를 대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치제도는 이와같이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과 이 방식에 따라 선출된 지도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규정해주는 것이다. 이 민주적 정치방식은 전 국민의 의사가 가능한 한 잘 반영되도록 하려는 제도로 구체화 된다.

입헌(立憲)제도, 삼권(三權)분립제도,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고 실천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예다.

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되는 제도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사실상 선진 민주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제도는 각기 다르다.

입헌정치제도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본질적 특성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시여겨지고 있으나 성문화된 헌법의 존재여부로 민주적 혹은 비민주적 국가를 판가름 할 수는 없다. 선진 민주국가의 하나인 영국의 경우 성문화된 헌법은 없으며 공산독재적인 소련은 성문화된 헌법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성문화된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입헌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은 각종 법령 사법판례, 관례의 종합인 것이다. 소련은 헌법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헌법이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않고 있기 때문에 그 헌법이 입헌정치제도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따른 통치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입헌정치이며 입헌정치的基本적 처리는 종전의 소수 특수층의 「인간에 의한 정부」에 「법에 의한 정부」를 대치함으로써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 인간적 자의(恣意)의 남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입헌정치는 민주적 정치제도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입헌주의를 민주주의와 동일시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입헌주의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의 의무로 민주적 혹은 비민주적 국가를 판가름 할 수는 없고 헌법의 내용 여하로 민주적 혹은 비민주적 국가를 판가름 하게 된다.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규정하고

그밖에 모든 절차와 제도를 규정한 헌법의 내용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고 운영될 때 이를 입헌민주정부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입헌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가 표명되고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필요로 한다. <국민에 의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근대 민주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정치제도는 정부를 운용할 사람(代表)을 선출하고 그들 대표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간접민주정치 내지 대의정치(代議政治)의 방식인 것이다.

대의정치는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로 하여금 사회 내지 국가의 의사를 결정, 집행하게 하는 정치제도이다. 따라서 대의정치의 중핵은 국회인 것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입법자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들에게 입법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의미에서 국회가 대의정치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것이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이기 때문에 행정부도 대의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동등한 지위에 있으면서 권력을 서로 견제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국가에서의 정치제도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의의도 바로 권력의 집중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된 제도이다. 군주나 독제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권력을 장악한자는 그것을 남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의 셋으로 분립시키고 이를 각각 독립기관에 부여하여 서로 견제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권력의 균형을 유지케 하고 있다.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정치제도에는 소수인의 자의에 따른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헌제도와 국민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

영시킬 수 있는 대의제도,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대표에게 주어진 권력을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삼권분립제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기본 이념과 정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제도와, 정치기술은 국가의 특수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입법권이 주어진 입법부도 단원제(單院制)를 택하고 있는 민주국가도 있으며 양원제(兩院制)를 택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행정부 역시 나라마다 다른 형태를 택하고 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다듬어진 이들 제 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현존하는 모든 제도중 최상의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나 수정과 보완이 필요치 않는 절대적인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

따라서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도와 정치기술의 활용이 필요하고 계속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믿는 것이 민주정치의 특성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이들 제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이냐의 문제도 중요하다. 제도의 운용문제에 관해서는 다음의 주제에서 취급될 것이기 때문에 본 주제에서는 주로 민주주의 기본 이념에 입각한 정치적 이념과 그 이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존의 정치제도들에 관해서만 극히 간략히 개관한 것이다.

2 교수방법

민주주의적 생활방식을 형성하는 여러가지 요소중에 민주적 정치제

도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흔히들 민주주의를 민주적 정치제도와 동일시 하려는 경향마저 없지 않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나 정치제도의 중요성은 충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 까닭은 정치제도에 의해서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이 규제되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운동시합의 목적이 무엇이던 간에 그 운동시합이 잘 이루어지게 되려면 그 시합의 운영방법이 크게 문제된다.

그 운영방법 여하에 따라 운동시합의 원래의 목적이 잘 실현될 수도 있고 전혀 목적인 바와 다른 방향으로 시합이 운영될 수도 있게 된다.

운동시합의 운영방법이 마치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치제도에 해당된다. 제아무리 좋은 이념이라 하더라도 그 실현을 위한 방법과 도구인 정치제도가 잘못되는 경우 그 이념은 있으나마나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제도는 어디까지나 방법이기 때문에 제도를 이해하기에 앞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이념에 투철해야 하고 또한 기본적인 이념에서 도출된 정치적 신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주제의 처음에 민주주의의 정치적 신념을 규명하려 한 것이다. 여기에 제시한 기본적인 신념의 요지를 여러 각도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자치 능력에 대한 신념, 국민에 의한 정치사상, 자연법, 사회계약론에 대한 이론등 여러 학자에 의하여 제시된 이론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이론을 구현하기 위한 역사적 과정을 실례를 들어 설명 할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 과정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의 당위성 여부에서 보다 그 실제적

구현 방법에 관해서 논란이 많았고 투쟁도 많았던 사실을 들어 민주주의 이념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의 확립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가는 과정이며 현재 민주국가에서 택하고 있는 제도는 현존하는 제도 중 최선의 것임을 다른 독재주의 국가의 것과 비교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체주의나 독재주의와는 대조적으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방법과 절차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정치제도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중요시 하는 것이며 제도와 그 제도의 운영 여하는 민주주의 사활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누구에게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스스로 가꾸어 가는 것임을 명시하게 하고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케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 주제에 계속 취급될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오병헌(역), 20세기 정부와 정치, 사상계사, 1962.
- ② 차기벽, 제2절 민주주의의 제도와 실제 박종홍·유달영(편), 국민윤리, 삼파출판사, 1970, pp. 140-154.
- ③ Appleby, paal. policy and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Alabama: Univ. of Alabama press, 1949.
- ④ Backer, E. Reflections on Government, London: Oxford Univ.

press, 1953.

- ⑤ Ebenstein.W.et al., American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1967.
- ⑥ Holcombe, Arthur N. The Constitutional System, Chicago: Scott, Foresman, 1964.
- ⑦ Hyneman, c.s. Bureaucracy in a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1950.
- ⑧ May , H.B. An Introduction to Democratic Theor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0.
- ⑨ pounds, R.L. and J.R.Bryner, The school in American Society ., New York: The MacMillan, 1959, pp.424~42.
- ⑩ pritchett, C.H. The American Constitution, New York: McGraw-Hil, 1959.
- ⑪ Stein, Harold(ed.),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Development,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52.

Ⅱ 개인의 정치 참여와 정치과정

1 내용개요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지향하는 이념도 중요하지만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전 주제에서 지적한 바 있다. 민주정치의 성패는 민주주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그 제도의 운영과정 여하에 달려 있다.

제도에 관해서는 전 주제에서 논의했고 그 제도의 운영과정과 개인 및 집단의 참정문제를 취급할 본 주제에서는 선거, 국민의사를 형성하는 여론, 정당, 다수결의 원리, 이익단체 등의 참정과정과 개인 및 집단의 참정에의 책임등에 관해서 논의 할 것이다.

민주정치의 기본 신념은 국민 개인의 자치적 능력을 믿는데 있으며 외부로부터 주어진 혹은 소수인에 의하여 완성된 좋은 정치보다 미완성된 자치적 정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또한 국민에 의한 정치가 민주정치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점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근대 민주국가가 택하고 있는 국민권리행사 방법은 국민의 직접적 행사가 아니라 권력을 대표에 위임하는 대의정치제도인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자치적 권리를 대표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력을 위임 받은 입법부의 의원이나 행정부의 수반이 국민의 의사를 어느정도 반영시키느냐가 민주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나 권력을 위임하게 될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이 곧 선거인 것이다. 선거제도는 그 존재 유무보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집약 표시하여 대표를 선출하느냐의 선거과정이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국민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정부에 반영시킬 수 없고 국민의 의사가 조직화 될 때 가장 효과있게 정부에 반영된다.

국민의 의사를 조직화하여 정부에 반영케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가 정당인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통합하고 이를 정부에 반영케 하는 역할은 정당이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은 대의정치체도의 실제 운영과정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의사는 다양하고 또 그 다양성을 권장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선거때 국민의 선택 범위가 넓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르기 위하여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복수정당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복수 정당제도는 민주정치의 필요 조건으로 요구되는 까닭은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의 선택의 범위를 확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산국가에서 볼 수 있는 일당제 국가의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한 대의적 성격을 가지기 보다 정부의 독재성을 은폐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통합하고 이를 정부에 반영케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은 사회와 국가 국민과 정부의 사이를 이어주는 조정자 내지 중재자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당은 구체적으로 국가 정책에 의거해야 할 기본강령과 이를 수행할 의무들을 유권자에게 제공한다.

민주정치에 있어서의 대의제도는 국민의 의사의 다양성에 기반을 둔 복수정당과 국민이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맞는 정당의 강령과 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를 통해서 실현된다. 그리고 국민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국

민이 정부를 통제 내지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대의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정부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국민에게 대해서 지는 정부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정부가 어느 정도 잘 수행하느냐를 국민이 지켜보고 통제 내지 견제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선거를 통해 정권의 교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에게 보유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산국가와 같은 일당제 국가의 선거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권교체의 권한이 국민에게 실제로 주어지지 않는다.

민주국가의 대의정치를 운영하는 기본원리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의 권리를 대행할 대표를 선출하는 대표의 원리와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통합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다수결의 원리가 그 주축을 이룬다.

대표의 원리란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통합하여 국가의사로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수결의 원리는 다양하고 상이한 국민의 의사와 주장을 통합하여 국가의사로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원리는 국민의 의사를 통합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민이 갖는 의사나 주장은 다양하고 서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국가의사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의견과 주장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과 주장에 따라 국가의사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결코 소수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의미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이 민주국가에 있어서 하나의 특색인 것이다.

국민 각자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토론을

통한 여론의 조성 과정이 필요하게 되며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서로의 상이한 의견과 주장이 교환되고 설득과 타협, 이해와 양해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져 나아가 전체의 의사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토론은 민주적 정치과정에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것이며 중요한 교육적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토론은 국민 스스로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적 과정인 동시에 이를 통하여 다수의 의견을 형성해가는 민주적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다수의 의견은 질적 무위성이 지배하는 새로운 의미의 의사로서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다.

토론은 다수결의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과정이며 토론 과정의 성격에 따라 다수결은 민주적일 수도 있고 비민주적일 수도 있게 된다.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곳에 있어서의 다수결은 도리어 독재나 소수지배를 위장하는 절차에 불과하게 된다.

공산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수결은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당제인 공산당의 독재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집약하고 국가의 사로서 정부의 시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다수 정당은 민주국가에서 허용되고 장려되지만 정당만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총망라 하기에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여기에 민주국가에서는 다양한 이익단체들이 생기게 된다. 이들 이익단체들은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직을 규합하고, 정부의 정책에 그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정당과 정치적 이익단체는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정부에 반영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정당은 대표자의 선출에 주된 관심을 갖는 반면, 이익단체는 정책에 주된 관심을 갖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조직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욱 신장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그들의 주장을 반영하도록 집단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그들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다른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과 토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공산독재 국가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이익추구를 허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다양한 이익단체의 구성을 통제한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국가가 제시하는 단일목적(단일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민을 총동원시키는 일이 단일정당인 공산당의 권한이며 의무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단일적 이익과 상이한 이익추구를 위한 단체의 형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산독재국가에서도 명목상의 이익단체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들이 담당하는 역할에 있어 민주국가의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민주국가의 이익단체는 국민의 의사와 주장을 정부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반하여, 독재국가에서의 이익단체는 국가와 당의 시책을 국민에게 파급케 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

다시말하면 독재국가의 이익단체는 독재자 내지 정부의 궤퇴노릇을 하기 마련이며, 국민의 편에서 있기라기보다 정부의 편에서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다양한 이익단체들로서 노동조합, 부인회, 종교단체, 각종 지원단체, 의사회, 약사회, 예술인 단체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주로 직종별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하여

여 정부에 대해서 압력과 통제를 가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익단체를 흔히 압력단체라고도 불리어진다.

이미 시사한 바와 같이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정치적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내지 집단이 져야할 책임과 의무가 중시된다. 본 주제의 마지막 문제로 개인 내지 집단이 민주적인 정치적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책임문제를 간결히 규명해 보기로 한다.

첫째 국민각자는 사회적 문제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해지는 정책등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국민이 사회문제와 그 문제해결을 위해 취해지는 공적조처에 전혀 무관심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정보에 따른 이해의 기반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면 국민의 의사에 의한 정치과정의 운영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사회문제에 관한 국민의 의사가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에 터한 의사라야 할 것이다.

민주정치의 원리인 «국민에 의한 정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되느냐의 문제에 앞서 그 의사가 어느정도 정확하고 정당한 것이냐가 문제된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 아니며 또한 어느 특정의 소수인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민주주의는 허울만의 것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 스스로가 가꾸어 만들어 가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라면 민주정치를 어떻게 가꾸고 만들어 나가느냐는 문제는 어느

특정인에 대한 책임이라기 보다 국민 각자에 그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국민 각자는 자기의 의견과 주장을 정당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그 의견들을 집약하여 국민의 권리를 위임한 대표들에게 전달하고 그들 대표들을 통하여 국민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첫번째의 문제는 의견을 제시하기 이전의 문제라면 이 둘째번의 문제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사를 반영케 하는 것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셋째,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집단적인 의사를 집약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합의의 과정이 중시되며 개인은 합의된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하고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책임과 미덕을 가져야 한다.

네째, 국민 각자는 정치적 권력을 위임할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적극 참여할 책임을 져야한다.

다섯째, 국민 개인은 국가적인 비상시에 정부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협조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적인 비상사태라 함은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가 야기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앞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국민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여섯째, 개인과 집단은 법을 준수하고 불합리함을 시정할 필요가 있을때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할 책임을 져야한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개인의 의사와 행동을 존중하되 부당한 행동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개인 및 집단의 행위의 부당성은 정당

한 법적 절차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이 민주사회의 특징이다.

2 교수방법

본 주제에서 강조되어야 할 요지는 민주주의 제도의 실제적인 운용 과정의 중요성과 제도의 운영 과정에 개인 및 집단이 참여하여 담당하는 역할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개인 및 집단이 져야할 책임등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주제의 내용개요에서 먼저 정치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근대 민주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했다. 즉 선거, 정당, 여론, 형성과 토론, 다수결 및 이의단체의 역할과 기능 등에 관하여 극히 개략적인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에 따라 내용에서 제시한 개념의 설명에 보충되어야 할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강조되어야 할 요지는 제도의 운용과정의 중요성이며 나아가 민주국가의 정치제도와 공산국가의 정치제도와 비교도 전주제에서 취급되었을 것이나 제도 자체의 비교 보다 그 제도의 운영과정의 비교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공산국가에서 택하고 있는 정치제도는 민주국가의 것과 유사한 점도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차이는 그 제도의 운영과정에 있음을 명백히 해야할 것이다.

제도의 운영과정 여하에 따라 제도의 민주성과 비민주성이 결정된다는 점과, 민주국가에서는 이념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그 제도의 운용과정을 동일하게 중요시하는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강의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점은 제도의 실제 운용과정에 참여하는 개인 및 집단의 책임 문제이다.

내용개요의 마지막 부분에 개인 및 집단이 준수하여야 할 책임들

을 예시하긴 했으나 그것만으로 국한될 성질의 것은 아니며 내용개
요에 소개된 전과정에서도 개인 및 집단의 역할을 시사할 수도 있
을 것이며 보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제도의 실제 운용과정의
효율화를 위해 저야할 책임의 문제를 부각시켜 충분한 이해와 정당한
방법에 의한 정치참여의 의욕을 북돋울 수 있도록 강의에서 유의해
야 할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Berman, D. In Congress Assembled: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Government, New York: MacMillan, 1964.
- ② Davies, F.C. Human Nature in politics, New York: Wiley, 1963.
- ③ Duveger, M.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New York: Wiley, 1956.
- ④ The Responsible Electorate,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66.
- ⑤ Key, V.O. gr. Politice, parties and pressure Groups, New York: Crowell, 1964.
- ⑥ Lane, R.E. political Life, New York: Free press, 1959.
- ⑦ Lazarafield, paul F. and others,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48.
- ⑧ Milbrath, L.W. political, participation, Chicago: Rand McNally, 1965.
- ⑨ Schramm, W. process an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s,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1965.

⑩ Truman, D. The Governmental process, New York: Knopf, 1951.

⑪ Zeigler, H. Interest Groups in American Socie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64.

Ⅲ 자유경제 체제

1 내용개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나 그 분량과 중요성에 비추어 경제체제를 따로 한 독립된 주제로 취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의 경제체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제도 등과 연관시켜야 할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본 주제의 내용은 주로 경제체제에만 국한시킬 것이며, 또한 본 주제에서는 경제체제의 제반에 걸친 문제를 다 취급하지 못하여 다만 그 기본적인 원리에만 국한되고 있음을 미리 지적해 둔다.

민주국가의 경제체제를 흔히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알려져 있으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본 원리는 자유 경제에 두고 있다. 자유경제의 기본정신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개인의 *행복추구 (The pursuit of happiness)*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최선아의 실현*과 일치되는 경제적 활동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 정치제도의 기본 원리도 개인의 자치적 능력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체제의 기본원리도 개인이 자기 행복추구를 위한 능력과 노력을 믿고 이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권장하려는 이념에 그 기반을 둔다.

개인의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주관적 판단과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민주주의는 믿으며 바람직한 생활

을 위해 필요로 하는 물질적 정신적 수단을 획득하려는 바람직한 능력과 노력을 개인이 소지하고 있음을 민주주의는 믿기 때문에 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려하려는 것이 자유경제의 기본 이념인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개인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에의 의욕을 고취시켜 인간이 갖는 능력과 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케 하여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해서는 물론, 민주주의는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케 하는 것으로 믿는다.

인간은 외부적 강요에 의하여 일에 임하게 될 때와 스스로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일에 임하는 경우에 따라 의욕과 노력에는 큰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능력과 노력을 믿어, 개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민주국가와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공산독재 국가와의 경제성장에서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을 입증하는 실 예를 여러나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자연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여건을 가진 서전이나 노르웨이 (Norway) 같은 나라는 민주적 자유경제체제의 채택과 그의 효과적인 활용에 따라 높은 수준의 경제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 국가의 경제적 성장이 촉진된 것이라는 예는 이차대전후의 서독과 일본의 경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두나라에 있어서 역사상 과거에 있었던 전체주의적 정치체제에서 보다 대전후 택한 민주적 정치체도와 자유 경제체제하에 그들의 경제성장은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촉진된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나라의 **경제적 기적**은 우연한 기적은 아니며, 대전후 그들이 택한 민주적 정

치제도와 자유경제체제의 기반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아 타당하며 학자들도 그같이 말하고 있다.

민주적 정치제도나 자유경제체제는 개인의 복지향상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제공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이들 제도 자체가 개인의 복지나 경제성장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경제성장은 다른 많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자유의 보장만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리라 보장할 수는 없다. 인구의 증가, 종교, 인생관과 세계관 그리고 자연관 등의 가치관, 일에 대한 태도, 교육 등이 경제성장에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경제체제나 정치적 제도만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는 없게 된다.

정치적 민주주의제도를 가진 인도의 경제성장이 보잘것 없게 된 까닭은 제도에 있다가 보다 많은 인구, 현세부정적 소극적 종교관과 인생관 등의 가치관과 일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보아 민주적 정치제도와 자유경제체제가 경제성장을 위해 유리할 것이라는 가정은 같은 여건하에 개인으로 하여금 강제 노동을 강요했을 때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장려했을 때 어느것이 경제적 의욕과 활동을 더 크게 촉진하게 될 것이냐로 입증될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우기 개인의 행복은 개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규정되며 행복추구를 위한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믿어 개인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의 우월성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외부적 강요에 따라 활동하게 하는 공산독재의 것에 비하여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전 주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기본적 자유

는 크게 분류하여, 시민적 자유, 정치적 자유, 그리고 경제적 자유의 셋으로 나누어 진다.

이들 자유는 영역에 있어서 분류된 것이며 기본적인 이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여기서 좀더 설명해 둘것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발달된다. 그러나 하나의 자유가 다른 자유를 결정하는 그러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는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민주국가들의 발달과정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강화 보완케 하고 또한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를 강화 보완하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되어 온 것이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고 결과라는 그러한 관계를 성립시킬 수는 없지만 두 자유는 같은 이념과 가치, 그리고 태도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상보적 관계를 가지면서 발달되는 것이다. 그와같은 기반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과 ◦최선아의 실현◦에 대한 신념인 것이다. 이를 다시 경제적인 의미로 풀이하면, 개인은 자기의 행복추구를 위해 무엇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능력과 노력을 믿는 것이 자유 경제의 기본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대한 법의 규정도 결국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 파생된다.

경제적 자유란 모든 개인이 자기의 원에 따라 일하고 그 결과로 얻은 소득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며 그 재산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자기가 노력하여 얻게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해 주고,

이에 대한 저축, 교환 및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할 때, 그 개인은 일에 대한 보람과 행복추구에 대한 보람을 갖게 되고 인정된 생활의 기반 위에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 최선아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개인의 재산권이나 사유재산권의 보장은 영리 추구의 자유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의 기본 원리가 되었고, 자본주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 온 것이다. 본 주제에 강의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정당한 법적 절차없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 (2) 범죄에 대한 처벌의 경우 이외에는 개인을 강제노동 시킬 수 없다.
- (3) 정당한 보상없이 개인의 재산을 공유로 사용할 수 없다.
- (4) 국민의 합의(국회의원 대다수에 의하여 결정되는)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들 사유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다.

① 사유재산권 :

- 개인은 토지, 가옥, 재산, 화폐를 자유로히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 개인은 자연자원과 생산수단을 자유로히 소유할 수 있다.
- 개인이 자기의 재산을 그가 자유로히 택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개인은 공중위생, 안전, 질서, 공익등 공공복지를 침해하는 일에 그의 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② 개인 사업의 특권 :

- 개인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또한 자유로히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 개인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지시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다.
- 개인은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저축하고, 소비하고, 또한 투자할 수 있다.
- 개인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개인은 자기의 생각이나 발명에 대하여 특허 및 출판권의 보장에 의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③ 개인 노동의 특권 :

- 개인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직업을 가지고 노동할 수 있다.
- 개인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가졌던 직업을 포기할 수 있다.
- 개인은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④ 경제적 조직과 단체의 권한 및 책임

- 사용자나 노동자는 자유로운 방법에 의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을 형성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이나 기업협회는 그들의 단체 운영을 위해 기금을 모을 수 있다.
-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흥정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쟁의 또는 파업할 수 있다.
- 사용자나 노동자는 그들의 조직된 권력으로 매매를 구속할 수 없다.
- 사용자나 노동자는 국가의 안전,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에 그들의 조직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2 교수방법

본 주제의 강의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민주국가에서 허용하고 장려하는 경제활동의 자유와 공산국가에서의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공산국가에서의 경제활동의 통제를 비교하는데 있다. 그러나 본 주제의 내용에서는 공산주의의 자유 경제체제의 기본적인 요지만을 요약 제시한 것이다. 공산주의의 경제체제에 관해서는 다른 주제에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본 주제에서는 약했으며 실제 강의에서는 민주국가의 경제와 공산국가의 것파 비교하여 민주주의의 자유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체제에 있어서 양 진영간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지는 않았으나 자유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통제하의 경제성장과 자유 경제하의 성장을 몇 나라의 실례를 예시하였다. 물론 자유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의 경제현상을 전문적인 경제이론의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나 양진영 국가의 경제 성장의 현실을 분석 제시하는 편이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강사의 전문적인 식견에 따라서는 이론적인 비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제를 달리하여 본서에서도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요약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 경제체제의 기본적 바탕이 되는 민주주의 기본 이념과 자유 경제의 기본 원리와의 연결시켜 이해시키는 일은 중요하다. 이러한 설명을 위해 본 주제의 내용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경제 활동의 기본 원리에 관해서 간략히 언급했으나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례를 제시하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주제의 내용 개요의 마지막 부분에 요약 제시된 경제 활동의 자유에 관해서도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 주제의 강의에서 주의를 기우려야 할 점은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와의 비교와 그리고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경제활동의 통제에 관한 것이다.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와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그중 어느 하나가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라는 인과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양자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는 발달과정을 밟고 있음을 내용 개요에서 지적한 바 있다.

개인의 자치적 능력을 믿는 정치적 신념에서 출발한 정치제도나 개인의 복지추구를 위한 능력을 믿고 이를 최대한으로 허용하고 장려하는 경제적 신념과 제도는 모두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최선의 이익의 실현의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초기단계에는 국민의 관심은 주로 국가의 간섭을 배격하기 위한 정치적 자유의 추구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치적 자유의 쟁취와 더불어 개인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요구하게 된 것이 서구 민주국가의 발달 과정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은 종전의 «국가에의 자유»

에서 < 국가에 의한 자유 > 를 추구하기에 이르고 있다.

경제적 자유는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으로 간주되는 삼대 자유의 하나이다.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최선아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국가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게 되는 필요성과 그 통제의 한계등에 관해서 전 주제에서 논의한 바 있다.

최근 민주국가에서 취하는 자유의 통제 중에도 경제활동의 통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가능한 한 많은 자유를 부여해야 하지만, 자유방임의 상태에서는 만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없고 또한 자유의 외적 조건으로서의 기본적인 경제적 여건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다소 통제를 가하게 되는 것이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허용하게 된 결과 자본주의적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게는 되었지만 빈부의 차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도 물론 부인할 수는 없다.

경제적 자유에 통제를 가해야 할 필요성에 이론적 근거를 정립한 「토마스 힐 그린」은 < 만인이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도모하게 하기 위한 외적 조건으로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국가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보호와 간섭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 설명하면서 그는 국가권력이 개인 생활에 간섭할 수 있는 한계를 제시하였다. 그는 또 개인의 기본적 인권(시민적 자유)과 참정권(정치적 자유)은 민주주의의 이념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로서 확보하고, 국가는 다만 전통적인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여 개인의 최선아의 실현을 위한 물질적

인 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간섭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가 점차 확대되어 오늘날 민주국가들은 경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그의 추진을 위해 경제적 자유에 대한 통제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제활동의 통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최선아의 실현을 위한 외적 조건의 보장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것이며 국가권력의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의 제한과 통제의 의미와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민주국가의 경제계획 및 정책과 경제 성장,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시책,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 등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의의와 실제를 분석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Anderson, J.E. politics and the Economy, Boston: Little Brown, 1966.
- ② Arnold, T.W. The Folklore of capitalism, New Haven: Yale Univ. Press, 1937.
- ③ Beard, C.A. The Economic Basis of politics, New York: Knopf, 1922.
- ④ Bernstein, p.L. The Price of Prosperity, garden city, N.Y.: Doubleday, 1962.
- ⑤ Friedman, M.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2.

- ⑥ Schemseter, J.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1942.
- ⑦ Shonfield, A. Modern Capitalism. The changing Balance
of public and Private Power,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5.

제 3 장 민주적 생활양식

민주주의는 정치형태나 경제체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나 경제가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논할때 흔히 정치양식과 경제양식에 결부시켜 그 뜻을 밝히려 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나 경제는 사회생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정치형태나 경제체제만으로 해석하는 민주주의의 일부분만을 보는 결과가 된다. 민주주의는 생활원리이며 이 원리가 모든 생활양식에 구체화됨으로써 민주주의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민주사회의 성격을 규명하고 다음에 개인적 차원에서 민주적 인성과 태도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갈등의 소제와 그 해결과정에 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본 장의 첫째주제 “민주사회의 성격”에서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성격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둘째 주제인 “민주적 인성과 태도”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개인의 자질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장의 마지막 주제인 “갈등의 건설적 해결”에서는 문제의 소재와 그 해결과정 등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I 생활양식 으로서의 민주주의

1 내용개요

민주주의는 정치체제나 경제체제 이상의 것이며 전생활양식이기 때문에 정치체제나 경제체제만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으며 민주적 정치체제나 경제체제를 갖춤으로써만이 참된 민주주의 사회를 성립시킬 수 없다.

앞 주제들에서 지적한 바 있는 정치 및 경제제도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통치체제인 것이나 이들 제도는 국민 개개인이 민주적 생활원리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만일 국민 개개인이 민주적 생활원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체제나 제도가 아무리 민주적인 것이라 해도 허울만의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실을 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사회체제는 사람이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할 것이라는 규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며 규정에 따라 사람이 실제로 행동하게 될 때 그 체제는 명실공히 산체제가 된다.

형식적인 정치체제나 제도는 민주적이면서 실제 생활양식은 극히 비민주적인 나라가 있다.

공화국이라는 이름과 민주적 이념을 담은 헌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재정치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를 중남미의 여러나라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민주적 생활양식이 지배적인 나라인 영국, 미국, 네델란드 등은 각기 다른 형태의 정치체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정치체도만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규명할 수 없음

을 알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형식적 제도보다 생활양식이 민주주의의 사활(전경)을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민주적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처지이나 그 자체가 민주적 사회생활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민주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민주적 사고와 행동을 하고 민주주의 이념이 국민의 전체 생활양식에 반영될 때 비로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사회가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뜻이 정치제도에 국한되어 해석되지 않고 범위를 넓혀 국민의 생활양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 이념이 국민의 생활전체를 이끄는 원리가 되고 신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생활원리가 개인의 사고 행동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는 생활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과 최선아의 실현에 있음을 처음의 주제에서 지적한 바 있다.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관점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인간관계 원리인 것이다.

사람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사회의 생활은 달라진다. 사람은 누구나 귀중한 것이며 사람의 가치는 어떠한 다른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지상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사람에 대한 태도나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민주주의는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면 누구나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는 등

등한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사회계층이 낮다고 사람을 천시하거나 여자라고 무시하거나 어린이를 어른의 부속물로 생각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업신여기거나 하면, 이러한 곳에 인권의 존중이라든가, 사람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곳에 민주사회가 이룩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민주사회는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자유와 평등을 기동으로 하는 사회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민주사회의 특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 특성을 몇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람의 능력을 믿는 사회
- 2)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
- 3) 다원(多元)의 사회
- 4) 자율적 활동이 존중되는 사회
- 5) 지성 우위의 사회
- 6) 과학적 실험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을 존중하는 사회
- 7) 협의와 협동의 사회
- 8) 다수와 소수가 다 같이 존중되는 사회
- 9) 공공의 복지를 위하는 사회
- 10) 공개사회
- 11) 법이 다스리는 사회
- 12) 진보적인 사회

여기에서 지적한 민주사회의 특성은 민주주의 기본이념에 그 바탕

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기본적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 바 있다. 그 믿음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인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이념으로 개인의 최선아의 실현을 위한 능력, 개인의 자치적 능력,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능력을 민주주의는 믿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위에 민주사회는 세워지는 것이다. 여기에 유의해야 할 점은 인간, 사람, 개인 등으로 표현된 개념의 해석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사람은 특수한 몇몇 개인을 일컫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특수한 개인의 능력만을 믿고 그 사람에게 만인의 운명을 맡겨 그 사람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집단이나 사회는 민주적일 수 없다.

사회적인 신분여하를 묻지 않고 개인을 누구나 같은 사람으로 존중하고 개개인이 갖는 능력을 존중하고 믿는 사회가 민주사회의 특성이기 때문에 민주사회는 또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개성(個性)을 존중하게 된다.

독재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기를 바란다. 독재자는 그의 개인적인 이념이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모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며 또 강요하게 된다. 개인이 원하는데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면 독재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독재사회에서 개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단(異端)으로 취급되며 그러한 사회에서는 개성이 존중되지 않을 뿐아니라 도리어 크게 벌을 받게 된다.

민주사회에서 개성이 존중되는 까닭은 사람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며 개인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점에서 선택이 가

능하고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는데서 진보가 있을 수 있다는 생활 원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일치되는 생각이다.

민주사회에서는 개성을 존중히 여길 뿐 아니라 개성을 장려한다.

각 개인이 갖는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 성장에 필요한 자극을 줌으로써 개인은 그가 지닌 바 능력과 재질을 발휘하여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사회는 이와 같은 개인의 노력의 총화로 진보 발전될 수 있다는 신념을 민주사회는 믿고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는 개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다양성을 허용하고 장려한다. 사고와 행동의 획일성을 강요하는 독재사회에 비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인생관과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다양성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특성이다.

개성의 존중은 사람의 존엄성을 소중히 하는 사회에 있어 당연한 일이며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도 개인의 최선아의 실현을 믿고 장려하는 사회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다. 독재자의 명령에 맹목적인 복종만을 필요로 하는 독재사회에 있어서는 개성의 존중, 개인의 자율성, 사회적 다양성은 위험한 특성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이들 특성을 환영하고 장려한다. 또한 독재사회에서 위협시하는 것은 개인의 지성이다.

국민개 개인의 지성과 이성, 독재자의 권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독재사회에서는 개인의 지성적 활동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독재국가는 특수한 개인의 독재의 힘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민주사회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자성의 활동과 탐구에 의하여 개인

의 생활을 부되게 할뿐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바른 길이며, 또한 사회가 발전하고 풍요해지는 수단임을 굳게 믿고 있다. 지성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되며 의심을 해소하게 되고 다른 의견을 토의하여 의견의 총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특징이다.

인간의 지성과 경험의 중요성을 믿기 때문에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진리도 변화할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의 지성에 의하여 항상 검토되어 질 수 있는 잠정적인 의의를 갖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믿는다. 따라서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문제해결을 존중히 여긴다.

문제를 소수인의 자의나 힘으로 혹은 감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지성을 동원하는 과학적 사고로 해결하려는 민주적 문제해결의 방법을 취한다. 과학적 사고를 위해서는 진정한 의심과 회의는 필수적이다.

기존하는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보고 검토하여 보다 나은 진리를 탐색하는 태도를 민주주의사회는 장려한다. 독재주의 사회에서는 진리의 절대성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내세우는 진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심을 갖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지성적 탐색을 부인한다. 과학적 사고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진리를 탐구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민주사회는 믿고 개인의 지성과 과학적 사고를 장려하는 것이다.

민주사회는 어느 특정인의 의견이나 능력을 믿기보다 만인의 의견과 능력을 다 같이 존중하고 믿는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를 허용하고 장려한다.

독재사회에서는 한 의견만이 존중되고 강요되지만 민주사회에서는 만인의 의견이 다 같이 존중된다. 민주국가에서는 한사람이나 몇몇 개인의 의견이 곧 법이나 명령이 되지 못하며 어느 의견이나 공중의 여론에 의하여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시말하면 개인의 의견은

토의와 협의에 의하여 옳고 그름이 가려지고 옳은 의견만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게 되며 이러한 옳은 의견이 국민의 의사로서 집약되어 정책적으로 받아 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의사 결정과정은 정치적 과정에서 설명한 바 있다. 개인의 의견은 물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협의와 토의를 거쳐 집약된 다수의 의견에 따라 국가의 정책으로 혹은 법으로 규정되며 이렇게 규정된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민주사회의 특성인 것이다. 여기에서 법이 다스리는 사회의 공공복지를 위하는 민주사회의 특성을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법은 만인에 있어 의견의 총화이며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민주사회의 최종의 목표는 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의 복지를 최대한으로 증진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의 의견에 따르기 보다 만인의 의견에 조차 생활원리를 규정하게 된다.

개인의 행복이 무엇이냐를 개인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듯이 국민의 행복이 무엇이냐도 국민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민주사회는 믿는다. 이러한 국민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의 총화로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법치국가인 특성이며 법은 공공의 복지와 사회적 질서 및 안전을 도모하기에 개인의 최선아실현의 방법인 것이다.

독재국가는 독재자 개인의 의견이 곧 법이요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고 만인의 의견의 총화도 이루어 지는

법이 필요없다. 독재국가는 특수개인의 사람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사회이나 민주국가는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사회이며 법은 만인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

인의 의견의 총화로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독재국가의 특성이 폐쇄적이고 고정적이라면 민주국가의 특성은 공개적이고 개방적이며 진보적이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혹은 정부에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

사회에서 혹은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나쁜 모든 것을 국민이 알고 있음으로써 올바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는 만인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광장에서 모든 일을 수행하고 또 의도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 이해시키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믿고 있다.

민주사회의 특성으로 공개적이고 개방적이며 또한 유동적이고 진보적이라는 의미는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사회 내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만인이 보고 알 수 있게 문이 열려져 있다는 의미와 국민의 여러 다른 의견이 받아들여 진다는 의미의 것이 공개적이란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개적이란 의미에는 유동적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한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한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한 단체에서 다른 단체로, 혹은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인의 취미와 능력과 이상에 따라 자유로히 옮겨 갈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도 공개적 혹은 개방적이라는 뜻에 포함된다.

또한 민주주의는 사람의 능력을 믿고 그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 역시 계속 발전 진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믿고 노력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이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상을 실현해가는 과정에 있음을 믿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갖는 사회에 많은 모순과 결점, 그리고 문제가 있음을 알지만 실망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며 서로 협동하여 노력하면 사회는 발전하고 진보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이념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2 교수방법

본 주제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 정치양식만으로 민주주의를 규정할 수 없는 실례를 들어 그 뜻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선진 민주국가들이 갖는 정치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해도 좋을 것이고, 또한 독재 국가들이 갖는 정치형태와 실제적인 사회생활양식을 비교, 검토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양식보다 생활양식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결정된다는 요지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제도나 경제체제의 중요성이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의 특성을 몇개로 분류하여 먼저 제시하고 그 특성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했으나 이것만으로 불충분하다. 내용개요에서 지적한 민주사회의 특성에 더 첨가될 것도 있을 것이고 그 특성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도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이 모든 특성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점이며, 설명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결부시켜 그 타당성 여부를 밝혀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민주사회에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의 특성과 비교하여 민주사회의 특성을 설명하고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의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려면 좀 더 자세한 비교설명이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 제시하는 생활원리와 실제 우리의 혹은 개인의 생활양식과를 비교하여 반성의 기회와 토의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뜻은 실제 생활 장면을 비판함으로써 더욱 뚜렷해 질 수 있을 것이며 개인으로 하여금 민주적 생활원리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본 주제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과거의 생활양식을 비판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참고문헌

- ① 오천석, 민주주의의 참된모습, 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8.
(N, ◆민주사회의 성격◆ pp.89-112)
- ② Alexander, F. Our Age of Unreason, Philadelphia: Lippincott, 1942.
- ③ Barbu, Z. Democracy and Dictatorship, New York; Grove press, 1956.
- ④ Ebenstein, W. Today's Isms: Communism, Fascism, Capitalism, Socialism, Studed, Englewood Cliffs, N.Y.; Prentice-Hall, 1967.
- ⑤ Pennock, J.R. Liberal Democracy; Its Merits and Prospect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50.

- ⑥ perkins. D. The American Way, Cornell Univ. press, 1957.
- ⑦ Yang, C.F. Chinese Communist Society, Cambridge, Mass:
Institute of Technology press, 1965.

II 민족적 인성과 태도

1 내용개요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물건이나 제도와 같은 형식적인 허울만의 체제가 아니며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활원리라고 하는 점을 전 주제에서 논한 바 있다. 전 주제에서는 사회적 수준에서의 민주적 생활원리를 논했다면 본 주제에서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민주적 생활원리를 논하게 되는 셈이다.

민주주의 이론에 밝은 사람이 민주적제도를 갖춘 조직에서 사람을 대하여 행동할 때 극히 비민주적인 태도로 행동하게 되는 예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된다. 이러한 예는 제도의 운영이나 대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이 갖는 인성과 태도 여하가 그 민주성 여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존엄성과 능력을 믿는 정신적 터전위에서 질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 여하는 개인의 인성 (personality) 특성에 의존되는 바 크다. 개인이 자기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타인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존중되며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의 최선아실현을 위해 노력하게 될 때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은 시작되는 것이다.

개인이 자기의 존재가치나 능력을 믿지 않고 타인에 의존하려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기의 능력만을 과신하여 타인을 무시하고 지배하려 한다면 민주적 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개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민주적 체제나 제도는 허울만의 것으로 민주적 생활원리가 지배되는 제도는 못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완성된 물건이 아니며 개개인이 스

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가꾸어 가는 생활원리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의 정도는 결국 개인의 민주적 인성발달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개인의 인성특성이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다음 개인이 육성시켜야 할 민주적 인성특성을 분석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개인의 인성특성이 다양하고 그들 특성에 관한 개념이 다양하기 때문에 분류하기에 따라 수 많은 특성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나 흔히 지적되는 중요한 특성만을 요약 제시하기로 한다.

- 1) 독립심
- 2) 자율적 태도
- 3) 타인에 대한 존경심
- 4) 이견(異見)에 대한 존중
- 5) 타협과 협동심
- 6) 실험적 태도
- 7) 개방성
- 8) 집단지(集團知)에 대한 신념
- 9) 적극적 사회참여 태도
- 10) 사회적 책임감

민주적 인성특성 중 가장 중요한 특성은 독립성과 자율성이다. 개인이 자신의 존재가치와 능력을 믿지 못하고 타인에 의존하여 그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면 개인의 존엄성과 능력에 대한 신념의 토대위에 세워지는 민주주의는 그 의의를 잃게 될 것이다.

개인이 자기의 존재가치를 인식하고 자력으로 운명을 결정하려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인식을 상실하고 있다면 그러한 개인들이 모인 사회는 몇몇 소수인의 권위가 지배하는 독재사회를 면치 못할 것이

다. 독립심과 자율적 태도를 다른 유사한 개념으로 풀어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자존심, 자신감, 자결적 능력, 자치적 능력에 대한 긍정적 태도등은 모두 독립심과 자율적 태도와 유사한 개념들이다.

이들 개념들이 갖는 공통적인 의의는 개인이 자기에게 의의있는 일을 스스로 찾고 그 일을 자력으로 해결하려 하며 스스로 결정하려는 의욕과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양한 방법과 예로 이들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나 중요한 것은 민주적 인성과 권위주의적 인성 내지 독재적 인성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를 포함한 독재국가에는 국민의 자율적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개인의 자율적 행동은 그들의 독재성을 해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 대중은 무지무능하여 몇몇 독재자의 지도 없이는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독재자는 믿는다. 따라서 그들은 국민을 우중(愚衆)이라 보며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를 중지(衆知)라고 한다.

민주사회에서는 개인이 자기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고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외부에서의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보장과 장려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스스로 자율적 행동을 거절한다면 그는 결코 민주적 인성자질을 육성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사회의 육성과 발전에 공헌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자기 스스로 자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사회나 국가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개인 역시 스스로 자율성을 육성시켜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민주주의는 육성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치와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적 노력을 해야겠지만 타인의 존재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특정인의 존재가치와 능력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같은 의의를 갖고 사는 귀중한 존재로 여기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특징이다. 따라서 남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의견이 비록 자기의 의견과 다른 이견(異見)이라 할지라도 존중히 여겨야 하며 타인의 이견을 이해하고 타협하여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동하는 태도가 민주사회에서 요청된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의견의 다양성을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에서 새로운 창의적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발전과 진보가 있을 수 있다고 민주주의는 믿는 것이다.

진리(眞理)라는 것은 잠정적이며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신봉하는 진리관이다. 이러한 진리관을 신봉하는 민주주의는 언제나 새로운 그리고 보다 나은 생활양식을 찾고 개선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진리관과 생활관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혜와 실험적 태도이다.

기존의 진리와 이념, 가치관, 그리고 생활양식 등에 의문을 가지고 비판하고, 이성적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검토하고 실험하여 생활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태도를 민주주의는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독재자는 개인의 이성적 경험, 그리고 비판적 실험적 태도에 대한 신념을 거부한다. 그 까닭은 진리는 요지부동

한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들이 신봉하는 진리는 불변하는 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의문을 품거나 비판을 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들이 신봉하는 진리만을 국민에게 강요하게 된다. 이러한 곳에 개인의 이성과 실험적 태도가 허용될 수 없고 맹목적인 추종만이 높이 평가된다.

개방적 사회는 민주사회의 특성 중의 하나임을 전 주제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수준에서의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의 인성적 특징으로서의 개방성을 민주주의는 요구한다. 하나의 독단적인 진리에만 집착되고 다른 진리에는 눈을 감는 폐쇄적인 마음가짐이나 자기의 주장만이 옳은 것이고 남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는 폐쇄적인 태도는 개선과 진보, 그리고 타협과 협동을 높이 평가하는 민주사회의 건설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도 계속 검토하고 수정하려는 아량이 필요하며 남의 주장을 받아 들이면서 또한 검토하고 보다 나은 것의 창조를 위해 타협과 협동하는 마음가짐을 민주주의는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형성되는 집단지(集團知)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계속 검토되고 수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서)가 중요하다.

민주사회는 개개인의 의사를 소중히 여기며 이들 의견이 모든 사회과정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최대한으로 반영케 하려해도 개인이 적극적인 태도로 의사를 제공하고 모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에 게을리 한다면 참된 민주사회는 건설될 수 없게 된다.

민주사회의 진보와 발달은 결국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하여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회적 활동에 적극성을 갖는 태도가 개인에게 요청되며, 이러한 요청은 개인의 생활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는 개인이 가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의 하나이다. 개인은 자기의 요구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노력에 필요한 활동을 자유로히 행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같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따라서 민주사회에서 개인에게 허용하는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누구나 같은 정도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개인은 져야하며, 사회복지를 향상시킬 책임과 민주주의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책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발전을 위한 개인의 책임은 민주사회에서 중요시된다.

민주사회에서 최대한의 자유와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여 받은 자유와 권리의 수행에 따른 책임도 결국 개인이 져야 하는 것이다.

2 교수방법

본 주제에서는 민주주의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개인의 인성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파악하여 개인이 민주사회에서 요청되는 인성적 특성을 육성하게 하려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강의에서 먼저 취급되어야 할 점은 개인의 민주적 인성특성의 중요성이다. 이를 위하여 본 주제의 내용개요의 첫 부분에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개인의 민주적 인성특성과의 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극히 개략적인 언급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용의 실에가 더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설명되어야 할 중요한 요지는 인성특성의 형성과 발달과정이다. 정치적 혹은 사회적, 국가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가 하루 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며 오랜 역사를 통한 노력의 결과로 형성된 바와 같이 개인의 수준에서의 민주적 인성과 태도도 성장과정에서 학습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생득적으로 혹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개인에게 민주적 인성특성이 형성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지적 정서적인 성숙과 함께 학습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민주적 인성특성이 육성되고 발달되는 것이다.

그 노력은 개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정과 학교에서 혹은 대인관계가 있게 되는 온갖 사회적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인성특성을 육성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 가정, 학교의 역할 등을 예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혹은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있음직한 민주적 인간관계를 모형으로 *역할놀이* (Role play)를 하게 하는 방법도 민주적 인간관계 양식과 개인의 민주적 인성 및 태도를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윤태림, 한국인의 성격,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8.
- ② Adorno, T.W. and Others,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per & Row, 1950.

- ③ Cantril, H. Human Nature and political systems, New Brunswick, N.Y. Rutgers Univ. Press, 1961.
- ④ Davies, James C. Human Nature in politics, New York: Wiley, 1963.
- ⑤ Lasswell, Harold P. power and personality, New York: Norton, 1948.
- ⑥ Stauton, Alfred H. and S. Z. perry.(eds) personality and political Crisis, New York: Free Press, 1951.
- ⑦ Wallas, G. Human Nature in politics., London: Constable, 1908.

Ⅲ 갈등의 건설적 해결

1 내용개요

민주주의는 완전무결하게 만들어진 기성품이 아니며 가꾸어 나가
는 미래 완성적인 이념임을 앞서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완성
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이 전혀 없기를 기대하기는 어렵
다.

사회나 국가가 민주화 해갈수록 도리어 더 많은 복잡한 문제들
이 야기될 것으로 짐작된다. 민주사회에서는 문제를 은폐하지 않
고 도리어 문제를 찾아 밝히고 이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을 더욱 가치있는 일로 생각한다.

문제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소재를 밝히는 일은 어려운 일
이다. 민주국가들 중에도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마다 특수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 해결과정에 사용되는 방법도 특수한 것일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문제들을 총망라하며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갖는 공통된 문제
와 갈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개성의 존중과 개인의 의
사를 존중하는데서 생기는 문제와 갈등이다. 사람은 자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다른 의견과 주장을 갖게 된다.

민주사회에서는 개성을 존중하고 개성의 신장을 더욱 장려하며
개인의 의사와 행동의 다양성을 권장한다. 이러한 개성의 존중과
개인의 의사와 행동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일치하는 생활원리인 것은 앞 주제들에서 여러번 지적한 바 있다.

개인의 의사와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간에 혹은 집단간에 마찰과 갈등이 있게 되나, 그들 갈등의 해소과정이 때로는 언쟁과 극단적인 투쟁도 있게 한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개성의 신장과 다양한 개인의 의사와 주장을 보장함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때문에 그 해결과정에 다소의 혼란과 마찰이 있을 것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들 혼란과 마찰은 진보와 발전을 촉진하게 되는 활력소로 간주된다.

물론 이들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낙관은 민주사회에서도 갖지 않는다. 문제의 건설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권장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가치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개인간 혹은 집단간에 생기는 갈등과 마찰은 결국 개인 내지 집단들의 노력에 의하여 건설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고 문제의 건설적인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개인의 의사와 주장이 사회적 혼란과 마찰을 야기시키는 것이라 우려하여 이를 억압하는 독재국가에서 보다 혼란과 마찰을 무릅쓰고라도 개인의 의사와 주장을 권장하는 민주국가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으로 더 큰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입증하고 있듯이 이같은 모험이 실패하지 않고 발전과 진보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개인의 지성을 믿고 상이한 개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사회는 개인의 지성을 무시하고 개인의 상이한 의견들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독재사회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음을 믿고 발전에 대해 낙관하며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를 민주주의는 권장한다. 민주주의가 취하는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란 개인의

의견을 허용하지 않고 문제를 은폐하려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문제의 발굴과 그 해결을 위한 일시적인 갈등과 혼란을 두려워하여 회피하지 않고 관용과 타협으로 타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밖에 민주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로서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자유와 통제와의 조화문제, 자유경쟁에서 야기되는 문제(빈부, 노사문제) 다스리는자와 다스림을 받는자의 관계문제, 정치적 경제적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제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과의 관계문제는 모든 사회생활에 적용되는 문제이나 우선 학교교육과 관련지워 예를 들어보면 민주사회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내세우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주어진 기회를 쟁취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자유와 평등간에 갈등의 예를 볼 수 있다. 자유이기 때문에 경쟁을 하게 하고 치열한 경쟁으로 오는 폐단을 없애자니 결과적으로도 자유를 구속하는 결과가 된다. 평등을 보장하자니 자유를 구속해야 하고 자유를 허용하자니 평등이 다소 저해되어지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곧 자유와 평등간에 조화를 유지하는 문제가 오늘날 민주국가들이 당면한 문제중의 하나이긴 하나 민주사회에서의 평등은 “상대적인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조화의 미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국가들이 택하는 방향은 어느정도의 통제를 가하면서 평등을 유지하려하고 있다. 평등을 위한 자유의 통제는 만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의 수준에서 가해지는 것이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에서의 통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않고는

이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개인간 혹은 집단간에 생기는 문제와 갈등의 종류가 어떠한 것이건간에 이를 억제하거나 억압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혹은 겉으로는 안정이 유지 되는듯 보이나 갈등의 정도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며 그 갈등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수습이 어렵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 민주사회에서는 개개인들이 갖는 불만과 갈등을 그저 억압하기에 앞서 건설적으로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 등은 의사의 자유로운 표시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만과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로도 볼 수 있으며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야기되는 공포와 의혹, 불신이 만연하기 쉬운 독재사회의 불합리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국민 개개인이 갖는 갈등의 건설적 해결은 곧 사회문제의 해결에 직결된다 볼 때 갈등의 건설적 해결을 전제로한 민주사회의 우수성을 더욱 절감케 한다.

이미 지적한바 있듯이 국민 개개인이 자기의 의사와 주장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없도록 언론을 구속하는 곳에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 언론이 구속되는 곳에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발전과 진보 또한 있을 수 없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의견과 진리중에 가장 좋은 의견과 진리는 모든 국민이 자기 자기의 의견과 주장을 자유롭게 표시하고 토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와 주장을 충분히 표명케 하고 그들 의견들이 토론과정에서 검토되고 수정되어 다수의 지지를 받게 되는 의견을 선택하여 이를 국가의 총의로서

정책에 반영한다. 이렇게 국민 개인의 의사를 집약하는 여론형성 과정과 여론의 정책에의 반영과정이 곧 진술한 민주주의의 과정인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다소의 혼란과 마찰을 예상하면서도 개인의 의사와 주장을 존중하고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의 지지를 받게 되는 의사를 선택하는 절차를 밟게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신봉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때문이며 나아가 모든 국민이 의견을 자유로히 발표할 수 있게 함으로서 창의적 의견과 진리에 가까운 의견이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며 또한 토론과정에서 선택된 많고 다양한 참된 의견이 사회의 진보와 발달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진리관을 논한 바 있지만 수세기를 거쳐 발전하여온 오늘의 민주주의도 아직 미완성적인 것으로 보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중요시 하는 것 처럼 진리도 언젠가 변화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으로 보고 보다 나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과정을 중요시 한다. 따라서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아직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계속 문제를 발굴하고 이들 문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험하여 개선해가는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을 민주사회는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과학적, 실험적, 창의적 태도를 권장하는 것이다. 문제에 임하는 이러한 창의적 태도를 권장할 때 생활은 개선되고 진보 발달하게 될 것이라고 민주주의는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을 가진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의사와 주장을 존중하고 이로 인해서 야기 될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은 기어코 일시적인 것이며 미래에 얻게될 참된 의견의 도출을 위해 거쳐야 할

전통으로 알고 감수하며 보다 더 참된 진리의 산출과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사회가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없지 않는 다양성을 허용하며 장려하는 소이가 그것이다.

독재사회가 하나의 고정된 진리에 따라 모든 생활과 문화가 소위 하나의 진리에 예속되고 속박되어 있음에 반하여 민주사회는 다양한 생활양식과 문화활동이 허용되고 있음이 독재사회와 다른 점이다. 따라서 한색으로 통일된 독재사회가 안정되어 보이며 다스리기에는 쉬울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곳에 개인의 창의적 의견이 반영될 수 없고 진보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양성을 전제로한 민주사회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다스리기 어려울지는 모르나 개성과 창의적 의사가 정당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국정에 반영되어 보다 밝은 사회를 지양하게 되면서 진보와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2 교수방법

민주사회일수록 더 많은 복잡한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한 다음 문제와 갈등은 보다 나은 진보와 발전을 위해 치루어야 하는 진통인 것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문제를 발굴하고 갈등의 소재를 밝히려는 민주사회와 문제를 은폐하고 갈등의 소재에 눈을 감게하는 공산사회의 모순점을 비교하여 어느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며 어느것이 진보와 발전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인가를 비교 검토하게 하는 토의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회현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실례를 제시하면서 문제와 갈등에 임하는 태도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생활원리에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와 갈등의 소재를 규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내용개요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민주사회가 당면하는 공통된 문제와 갈등을 예시할 수는 있을 것이며 민주사회라 할지라도 문화적 배경의 특수성에 따라 문제와 갈등의 소재와 내용이 다를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민주사회가 당면하는 공통된 문제를 설명하면서 문화적 배경의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특수한 문제를 갖는 나라의 예를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며 더욱이 우리나라가 당면하는 문제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에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이다.

문제의 소재와 성격을 구명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문제에 임하는 태도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정을 분명히 이해하고 요청되는 능력과 태도를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민주사회는 문제와 갈등을 진보와 발전을 위한 활력소로 알고 은폐하려하지 않으며 도리어 문제의 발골을 장려한다. 그러나 문제가 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며 모든 지성과 과학적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적극 장려한다.

민주사회는 문제에 임하는 태도와 그 해결과정을 중요시한다. 민주사회에서 권장하는 문제에 임하는 태도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환영하며 문제는 진보와 발전을 위한 자극적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고정된 공식을 적용하거나 권위자에 의한 해결을 민주사회는 높이 평가하지 않으며 공개된 토론을 통하여 검토하고 합의에 의한 해결을 존중하며 합리

적이고 과학적인 실험을 거쳐 창의적인 해결을 권장한다. 이러한 문제해결과정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방법이 허용될 수 있다.

공동으로 문제를 모색하게 하고 그 문제에 대한 개인들의 의견과 주장을 표명하도록하여 자유로운 의사교환과 토론을 통하여 합의점에 도달하게 하는 집단토의의 방법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여 결론을 얻게하는 방법, 혹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는 엄격한 의미의 과학적 실험을 하게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한 방법을 택하던 간에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의 기술적인 면을 먼저 제시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교수방법을 통하여 문제에 임하는 태도 의견의 정당한 제시방법, 타의 의견의 청취방법, 의견의 차이에 대한 관용 토의방법,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 접근과 행동등, 사회적 집단기술을 육성함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Anderson, W.A. The Nation and The States; Rivals or Partners?,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55.
- ② Barlin, I. Two Concepts of Libert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59.
- ③ Chase, Harold W. Security and Liberty: The Problem of Native Communist, 1947-1955, New York: Doubleday, 1955.
- ④ Dollard, John and Others. Frustration and Aggression.

- New Haven: Yale Univ. Press, 1939.
- ⑤ De Grazia, A. (ed.). Grass Roots Private Welfare.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1957.
- ⑥ Heilbroner, R. L. The Limits of American Capitalism.
New York: Harper & Row, 1966.
- ⑦ Phelps, Edmunds. (ed.). Private Wants and Public Needs.
New York: Norton, 1962.
- ⑧ Roche, John P. The Quest for the Dream, New York:
MacMillan, 1963.
- ⑨ Seligman, Ben B. (ed.) Poverty as a Public Issue.
New York: Free Press, 1965.
- ⑩ Strausz-Hupe, R. and others, Protected Conflict.
New York: Harper & Row, 1963.

제 3 부

공 산 주 의

제 1 장 공산주의의 정의와 기본 개념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는 그 이론적인 면에서 모순성을 인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실제적인 면에서 비윤리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장에서는 역사적 이론으로서 공산주의의 기본개념을 주로 설명한다.

본장은 네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공산주의의 정의라는 제목아래 공산주의라는 단어의 뜻을 기술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단어의 정의보다는 공산주의 이론의 서론적 소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분은 본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공산주의의 기본개념을 설명하고 그 개념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주지하다 싶이 공산주의의 기본 개념은 철학이론, 정치이론, 경제이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유물변증법,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폭력혁명론, 계급국가론, 잉여가치 및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자본주의 몰락논이라는 여러 측면에서 고찰한다.

셋째 부분은 공산주의 이론이 발생하게된 역사적 배경을 다루고 있다. 다른 모든 사회이론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와 「엔겔스」에 의하여 주창된 공산주의도 시대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하던 19세기 서구라파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대적 배경에 대한 고찰은 당시의 사회 경제적 여건과 공산주의 이론의 발생과의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네째 부분은 공산주의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전체주의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전락되어 독재를 위한 교리로 이용되고 있는 비극적인

사실을 설명한다. 공산주의는 과학적인 진리인 동시에 프롤레타리아의 이해올로기로서 주장되었지만 오늘날 공산주의가 전체주의 공산당의 이해올로기로 변질된 것은 하나의 이상으로서의 공산주의가 영원히 소멸한것을 뜻한다. 이것은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예측한것도 아니며 그들이 바람직한 것으로 믿었던 것도 아닌 것이다.

전체주의의 이해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

I 공산주의의 정의

1 내용개요

오늘날 공산주의라고 하면 주로 「레닌」에 의하여 수정된 「마르크스」주의를 의미하며 따라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불리우기도 하는 세계관이다.

하나의 이상(理想)으로서 공산주의는 「푸라톤」이 그의 저서 <공화국>에서 그 유명한 “이상국을”(유토피아)을 착안했을 당시 그러니까 서구의 정치사상의 시원점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제도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불평등을 사회의 모순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회질서의 개혁을 주장해 왔다.

이와같은 부르짖음은 19세기의 사상가 「칼·맑스」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다.

그는 현존하는 불평등한 사회질서가 어떻게하여 발생하게 되었으며 어떻게하면 사회질서를 개혁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관하여 하나의 철학체계를 제시하였는데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이 「과학」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마르크스」의 사상체제는 기독교가 발흥한후 가장 큰 대중운동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전적 이론에 의하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고 일체의 생산, 교환, 분배수단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주의이다.

사회구성체로서의 공산사회는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와 달라서 생산수단이 사회전체의 소유로 되며, 계급적 착취 또는 계급적 대립이

소멸되어 근로자의 협력과 상호부조에 입각한 협동사회이며, 여기에서는 민족국가가 소멸된다고 한다.

또한 그러한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계급투쟁이 격화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에 승리를 거두어 독재를 수립 강화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경제질서를 뒤집어엎는 혁명과 이러한 공산사회의 수립사이에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라는 과도기가 필연적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오늘날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과도기에 그들이 놓여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예컨대 소련은 그들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라고 부르고 결코 공산주의의 그것이라고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아직 미래에도 도래 할 수 없는 하나의 공상적인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공산사회의 기준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응하여 분배한다.”는 원칙인데 이러한 평등은 「마르크스」가 지적한 바와같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응하여 분배되는”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마르크스」 자신도 계획경제의 과도기를 공산주의의 초기현상이라고 한적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한 과도기를 사회주의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가 1847년에 결성한 정당을 “공산당”이라고 한것은 「루이불랑」의 사회당과 구별하기 위해서였고 1848년의 선언은 “공산당 선언”이라고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 였다.

「레닌」과 「스탈린」은 「마르크스」를 쫓아서 자본주의의 몰락위에 건설되어야 할 새로운 질서를 사회주의라고 불렀다.

그런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관한 한 서로 교환하여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들의 본질은 생산수단이 공동사회에 의한 생산수단의 규제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대신하여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소유는 실제로 국가자본주의를 의미하게 된다. 이와같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또는 동일하며 양자의 차이는 목표보다는 수단에 있어서 발견된다.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그들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공산당이란 말은 사회당이나 사회민주당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 당원들은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인간들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어디서도 공산주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련이나 중공의 사회주의도 그들이 무어라고 부르던간에 국가 자본주의를 탈피하지 못할 것이며 국가의 소멸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이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공산사회에 대한 논의는 한낱 신화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공산주의가 빈곤과 사악한 사회조건으로 부터 생성된 것도 아니고 대중이 자본주의 체제의 병폐와 비인간성을 별안간 발견했기 때문에 폭발된 것도 아니며, 공장노동의 독점에서 기인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인민대중의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마르크스」와 「엔겔스」가 인정했듯이 부르주아 운동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공산주의가 강력한 운동으로 확대된 것은 그것이 사회의

빈민층 보다는 지식계층과 부유한 노동자에게 보다 큰 매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신봉자들에게는 그것이 현실과 그 현실의 일부로서의 인간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제공하고 또 인생의 목표의식을 부여하는 것같이 보이기 때문에 일종의 종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공산주의는 종교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의하여 받아들여져야 할 명제(命題)에 호소하고 있는데 종교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함에 반하여 공산주의는 그 기본적 교리가 과학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교수방법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교수에 있어서 정의로 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우선 학생들에게 공산주의의 정의는 다음 강의 내용이 될 기본 개념과 불가분의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인 공산주의의 이론에 대한 언급이 없이 하나의 이상적인 사회로서의 공산사회의 설명에 그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란 오늘날 정치적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약 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모든 경제수단이 사회에 귀속하는 사회협동체로서의 공산사회는 국가가 소멸된 상태임을 지칭하지만 정치적 현실로서의 공산국가는 국가의 소멸은 커녕 오히려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결국은 오늘날의 공산주의가 전체주의의 이데올로기라는

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야 될 것이다.

공산주의의 기본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와의 구별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란 용어를 고의적으로 혼용함으로써 자유세계를 당혹케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정치철학이나 현실적인 정치이념으로서의 양체계의 차이를 인정하려 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구별은 앞서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두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설명함으로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치용어로서 “코뮤니스트”라는 말은 「레닌」에 의하여 창설된 “공산당”을 지칭한다. 그것은 1898년에 창건된 “러시아 사회주의 민주 노동당”이 발전된 것이다.

1903년에 이 정당은 소위 「볼셰비키」라고 불리우던 다수파와 「멘셰비키」라고 불리우던 소수파로 나누어 졌다.

이 양자가 공히 「칼·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사회주의를 추구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레닌」의 지도아래 「볼셰비키」는 소규모의 비밀단체를 형성하고 급격하고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정부의 전복을 위해 투쟁했다. 여기에 반하여 「멘셰비키」는 서구라파의 사회민주당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선거, 노동조합, 대규모의 공개 정당을 통하여 비교적 합법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의 성취를 목표로 하였다.

1918년 「레닌」은 「멘셰비키」파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그의 「볼셰비키」파에게 공산당이란 이름을 붙였다.

그후 즉시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반대 정당을 탄압을 시작했던 것이다.

경제적 용어로서 “사회주의”는 재화의 생산과 분배의 기본수단을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체제를 말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초기의 공산주의도 재산이 “공동으로” 소유된 사회조직의 체제를 의미했던 것이다.

오늘날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혹은 북구제국의 사회민주당은 실업보험이나 공공소유의 주택과 같은 사회개혁 정책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영국의 노동당도 추정의 산업을 국유함으로써 그 목표의 일부를 달성한 바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오늘날 소련사회의 생활양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란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소련에 있어서는 국가가 생산과 소비의 모든 수단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받고 보다 많은 재화를 벌어들인다는 점에서 「마르크스」가 생가했던 공산사회와는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공산사회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응하여 분배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산주의는 철학, 경제, 정치 및 사회에 관하여 밀접하여 연관된 학설에 기초를 둔 세계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전체로서 고찰되어야 하며 그 일부분의 어떤 요소를 별도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시말하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어떤 요소만을 추출해내고 다른요소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강사는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지식이 없이 공산주의자의 활동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공산국가에서 주요한 직책을 받고있는

공산주의자들은 자유세계에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풍토,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Ebenstein, William. Today's Isms. 6th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70. Clap.I.
- ② Hunt, R.N. Carew.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Fifth ed, revised. London: pelicam Books, 1963. part1.
- ③ Conquest, Robert. Common Sense about Russia, New York: Macmillan, 1960.
- ④ Meyer, Alfred. Communism. 3rd ed. revised, New York: Random House. 1964.
- ⑤ Gyorgy, Andrew and Blackwoods, George D. Ideologies in World Affairs. Waltham, Mass: Blaisdell publishing Co., 1967. Chapters 3,4.
- ⑥ Gyorgy, Andrew. Communism in perspective, Boston: Allyn & Bacon, 1964.
- ⑦ Daniels, Robert V. The Nature of Communism, New York: Vintage Books, 1963.
- ⑧ Bernstein, Eduard. Evolutionary Socialism, New York: Schocken Books, 1961.
- ⑨ Cole, G.D.H. A History of Socialist Thought. Vol.I: Socialist Thought: The Forerunners, 1789-1850.

- ⑩ Durkheim, Emil. Socialism and Saint-Simon, Yellow Springs, Ohio: Antioch press, 1958.
- ⑪ Lipson, Leslie. The Democratic Civi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 ⑫ Owen, Robert. A New View of Society, New York: Free press, 1948.
- ⑬ Rostow, W.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 ⑭ Schumpeter, Joseph 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1962.

II 공산주의의 기본개념

1 내용개요

공산주의의 기본개념은 철학관, 경제이론, 정치이론의 세 측면에서 고찰 할 수 있다. 철학관으로서 공산주의의 기본개념은 변증법적 유물론이며 경제이론으로서는 잉여가치 및 노동가치설에 근거한 자본주의 물락론이다. 또 정치이론으로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폭력혁명론」 「계급국가론」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개념을 주창한 「칼·마르크스」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에 대해서 고찰 할 필요가 있다. 「헤겔」사상의 핵심은 그가 “변증법”이라고 부르던 기술적인 철학용어다. 「헤겔」의 변증법에 의하면 모든 역사, 사상, 존재의 원동력은 충돌(모순)이라고 한다.

「헤겔」은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이 항상 변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낡은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등장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하나의 즉자(即自:테제)는 이것으로부터 발전된 대자(對自:안티테제)와 맹렬히 충돌된다. 이 충돌로부터 두 개념의 좋은 요소를 포함하는 새로운 결합이 이루어 진다. 이 결합이 다시 하나의 개념으로 발전되고 그것은 또다른 개념과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정(正)개념과 반(反)개념의 충돌과 투쟁에 의해서 세계는 보다 완전하게 발전된다고 했다. 이러한 이론을 인간에게 적용시켰을때 「헤겔」은 “정신”이란것을 생각해 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이 “정신”자체가 실제(實在)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인간의 역사란 것도 그들의 본성과의 투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했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방법이 옳다고 했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그 자신의 세계를 만드는 것은 정신(意識)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물질적 환경-가 사회환경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사회의 모든 법률 정치, 종교 도덕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 물질적 상품을 만들고 교환하는 양식으로부터 발전된다고 한다. 이것이 「마르크스」이론의 첫째 요소인 유물사관이다.

「마르크스」이론의 둘째 요소는 노동계급과 소유주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말하기를 과거의 모든 시대에 노동계급은 소유계급과 투쟁해 왔다. 노예는 주인과 봉건 농노는 영주와 더불어 투쟁했고 18세기 산업자본주의가 발흥함에 따라 공장노동자는 자본 소유자와 투쟁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주장하기를 자본주의는 그 내재적 모순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자멸 할 것이라고 했다.

고전적 경제학자들이 노동가치설의 제원칙을 발견했지만 「마르크스」는 노동가치설을 그의 경제이론의 초석으로 삼았다.

이 노동가치설로부터 “잉여가치”라고 불리우는 개념이 생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투하된 노동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만일 자본가가 어떤 상품을 팔므로서 이윤을 남긴다고 가정할때 노동만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어디서 자본가의 이윤이 생기는 것인가? 「마르크스」는 자본가의 이윤은

잉여가치에서 나온다고 한다. 말하자면 자본가는 그가 지불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얻는다는 것이다.

노동의 가치는 그것이 가치를 “생산”해 내는데 드는 비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공장제도 아래서 노동자는 자본가가 정한 량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마르크스」 당시 주당 84시간) 노동자는 자기가 필요한 량의 가치를 넘어서 일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렇게 초과된 량의 노동이 자본가에게 잉여가치가 된다고 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의식적으로 이러한 “잉여가치”를 추구한다고 생각치는 아니했으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현대 경제학자들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이 경제분석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노동가치설은 인간의 노동력과 기술만을 생산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토지나 자본같이 중요한 비인간적인 생산요소의 비용을 계산해 낼 도리가 없다.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을 따른다면 공장소유주는 무제한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오래 계속되지는 아니한다. 자본가는 서로 경쟁을 하게 마련이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확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하여 자본가는 보다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결국은 자본가 상호간에는 노동자 쟁탈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임금은 상승되고 자본가의 이윤은 감소된다. 상승되는 임금을 막기 위하여 자본가는 노동력을 절약하는 기제에 의존하게 되고 이로써 실업이 만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노동력만이 모든 가치의 원천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본가가 기제를 사용함으로써 노동력의 필요를 줄인다면 그

만큼 그의 이윤은 줄어든다. 다만 자본가는 다른 경쟁자보다 앞섭으로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절약하는데 기계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윤율은 계속 하락되고 상품의 가격도 하락하지 않을 수 없다. 기계에 의하여 희생된 노동자들은 상품을 구입할 능력이 없고 따라서 사회의 소비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투매(덤핑)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소규모의 자본가는 도산하게 되거나 대자본가에 흡수되며 결국은 소수의 대자본가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위기가 반복되는 동안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던 공장노동자는 자본가에 대항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게 된다고 한다.

요컨대 자본주의는 화폐와 기계와 노동자단체의 거대한 결합에 의한 경제체제다. 그런데 소유권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노동자와의 대립이 발생하는 현상을 제외하고는 자본주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양식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자본주의의 최대 약점이다. 「마르크스」는 만약 노동자가 소수의 자본가로부터 소유권을 빼앗는다면 생산과정은 완전히 합리적으로 될 것이며 악순환의 위기는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혁명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그것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와같은 경로로 자본주의는 몰락한다고 예언했던 것이다.

「마르크스」는 혁명을 계급투쟁이 최종적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노동자의 단결은 처음에는 임금의 유지와 착취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는 곧 모든 생산수단

가운데 최대의 생산력은 혁명계급자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산력을 변경시킬 수 있고 이와같은 변증법적 발전이 정치질서에 있어서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의 지배계급인 자본가가 노동자의 폭력혁명에 의하여 몰락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론은 그후 많이 오용되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그러한 상태하의 정부는 노동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력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다수의 노동자가 소수의 자본가를 지배하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폭력혁명이 사회의 모순과 여기서 발생하는 압박의 제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는 강압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는 곧 소멸하고 만다. 왜냐하면 국가란 「마르크스」에 의하면 우세한 경제력의 반영이다. 따라서 국가도 계급투쟁의 일부인 것이다.

말하자면 국가가 우세한 경제력의 조직된 탄압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몰락한 후 자연히 소멸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선에 대한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예술이나 시나 미에 대한 본능을 발전시키게 되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응하여 분배하는” 황금율이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수 10년이 지난 후 「마르크스」의 제자들은 세계의 도처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자비로운 독재와 책임과 보수의 완전한 분배에 대한 「마르크스」의 예언”을 뒤집어 버렸다. 이들은 악독한 독재를 만들어 내었으며 정부가 소멸하기는 커녕 점점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서 권력은 소수의 손에 집중되게 되었다. 「마르크스」

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던 노동자의 혁명은 사실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다. 「마르크스」의 생애 말기, 단 하나의 인민봉기는 1871년 “파리콤문” 뿐이었다. 여기에서 노동자들은 파리와 그 정부를 잠시나마 수중에 넣었었다. 그동안 “콤문”은 수백의 양민을 학살했다. 전유럽이 이와같은 사건을 혐오와 공포로 주시하고 있을 때, 「마르크스」는 “국제노동자 협회”의 이름으로 “파리콤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마르크스」의 이론은 옳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단순한 것이었다. 「마르크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고도로 산업화된 서구에서 그의 예언은 저중하지 아니했다. 자본가는 혁명의 발생없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였고 따라서 「마르크스」의 예언의 부당성은 증명되었던 것이다. 자본주의는 소련과 중국에서 몰락했지만 이 두나라에는 자본주의가 완전히 성숙하지도 못했었다. 뿐만 아니라 소련과 중국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몰락은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필연적인 역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광신자의 고의적 행동에 의하였고 그 결과도 비참한 것이었다.

2 교수방법

공산주의의 기본개념을 강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용어와 개념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학생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강사는 「마르크스」의 유물변증법과 철학체계

가 일단 받아들여지면 그 말들은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된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사실 공산주의자들은 말장난을 함으로서 사람들을 혼돈시키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사상체제는 방대하고 여러갈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선 「마르크스」의 사상과 공산주의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유물변증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에서 부터 시작해도 좋다.

사실 유물변증법은 「마르크스」주의의 영혼이며 공산주의의 국가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치지도자는 물론 일반시민에게도 생활양식의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변증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반—합」의 기본원칙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그 비과학적 성격을 또한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분석에 있어서 「마르크스」가 경제적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사실 역사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였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경제관계가 인간의 모든 사상과 행동을 결정지우는 요소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이 인간관계를 얼마나 간단하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유물변증법에 의하여 인간의 역사가 발전한다는 유물사관이 과학적 법칙위에 놓여있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역사를 하나의 정밀과학으로 보는 오류에서 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그 자신의 미래의 발전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엔겔스」가 모두 역사학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그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역사적 예시가 많지도 않고 유물사관이 올바른 이론이란 증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유물사관이 자명한 진리로서 증명이 필요없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가칭 자체의 그릇됨을 학생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은 유물변증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설명해야 한다. 노동가치설이 경제학설로서 옳지 아니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하며 「케인즈」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이 현대사회에 적용될 수 없는 낡은 이론임을 강조해야 된다. 더구나 “자본주의의 필연적 몰락론”은 오늘날 많은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입법이나 제한된 계획경제를 채택함으로써 스스로의 약점을 개선하여온 사실을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1930년대의 세계적 공황에 대응한 「루즈벨트」대통령의 “뉴딜” 정책도 그 하나의 좋은 예이며 각국이 최저임금제도, 최고노동시간을 입법으로 정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준다는 사실이라든지 소년이나 부여자의 노동을 제한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이론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의 폭력혁명론은 자본주의의 몰락과정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론적이기 때문에 경제이론과 결부시켜 설명하여야 좋을 것이다. 다만 “계급국가론”이나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는 「레닌」에 와서 더욱 강조되었기 때문에 시대적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학생들에게 지적해 주어야 하며 따라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강사는 「마르크스」의 국가관이 “계급적 착취의 도구”라는 점에 주의하여 사회속에 비경제적이며 비강제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마르크스」가 간파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 국가가 “소멸하여 버린다”는 「마르크스」의 예언이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에 국가의 존재여부를 지적하면 편리하게 설명된다. 사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기간을 비교적 짧게 잡았으며 그 기간동안에 국가없는 공산주의 사회의 기초가 확립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없는 공산사회란 존재하지도 아니하며 영원히 존재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마르크스」나 「레닌」은 그들이 정치적 권력을 획득했을 때 그들이 당면할 문제에 관하여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의 차별이나 노동자의 착취를 없애지 못하고 새로운 과두제가 창설되었으며 노동자는 무력한 피지배계급으로 전락했던 것이다. 사실 소련이나 중공 기타 많은 공산국가에서 노동자의 독재는 한낱 신화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의 필요에 개인을 무자비하게 복종시키는 힘의 정치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

끝으로 공산주의의 기본개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 창시자인 「칼·마르크스」가 역사상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관하여 언급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사실 그의 예언과는 다른 이유에서 인류의 기억에 남을 인물이다. 「마르크스」가 후세에 남긴 업적은 역사를 보는 방법에 있었다. 즉 어떻게 사람들이 재화를 생산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느냐 하는 점에서 사회를 관찰하고 분석한 그의 방법은 서구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 자신의 통찰과 예지가 인간을 해방시킬줄로 믿었고 인간을 노예화 시키리라고는 생각지 아니하였다. 러시아에 있어서 「마르크스」의 제자들이 지구상 일찌기 없었던 무자비한 독재를 만드는데 그의 이론을 사용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란 사실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도 좋을 것이다.

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란 사실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도 좋을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Engels, Friedrich. "Socialism, Utopian and Scientific: part II" in Carl Cohen(ed.). Communism, Fascism, and Democracy: The Theoretical Foundations, New York: Random House, 1962. pp50-57.
- ② Hunt, R.N. Carew,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Fifth ed. revised, London: pelican Books, 1963. pp39-108.
- ③ Maye, Henry B. Introduction to marxist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pp29-62.
- ④ Boclienski, Joseph M. and Niemeyer, Gerhard(eds.). Hand book on Communism, New York: praeger, 1962.
- ⑤ Hunt, R.N. Carew. A Guide to Communist Jargon, New York: Macmillan, 1957.
- ⑥ Cole, G.D.H. A History of Socialist Thought. Vol.II: Marxism and Anachism, 1850-1890, New York: St.Martins press, 1954.
- ⑦ Fever, Lewis(ed.). Marx and Engels: Basic Writings on politics and philosophy, New York: Doubleday-Anchor, 1959.

- ⑧ Hook, Sidney. Reason, Social myth and Dialectic, New York: Humanities press, 1940.
- ⑨ Leff, Gordon. The Tyranny of Concepts: A Critique of Marxism, London: Merlin press, 1961.
- ⑩ Marcuse, Herbert. Reason and Revolution: Hegel and the Rise of Social Theory, New York: Humanities press, 1955.
- ⑪ plamenatz, John. German Marxism and Russian Communism, London and New York: Longmans, Green, 1954.
- ⑫ Tucker, Robert C. philosophy and Myth in Karl Marx,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1.
- ⑬ Daniels, Robert V.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2 Vols. New York: Vintage Books, 1962.
- ⑭ Gregor, James A. A Survey of Marxism, New York: Random House, 1965.
- ⑮ Ulam, Adams B. The Unfinished Revolution: An Essay on The Sources of Influence of Marxism and Communism, New York: Random House, 1960.
- ⑯ Wolffe, Bertram D. Marxism: 100 Years in the Life of a Doctrine, New York: The Dial press, 1965.

Ⅲ 전체주의의 이데올로기

1 내용개요

사회경제적인 철학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혁명운동으로서 독특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공산주의는 모든 인간의 문제에 관하여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역사상 다른 교리와 유사하다. 일단 그 기초적 가설이 행동의 신념으로서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것들은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교리들은 추종자를 이끌어 그 목적을 위하여 심혈을 받히게 하는 매력이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교리가 보편화 된다면 모든 인간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한다는 일종의 유토피아에 대한 약속이 있다. 공산주의자들도 그 추종자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산업시대를 포함하는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과학적 술어로서 설명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공산주의는 민족이나 기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공할 전체주의 교리로서 등장했다. 공산주의의 추종자들은 그들이 인간의 행동과 동기를 이해하고 따라서 그들만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발전의 추진력을 이해한다고 설복되어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이론적 가설을 행동의 신조로 믿고 있으며 그들의 약속의 배후나 기초를 검토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산주의의 이론적인 오류를 정확히 파악되며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세우는 목표와 전체주의적 지배와의 모순된 관계를 알아야 한다.

공산주의는 오늘날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갖고 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게 되자, 「마르크스」주의를 사회주의와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위한 지침서로 사용하려고 했다. 그들이 당면했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와 「마르크스」나 「엔겔스」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충분한 해답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산주의자 사이에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마르크스」의 이론은 여러가지 견지에서 분석되었던 것이다. 「스탈린」이 독재자로 등장하면서 그는 이러한 논쟁을 끝맺었다. 그는 그 자신의 견해 및 해석만이 모든 공산주의 정당에 타당한 교리라고 했다.

「레닌」의 이론에 근거한 이 교리에 핵심은 아래와 같다.

“ 「마르크스」주의는 과학적인 진리인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이해올로기다. 공산당이 완전히 과학적인 통찰력을 갖고 노동자의 진정한 이익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당에 충성한 자만이 프롤레타리아에 충성 할 수 있고 역사의 발전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있으며 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있는 자다. 당과 모순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던지 진실일 수 없다. 더 나아가 소련에서 공인된 교리는 공산국가와 그의 정책과 사회구조를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와 사회주의 건설에 종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로서 정당화 한다. ”

여기서 「마르크스」주의는 사실상 「마르크스」가 표시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무시하는 정권을 완벽하게 옹호하는 국가론에 지나지 않게 된다. 「마르크스」의 이론을 이와 같이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교리로 변형시킨 것은 그것을 이해올로기로 만드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소련에서는 여기에 “공산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첨부되었는데 이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기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기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늘날 소련사회가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와같은 사실은 「마르크스」주의적 이념에 있어서 유토피아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의 공산주의 이념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과를 위한 프로그램을 내포하고 있다. 비록 선진 산업사회의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있지는 못해도 공산주의 운동은 식민세력이나 약소국가에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정치체계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기능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많은 학자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모든 공산주의 사상, 행동, 제도의 지침이 되는 근본이라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정책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는 현실합리화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두 이론은 비록 서로 모순되기는 하지만 사실 양자가 모두 타당한 점이 없지 않다.

「레닌」과 그의 후계자에 의하여 수정된 「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 혁명을 실현한 사람들을 고취시켰고 공산주의 정권이나 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공산주의자가 정권을 획득한 후 이데올로기는 합리화의 수단으로 변했지만 그것은 정치의 언어로 남아 있어 정치적 지도자의 통신수단일 뿐더러 윤리적 자기의식을 위한 개념적 구조를 의미했던 것이다.

2 교수방법

이 강의는 전체주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에 관한 것인 만큼 우선 전체주의란 용어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는 문제로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음엔 공산주의 이념에 있어서 환각적인 측면을 지적하여 설명해야 한다.

먼저 강사는 공산주의를 포함한 현대 전체주의의 특성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현대 전체주의의 기원에 관하여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주의라고 불리우는 근대산업사회의 일부 특성이 논리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전체주의 특징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전체주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보장하는 이해주의적인 이념을 방패로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합리화 시키는 독재의 한 형태이다. 전체주의 정권은 계서조직(Hierarchy)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직은 막강의 권력을 가진 지도자에 의하여 통치된다. 그들은 흔히 대중출신이라고 하며(「레닌」은 예외다) 그들의 정당과 전시민을 그들자신과 동일시 한다. 전체주의는 예외없이 정당에 의하여 지배되는데 그것은 전체주의의 이배율로기를 세속적인 종교로 믿는 광신적이고 헌신적이고 충성스런 소수의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주의는 대중통제의 수단으로서 폭력과 공포를 사용한다. 이러한 공포는 흔히 선전과 혼합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통신 및 선전수단을 독점하여 통제한다. 말하자면 전체주의는 대중의 사상까지를 통제하는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이외에 전체주의의 특징은 중앙집권적인 경제통제라던가 지식계급이나 합리주의를 탄압한다던가 하는 등을 히틀러의

독일이나 스탈린치하의 소련, 모택동의 「인민공사」 복귀의 사정들을 간단히 예로 들면서 설명하면 좋을것이다.

강사는 모든 인간의 제도를 하나의 교리(이데올로기)안에 집어 넣으려는 전체주의자의 노력이 결국은 대내적인 탄압과 대외적인 호전성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강조할 수 있는데 반면에 어떻게 하여 이러한 모순된 지배체계가 많은 추종자를 얻을 수 있을만큼 매력을 갖게 되었는지도 설명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공산주의의 매력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킴으로서 공산주의의 도전 가능성을 주의시켜야 될 것이다. 예컨대 공산주의는 ;

- (1) 훈련된 엘리트가 됨으로서 공허한 생활에 의미를 가지기 원하는 사람들
- (2)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재빨리 해결하여 출세를 기도하는 사람들
- (3) 공산세계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이들에 합세해야 된다고 판단한 사람들
- (4) 위험하고 모험적인 생활양식을 원하는 사람들
- (5) 전지전능한 당의 이름으로 보다 강하고 보다 현명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강력한 집단속에 자기들의 불만스러운 생활을 파묻어 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 (6) 역사적인 경험을 검토함이 없이 주위에 일어나는 비참과 부정을 진실로 혐오하여 공산주의가 마치 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들
- (7) 심리적으로 자기의 전통과 관습에 반항하여 공산주의를 통해 자기들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도구로 알고 있는 사람들

(8) 항상 변화하며 무질서한 세계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확실성을 공산주의 교리에서 발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공산주의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로부터 방향을 돌려 강사는 전체주의적 공산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측면을 요약해 보여 줄 수 있다. 예컨대 조국을 초월한 충성심, 투쟁에 대한 헌신, 훈련된 조직 소련 및 중공의 세력기지 등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목표에 대한 새로운 추종자를 얻기 위해 여러가지의 노력을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사는 공산주의 이념의 몇가지 환상적 측면을 말해야 한다. 이상적인 “지상의 천국”이란 개념은 인간의 경험이나 정신에 의해서 확증되는 것이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이념은 국가의 소멸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프롤레타리아」를 대표하여 권력의 핵심에 앉아 있는 소수의 전위로 구성된 전체주의적 구조의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실현은 항상 먼 미래로 미루어 졌으며 전체주의적 강압적 통치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도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3 참고문헌

- ① Friedrich, Carl J., and Brzezinski, Zbigniew K. Totalitarian Democracy and Autocracy, New York: Praeger, 1961, Chapters 17.

- ② Fainsod, Merle. How Russia is Ruled. rev. 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PP. 577-601,
- ③ Almond, Gabriel A. The Appeals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54;
- ④ Aron, Raymond. The Opium of the Intellectuals, London: Secker and Warburg, 1957.
- ⑤ Djilas, Milovan. The New Class. New York: Praeger, 1957.
- ⑥ Ebenstein, William. Totalitarianism: New Perspective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2.
- ⑦ Griedrich, Carl J. (ed.) Totalitarianis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 ⑧ Hoffer, Eric. The True Believer: Thoughts on the Nature of Mass Movement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7.
- ⑨ Kravchenko, Victor A. I Chose Freedom, New York: Scribners Sons, 1946.
- ⑩ Leonard, Wolfgang. Child of the Revolution, Chicago: Henry Regnery Co., 1958.

- ⑪ Meyer, Frank S. The Moulding of Communists: The Training of The Communist Cadre, New York:Harcourt Brace, 1961.
- ⑫ Houn, Franklin. To Change a Nation: Propaganda and Jud-
octrination in Communist China, Glencoe, Jel. Free Pr-
ess,1961.
- ⑬ Inkeles,Alex. Public Opinion in Soviet Russia, Cambri-
dge, Mass.:Harvard University Press,1950.

Ⅳ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배경

1 내용개요

19세기초에 주장되었던 여러 사회주의 학설과 같이 「마르크스」주의도 서구의 산업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모순속에 배태되었다. 1848년 독일의 한신문인이었던 29세의 「마르크스」가 「프리드리히·엔겔스」의 도움을 얻어 “공산당선언”을 발표했다. 그들은 이 선언이 전구주에 있어서 혁명을 유발시키기를 희망하였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이 권력을 획득하고 자본가로부터 공장을 빼앗고, 모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계급없는 사회를 건설할 것을 기대했다.

「마르크스」와 「엔겔스」가 주장한 혁명은 20세기에 들어와 나타났었는데 그것도 그들이 예언하지 못했던 러시아에서였다. 그러나 그들이 “공산당선언”을 발표했던 당시의 서구라파는 확실히 혁명을 향해 몸부림 쳤던 것이다.

실제로 1840년대는 정치와 산업에 있어서의 혁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적 변혁이었던 산업혁명은 이미 18세기 영국에서 시작하여 전구주로 번지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많은 대중에게 빈곤과 처참을 가져왔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수세기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살고 있던 촌락에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자식은 부대(父代)의 직업을 전승하였었다. 그러나 1769년에 「아크라이트」

가 발명한 방직기와 「제임스 왓트」의 증기기관은 영국의 농촌생활을 붕괴시켰는데 가내의 방직기계를 갖고 있던 소규모의 수공업자들은 만체스터와 같은 큰 도시의 방직공장으로 물리게 되었다.

「왓트」의 증기기관은 철도를 가능케 하였고 따라서 농촌사회的高립은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 도시로 이주하였고 또 공유지를 사유지화 하는 법령(Enclosure Acts)에 의하여 농민들은 실항민이 되었다. 이러한 법령들은 소작농민의 희생위에 귀족이나 시골의 지주의 협력을 넓혀있던 것이다. 한편 도시로 이주한 농민과 수공업자들은 도시의 빈민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이 살고있던 생활환경이란 것은 오늘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것이었다. 노동조건은 극악하고 자금은 최저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하였으니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부모를 따라 노동을 하게 되었다.

이 산업으로 이득을 본 새로운 지배계급은 이러한 혁명이 초기에 가져온 피해를 해결할 수 없었다. 당시 서구에는 인민에 의한 정부라는 관념이 거의 알려지지 아니 했었다. 다만 영국은 비교적 광범위한 대중참여에 기초를 둔 의회정치를 발전시켰고 의회는 1844년에 공포된 공장법과 같은 일련의 법률로서 산업혁명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서구의 산업화는 절대군주가 백성들에 의하여 몰락하기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다.

「마르크스」가 혁명을 선동하는 선언서를 발표 했을때 서구의 백성들은 기본권이나 입헌정부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1848년 전구주는 「제퍼슨」이 미국독립선언에서 주장한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와 같은 불가양의 권리에 대한 요구로 들끓고 있었으니 미국의 발전은 서구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주요한 자극제였다. 뿐만아니라 불란서 혁명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니 비록 혁명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혁명이 정치 내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희망을 구주인에게 주었던 것이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반동적 재상이던 「메테르니히」는 헝가리인, 기타의 민족들을 억압하였고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 1세」(1825 - 1855)의 치하에서 농민들의 생활은 노예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프러시아의 「프레데릭. 윌리암」4세 역시 개인의 자유는 전혀 인정치 아니하는 독재군주였다.

「루이 필립」의 불란서는 비교적 자유주의적 입헌정치아래 있었으나 여기에도 공장제도는 구주의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노동자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드디어 1848년 파리의 인민들은 무능한 「루이 필립」의 정부를 무너트리고 그들의 정권을 장악했다. 그들은 노동자 대표 4인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니 이것으로 불란서 제2 공화국은 탄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사한 혁명이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를 풍미하였다. 노동자들은 백림에서 방책을 치고 정부에 대항했으며 「프레데릭 윌리암」4세는 폭동의 희생자에게 머리를 숙이도록 강요되었다. 이태리에서는 「밧찌니」라고 불리우는 인민의 영웅이 등장하여 로마 공화국의 지배자가 되었으며 헝가리의 「루이 코수트」(Lónis Kossuth)는 황제 「페르난트」1세의 하야를 강요했다. 구라파의 대국가운데 1848년에 조용했던 나라는 공업이 가장 발달했던 영국과 가장 낙후했던 러시아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혁명은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1년이 못가서 이러한 혁명운동들은 실패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혁명을 전압하려 했던 지배자들은 새로운 혁명에 대비하는 새로운 독재자들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정치적, 변혁을 동경하던 구주인에게 혁명의 물결은 끝이지 아니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와같이 자극적인 환경에서였는데 선언의 문구는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강렬하게 울렸던 것이다.

2 교수방법

이 강의는 「칼·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이 발표될 당시의 사회 및 정치현실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아울러 19세기 초기의 여러 사회주의 사상가에 언급함으로써 「마르크스」가 독창적인 정치사상가라기 보다 하나의 종합자였다는 사실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강의는 대체로 지적인 역사(Intellectual History)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고 사상과 사건을 연관시켜 설명해야 한다.

「나폴레옹」전쟁후 불란서 혁명과 계몽사상의 절대적 이상(理想)에 대한 반동이 일어났다. 많은 지식인과 정치적 지도자들이 보수주의를 고수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원칙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샤또브리앙(Chatean Briang)」의 낭만주의 운동에서도 나타났고, 세계질서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찾으려던 독일의 관념론에서도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특히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실

용적인 접근법을 시도 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상이 현실로 등장하게 된 물리적 혹은 제도적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하여 강사는 산업의 발달, 도시의 성장, 농민과 가내공업의 문제, 진흥중산계급등에 관하여 언급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계급간의 구별은 점차 소멸하기 시작하였고 1815년의 빈회의.(The Congress of Vienna)와 1848년의 “ 공산당선언 ”의 발표까지 30여년간은 서구에 있어서 사회적 동요와 불안의 시기였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아래서 지식인과 그들의 사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었다. 예컨대 「 마르크스 」 자신도 독일의 지식사회의 영향을 받고 자랐으나 나중엔 파리의 불란서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 마르크스 」의 지적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 마르크스 」는 신성동맹의 반동세력이 서구라파를 폄미하던 시절에 자랐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당시 독일에서는 자유주의 운동이 활발하였다. 이 운동의 주요 인물은 「 루드비히 · 비른너 」와 「 하인리히 · 하이네 」등의 젊은 시인이었으며 이 운동의 영향은 불란서의 7월혁명을 자극했던 것이다.

1830년대 후반 헤겔학파의 소장학도들은 급진적인 법률과 철학을 공부하고 있을때 이들과 접촉을 시작했다. 「 마르크스 」는 헤겔학파에서 가장 년소했지만, 그는 단연 뛰어났다. 특히 1841년 그의 학위논문에서 「 마르크스 」가 필요한 것은 이념이나 공허한 가설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명백한 생활방식이라고 한 것은 헤겔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었고 헤겔의 보수적 관념론에 대한 반발로 여겨졌다.

「 마르크스 」는 「 스피노자 », 「 라이프넨츠 », 「 흄 」의 영향을 받아 민주주의의 실정과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특히 「 스피노자 」의 영향은

「마르크스」로 하여금 자유와 필요와의 조화를 발견하게 했다. 그리하여 그가 헤겔의 형이상학적 국가관을 반박하고 나설때, 「마르크스」는 합리적인 윤리를 그 자신의 사회학적이고 혁명적인 교리와 통합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헤겔의 정치철학과 관념론을 무조건 부정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그의 변증법이 계속하여 「마르크스」의 철학체계의 기초를 형성하였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마르크스」가 민주주의에 관하여 과격한 견해를 갖게 된 것은 영국, 불란서, 미국등의 혁명의 영향이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공산사회에서 실현되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유주의자에서 공산주의자로 전향되어가는 동안, 「마르크스」는 「스피노자」와 「포이에르바흐」, 「방씨몽」과 「바뵈르」, 「토마스·해밀튼」과 「토포빌」, 「푸라톤」, 「오웬」, 「프리에트」등의 영향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상가들에 관하여 간략히 언급하는것이 좋다. 그것은 1864년에 「마르크스」가 주도적 역할을 한 「제1 인터내셔널」이 다양한 사회주의 사상을 보여 주었던 것과 같이 「마르크스」의 사상도 결국은 그 많은 사회주의 사상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설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졌던 여러갈래의 사회주의는 후에와서 명백하게 분파된것을 예시하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강사는 영국의 「웨이비언·쏘사이어터」의 실용주의적 활동과 「베른쉬타인」 이전의 독일사회 민주당과 러시아의 「인민당」 혹은 「사회주의 혁명당」의 보다 교조적이고 혁명적인 활동을 대조시켜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사회주의 사상의 철학적 배경과 활동적인 정치지도자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의 현실과를 비교함으로써 이론과 실제와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는다.

3 참고문헌

- ① Cohen, Carl(ed.) Communism, Fascism, and Democracy: Theoretical Foundations, New York: Random House, 1962. PP. 3-48.
- ② Hunt, R. N. Carew.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Fifth ed. revised, London: Pelican Books, 1963. PP. 123-140.
- ③ Rubel, Maximilien. "Karl Marx,"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The Macmillan and The Free Press, 1968. Vol. 10. PP. 34-38.
- ④ Beer, M. The General History of Socialism and social Struggle, 2 Vols, New York: Russell and Russell, 1957.
- ⑤ Buber, Martin, Path in Utopia, New York: MacMillan, 1949.
- ⑥ Cole, G. D. H. A History of Socialist Thought. Vol. 1: The Forerunners, 1789-1850, New York: St. Martin's Press, 1953.
- ⑦ Egbert, Donald Drew, and Persons, Stow. (eds.). Socialism and American Life. 2 Vol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2.
- ⑧ Hook, Sidney. Marx and Marxist, Princeton: Van nostrand, 1955.
- ⑨ Hook, Sidney. From Hegel to Marx: Studies in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of Karl Marx, New York: Humanities Press, 1958.
- ⑩ Labedz, Leopold(ed.). Revisionism: Essays on the History

of Marxist Ideas. New York: Praeger, 1962.

- ⑩ Papper, Karl 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3rd ed. 2 Vols, London: Routledge and Paul Kegan, 1957.
- ⑪ Talmon, J. L. The Rise of Totalitarian Democracy, New York: Praeger, 1960.
- ⑫ Wilson, Edmund. To the Finland Station,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and Co., 1953.

제 2 장 공산주의의 변천과 모순

오늘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국가의 수보다 더 많다. 이 말은 공산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뜻이다. 이것은 「마르크스」와 「엔겔」이 주창한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만,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역사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공산주의 혁명이 러시아에서 성공하기 이전에 이미 공산주의는 그 내재적인 모순으로 인하여 그 이론적인 분열을 거듭했고,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성공한후, 후진농업국인 중국에서 이단적인 공산주의 혁명이 또한 성공했다. 본 장은 공산주의의 변천과 모순을 이론상의 분과작용, 소비엘 공산주의 및 중국공산주의의 순서로 나누어 고찰한다.

첫째로 「마르크스」와 「엔겔스」의 공산주의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이르면서 이론상의 분열을 계속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와, 「카우츠키」의 정통파, 「로자」 「록셈부르크」의 좌파가 그것이며 「레닌」도 좌파에 속했다. 그러나 이들 상호간의 이론적인 대립은 바로 공산주의의 모순을 나타낸 것이었다.

둘째로 소비엘 공산주의의 변천을 고찰한다. 「레닌」에 의하여 성공된 소련의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중대한 수정이며, 「레닌」은 공산주의 이론을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스탈린」에 이르러 소련의 공산주의는 일국사회주의(一國社會主義),로 변질되었으며, 공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완전통제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스탈린」의 사후(死後), 소련의 공산주의는 후르시초프의 시대를 거쳐 변천을 거듭했지만,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셋째로,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로 소련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공산주의를 고찰한다. 중국공산주의는 그 지도자인 모택동의 전술사상에 의하여 성공했기 때문에 주로 모택동사상의 전술적인 측면을 설명하는데 그친다. 모택동사상의 중요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에서 발견되지만, 중공이 자기에 혁명모델이 세계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외교전략면에서도 발견된다.

I 공산주의의 분파작용

1 내용개요

오늘날의 공산주의가 「레닌」에 의하여 수정된 「맑시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흔히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불리운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레닌」에 의한 맑시즘의 수정은 「레닌」이 러시아 혁명에 성공하여 강력한 전체주의적 독재국가를 건설하였으며 세계 공산주의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지, 「레닌주의」가 「마르크스」주의를 대변할 수 있을만큼 이론적 우수성을 가졌기 때문은 아니었다.

「맑시즘」은 「레닌」주의의 등장 이전에 이미 여러가지 분파로 나누이게 되었으니 그 대표적인것은 「베른슈타인(E. Bernstein)의 수정주의파」 「카우츠키(Kautsky)의 정통파와 「록셈부르크(Rosa, Luxemburg)의 좌파가 그것이다. 「맑시즘」이 이와같이 다양한 변천을 겪은 것은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베른슈타인」은 1872년 독일사회민주당에 가입하였으나 정부의 탄압으로 영국으로 망명한후 「엔겔스」의 영향으로 공산주의자로 전향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후 「페이비안 협회」(Fabian Society)의 영향을 받아 「마르크스」주의 정통파와 결별하게 되었다. 「베른슈타인」은 사회민주주의가 하나의 철학으로서만 존재할것이 아니라 개혁된 사회민주당의 행동방침이 될 것을 주장하고 사회민주주의로선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 체제아래서 「프롤레타리아」가 점점

더 착취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위기는 그 체제의 몰락을 가져 오리라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비판하고, 대중소비와 노동자의 실수입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량을 증가함으로써 자본주의는 몰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 그는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가 제품의 대립을 초래하리라고는 믿었지만, 소수의 기업가에 의한 자본독점은 생산제급에 의하여 저지되며, 자본의 집중은 적어도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립되는 양극화보다는 사회의 다분화를 주장하였다.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의 가치설에 반대하고 경제적 요소가 “사회적 발전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유물사관을 부인했다. 그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와 동등한 비경제적 요소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으니 그의 견해는 소위 부르주아, 사회학(Bourgeois Sociology)의 교량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노동자에게 조국이 없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다만 그들의 제급에만 속한다” 그러나 「베른슈타인」은 노동자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사실을 지적하고 이것은 그들이 국가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마르크스」의 “경제적 결정론”을 포기하고 「칸트」의 윤리관을 받아 들임으로써 “사회주의적 투쟁의 정당성은 당위의 문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변화의 법칙에 대한 과학적 분석보다는 정책적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했다.

수정주의로 불리워진 「베른슈타인」의 견해는 당시 독일사회민주당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아니 하였지만 오늘날 서독의 사회민주당은

「베른슈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우츠키」는 「베른슈타인」의 영향으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으나 「베른슈타인」과는 달라 정통적 「마르크스」주의를 고수했다. 그는 수정주의자와 같이 사회주의는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수정주의자와는 달리 독일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되리라고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혁명적’ 전략을 주장했던 것이다.

「카우츠키」를 중심으로한 「마르크스」주의의 정통파는 비록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을 받아 들이지는 아니했으나 자본주의의 장래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관적 예언과 유물사관을 신봉했다. 그들은 ‘계급투쟁론’과 아울러 “혁명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혁명은 계속적인 폭동이 아니라 “혁명을 위한 사회적 조건의 성숙”을 토대로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하여 노동자의 정치적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통파들은 당시 독일의 제정(帝政)을 지지하는 부르주아정당파의 타협을 거부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이론과 거리가 멀었고 점차 수정주의적 경향을 띄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카우츠키」자신도 독일정부의 사회입법을 거의 지지하게 되었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초기에는 「카우츠키」와 더불어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 운동의 필연적 목적은 정치권력의 쟁취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10년을 전후하여 「룩셈부르크」는 혁명적 경험 특히 “정치적 스트라이크”에 관한 견해의 차이로 「카우츠키」의 정통파로부터 분리되어 「마르크스」

주의의 좌파를 형성하였다. 「루셈부르크」는 “과격한 혁명적 대중의 스트라이크”를 주장했는데 이러한것은 “당의 혁명돌격대적 역할에 의하여 유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같은 과격한 견해는 당이 노동자들의 필연적인 정권의 획득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된다고 보았던 「카우츠키」와 대립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좌파로 조직문제를 위시한 여러 이슈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또 분열을 거듭했던 것이다.

2 교수방법

강사는 공산주의의 분과작용이 그 모순때문에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인식 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와 「엔겔스」의 사상이 완벽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분과작용이 대두된 시대적 배경이 「마르크스」와 「엔겔스」가 “공산당선언”을 발표하던 당시와 현저하게 달랐다는 사실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사실 「맑시즘」이 구라파의 노동운동의 주요 교조로 받아들여졌지만 구체적인 전략의 문제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어떤 사회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모든 조건이 성숙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전의 대립이 결국은 맑시즘의 상이한 해석을 낳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전의 대립은 오늘날에 와서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차대전이전 「맑시즘」에 관한 논쟁은 전략이나 조직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그것은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의 비현실성에서 출발했다. 경제적 변영의 확대와 입헌정부의 대두는 위

기와 빈곤이 심화되리라는 「마르크스」의 예언을 뒤집어버린 결과를 뒤집어버린 결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강사는 “공산당선언”이 주장한 혁명적 구호가 “제2 인터내셔널”의 온건한 지도자들의 태도와 일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된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정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교리의 완전한 변화를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당시의 사회적 조건이나 사회민주주의의 목표와 정책을 변형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수정주의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배격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수정주의에 반대하던 “제2 인터내셔널”의 지도자들은 「마르크스」의 저술과 노동운동에 충실히 따르면서 「마르크스」주의의 문리적 해석에 급급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론과 현실과의 격차를 연결시키는 방법이란 이러한 격차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개혁적인 주장을 극복시키기 위하여 「마르크스」의 혁명적 이론을 다시 해석했던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로 전향한 「마르크스」주의자에게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고집이 이데올로기적 후위행동에 지나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은 사회주의 운동에 있어서 지배적 경향이 수정주의적 요소를 좇았기 때문이었다.

수정주의자들은 현실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론의 변경을 추구했지만 정통파의 이론가들은 현실과의 야합을 부인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20 세기에 들어서면서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과격파(좌파)들은 노동자의 운동을 “공산당선언”의 혁명적 행동의 방향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이론과 현실과의 격차를 없애려 했던 것이다. 이 정통파가 공산주의의 핵심분자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들의 대부분은 공산당에 가입했던 것이다.

과격파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마르크스」의 생존 당시와는 현격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것은 특히 제국주의의 등장에 의한 것이지만, 그들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이 사회의 기본적 모순으로 남아있다고 믿었고 따라서 「마르크스」가 예언한 혁명이 불가피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다만 「마르크스」주의의 좌파 사상가들도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그 대표적인 예가 「레닌」과 「룩셈부르크」의 차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사는 러시아 공산주의의 분파작용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며 러시아 혁명으로 인하여 민주적 사회주의가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와 결별하게된 경위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Cole, G.D.H. A History of Socialist Thought, Vol III: Second International 1889-1914, New York: St. Martins press, 1956.
- ② Gay, peter. The Dilemma of Democratic Socialism: Eduard Bernsteins Challenge to Marx,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 ③ Labedz, Leopold(ed.) Revisionism: Essays on the History of Marxist Ideas. New York: praeger, 1962.
- ④ plamenatz, John p. German Marxism and Russian Communism, New York: Longmans, 1962.

- ⑤ Schorske, Carl E. German Social Democracy 1905-1917: The Development of the Great Sch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5.
- ⑥ Nettl, John P. Rosa Luxemburg. 2 Vols.,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 ⑦ Luxemburg, Rosa. The Russian Revolution and Leninism or Marxism?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1.
- ⑧ Luxemburg, Rosa. The Accumulation of Capital,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64.
- ⑨ Kautsky, Karl.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4.
- ⑩ Kautsky, John H. "J.A. Schumpeter and Karl Kautsky: parallel Theories of Imperialism." Midwest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01-128.

II 소비엘 공산주의

1 내용개요

소련 공산주의의 기원과 본질에 관하여는 그것이 전통적(傳統的)인 러시아의 전제(專制)가 현대적(現代的)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는 견해와 고전적 맑시즘의 혁명적 요소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과거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되어 있다. 사실 소련의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의 이론과 프랑스의 「자코뱅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러시아적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양자의 견해가 모두 일리가 있다.

하나의 독립된 정치운동으로서 러시아의 맑시즘은 1879년 소위 「나로드닉 운동(Narodnik Movement)」의 분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분열의 주동자였던 「게오르기. 프레하노프」(Plehhanov)는 그들의 교리의 전파를 위해서 선전과 선동을 주요한 무기로 삼았는데 테로를 일삼던 반대파와는 대립되었었다. 러시아의 맑시즘의 비조라고 불리는 「프레하노프」는 혁명의 원동력으로서의 농민은 그들의 선전과 선동 혹은 심지어 「테러」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했고, 한편 19세기말부터 서서히 발흥하기 시작한 산업은 「프레하노프」로 하여금 자신의 견해를 재음미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새로이 일어나는 공장노동자에게 미래의 혁명에 대한 희망을 걸었다. 말하자면 그는 「마르크스」주의자가 된 것이다.

1883년 「프레하노프」를 중심으로 한 혁명가들은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 단체를 조직하였는데 「레닌」은 이 단체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1903년 「러시아 사회주의 민주노동당」은 당조직에 관한 문제로 분열하게 되었다. 「마르토프」(Martov)를 중심으로 한 소수파는 당이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공개정당이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러시아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성취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노동자계급의 성장에 달린만큼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믿었다. 이에 반하여 「레닌」의 다수파는 정당이 노동자의 전위를 담당할 소수의 엄선된 간부로서 조직되어야 하며,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은 "영구혁명"이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닌」자신의 견해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그는 「러시아」가 사회주의혁명에 도달하기에 앞서 부르조아-민주주의적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정통적인 이단계의 혁명론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레닌」은 멘체빅(少数派)과는 달리 부르조아-자유주의자들을 배반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단결을 호소했었다.

그러나 1905년의 혁명이 절정에 달하였을때 레닌은 이와같은 두 단계의 혁명은 하나로 압축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트로츠키」(Trotsky)의 견해와 동일한 것이었다.

1917년 혁명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하자 「레닌」의 새로운 혁명론은 세계적인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통적인 맑시즘의 입장과는 먼 것이었다. 「레닌」의 혁명론은 이미 그 선행조건으로서의 산업의 발전, 대중적인 노동자계급, 부르조아-민주주의의 혁명의 완수가 요구되지 아니했다. 말하자면 「칼. 마르크스」가 「레닌」에 의하여 후진국에 있어서 혁명 수행이라는 과업에 적응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산업의 후진성은 혁명의 장애로부터 기회로 변질되었으며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라는 개념은 다수의 무기로부터 소수의

도구로 전락되었다.

1902년 「레닌」은 직업적 혁명가의 조직을 위한 저술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산주의의 조직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개념이 요약되어 있다. 먼저 자발성에 대한 문제로서 외부의 지도력이 없이는 노동자 계급이 그들의 진정한 이익을 찾아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적 투쟁을 추구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역사의 법칙을 알고있는 소수의 혁명적 진위에 의하여 지도되어야 하며, 혁명적 전위는 직업적 혁명가로 구성된 당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떠한 단체도 자기에 정당파는 권력에 대한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권력의 독점에 대한 개념이다.

이와 같은 「레닌」의 혁명적 조직에 대한 이론은 「볼셰비키」정당의 강인성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하여 1917년 10월 혁명으로 권력을 획득하게 되자 「레닌」은 조직의 우수성과 러시아 사회에 있어서 축적된 불만을 교묘히 이용하여 당의 독재를 강화할 수 있었다.

「레닌」에 의하면 대중의 이익의 최종적 보루는 공산당이다. 이 견해는 일당독제와 정적의 박멸을 위한 비밀경찰의 사용이라는 논리적 결론을 유발시킨다. 그리하여 「레닌」은 반대당의 자유를 빼앗고 사회의 모든 조직은 독점당(공산당)의 의사를 매개할뿐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 독자성을 부인했다.

일당국가로부터 당내의 독재를 설립하는 것은 쉬운 것이다. 이것은 물론 「스탈린」에 와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조직에 관한 초집중적 사상은 이미 「레닌」에 의하여 그 기초가 설립된 것이다.

「트로츠키」는 1904년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레닌」의 계획에 따르면 당은 노동자계급의 지위를 빼앗을 것이며 결국에 가서 독재자가 당조직을 빼앗을것”이라고 했다.

「트로츠키」의 예언은 「스탈린」에 와서 적중되었다. 「스탈린」은 「레닌」이 죽은 뒤 「트로츠키」 「카메네프」 「지노비예프」 「부카린」 「봄스키」 「리코프」등의 정적을 차례로 숙청하고 당의 최고 실력자로 등장했지만 그의 숙청은 「볼셰비키」당내에만 한하지 아니했다. 「호루시초프」가 1956년 제 20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밝힌바에 의하면 1930년대의 「스탈린」의 피의 숙청은 수천명에 달했다 한다.

이와같이 스탈린이 막강의 독재자로 그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그 자신의 의사당의 운영원칙으로 등장했고 당의 기구는 「스탈린」의 의사에 복종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스탈린」의 독재는 그의 “퍼스날리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러시아의 후진성을 극복하려는 「레닌」과 「스탈린」의 열망이 전체적인 방법에 대한 의존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볼셰비키」가 권력(權力)을 획득했을 당시 러시아는 초기의 산업사회로 돌입하고 있던 농업국이었다. 일부의 「볼셰비키」사이에는 러시아의 후진성이 사회주의혁명을 불가능하게 하리라는 두려움조차 없지 아니하였지만 「스탈린」과 「레닌」은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방법으로 후진사회를 근대화하는것이 공산주의의 임무라고 믿었다.

1921년에서 1928년 사이에 실천되었던 「신경제 계획」(NEP)과 1928년부터 시작된 5개년계획은 이와같은 독재자의 신념이 반영된 정책이었다. 「신경제정책」기간 소련은 상당한 공업의 성장을 이룩

하였지만, 공업부문의 지속적인 팽창을 위하여 투자자본을 축적하는데 곤란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공업자본의 축적을 위하여 집단 농장 제도를 채택하게 될 것이 결국은 농민의 희생으로 돌아갔다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스탈린」의 시대는 교소보다 실천이 강조된 시대였다. 혁명정당으로부터 지배정당으로 「볼셰비키」가 변질된 것은 「레닌주의」(혹은 「마르크스 · 레닌」주의)가 국가의 지배올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의 주요임무는 당지도력의 결정을 설명하고 합리화하고 옹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스탈린」의 이론적인 주장은 작용적 지배올로기의 선언위에 아무것도 아니다. 「트로츠키」의 영구혁명과의 논쟁에서 「스탈린」이 주장한 사회주의연설의 이론은 소련의 부강을 과시하는 것이었고 또한 외세의 위협에 대한 소비에트의 애국심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했다. 「스탈린」은 국가가 소멸할 수 있기 전에는 더욱 강성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소비에트사회를 재편성하는데 있어 국가기구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었다. 또한 공산주의에 다가올수록 계급의 적을 더욱 위협시킨 그의 주장 역시 피의 숙청의 정당화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1953년 「스탈린」의 죽음은 소비에트 공산주의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 시대는 「후르시초프」의 시대로 부를 수 있겠는데 그것은 일종의 합리적 전체주의였다.

「후르시초프」는 전체주의 권력의 실체를 보류하면서 경제와 행정통제를 합리화하고 「스탈린」시대의 테러를 완화하고 정권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넓히기 위하여 복지개혁을 단행했다.

「후루시초프」는 스탈린과 달리 당을 그의 지배에 있어서 제1의 도구로 삼았다. 말하자면 「레닌」의 운영방식을 당내에 부활시켰다.

「후루시초프」가 당의 기구를 이용하게 된것은 「스탈린」시대의 초집중된 권력구조가 점차로 복잡해가는 경제의 합리적 관리에 부적합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후루시초프」는 초집중된 권력구조의 분산을 시도했지만 당의 기능은 여전히 그의 의사집행을 위하여 존재하였고 자유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후루시초프」는 그 자신이 인민과 친근한 인상을 주기위하여 노력했고 공산주의 건설에 있어서 대중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다. 그리하여 「후루시초프」에 와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는 전인민의 정당으로 대치되었다. 사실 「후루시초프」는 공산주의 건설단계에 돌입하는 여러가지 이론을 정립했던 것인데 특히 1961년 당의 프로그램은 국가가 소멸함에 따라 국가기관을 점차 자치단체로 대치할것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행정기능에 있어서 보다 많은 대중 참여를 강조했지만 그것은 물론 당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현되어야 된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공산주의의 단계에 있어서도 당의 소멸은 결코 그들이 예상하고 있는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후루시초프」치하의 소련은 한동안 공업과 우주개발에 있어서 괄할만한 성장을 보였으나 그의 집권말기 공업의 성장은 지연되고 농업정책은 실패로 식량난을 겪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부 백림으로부터 서방측 세력을 축출하려던 기도의 실패, 큐바미사일 사건 증소분쟁의 격화, 동구에서 소련의 영향력 감퇴 및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후루시초프」의 권위를 점차 떨어뜨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집권초기의 업적과 반스탈린운동에도 불구하고 「후루시초프」는 1964

년 10월 권좌에서 밀려났으며 새로운 집단지도체가 등장한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2 교수방법

이 강의는 맑시즘이 최초로 성공한 소련에 있어서 이념과 정치 현실과의 모순에 중점을 두고 소비엘 공산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강사는 「레닌」과 「스탈린」과 「스탈린」 사후의 소련의 지도자들이 맑시즘에 어떠한 이론적 공헌을 하였는가를 설명하여야 되며 이러한 이론적 공헌이 지배체제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띄어왔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야 될 것이다.

먼저 강사는 「레닌」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거꾸로 세웠다는 사실을 역설해야 된다. 「마르크스」는 역사의 흐름이 개개의 사건을 결정지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레닌」은 광적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인간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마르크스」는 역사의 필연적 흐름이 노동자들의 집권을 자연적으로 초래하리라 믿었으나 「레닌」은 「마르크스」의 이론이 무자비한 소수에게 권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입증했다. 「마르크스」와 「엔겔스」가 국가가 계급없는 사회로 소멸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레닌」은 공산주의 국가를 일찌기 없었던 독재국가로 만들어 버렸다.

1902년에 발표한 <무엇을 해야 되는가? (What was to be Done?)>이란 저술에서 「레닌」이 직업적 혁명가의 개념을 밝힌 것은 맑시즘에 대한 최대의 공헌이지만 1917년 11월 혁명 당시 「레닌」이 사용한 혁명의 선술에 관하여도 일언을 요한다.

이 혁명은 다섯가지의 기본전술을 가졌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혁명의 연속성이다. 1917년의 11월 혁명도 하루밤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공산주의자들은 사실 "전격"전쟁의 전술을 강조하고 있다.

(2) 혁명의 폭력성이다. 「레닌」은 힘과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는 대중을 착취하는 계급을 탄압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3) 혁명은 도시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폭동이나 내란을 도시에서 유발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볼셰비키」는 러시아의 2대 도시인 「모스크」와 「페트로그라드」의 장악을 제1의 목표로 삼았다. (이것은 모택동때 이르러 그 예외가 되었다)

(4) 엘리트에 의한 지도가 혁명에 절대적 요소다. 이 엘리트는 소수의 단결된 조직체이어야 한다.

(5) 공산주의 혁명은 대규모의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주의깊게 선택된 일부의 지지만으로 족하다. 혁명은 사회저항운동이기 때문에 소수의 불평분자를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레닌」의 이러한 혁명전술은 그의 제국주의론과 더불어 여러 후진사회에 있어서 공산주의 운동 지침서가 되었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공산주의 이론으로서 최초로 후진국에 관심을 두었고(그러나 「레닌」은 「카우츠키」 「룩셈부르크」 「홉슨」등의 영향을 받았다) 또 전쟁 불가피론을 주장한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강사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이 제국주의전쟁을 뒤이어 발생한 것이라는 「레닌」의 희망이 20세기 정치적 현실과 얼마나 차이가 있었던 것이었느냐에 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레닌」은 계급투쟁이라는 맑시즘의 원칙을 그의 제국주의론에 결부

것인데 말하자면 "서구의" 「마르크스」이론을 "동방의" 혁명전략에 적용시킨 점에서 오늘날 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게 된 소이판 사실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스탈린」의 이론적 주장은 "한국가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개념인데 이것은 세계공산화라는 「마르크스·레닌」의 주장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스탈린」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혁명의 불가피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혁명을 지도하기 위한 강력한 소비에트 체제를 먼저 강조했던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강사는 또한 어떻게 하여 「스탈린」의 집권시기에 전체주의적 국가의 개념이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하여 발전되지 아니하면 안되었나를 설명해야 하고 「프롤레타리아」의 독제가 아닌 당서기의 독재라는 개념과 「스탈린」의 무자비한 통치기술에 대한 인식도 강조해야 한다.

「스탈린」 사후의 이념적 변화는 「스탈린」의 과격한 정책에 대한 반동이란 점에서 논의해야 된다. 사회주의에 도달하는 길이 반드시 소련의 모델만이 아니라는 공산세계의 일반적인 추세도 언급함이 좋다. 끝으로 「후르시초프」가 사회주의로서의 전향이 평화로운 방법에 의하여 그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필연성과 불가피성을 믿었던 고전적 맑시즘과 얼마나 모순되는가를 지적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이론적 모순이 결국은 다양한 현실에 적응해야 되는 지배체제의 교민을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될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Hunt, R.N. Carew.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Harmondsworth: pelican Books, 1963. pp. 159-283.
- ② Lenin, V.I.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in Cohen, Carl(ed), Communism, Fascism and Democracy: The Theoretical Foundation, New York: Random House, 1962. pp. 148-164.
- ③ Lenin, V.I. "State and Revolution," in Cohen, Carl(ed). Communism, Fascism, and Democracy, New York: Random House, 1962. pp.176-199.
- ④ Conquest, Robert. "Liberalization: A Balance Sheet." problems of Communism, Vol. K, No 6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pp. 1~8.
- ⑤ Lichtheim, George. "The Programme and the Marxist-Leninist Tradition." Boettcher, Erik. "Soviet Social policy in Theory and practice," and Frank, Victor. "Coexistence and Revolution." in Schalapino Leonard(ed.) The U.S.S.R. and the Future: An Analysis of the New program of the C.P.S.U. New York: praeger, 1963. pp. 23-68.
- ⑥ Arendt, Hanna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Meridian Books, 1958.
- ⑦ Brzezinski, Zbigniew k. The permanent purge: politics

- in Soviet Totalitarianis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 ⑧ Gurian, Waldeman (ed.). The Soviet Union: Background, Ideology, Reality, South Bend, Indiana: University of Notredame press, 1951.
- ⑨ Gurian, Waldeman, Bolshevism: An Introduction to Soviet Communism, South Bend, Indiana: University of Notredame Press. 1952.
- ⑩ Kelsen, Hans. The political Theory of Bolshevism: A Critical Stud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8.
- ⑪ Lichtheim, George. Marxism: A Historical and Critical Study, New York: praeger 1961.
- ⑫ Treadgold, Donald W. Lenin and His Rivols: The Struggle for Russia's Future, 1898 ~ 1906, New York: praeger, 1955.
- ⑬ Wolfe, Bertram D. Communist Totalitarianism: Keys to the Soviet System, Boston: Beacon press, 1961.
- ⑭ Shub, David. Lenin, New York: Doubleday and Company, 1948.
- ⑮ Fisher, Lovis. The Life of Lenin, New York: Harker, 1964.
- ⑯ Trotsky, Leon. The History of the Russian Revolution,

Translated by Max Eastman, 3 vol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7.

- ⑰ Ulam, Adam B. The Unfinished Revolution: An Essay on the Sources of Influence of Marxism and Communism. New York: Random House, 1960.
- ⑱ Ulam, Adam B. The Bolsheviki, New York: MacMillan. 1965.
- ⑲ Wolfe, Bertram D. Three who made a Revolution: A Biographical History, 4th ed. Revised, New York: Dial press, 1964.
- ⑳ Brumberg, Abraham (ed.). Russia Under Khrushchev. New York: praeger, 1963.
- ㉑ Dallin, David J, and Nicolaevsky, Boris I. Forced Labor in Soviet Rus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7.
- ㉒ Deutscher, Isaac. Stalin: A Political Biograph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49.
- ㉓ Dux, Dieter (ed.). Ideology in Conflict, New York: D. Van Nostrand, 1963.
- ㉔ Khrushchev, N.S. The Crimes of the Stalin Era, Annotated by Boris I. Nicolaevsky, New York: The New Leader, 1956.
- ㉕ Laqueur, Walter, and Labeledz, Leopold (eds.), The Future of Communist Society, New York: praeger, 1962.
- ㉖ Moore, Barrington Jr. Soviet politics-The Dilemma of power: The Role of Ideas in Social Chan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 ⑦ Ritro, Herbert(ed.). The New Soviet Society: Final Text of the program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New Leader, 1962.
- ⑧ Trotsky, Leon. Stalin: His Appraisal of the Man and His Influence, New York: Harker and Brothers, 1946.
- ⑨ Wolfe, Bertram D. Khrushchev and Stalins Ghost, New York: praeger, 1957.

Ⅲ 모택동 사상 전략적 측면

1 내용개요

여러가지 의미에서 「모택동」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의 집권은 공산주의에 의하여 일찍이 쟁취된 집권 가운데 가장 주목할만한 사건이다. 모택동의 집권은 그 자체로도 경이적이지만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강화란 절에서도 그의 의의는 지대하다. 그러나 「모택동」의 집권은 한때 동질성이 강조되던 공산불력내부에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였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모택동」 사상에는 「마르크스」의 이론보다는 「레닌」의 교훈이 더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아세아 아프리카의 후진사회에서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모택동」은 「푸롤베타리아」와 민주주의자와의 결합으로 제국주의세력을 타파할 수 있다는 「레닌」의 이론을 받아들여 그것을 후진농업사회인 중국적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용시켰다. 또한 「모택동」은 「레닌」의 조직이론에 따라 정예화된 공산당을 이끄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택동」의 주요저작이 비록 오늘날 게릴라전쟁에 있어서 지도적 영향력을 주어왔지만 「모택동」은 창조적인 이론가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2차대전 이후 많은 공산정권이 외세에 의하여 수립되었음에 반하여 중국공산당의 집권은 독자적이고 토착적인 요소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모택동」의 독창성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중국공산당의 집권을 놓게한 모택동의 혁명전략만을 주로 설명하려고 한다.

중국공산주의 혁명은 "군사적인 대중봉기" (Militarized Mass Insurrection)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계획된 대중의 혁명전쟁이란 점에서 다른 혁명과 구별된다. "군사적인 대중봉기"는 인민대중에 의해서 수행되지만 여기에는 혁명간부의 지도가 필수적이다. 그들의 목적은 혁명전쟁에 의하여 정권의 획득에 있지만 혁명의 이념은 주로 민주주의적이라는 특색이 있다. "군사적인 대중봉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취약한 혁명군대가 어떻게 하여 직업적으로 훈련된 정부의 정규군을 타파하느냐는 것이다.

1927년 제1차 국공합작이 장개석의 쿠데타로 실패에 돌아가자, 중국공산주의자들은 「코민턴」의 정책을 불신하게 되었다. 「모택동」의 지도하의 소규모의 혁명군은 호남과 강서사이의 산간벽지로 도피하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주의 혁명의 문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던 것이니 소위 「정강산투쟁(井崗山斗争)」을 통하여 모택동의 혁명전술은 잉태되었다.

1928년부터 중국공산당의 세력은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강소성을 근거로하여 독립된 지역의 지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1년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모택동」의 기본 전략은 군사화하는 것이었다. 「모택동」의 군대는 비록 장개석의 제5차 소공전(掃共戰)에 의하여 협서성(陝西省)으로 도주행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강서에서의 경험에서 얻은 게릴라전술은 4차에 걸친 국민당군의 공격을 이겨낼수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1936년 「모택동」은 공산혁명을 가능케 한 소위 「인민전쟁전술」을 창안해 냈다. 이것이 "군사적인 대중봉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다. 인민전쟁은 공산주의자의 활

등이 정치적인것에서 군사적인 것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군사적 행동의 원칙이 「제릴라전술」인 것은 틀론이다. 그러나 「
 제릴라전술」만 가지고 「인턴전정」을 승리로 이끌수는 없다. 거기
 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단계의 전술이 필요하다. 첫째로 군사적인
 대중봉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지하는 인민의 동원이다.
 모택동은 "혁명전쟁은 대중의 건정인 가담에 대중을 동원하고 대중
 의 의존함으로써 단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대중의 동원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는 광범위한 이데올로기적 선전이 필요하다. 1937년 이후
 일본군의 침략은 모택동에게 절호의 기회를 가져왔다. 정치적으로
 계몽되지 아니했던 대중들이 일본의 침략에 의하여 깨우치기 시작했
 던 것이다.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은 「농촌인민의 민족주의」를 성
 공적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둘째로 당이 영도하는 혁명군의 양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공
 적인 "군사적인 대중봉기"는 당이 노련한 군사전문가를 공급할 것
 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혁명군의 양성을 위하여는 군
 민관계의 개선이 급선무인데 그러기 위하여 모택동은 소위 3대기율,
 8항주의(三代紀律, 八項注意)를 창안해 내었던 것이다. 요컨대 군
 민관계의 개선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는 수단이라고
 「모택동」은 믿고 있었다.

셋째로 군사적 행동은 제릴라전술을 좇아야 한다. 그런데 모택동
 의 제릴라전술도 대중의 지지를 절대 필요로 하고 있다. 「모택동
 」은 제릴라를 물고기에 비유하고 대중을 물에 비유했다. 그리하
 여 정치적 기운이 적당하다면 물고기는 비록 수에 있어서 적더라도

변경할 수 있다고 믿었다. 모택동의 계릴라전술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손자병법(孫子兵法) 이래 「적이 진격하면 후퇴하고 적이 정지하면 교란하고 적이 피로하면 공격하고 적이 후퇴하면 추격한다」(敵進我退, 敵退我進, 敵疲我攻, 敵退我追)로 요약된다.

그러나 모택동에 의하면 계릴라 전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계릴라전쟁은 항상 일시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것은 지구권을 통하여 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모택동」의 「인민전쟁의 전술」이 성공하면, 공산당은 중국대륙을 점거할 수 있었는데 「모택동」의 「혁명전술」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이론적기여를 했다고 보다는 후진농업사회인 중국적 현실을 감안한 실천적 적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모택동」의 대중동원이 가장 잘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은 1958년에 출범했던 「대약진 운동」에서였다. 이 시기에 중공 지도자들은 낙후된 중공의 경제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중의 노동력을 이익이나 기계와 대치시키려고 기도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비극적인 실패로 끝나고만 것은 대중동원의 한계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점차로 승대해가는 국내적인 불만, 경제적 실패, 중소분쟁의 격화에도 불구하고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은 아시아의 도처에서 직접적인 위협으로 등장했으며 모든 저개발국가들에 제 폭력적혁명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무서운 전체주의 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다. 중공의 이와같은 성공은 「모택동」의 「혁명전술」의 기저(基底)에 있는 "대중로선"이라는 실천적 논리가 결국은 일당독재할 가능케하는 완전통제의 수단으로서 교묘히 이용되는 소이에 기인한다.

2 교수방법

오늘날 중공이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고있는 강대국이란 점에서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위협적이란 점에서 이 강의는 특별한 취급을 요한다.

전술한 내용개요가 주로 「모택동」의 「혁명전술」을 다루고 있지만 강사는 여기에 구애됨이 없이 다각적인 시점에서 중공의 세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강사는 인민전쟁의 이론에서 볼 때 「모택동」의 전술이 고전적인 맑시즘에 대한 하나의 이단적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택동이 비록 중국의 전통적인 군사사상의 현대화에 성공했다하더라도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조직이론을 누구보다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모택동」의 독창성은 부인해야 것이다. 그러나 강사는 중공정권이 그들의 혁명전술을 후진국 및 식민지역에 있어서 공산주의운동의 모델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 특히 세계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소련으로부터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오늘날의 공산주의가 반드시 동일한 형태의 정치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될 것이다.

그러나 중공이건 소련이건 어떠한 공산주의 체제이건 결국은 당에 의한 전체주의적인 지배체제란 점에서는 모택동 치하의 중공정권의 전체주의성도 설명해야 할 것이다. 즉 중공은 소수의 당지도자가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고도의 중앙집권적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국가기구는 사실상 무의미하며 또한 당은 그들의 이념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을 사회의 모든 부문에 침투시키

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될 것이다. 중공에서 「모택동」사상은 거의 만능적 교리로서 받아들여졌고 이것을 강과하기 위한 사교육은 전인민을 「모택동」사상의 노예화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중공지도자들은 그들만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고 외부세계에서 배울 것이 별로 없으며 그들의 길이야말로 다른사람들이 따라야 할 길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독신주의자가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외부세계의 현실과 변화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중공지도자들이 군사력의 건설과 중공인민의 동원에 치중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강사는 중공에 있어서 「대중동원」이 「대중행진」 「민병대의 조직」 「인민공사」 「집단사위」 등에서 잘 나타났다는 사실을 「모택동」의 「대중로선」과 관련시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모택동」의 「대중로선」에 의하면 당은 대중으로부터 정책을 추출해야 되고 그 정책을 기초로하여 대중을 지도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대중통치의 수단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될 것이다.

중공에 있어서 전체주의적 통제는 당이 모든 통신수단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발견되고 중공에는 비공식적인 견해가 없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한다. 다른 전체주의적 정권과 마찬가지로 중공은 외부의 적과 내부의 희생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투쟁의 개념을 늘 강조하여 왔다. 특히 국내의 반당 반정부의 세력을 진압하기 위하여 중공지도자들은 「인민」과 「인민」의 적과를 구별하여 이들사이의 투쟁을 강조하여 왔는데 이러한 투쟁의 개념에 대한 이해없이 중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리적 설복

이나 강제의 기술을 분석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또한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강사는 중공정권의 취약성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 분화혁명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당지도자 내부에 갈등을 비롯하여 지식계급의 불만 농민들의 저항 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당 내부의 분열이 「모택동」의 지도력의 약화에서 표면화되었기 때문에 지도자계승에 있어서 합리적 절차가 없는 일당독재의 취약성이 불원한 장래에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리란 전망을 하여도 좋을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金相浹. 毛澤東思想, 改正版, 서울: 知文閣
- ② Barnett, A. Doak. Communist China and Asia.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60. pp. 1-37 and 65-86.
- ③ Tang, Peter S.H. Communist China Today, 2nd ed. vol. 1. Washington: Research Institute on the Sino-Soviet Bloc, 1961. pp. 71-123.
- ④ Soalapino, Robert A.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65. pp. 1-81.
- ⑤ Boorman, Howard L. et al. Moscow-Peking Axis: Strengths and Strains, New York: Harter and Row, 1957.
- ⑥ Floyu, David. Mao Against Khrushchev. New York: Praeger, 1963.

- ⑦ Hughes, T.J. and Luard, D.E.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ommunist China. 1949-1960. 2nd e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 ⑧ Johnson, Chalmers A. Peasant Nationalism and Communist Power. 1937-1945,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62.
- ⑨ Lewis, John W. Leadership in Communist Chin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3.
- ⑩ Lewis, John W. Major Doctrines of Communist China, New York: W.W Norton and Co, 1964.
- ⑪ Lifton, Robert J. Thought Reform and the Psychology of Totalism, New York: W.W. Norton and Co., 1961.
- ⑫ London, Kurt (ed.). Unity and Contradiction: Major Aspects of Sino Soviet Relations, New York: Praeger, 1962.
- ⑬ Macfargnar, Roderick. The Hundred Flowers Campaign and the Chinese Intellectuals, New York: Praeger, 1960.
- ⑭ Mu, Fu-sheng. The Wilting of the Hundred Flowers: The Chinese Intelligentsia Under Mao, New York: Praeger, 1962.
- ⑮ Schram, Stuart.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Tse-tung. 2nd ed. Revised, New York: Praeger, 1969.
- ⑯ Schram, Stuart. Mao Tse-tung,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6.
- ⑰ Snow, Edgar. The Other Side of the River, Red China Today New York: Random House, 1962.
- ⑱ Yang, C.K. A Chinese Village in Early Communist Transiti

- Cambridge:M.I.T.Press,1959.
- ⑱ Zagoria,Donald S. The Sino-Soviet-Conflict,1956-1961.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1962.
- ⑲ Schwartz,Benjamin.Chinese Communism and the Rise of Mao. Cambridge:Harvard Univ.Press,1951.
- ⑳ Cohen.Arthur A. The Communism of Mao Tse-tung.Chicago and London:University of Chicago Press,1964.
- ㉑ Brandt,Conrad,Benjamin Schwartz,and John K.Fairbank,A Documentary History of Chinese Communism,New York: A Theneum,1966.
- ㉒ Brandt,Conrad. Stalin's Failure in China.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1958.
- ㉓ Ch'en, Jerome. Mao and the Chinese Revolution,London:Oxford University Press,1965.
- ㉔ Mao, Tse-tung. Selected Works. 5Vols, New York:International Publishers, 1953-1981.
- ㉕ Chiang,Kai-shek, Soviet Russia in China, New York:Farrar, Straus and Cudahy,1957.
- ㉖ Schurmann, Franz.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2nd Enlarged ed.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 ㉗ Schurmann,Franz, and Schell, Orville, The China Reader, Vol.Ⅱ:Republican China, Vol.Ⅲ:Communist China.New York: Vintage Books,1967.

제 3 장 공산국가의 현실

본장은 공산국가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치 및 사회현실을 각각 설명하고 우리의 자유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있는 북괴의 현실을 마지막으로 고찰한다.

첫째 부분은 공산국가에 있어서 일당독재란 측면에서 정치현실을 분석한다. 공산국가에 있어서 당은 유일한 합법정당으로서 모든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완전통제와 완전동원 (total mobilization)의 정치를 요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당은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위한 당이 아니며,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당이 아니며, 소수의 지배 엘리트의 정치권력을 위하여만 존재한다. 또 공산주의 국가의 정치현실은 대내적으로는 테러 (공포) 정치, 대외적으로는 호전적 팽창주의로도 표현할 수 있다.

둘째 부분은 공산주의 국가의 사회현실이다. 자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평등을 누리지 못하는 말하자면 기본권의 보장이 완전히 박탈된 공산국가의 사회현실은 압축 바로 그것이다. 문화·예술의 부면에서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모든 문화적·예술적 활동도 당의 지시아래 당과 정부의 선전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산사회는 급격한 공업화를 목표로 하고 이것을 달성키 위하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도 희생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셋째 부분은 북괴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 2차대전이 끝난후 북괴공산집단의 수립에서 시작하여 북괴집단의 성격과 김일성의 독재 체제를 파해친다. 또한 북괴의 무력적화정책에 근거한 침략도발이 우연한 전략이 아니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폭력의 역할에 대한

공산이론을 설명하고 끝으로 여러면에서 볼 수 있는 북한사회의
비참한 취실을 고찰한다.

I 정치현실

1 내용개요

세계의 모든 공산국가의 정치현실은 당독재국가란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공산국가의 정치현실은 공산당에 의한 독재라는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공산국가에 있어서 당은 모든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당에 의한 국가권력의 독점은 역사적 발전단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문화혁명당시 중공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당이 일시적으로 붕괴되어 그 기능이 마비되었던 예외적인 이점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산국가의 공산당의 초기의 소수 혁명적 음모가들의 단체로부터 고도로 조직되고 훈련된 지배엘리트의 정당으로 변질되었다.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의 전위로부터 국가권력을 독점행사하는 정당이 된 것이다. 예컨대 소련에서는 전체인구의 약 5%가 공산당원으로서 전소련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국가에 있어서 공산당은 유일한 합법정당인 것이 보통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는 물론 사회나 경제도 통제하고 있다. 공산당은 자유민주주의적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정당은 아니다. 그것은 자도자에게 효율적인 통제수단을 공급하는 전체주의적 조직인 것이다. 공산당은 그 성격상 배타적이기 때문에 당원이 될 수 있는 절차는 까다롭다. 또한 당원이 되지 않고서는 지배 엘리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지배엘리트가 아닌 일반당원은 엘리트와 비당원인 대중과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공산국가에 있어서 당의 조직은 정부의 조직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각단위의 정부기구를 당은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말하자면 당조직은 사회의 전조직에 침투하고 있다.

당은 그정책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반대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마찬가지로 당지도자의 결정도 당내의 반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당내의 모든 권한은 중앙위원회 정치국, 서기처 등에 집중되어 있고 여기의 위원들은 흔히 행정부에 요직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

공산국가에 있어서 당은 “민주적 집중제”의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다. 이론상 이것은 당의 간부들이 당원에 의하여 선출되고 따라서 모든 결정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토론된 후 채택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일단 결정이 채택되면 당은 이것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중제는 실질적으로 당내의 민주주의를 사문화 시켰으며 당간부들은 진정한 의미의 선거과정을 통하여 선출되지 아니한다. 물론 형식적인 선거는 있어도 그것은 지도자에 의하여 임명된 것을 승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뿐만아니라 당의 요직을 맡은 간부들의 임기도 이론상 제한되어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제한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간부들은 그들 스스로가 진퇴를 결정하거나 권력투쟁과정에서 몰락, 사퇴가 강요되는 이외에 외부적인 혹은 제도상의 압력을 받지 않는다. 다만 하급 간부는 고급간부의 의사에 따라 그 정치적 생명이 좌우된다. 명령집행의 방법에 관하여는 약간의 토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정책은 당지도자들의 임의대로 결정되며 때로는 최고지도자 한사람에 의하여만 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예컨대 「스탈린」시대의 결정과정에서 자주 나타났다.

또한 당요직의 계승은 법률이나 관습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내의 권력투쟁의 결과에 의하여 나타나고 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당원들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레닌」의 사후 「스탈린」과 「트로츠키」와의 권력투쟁이라든가, 「스탈린」의 사후 「말렌코프」, 「불가닌」, 「후르시초프」등의 권력투쟁은 유명한 예기며 중공에 있어서도 모택동의 후계자를 의한 권력투쟁이 심각했다는 사실이 문화혁명을 통하여 밝혀졌다.

사실 엄격한 당의 훈련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공산당은 거의 언제나 내부적 권력투쟁이나 이념투쟁을 일삼아 왔다. 1921년 이후 소련은 당내의 파벌형성을 금지하여 왔고, 지도층에 위협이 되는 당원들의 조직은 가혹한 탄압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당과와 내부의 권력투쟁이 계속된 것은 지도자 계승이나 권력의 이양에 대한 합리적 절차의 결여에서 발생하는 일당독재국가의 필연적 취약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산당내부의 의견의 차이는 대부분의 경우 전략적인 문제이거나 혹은 상대파를 숙청하기 위하여 한 당파가 조작하는 때에 나타난다. 사실 공산주의자들은 당내의 분열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적어도 외부세계에 대하여는 자기들이 항상 단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

권력이나 특권의 면에서 본다면 각국의 공산당원들은 “구체제”의 귀족들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다. 그들은 자기네 국가의 보존 및 팽창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의 파멸은 그들자신의 운명의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당원은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광적으로 심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정치적 생명유지에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고 개혁이나

정책의 변경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당의 고위간부들이다. 머구나 그들은 국가의 모든 조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인 열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공산국가의 공산당은 당의 지배엘리트가 아닌 분자들에 관한 한 「레닌」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전위”와는 거의 공통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당의 지배엘리트는 권력지향적인 전위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은 특권계급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공산국가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이며 전체주의적 일당독재국가에서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수방법

공산국가의 정치현실을 강의하는데 있어서 강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전체주의적인 일당국가란 점을 강조해야 하지만 전체주의 국가의 일반적 특성을 피상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강의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공산국가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의 정치현실이나 그 경쟁국인 중공, 혹은 동구의 공산국가의 정치적 현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나라의 정치현실이나 공산당의 독재를 설명하는 때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현실과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예컨대 강사는 소련이나 중공의 정당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을 영속시키고 있으며 당이 법률을 제정하고 혁명과 세계지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할 수 있다.

당의 활동은 헌법상의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당은 지배엘리트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이지 국민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선거에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의 개념으로는 공산국가에 정당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야 된다. 공산국가에 있어서 모든 생산수단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소유자이며 이것은 소수의 핵심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레닌」의 민주적 집중제는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계속 견지되고 있으며 따라서 공산국가에 있어서 권위와 통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명심하여야 된다.

강사는 공산국가에 있어서 당원의 중요성을 강조 할 필요가 있다. 공산국가에 있어서 과학자나 기술자와 같이 비정치적분야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출세의 길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들은 지배엘리트에 속할 수는 없으며 결국은 당에 의하여 이용되는 부류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출세를 위하여 당에 가입하는 경향이 많다. 당원이 아니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산당은 대중을 위한 대중의 정당이 아니다. 소수를 위한 소수의 정당인 것이다. 소련의 경우 공산당원은 전인구의 약 5%에 불과하고 중공의 경우는 당원수가 전인구의 약 3%에 불과하다. 당원들은 국민대중에 비하여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계급없는 사회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사실상 대중을 착취하는 새로운 계급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공산국가의 정치현실이고 이것은 공산주의

이론의 내재적 모순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지적해야 된다.

공산국가는 그들 나름대로 성문헌법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의 보수가 아니고 공산당의 통제를 위하여 만들어 졌다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소련헌법에는 기본권에 관한 5개의 조항이 있어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공산당이 법률의 유권적 해석과 국민의 기본권의 한계 설정에 관하여 최종적인 권한을 갖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산당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 교육, 종교, 경제, 통신 등의 생활의 모든 면이 당과 당의 교조에 의하여 독점되어 있다. 소련이나 중공을 가르쳐서 “철의 장막”이나 “죽의 장막”으로 쌓여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외부세계의 사상이나 소식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그 목적이 있고 공산당은 자유세계와 사상적인 경쟁을 회피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의 임무는 전체주의 제도의 영속화를 위하여 있는 것이며 이점에 있어서 공산당은 「히틀러」의 「나치정당」과 같은 「파쉴스트정당」과 차이가 없다.

강사가 또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당은 국민생활을 지배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통제할 뿐만아니라 외국의 공산주의운동에도 어떠한 형태의 기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련이나 중공의 공산당은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국적을 초월하여 자기네들의 이념을 부식하려 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의 정체가 국내적으로는 공포정치요, 국제적으로는 팽창주의인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강사는 「마르크스」의 예언이 오늘날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혁명에 의하여 노동자대중에 의한 정부가 수립되리라고 예언했지만 사실상 세계의 공산국가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하여 지배되는 가장 가혹한 독재국가로 등장한 것인데 이것은 「레닌」의 민주적 집중제가 「마르크스」의 예언을 거꾸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공산국가에 있어서 권력은 아무런 외부적 제한을 받음이 없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Reshetar, John S., Jr. A Concise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 Praeger, 1960. PP.253-281.
- ② Whiting, Kenneth. The Soviet Union Today, New York : Praeger, 1962. PP.121-169
- ③ Aspaturian, Vernon V. "The Soviet Union." in Rog C. Maeri-dis and Robert E. Ward. (eds), Modern Political System Europ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3. PP.401-531.
- ④ Whiting, Allen. S. China's Political System. 2nd revise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0.
- ⑤ Fainsod, Merle. How Russia is Ruled. rev.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 ⑥ Fainsod, Merle. Smolensk under Soviet Rul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 ⑦ Armstrong, John A. The Politics of Totalitarianism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from 1934 to the Present, New York : Random House, 1961.
- ⑧ Conquest, Robert. Power and Policy in the USS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1.
- ⑨ Armstrong, John A. The Soviet Bureaucratic Elite, New York : Praeger, 1959.
- ⑩ Dallin, D.J. The Changing World of Soviet Russia,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56.
- ⑪ Kulski, W.W. The Soviet Regime. rev. ed,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1959.
- ⑫ Fisher, Ralph J. Pattern for Soviet Youth: A Study of the Congresses of the Komsomol, 1918-1954,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 ⑬ Raymond, Ellsworth. The Soviet State, New York : Macmillan, 1968.
- ⑭ Schapiro, Leonard. The Government and Politics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 Random House, 1966.
- ⑮ Schapiro, Leonard.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 Random House, 1960.

- ⑩ Tang, Peter S.H. Communist China Today, 2nd. ed. vol. I.
Washington: Research Institute on Sino - Soviet Bloc,
1961.
- ⑪ Schurmann, Franz.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2nd enlarged 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
-ia Press, 1968.

II 사회현실

1 내용개요

공산주의 사회는 전체주의적 사회의 표본으로서 당이 지배하는 정부의 엄격한 농제와 감독아래 조직 운영되고 있다. 당은 공산주의이념의 달성이란 미명(美名)아래 모든 개인과 집단의 원천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같은 다원사회는 아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모든 집단의 독자성이나 자율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모든 자립적인 단체나 제도는 파괴되었던가 아니면 당과 정부의 도구가 되고 만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는 공산당에 의하여 선출되고 감독을 받는 행정관리, 과학자, 기술자, 군대나 경찰의 고급간부와 일부 언론인으로 구성된 엘리트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적인 선거민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서방세계의 엘리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그들은 전체주의적 독재를 영구화하기 위한 당의 시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은 당의 최고 결정기관에만 책임을 지고 사회 단체는 자유민주적 다원사회에 있어서와 같이 세력균형의 요소로서 역할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정책에 있어서 의견차이는 엘리트간의 당파적 투쟁에 의하여만 비밀리에 해결되고 그들만이 모든 분야의 표준을 세우며 행동에 대한 규칙을 제정한다. 그러므로 권력독점에 대한 도전은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으며 반대사상은 진압되고 또 사회는 외부세계의 영향으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

당과 정부의 감독은 종교활동으로부터 문학·미술·음악에 이르는 모든 예술분야에 미치고 있고 따라서 예술적 활동도 당의 지도계급의 목표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나아가서는 대민(對民) 또는 대외국(對外國) 심리전의 도구로서 사용된다. 매스 콤과 같은 통신수단도 당과 정부에 의하여 강력하게 통제되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자유로운 예술활동이나 지식인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의 반지성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주의의 경향은 「스탈린」시대에도 「후르시초프」시대에도 그러했고 「모택동」치하의 중공에서도 그러했다. 공산사회에서는 대중이 정부나 당의 선전을 이해할만큼은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당지도자들의 정책이나 그 정책의 기초가 되는 이념에 대한 비판을 할만큼 대중들이 계몽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은 전체주의 성격에서 필연적으로 나온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칼·마르크스」는 일찌기 종교가 대중의 아편이라고 말함으로써 종교의 무가치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공산주의라는 “과학적” 진리에 의하여 인간사회를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이 보편적인 역사의 법칙인 만큼 “종교는 불행에 억눌린 인간의 한숨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두신론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시행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기본권중에 하나는 이주의 자유이다.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자들을 집단노동 수용소로 보내기도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정부의 허가없이 이주가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소련에 있어서는 농민들의 도시로의

이전이 금지되어 있다. 국외여행은 극히 제한된 엘리트에게만 허용되고 일반적으로 이민도 금지되어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교육은 교조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면 기술 습득에 한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당의 감독은 특히 철저하여 그들은 대부분이 청소년 공산주의 단체에 가입이 강요되고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주입식 교육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지배엘리트의 자녀에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지 못한 것이 공산주의 국가의 또 하나의 사회현실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당과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통제 간섭하고 있다. 소련이나 중공등의 농민들은 주로 국영농장, 집단농장이거나 인민공사에서 살도록 강요되고 정부는 이들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재산은 농장이나 공사 아니면 국가의 재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들은 일정한 량의 노동을 집단생활을 위해 바쳐야 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일반시민이 누리는 가정생활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다. 요컨대 당지도자들이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농업의 집단화는 「스탈린」에 의하여 시작되었는데 「스탈린」은 농업의 집단화가 농업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리라 믿었고 이것이 곧 공업부문의 성장을 위한 자본축적의 수단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같은 강요된 농업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사실 소련에서 농업의 집단화가 자본축적의 수단이 되기는 커녕 식량문제도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으며 소련공산주의의 최대의 실패는 농업정책에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생산량의 증대를 목표로 했던 농업의 집단화는 오히려 생산량의 감소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공에 있어서 인민공사의 실패에서도 발견된다.

그리하여 오늘날 일부의 유력한 소련의 경제학자는 개인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확대시킴으로서 생산에 대한 자극을 유인하자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을 지적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공산국가의 이와같은 사회적 현실의 제모순은 동구의 공산국가의 성격변화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난다. 동구의 제공산국가는 2차 대전이후 스탈린식의 전체주의 독재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그후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전체주의적 탄압에 대하여 자유를 위해 싸웠던 것이다. 물론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는 「티토」가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를 표방하여 소련의 위성국가로부터 독립한 예이지만 그는 집단농장을 해산하고 정치적, 경제적인 자유를 허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의 공산주의에도 한계가 있으니 언론출판이 제한받고 있고 공산당이외의 정당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 1953년 동부독일의 혁동, 1956년의 폴랜드의 폭동과 60년대에 들어서서 체코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의 자유화운동은 공산사회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폴랜드, 독일,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이러한 운동이 소련의 탄압으로 인하여 실패하였으나 유고슬라비아와 루마니아의 공산주의는 국민에게 상당한 자유가 허용되고 개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온 것은 특기할 일이다.

2 교수방법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강의는 당이 목표하는 바를 달성키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완전동원하는 체제란 것의 설명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강사는 이러한 목적달성의 수단이 힘에 의한 강제란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물론 당지도자들은 대중에 대한 설득 기타 조작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공산사회에서는 정부가 일단 목표를 정하면 전사회가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산사회는 다원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의 대안도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는 것이다. 모든 조직과 단체는 정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조직이나 단체의 활동이란 것도 정부가 규정한 일반적인 정책의 범위내에 한정된다. 공산국가에 있어서 주민은 어렸을때부터 당지도자들의 목표에 매어있게 마련이고 선전이나 교리주입에 의한 교육을 받게된다. 집중적인 선전에 매어있고 또 외부세계와 그 사상으로 부터 고립되어 있는 까닭에 공산사회의 국민들은 지배자들이 선언한 정책이외에는 아는것이 없는 형편이다. 더구나 국민들은 당에 대한 그들의 불만이나 적개심을 조직적인 반항으로 변형시킬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정부만이 사회의 모든 힘을 독점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반대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강사는 공산사회에서 예술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지되는 예를들어 설명하는게 좋다. 예컨대 강사는 소련의 대표적인 작가 「파스테르나크」와 「솔제니친」의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파스테르나크」는

그의 <의사 지바코>가 노벨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상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솔제니친」은 지식인의 자유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소련에서 출판 및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예는 허다하다. 또한 강사는 소련작가 「쿠즈네쯔프」(Kuznetsov)의 망명을 예로 설명해도 좋을 것이다.

자유와 제한은 예술이나 문학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강조해야 된다. 강사는 특히 집단농장이나 인민공사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상당한 량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생활이 결국은 지도자들이 달성하고자하는 목표에 의하여 희생된 것이라는 것을 역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농업의 집단화가 어찌하여 실시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함이 필요하다. 공산주의자들은 기계화에 의하여 농업의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믿는데 이러한 기계화가 개인의 자영농장에서 보다는 집단농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또한 그들은 개인소유의 농장이란 것은 생산수단의 공유라는 공산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믿고 있다. 뿐만아니라 개인의 자영농장은 전체주의적 정치통제에 불편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독립된 농부를 집단에 의존케하여 농민 「프롤레타리아」로 전향시킬 수 있다는 것과 집단내에서 같이 생활함으로써 감독 지시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화는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도 좋다. 그것은 전쟁시에 민병대로 전향하게 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화는 막대한 인명의 피해를 초래하였으니 예컨대 1929년에서 1933년 사이에 소련에서 농업의 집단화로 희생된 자는 4백만에서 5백만에 달한다고 하니 자유의 침해는 말할 것도 없다. 1958년부터 시작된 중공의 인민공사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그자체로서도 농업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오지 못했을 뿐아니라 농민의 희생이 강요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사는 공산사회의 일반시민들이 서방세계에 비교하여 결코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여야 된다.

공산주의 사회의 제모순은 동구공산국가의 자유화운동에서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공산국가의 정치 및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Brumberg, Abraham(ed.). Russia Under Khrushchev: An Anthology. New York : Praeger, PP.223-262 and 539-553.
- ② Mehnert, Klaus. Soviet Man and His World, New York : Praeger, 1962, PP.1-25.
- ③ Ritro, Herbert(ed.). The New Soviet : Final Text of the Program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 The New Leader, 1962. PP.116-152.
- ④ Whiting, Kenneth R. The Soviet Union Today: A Concise Handbook, New York: Praeger, 1962, PP.170-209.
- ⑤ Schumann, Franz, and Schell, Orville(eds.). The China Reader Vol. III: Communist China, New York : Vintage Book, 1967, PP.433-475.
- ⑥ Loh, Robert. Escape from Red China, New York: Coward - McCann, 1962.

- ⑦ Miller, Raymond W. A Conservative Looks at Cooperatives, Athens, Ohio: Ohio University Press, 1964.
- ⑧ Granick, David. The Red Executive: A Study of the Organization Man in Russian Industry, New York : Doubleday and Co., 1960.
- ⑨ Inkeles, Alex and Bayer, Raymond. The Soviet Citizen: Daily Life in a Totalitarian Socie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 ⑩ Tang, Peter S.H. The Commune System in Mainland China, Washington, D.C: The Research Institute on Sino-Soviet Bloc, 1961.
- ⑪ Inkeles, Alex. Public Opinion in Soviet Russi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 ⑫ Djilas, Milovan. The Unperfect Society: Beyond the New Class, New York : Harcourt, Brace & World, 1969.
- ⑬ Fisher, George. Soviet System and Modern Society, New York : Atherton, 1968.
- ⑭ Goldman, Marshall I. The Soviet Economy: Myth and Realit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8.
- ⑮ Hanson, Philip. The Consumer in the Soviet Economy, Evanston, Il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8.
- ⑯ Zeman, Z.A.B. Prague Spring, New York : Hill and Wang, 1969

- ⑰ Strauss, Erich. Soviet Agriculture in Perspective: A Study of Its Successes and Failures, New York : Praeger, 1969.
- ⑱ Schwarz, Harry. Prague's 200 Days: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Czechoslovakia, New York : Praeger, 1969.
- ⑲ Solzhenitsyn, Alexander, One day in the Life of Ivan Denisovich, New York : Ban tan Books, 1963.
- ⑳ Inkeles, Alex. Social Change in Soviet Russi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Ⅲ 북괴의 현실

1 내용개요

북괴의 실질적인 통치조직체인 조선노동당은 북한사회의 모든 분야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 8.15 해방직후 소련 점령군의 앞잡이였던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점차로 교도로 훈련되고 일원적인 공산정권을 수립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정치, 경제, 군사력을 공고히 하면서 남한에 대한 무력침략을 도발하여 왔다.

2차대전이 끝날무렵 한반도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세력은 보잘것 없었다. 1918년부터 1945년 사이에 공산주의의 동조자나 교란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본관헌은 공산주의의 조직적인 운동을 효율적으로 봉쇄하였었다. 그러나 8.15 해방과 더불어 한반도에 있어서 공산주의 혁명은 외세에 의하여 성취되게 되었으니 그것은 소련군이 38이북을 점령했던 비극적인 사건에서 시작된다. 오늘날 북괴의 지도자들은 1945년 10월에 북한에 도착하였는데 그 목적은 소련의 점령임무를 돕고 필경은 그들자신의 공산주의 정권의 수립을 위한 것이었다.

북한점령 초기에 소련당국은 당시 33세의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으로 따라서 가장 적격의 공산주의 지도자로 내세웠다. 「김일성」은 만주를 중심으로 항일운동에 종사하다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1940년대 초기에 소련으로 갔다고 알려졌는데 거기에서 그는 군사교육을 받고 1945년 귀국당시는 소련군의 소좌였다고 한다.

1948년까지 군정을 실시하던 소련당국은 김일성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한편 새로히 활기를 띄기 시작한 공산당의 최고지위를 맡김으로써 김의 출세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리하여 김은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제1서기(책임비서)가 되었는데 북한에 있던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1945년 10월에 이 북조선분국의 지휘아래 재조직되었던 것이다. 1946년 2월 김은 다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의장이 되었으며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연안에서 돌아온 지도자들로 구성된 「신민당」을 흡수하여 1946년 7월 「북조선노동당」으로 정칭되었을 때 부당수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설되었을 때, 김일성은 수상으로 등장하였으며 익년 6월 북조선노동당이 남조선노동당과 합쳐서 조선노동당이 창설되면서 「김일성은 명실 공히 최고의 지도자로 나타났다. 남조선노동당은 남한에 잔류하던 공산주의자 및 기타 좌익분자의 집합체였는데 이들은 1949년초에 북한으로 탈출하여 「김일성」의 휘하로 들어갔던 것이다.

「김일성」이 집권하던 당시 북괴의 정권은 소련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동란의 발발과 더불어 중공군이 진주하게 되자 「김일성」은 소련의 지배를 점차 배격하면서 국내의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첫째로 「김일성」은 한국전쟁 당시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새로이 가입한 당원에게 반소 감정을 주입시켰는데, 그것은 소련이 한국동란에 적극적인 지원을 거절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김일성」의 조작에는 중공의 도움이 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김일성」은 소련출신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을 제거하였던 것이다. 둘째로 「김일성」은 자신의 정치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한국동란 말기에 「박헌영」을 위시한 남로당 출신의 공산주의자들을 숙청하였으며, 세째로 1958년 중공군이 철수하자 반김세력을 형성했던 연안파의 지도자들과 친소공산주의자의 마지막 잔류를 숙청하였다. 그리하여 세차례에 걸친 대

속청으로 「김일성」은 반대파를 모두 제거하고 완전한 일인독재 체제를 강화하였는데 이와같은 「김일성」의 속청은 「스탈린」의 그것을 방불케 하고 있다. 어쨌던 오늘날 북괴의 지도자들은 1945년 이전에 「김일성」과 같이 만주에서 활약하던 공산주의자들이며, 1966년 10월이후 노동당·비서국의 정치위원은 모두가 만주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일성」체제의 독재는 당의 고위간부는 물론 말단당원에 이르기까지 필연적인 불안상태와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그것은 「스탈린」적 공포정치의 필연적 산물인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김일성」은 국토양단이라는 정치적 조건을 강조하여 왔다.

다시말하면 남북통일이 성취되기까지는 일반민중은 물론 당간부까지도 파중한 군비부담 경제절약 내지 각종의 통제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자신의 일당독재를 통일을 위하여 참고 통일을 위하여 힘을 기른다는 관점에서 정당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는 “남조선혁명론”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은 혁명수행에 있어서 폭력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남조선혁명”은 “남조선 인민자신의 투쟁”임을 내세우면서 북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북괴의 침략도발행위도 이러한 「김일성」의 전략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북괴가 1966년 10월이후 군사전략의 4대원칙(「전체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군대의 현대화」 「군대의 간무화」)을 계속 강조하면서 경제 건설과 군사력의 배양에 온갖 힘을 경주해온 것은 무력침략의 의사를 암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1970년 11월 제5차당대회에서 군사전략문제를 취급한 것

도 무력적화통일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북괴의 사회현실은 어떠한가?

첫째로 북한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인정되고 있지않다. 모든 생산수단은 협동화하는 이름아래 노동당에 귀속되어 있다.

1953년 한국동란이 끝날무렵 북괴의 경제사정은 말할 수 없이 저조하였다. 공업시설은 거의 파괴되고 식량은 부족되고 소비재는 품귀했다. 그리하여 일부지도자들은 균형된 경제회복을 주장하고 대중의 긴급한 생활난을 해결하는 온건한 정책을 구상했다. 그러나 「김일성」을 포함한 당의 과격파는 이러한 온건책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지도자들이 간여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아래 전쟁에 파괴된 공업, 교육, 문화시설의 복구를 위하여 대중의 노동력을 동원하여야 하며 대중의 「애국적 희생」을 강요했던 것이다. 그 결과 스탈린 방식의 공업화정책을 채택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면서 중공업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경제계획에 착수했다. 이 계획은 첫째로 일년이내의 준비단계를 거쳐 둘째로 1954년에서 1956사이의 3개년계획, 세째로 1957년에서 1961년사이의 5개년계획, 네째로 1961년에서 1967년에 이르는 7개년계획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제계획의 특징은 집중적인 자본투자는 중공업에 두고 경공업과 농업에는 최소한의 자본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대중의 생활수준은 생존만을 위한 최저의 것에 머물렀던 것이다. 소비재의 생산은 1958년까지는 전혀 없다시피 하였고 농민들까지도 그들의 농산물의 극히 일부만을 소비하도록 통제되었던 것이다. 농업의 집단화는 공업투자를 위한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였지만 농민들에게는 공업자본의 증대를 위한 강제저축이 강요되었다. 농업합작사를 통한 농업의 집단화는 1958년에 이르러 북괴의 전지역에서 완수되었는데

이로서 생산수단의 사유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로 북한의 인민들은 이러한 집단주의체제하에 묶여 있으므로 직업의 선택, 자녀교육,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없으며 개인의 자유는 각종 조직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말하자면 인민들의 기본권의 거의 전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회인 것이다. 북괴헌법에 의하면 인민의 기본권을 형식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괴가 말하는 인민이란 계급적이고 배타적 의미의 내용을 지닌 것으로서 당의 명령에 충실한 공산주의자라 할지라도 일단 당의 영도적 지위로 부터 축출 되면 인민의 적으로 낙인을 찍히게 된다. 하물며 정치적 권한이 없는 대중의 기본권이란 말할 것도 없다.

셋째로 북한사회는 불평등한 분배로 이루어진 계급사회이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공산주의의 분배상식이 사실상 적용되고 있지 아니하며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생활면에서 격차가 현저한 계급사회이다. 이러한 계급사회도 「프롤레타리아」와 농민들의 우위가 인정되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당 기타 정치권력기관에 종사하는 지배계급만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말하자면 소수공산당지도층을 위한 사회인 것이다.

넷째로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공산당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의 모든면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집행기관, 사법, 검찰, 군사, 보안에 이르는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최고 주권기관이라는 「최고인민회의」까지도 당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당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의 모든 제도, 생활양식, 인간관계까지 당의 조직에 의하여 조정되며 조작되는 폐쇄사회이며 당이외의 어떠한 집단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완전한 일원사회인 것이다.

다섯째로 앞서말한 무력통일정책을 위하여 북괴는 전쟁준비와 전시 체제를 유지하고 언제나 전국민을 총동원할 수 있는 강제조직(예컨대 民兵組織)의 사회이다. 말하자면 북괴는 군사조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로 북한사회는 「김일성」 이상화의 맹목적인 믿음이 강요되는 사회이다. 북한사회는 강제력에 기초를 둔 다시 말하면 정치적 권력의 정당성이 결여된 사회이기 때문에 「김일성」의 개인승배가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반수단으로 선전되고 주입식의 교육이 강요되는 사회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또한 「김일성」의 사상을 「유일사상」이라 하여 「마르크스 · 레닌」주의의 진리를 북한사회에 적용시킨 독창적 사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 교수방법

우리가 공산주의 이론을 강의하는데 있어서는 북괴의 현실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말할 것도없이 우리가 공산주의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목적은 북괴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세를 확립하고 나아가 승공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이다. 내용개요는 북괴공산집단의 수립, 그 성격, 침략도발, 사회의 현실등 여러면을 간단히 고찰했지만 강사는 각부분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강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강사의 체험(예컨대 6.25동란중 보고 들은 것과 같은)이나 요지음 남파되고 있는 북괴 간첩의 일화같은 것을 첨부하여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강사는 한국에 있어서 공산주의운동은 일제식민지 아래서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운동이 체계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소련의 진주와 더불어 부활된 공산주의운동은
외세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된 「김일성」체제의 특징
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김일성」체제의 조직상의 특징은
소련군 점령하에 타율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실정과는 거
리가 멀었고 따라서 여기에 적응하기 위한 빈번한 기구개편이 불가
피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일성」체제의 특징
은 단순한 당의 영도의 표현이 아니라 「김일성」이라는 혁명전통의
체현자의 개인숭배체제라는 점을 「스탈린」이나 「모택동」의 개인숭
배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좋을 것이다.

강사는 또한 「김일성」이 그의 정치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세
차체에 걸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한 사실 다시 말해서 「스탈린」
적 보복정치를 설명해야 된다. 세차체에 걸친 숙청에서 소위 「국
내파」, 「중공파」, 「소련파」가 모두 숙청되고 오늘날 만주출신 공
산주의 「김일성」계 밀라파들이 지배계급을 형성한 경과를 설명해야
되고 특히 현지도체제의 성격을 규명해야 할것이다. 뿐만 아니라
1970년 11월 「5차당대회」에서 밝혀진 비서국의 정치위원의 구
성과 성분을 설명하고 「오진우」(吳振宇), 「서철」(徐哲), 「김중
린」(金仲麟) 등 남한사정에 정통한자들이 대남공작의 책임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이르게야 할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강사는 북괴의 무력도발행위를 설명하면 좋은데
특히 폭력의 역할에 대한 공산주의 이론을 설명하고 이것과 북괴의
침략도발행위를 비교함으로써 무력적화정책이 우연히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여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괴의 사회현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
다.

3 참고문헌

- ① 徐南源, 「北韓의 經濟政策과 生産管理」, 서울:高麗大学校 亞細亞問題研究所刊, 1966.
- ② 方仁厚, 「北韓 “朝鮮勞動黨”의 形成과 發展」, 서울:高麗大学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67.
- ③ 金俊燁, 金昌順, 「韓國共產主義運動史」二卷, 서울:高麗大学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67-1969.
- ④ 梁好民,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 서울:高麗大学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67.
- ⑤ 朴東雲, 「北韓統治機構論」, 서울:高麗大学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64.
- ⑥ Lee, Chong-Sik. "Stalinism in the East," in Robert A. Scalapino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Tactics, Goals, and Achieve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5, pp. 114-139.
- ⑦ Paige, Glenn D. "North Korea and the Emulation of Russian and Chinese Behavior," in A. Doak Barnett ed., Communist Strategies in Asia, New York: Praeger, 1963, pp. 228-261.
- ⑧ Rudolph Philip. North Korea, s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59.
- ⑨ Scalapino, Robert A. ed. North Korea Today, New York: Praeger, 1963.
- ⑩ U. 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 Over,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 ⑪ Suh, Dae-Sook,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제 4 부

민주·공산주의의 대결

제 1 장 민주·공산주의 대결의 이론 및 양상

18세기 「칼·마르크스」에 의해 노동의 행동강령으로 마련된 공산주의 이론은 1848년 「마르크스」와 「레닌」의 「공산당 선언」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1864년의 국제노동자회의(제1인터내셔널)가 창설됨에 따라 대결의 실마리는 더욱 굳히게 되었던 것이다. 실제적인 의미에 있어 민주·공산주의의 대결은 1917년 「레닌」이 영도하는 「볼셰비키」가 자리즘을 축출하는 무력 쿠데타에 성공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골자로 하는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한후부터라 하겠다. ;

당시의 「레닌」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상최초인 공산국 소비에트 공화국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그의 지론인 “제국주의론” 혹은 “자본주의국의 공산주의 위요정책 등을 전개, “전쟁불가피론”을 역설하였다. 그후 「스탈린」은 “일국사회주의론”을 표방, 소련의 국력증강을 위하여 모든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자들의 결속을 강조하고 자본주의 사회내에서의 파업과 후방교란을 선동하였다.

이같은 소련의 세계적화 야욕은 이로 그치지 않고 시간과 때에 따라 전략전술을 바꾸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적화에 광분하여 왔다.

특히 대결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역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됨과 동시에 전후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격화되기 시작하였으니 곧 소련의 동구의 공산화와 극동에서의 중국의 공산화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본 장에서는 주제 I에서 민주·공산주의 대결의 이론적 근거를, 주제 II에서는 대결의 양상을 각각 기술하게 되겠는데 특히 양극 체제하에서의 대결의 양상과 다원화체제에서의 대결의 양상을 전개. 근래 전개되고 있는 미·중공의 접근의 의의를 옴미시키고 이에 대처하여야 할 민주진영과 우리 국민의 자세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I 민주 공산주의 대결의 이론적 근거

1 내용개요

「마르크스」가 집대성한 공산주의 이론은 혁명을 위한 행동 철학이며 이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그 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근간으로 하는 공산정권을 수립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은 필연적인 것으로 1917년 소련에서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이래 오늘에 이르도록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민주·공산의 대결은 역사의 일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충되는 이해(利害)나 이질적 종교의 충돌이 빚어낸 대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국가간의 상충된 이해관계와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의 완전 대립시되는 이질 사회간의 대결로서, 공산주의자들은 이상의 제도를 임의대로 타국에 이식시키기 위해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대결의 발단은 소련의 공산주의 이념 즉 공산주의의 세계적화 전략으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비록 러시아의 「볼셰비키」당이 대결이란 용어를 구사하지는 않았지만 1차세계대전 말기 「레닌」에 의하여 발표되었던 1919년 제8차 소련공산당대회 중앙위원회 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결의 불가피성을 역역히 엿볼 수 있다.

즉 동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인민들은 단순한 1개국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국가의 연합체속에서도 살 수 없고 그리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공존은 장기간에 걸쳐 생각할 수 없다. 그러한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어느 하나는 승리를 하여야 한다. 또 사회주의 공화국과 부르주아

국가간에는 가공할만한 충돌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이나 1920년 「레닌」의 성명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한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없고 종말에는 그 어느 하나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볼 때도 역시 대결의 불가피성은 시사되고 있다. 이 같은 「레닌」의 성명은 이미 앞서 「마르크스」가 그의 「공산당선언」에서 밝히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투쟁사”이고 “현대사회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가 불가피 하며 이에 자본주의를 타도키 위해 노동자들의 독재하는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는데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란 사실상 기만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레닌」이 주창한 소위 「민주적 중앙집권제」나 「혁명전위이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동자 계급은 혁명의 진정한 진로나 무엇이 가장 현명한 행동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 정예분자가 절대권력을 장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을 비롯한 중공과 북괴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로서 모든 국가권력이 소수 혹은 한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집권자의 선출과정에서도 책략과 음모에 의해 절대권력을 장악토록 되어 있다.

이러한 소수에 의한 독재정부를 민주국가에 정부전복이나 무력적 수단으로 수출하려는 것이 공산국가의 대외정책이므로 자연 이에 대응하려는 민주국가의 대처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상의 대결의 근거와 관련하여 「레닌」이 전망한 세계적화 과정은 그의 “혁명의 불꽃이론”에 명시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혁명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내부모순의 일시적인 돌타구를 찾았다. 그 돌타구란 염가의 원료와 상품, 잉여자본시장과

크게 착취할 수 있는 노동력을 찾아 전세계로 팽창한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팽창이 제국주의이며, 제국주의의 국가간에는 시장쟁탈에 따라 전쟁이 일어나고 본국과 식민지간에 갈등이 파생, 자본주의 내부적 모순은 전 세계로 파급되어 세계화한 자본주의는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 그 혁명의 불꽃은 전세계를 휩쓴다는 것"이다. 이상의 「혁명의 불꽃이론」은 공산혁명이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성공하면 혁명은 연쇄반응을 일으켜 전세계에 퍼진다고 믿고 이 이론에 입각하여 세계혁명이 시초로 러시아·혁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코민테른」으로 발전 세계적인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발전할 것을 강조하였다.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혁명의 불꽃놀이 이론」에 따라 저개발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민족해방 운동」을 「세계적인 계급투쟁」으로 간주, 이는 전세계적으로 번지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레닌」과 그 후계자들은 자본주의가 오히려 전세계로 확대되자 “부르조아라는 이념과 정치목적을 가지고 단결된 국제적인 사회계급이 서방측 국가들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신화를 조작, 그들의 입장을 공산추종자들에게 해명하려 하였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입각, 단결된 힘으로 세계혁명을 완수하자”고 국민들을 선동하였다.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세계관은 민주·공산주의의 대결을 더욱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에 대처하여야 하느냐가 문제이다.

첫째 민주주의는 개인의 무궁한 행복의 추구를 전제로 하나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인정치 않으면서 “능력에 의한 공급에서

필요에 의한 수급 *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국민의 희생이 강요당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민주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지상과제로 하고 국민의 복지 향상을 정부의 주요기능으로 하는데 반하여 공산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제로 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혹은 소수의 정예집단의 정권장악의 수단으로 국민을 이용한다.

셋째로 민주주의사회는 풍요의 사회와 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전제로 하는데 대하여 공산주의는 신앙과 가족 그리고 민족을 배반하며 개인을 마치 기계화 하거나 수단으로 취급한다. 이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침략근성에 대처하여야 하는 소이가 있는 것이다.

2 교수방법

본 주제의 강의에서 노리는 교수의 목적은 공산주의의 이론상 대결의 불가피성을 제시하는 결과 세계적화의 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태도도 역시 다양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있다.

따라서 강사는 본 주제를 강의함에 있어 공산주의가 도전해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공산주의의 전략과 전술을 이해치 못하여 공산주의의 전략이 완화된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에는 흔히 현혹되는 현상을 일으키는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에 강사가 본 강의를 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대결의 양상

이 세계 2 차대전 의 종결과 더불어 전후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크게 격화된 사실이 중점이 되어 공산주의의 도전 이론의 근거를 불식할 염려가 없지 않으므로 공산주의의 발생 당시를 거슬러 올라가 이론을 구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목적과 유의점에 따라 강의자는 다음의 순서에 의거 강의함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믿는다.

첫째 대결의 불가피성이 우선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호르시초프」의 순으로 대결의 이론을 전개하고 그 변천과정도 아울러 곁들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산주의의 도전에 대한 민주주의의 대응의 필요성이 역설되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함이 피교육자로 하여금 사명감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양극체제하에서의 대결양상과 다원화체제하에서의 대결의 양상을 구분, 대결의 이론의 변천을 구명시킴과 동시에 미소(微笑) 외교에 대한 공산주의 적화야육의 저의를 분해시켜야 한다.

근래 들어 미·중공의 접근을 곧 완전 탈이데올로기적 사실로 간주, 공산주의의 저위에 방심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를 경계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침착하고도 사려깊은 국민적 자세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3 참고문헌

- ① Acton, H. B. The Illusion of the Epoch: Marxism Leninism as a Philosophical Creed, Boston Beacon press, 1957.
- ② Hunt, R. N. Crew.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York: The Macmillan Co., 1963.
- ③ Buber, Mortin. paths in Utopia, New York: Macmillan Co., 1949.
- ④ Eastman, Max. Reflections on the Failure of socialism, New York: Devin-Alair, 1955.
- ⑤ Labedz, Leopold. Revisionism: Essays on the History of marxist Idea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 ⑥ Nollace, Gunther. International Communism and World Revolution: History and Method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 ⑦ popper, Karl 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3rd ed, 2VoIs, London: Rontledge and KeganPaul, 1957.
- ⑧ possony, Stefan. Lenin: The Compulsive Revolutionary Chicago: Henry Regnery, 1964.
- ⑨ Schumpeter, Joseph 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 New York: Harper Torch Books, 1962.
- ⑩ Meyer, Alfred. Leninism, New York: praeger, 1963.

II 대결의 양상

1 내용개요

민주·공산주의의 본격적 대결의 시초는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달리 후진공업 국가인 제정 러시아에서 자체내의 모순에 의한 붕괴가 아니고 「레닌」이 조직한 무력 쿠데타의 성공으로 소비에트 러시아가 탄생한 이후부터라 하겠다.

「레닌」은 혁명직후 대규모 숙청을 단행, 구세력을 축출하고 그의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방식에 따른 공산당의 절대주의적 권력을 부식하는 한편 구세력의 잔여 대항 세력인 백계 러시아군을 분쇄하는데 전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제일차대전 당시 독일군과 싸우던 민주주의 체제국가들로서 형성된 서방연합군은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을 결코 환영하지 않았다. 연합군은 반 「볼셰비키」, 백계 러시아군에게 원조를 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연합국들인 불란서, 영국, 미국, 일본군들이 러시아의 각 지역에 상륙, 간접적으로 홍의군에 압력을 가하였다. 영국, 불란서, 이탈리아, 등이 「볼셰비키」를 러시아의 합법정부로 인정한 것은 혁명후 7년이 경과한 후였으며 미국은 거의 그 뒤 10여년후에서야 겨우 러시아 공산정부를 승인하였다.

「레닌」이 영도하는 공산주의 정권은 내란에 접차로 승리를 거두는 한편, 내부적으로 정권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소비에트 건설 작업에 착수 하였다.

첫째로 제정 러시아의 모든 정치 및 사회제도는 물론 전통사회의 기본 가치관과 새로이 싹튼 민주주의 제 요소를 말살 시키는데

주력을 가하였다. 새로히 선출된 헌법의회를 해산시키고 제정 러시아 중요 인물 및 반대파들을 가차없이 학살하였다.

둘째로는 러시아 전역의 토지와 공업을 국유화 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개인소유의 토지와 개인 기업체는 공산주의 체제내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하고 모든 재산과 토지는 국가에 반환 국가에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산주의 정책은 농민들의 비협조와 계속되는 흉작으로 드디어 「레닌」도 제1차의 「경제 혁명」을 포기하고 소위 「신경제정책」(NEP)을 채택하여 자본주의적인 색채를 띤 잉여생산에 대한 자유판매를 다소 허용하게 되었다.

셋째로 정부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 명목상으로나마 기본헌법을 1918년 7월 10일에 선포하였다. 그 후 1923년경에는 좀 더 구체화된 헌법을 제정하고 4개의 연방단위로 구성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연방국」을 이루었으며 1936년에 이르러서는 11개 공화국으로 성립된 연방국을 형성, 유명무실의 존재이긴 했지만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의 것과 유사한 헌법을 선포하였으니 이 때에는 벌써 소비에트가 이미 경제 5개년 계획을 완성하고 확고부동한 독재의 기반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기반을 구축하기까지는 독재적인 철두철미한 탄압정치로서 무수한 인명이 희생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조직체가 기계화되고 시민의 모든 기본권은 무자비하게 말살되었었다.

1924년 「레닌」이 사망하고 「조세프·스탈린(본명 드즈가쉬비리)」의 정권장악과 더불어 소련에서는 더욱 철저한 일인 독재정치가 계속 되었다.

러시아에서 공산 정권을 성공적으로 수립한후 소련 공산당은 계속 세계적인 공산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국제공산당(공민턴)을 모스크바에 설립하고 1919년 「레닌」의 지도하에 첫 「국제공산당회의」를 소집, 공산혁명을 세계적으로 파급시키며 민주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킬 것을 목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공산당들은 연합전선을 형성할 것을 다짐하였다. 즉 조직적인 봉기를 통해 혁명을 성취시킬 것이며 식민지 영토에서는 피압박 인민들을 봉기시켜 혁명을 이룩할 것을 결의하고 세계각지에서 공산당 폭동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위할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레닌」이나 그의 정적이었던 「레온.트로츠키」와는 달리 조속한 세계혁명에 전력을 다하는 것보다는 사회주의를 소련 일국에서 만이라도 확고히 한후 세계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일국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제일차 5개년 계획에 이어 제 2차 그리고 제 3차 5개년 계획을 세워 특히 중공업을 중심으로 소련국력을 강화시키기에 광분하였다.

이와같은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가 혁명을 통한 세계공산화의 야망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스탈린」은 소련의 국력이 빈약한 동안에는 강력한 세계혁명을 주도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에 의하여 소련의 공산정권마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소련이 군사적으로나 공업적으로 발전을 기하여 국력을 충실히 한후에는 「붉은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세계혁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지에서 소련 자체 발전을 강조하였었다.

또한 소련이 세계공산주의 혁명의 기지로 되기 위하여서는 모든

국가의 공산당들이 소련에 절대적인 충성을 받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련의 이익은 곧 참여공산국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결부된다는 것을 강조, 맹목적인 추종을 강요하였다.

이리하여 「스탈린」은 세계 각지에 호터져 있는 공산당원들을 소련의 첩자나 간첩으로 이용하고 소련정부의 견이와 이익만을 도모하여 왔던 것이다. 소련은 또한 세계 각국의 공산당원과 유력한 지도층 청년들을 소련에서 훈련시켜 장차 다가올 공산주의 혁명의 터전을 마련 하였다.

「스탈린」은 스페인 내란 (1936 - 1939) 동안에 공산화 정책을 도모하기 위해 좌익계의 반란을 물심양면으로 원조 하였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극동에서도 소련은 여러모로 공산화 정책을 꾀하였다. 즉 소련은 1920년 당시 혼란 상태에 있던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외몽고에 공산당 정부를 수립한 후 계속 중국에 침투, 1921년에는 중국 공산당을 설립하는데 도왔고 국민당내에 공산당 세력을 뻗히려고 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민당내 공산세력의 부식이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차후에 봉기할 잠재적 공산당 세력만을 확보하여 놓았다. 그 외에도 유럽의 각국과 동남아시아의 인도, 일본 등에도 공산세력 팽창을 시도하여 공산당원들을 포섭하고 본국에서의 활동을 강조하였다.

소련의 줄기찬 세계혁명의 선전과 선동 및 민주사회의 파괴와 전복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 2 차 세계대전까지는 별로 이렇다 할 팽창세력을 강구하지 못하고 소련이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주축국가들인 독일과 일 대항 동부유럽과 극동에 개입할 기회를 얻게 될 때부터 적인 눈 시작되었던 것이다

1945년 5월 유럽전선에서의 독일의 패망과 더불어 소련은 이미 2차대전 전에 정복한 핀란드와 발틱 3국 그리고 폴란드, 동부독일을 포함한 동구 여러나라와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등의 발칸국가들을 점령하였다. 동년 8월까지 일본이 패전하기까지는 이미 극동에서 소련군은 만주와 한반도의 북부를 정복하였다. 이로서 소련의 팽창은 어떠한 혁명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한 국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도 아닌 오직 「붉은군대」의 가차 없는 탄압과 정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종말과 더불어 평화와 번영의 세계를 희망하고 있던 미국대통령 「후렌크린·루즈벨트」를 비롯한 서방지도자들과는 달리 「스탈린」은 그의 공산화 운동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즉 우선 정복한 각 지역에는 현지 공산주의 정수분자들을 중심으로 괴뢰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일방적인 세력권하에 있는 인접 국가에 대하여는 사회의 혼란을 틈타 민주정부의 전복과 게릴라전을 적극 후원했다. 소련의 인접국인 이란과 터키에 대한 위협 또한 회랍에서는 게릴라전으로 공산화를 시도 하였다.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마자릭」의 민주주의 정부를 쿠데타로서 번복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스탈린」이 서방측의 경제심을 해소 시키기 위한 책략으로 1943년에는 코민턴을 해체하였지만 2차대전에서 소련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함에 따라 막대한 군사·경제원조를 제공했던 미국은 종전후 소련의 노골화된 이러한 팽창주의 정책에 미국은 연합국과 함께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5년 7~8월에 개최된 「포스담」 회담에서 소련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에 수립된 괴뢰 정권의 정부승인을 미영측에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미영은 그것이 민주주의적 정권이 아님을 지적 승인을 거부하였다. 또 분단된 독일 특히 「베를린」 문제등과 한반도에서의 미소의 대결은 곧 두 진영간의 냉전의 시초가 되었다.

그후 미국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공산침투에 대하여 성명서를 통해 「트루만」 대통령은 “소수무장단과 외부세력에 대항, 자유수호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국민들을 원조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 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공산진영의 팽창주의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자유진영에 대한 공약(公約)의 시초가 되었다. 그리리스와 터키에 대한 원조에 이어 통칭 「마샬계획」을 수립하여 제2차 대전이후 폐허가 된 서구 제국에 경제원조를 제공하였다. 또 미국의 대소공산주의 봉쇄정책은 국제적으로 「전미주상호원조조약」(1947년 9월 미국과 중남미 20개국간에), 1949년 4월에 북미와 서구라파 15개국간에 체결된 북대서양 조약, 1951년에는 「미비올빈상호방위조약」, 뉴질랜드 오스트라리아간에 「안주스 집단방위조약」, 「마일안보조약」 등등으로 확대되어 갔고 더욱 이러한 미국의 적극적인 방위조치는 극동에 있어 중국본토에서의 1949년 공산당정권의 수립과 1950년 한국동란으로 한층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소련은 소련대로 공산진영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1943년에 해체된 「코민턴」의 후계인 9개국 「공산당 정보국」(소련을 위시하여 폴란드, 유고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및 불란서, 이태리,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들로 조직된 것)을 중심으로 1947년

10월에 결정한 각 공산위성국들과 군사 및 상호원조동맹을 맺어 공산진영의 집단체제를 형성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모스크바에서 1950년 2월에 조인된 「소·중공 우호동맹 상호원조 조약」이다. 중공은 원래 다른 위성국가와는 달리 중국에서 거의 30년에 가까운 투쟁으로 제2차대전 후 혼란과 허망을 이용 소련이 주둔한 만주를 중심으로 거의 자력으로 1949년 10월까지 전 중국대륙을 공산화 하는 데 성공하였다. 중공의 이러한 독자적인 공산화는 다른 소련 위성국과는 달리 상당한 독자성을 처음부터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중공의 독자적 지위는 차후 1956년부터 비롯된 중·소분쟁의 근본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소련은 유럽 공산국가간의 집단안보체제로서 1956년에 소련,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등 8개국으로 구성된 「바르샤바」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을 위시한 「북대서양 방위조약」에 대처하였다. 이리하여 최근 다각적인 새로운 국제체제에 이르기까지 세계는 미·소를 중심으로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냉전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냉전속에서 소련은 세계공산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하여 경제 군사원조를 중립국에 제공하였고 그들을 공산영향권내로 유인하는 한편, 친서방 민주국가와 비공산중립국가의 기존체제에 대한 반란 및 정부의 전복음모를 계속 원조하여 왔다. 특히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들의 취약성을 이용 공산주의 운동을 파급시켰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 할 수 없는 사실은 1949년 10월 중공정권이 수립된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중공의 성장과정일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 정부를 대륙에서 축출한 후 중공의 지도

자들을 대대적으로 공산정권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련의 운동과 숙청을 개시, 「스탈린」의 1930년도 대숙청을 무색케 하는(궁극적 대량학살을 끝자로 하는 숙청, 희생자가 약 3천만으로 추정) 보수반동세력의 숙청을 단행하였다. 숙청이 일단락 지어지고 토지개혁을 단행한 후에는 중국의 전통적 문화, 가치관 및 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하고 그 토대위에 동양전체주의적 절대권력을 구사하는 공산당의 정권을 확립하였다.

외부적으로도 중공은 1950년에 「티베트」를 침략하고 1950년부터 1953년 휴전시까지 한국동란에 개입하였으며 또한 금문도, 포격으로 대만 해협의 긴장상태를 조성하는 등 자유·공산진영간의 냉전과 열전에 직접적으로 참여, 동남아세아 공산주의 운동의 후견자 역할을 하여왔다.

이와같이 미·소 중공을 중심으로 한 양대 진영의 대결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오늘날까지 세계도처에서 계속되고 있다.

「스탈린」의 사후 치열한 권력 투쟁과정을 통하여 소련의 제일인자도 등장한 「후르시초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체제간에 전쟁은 숙명적으로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평화공존이나 경쟁이 가능함을 1956년 제 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주장한 후부터는 어느정도 평화공존의 싹이 트이는 것 같았으나 이것이 공산주의 이론의 근본적 변질이나 그들의 세계 공산화 야망의 포기는 결코 아니고 다만 필요성에 기인하는 전략의 변화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1962년 큐바 미사일 사건, 월남전쟁, 남미 제국에서의 공산주의 운동, 중근동 및 아프리카에서의 공산세력의 계속적 침투가 증명하여 주고 있다.

2 교수방법

레닌의 정권 투쟁의 설명에 앞서 강사는 우선 「불세비키」의 혁명을 조성케 한 제정 러시아의 모든 쇠퇴성과 부패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즉 공산주의가 러시아에서 이룩된 것은 공산주의 장점 때문이 아니고 제정러시아 자체 내에서 오는 부패와 붕괴에 기인했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시켜야 한다.

제정러시아는 전유법을 휩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배경하여 오던 중 급기야 경제적 궁핍과 전체적인 탄압에 못이겨 봉기한 농민과 지식층의 반발 등등으로 20세기초에서야 급기야 제한된 의회제도를 채택하여 민주주의를 시도 하려하였으나 「라스퓨틴」과 같은 잔악한 간신의 무리로 이미 붕괴되어 가는 러시아를 구출하기에는 너무나 소극적인 상태였다. 특히 1905년 「페트로그라드」에서의 민중 봉기와 같은 파격한 상태에서는 전면적인 민주개혁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러시아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한 민주정부수립을 두려워 했던 것이다.

강사는 이러한 붕괴의 상태에서는 독재적 정예군으로 형성된 혁명이 다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또한 1949년에 있었던 중국공산당의 집권도 제2차대전과 중일전쟁으로 쇠퇴되었던 상태의 기회를 이용하였다는 점등을 비교하여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환영하여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국내상태에 기인 했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레닌」이 정권을 잠악한 후에 농민들의 반항과 비협조로 그의 경제계획을 수정해야만 되었다는 점과 「스탈린」도 역시 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테러, 비밀경찰 및 강제 노동을 이용하여

강제적 집단체제를 이루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여 사실상 국민의 협조가 없는 비민주주의적인 독재체제임을 강조하여야 한다. 농업면에 있어서 이같은 정책으로 소련의 수백만 농민들이 1930년대에 기아로 사망했다는 사실도 예를들어 설명하는 것이 사실을 묘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소련이 이러한 강압적 방법으로 힘을 배양함은 소련의 궁극적 목적인 세계정복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도 설명을 하여야 한다.

소련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소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1922년에 속적인 독일과 정치적 경제적 협력 조약을 맺고 또 1939년에는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어 독일의 침략을 격려하였을 뿐 아니라 독일과 합류 폴란드를 침략하여 그 북부를 차지하고 핀란드와 발틱의 3개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였다는 점을 지적해서 소련의 팽창주의 행동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을 설명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적인 핀란드 등의 반소 영웅적 투쟁도 설명해야 될 것이다.

또한 제2차 대전후에 소련이 동부 유럽과 발칸국가들을 공산화한 양식과 방법등을 설명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은 자의대로 공산국가들이 된 것이 아니고 소련의 무력적 침략 아니면 비합법적인 계략과 공갈로서 이루어 졌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공산괴뢰 정권을 세운 방법과 양상은 국가별로 다르나 그 경우가 대개 다음과 같은 계략을 썼다.

첫째로 이제까지 존재해 온 정부나 또 새로히 수립된 반공산 정권의 집권자들을 파시스트적 반동분자들이라고 규탄한 다음

공산당원들이 내무부나 공보부 같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 연립 내각의 일부를 제거한 후에 소련의 군사적 세력의 힘으로 소련에서 훈련받은 공산주의자들이 봉기하여 반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고 「레닌」의 방식으로 전제적인 독재체제의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소련과 같이 표면상으로 민주헌법을 선포하여 국민들과 서방측 연합국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끝으로 극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철저히 훈련받은 공산당원들을 각계각층에 투입시키고 반대파의 당이나 단체등을 해체한 후 공산당 일당독재의 취후 단계를 선택하게 하는 것등이다. 예로서 폴란드의 경우를 연구하여 본다면 알타협정에서 「스탈린」은 우선 소련의 괴뢰인 폴란드 공산당인 「블레스라브·베(이)류프」라는 자를 두목으로 친소련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서방측을 기만하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이 아닌 정치인들을 포함시켜 「루즈벨트」와 「처칠」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그후 곧 공산주의자가 아닌자들은 모두 유명무실의 지위에 돌리고 친소파 괴뢰공산당원들을 각각 요소에 배치시켰으며, 1947년에는 명목상의 총선거를 공산당원, 경찰, 비밀경찰, 군대들의 감시하에 실시, 1948년에는 소련 양식으로 헌법을 선포케 하였다. 이로써 폴란드에는 완전히 소련의 괴뢰정부가 수립하게 되었고 진실한 민주주의 옹호자들과 반공산주의자들은 학살당하였거나 추방당했던 것이다.

또한 1945년 소련군의 주둔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는 민주주의 체제와 독립을 유지키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하였다.

동년 11월 선거에서 대다수의 민주주의 옹호자들이 선출되어

국회가 구성되고 또한 「해린크·나기」라는 민주주의 지도자가 수상으로 선출되었으나 1947년의 쿠메타르 공산당들이 정권을 장악, 1949년에는 공산주의식의 헌법이 선포되었다. 그로인하여 모든 민주세력이나 반대세력은 추출되고 말았다.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체코슬로바키아도 1948년에는 소련권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등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강사는 이러한 비합법적인 정권탈취와 무력적 침략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몰락시킨 공산당들의 수단과 방법 등을 각각 그 경우에 따라 적어 설명하여야 될 것이다. 소련은 이러한 무력적 침략으로도 공산화에 만족치 못하고 제2차 대전후 혼란의 기회를 이용 각지에 게릴라전을 후원하였다. 특이한 예로서 그리스와 중국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스에서는 극소수 공산당들의 봉기의 틈을 타 소련은 이미 공산화된 발칸국가들에게 그리스의 봉기와 게릴라들을 적극 후원 할 것을 지명하였다. 극동에 있어서도 종전 후 소련은 만주를 점령, 패배당한 일본군의 무기를 중국공산당에게 제공 적극적인 게릴라활동을 지원하였고 국부군을 패망으로 이끌게 하였다.

그 후에도 계속 소련은 알제리아, 베트남, 큐바 및 한국등지에서 게릴라전을 시도하였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게릴라전에서 두가지 책략을 이용하고 있는바, 그 하나는 게릴라전을 처음부터 토착민들로 하여금 진행시키는 것이고 그 다른 하나는 특별히 훈련된 게릴라들을 투입시켜 토착민들을 자극 토착민 자신들이 게릴라전을 전개케 하는 것이다.

여하간에 게릴라전을 공산주의자들이 애용하는 것은 소련이나 중공 및 공산주의 위성국들이 침략자라는 규탄을 피할 수 있고 둘째로는

상대방이 게릴라전을 종식시키기에는 막대한 군대와 군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민심을 동요 시킬 수 있고 그 국가의 발전을 지연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진북 시킬 수도 있다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게릴라전은 조직력이 약하고 미제지나 혼란과 약화된 지역에서만이 그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으나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가에서는 게릴라전이 성공 할 수 없음을 지적, 민주주의의 발전의 필요성과 민주주의의 강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강사는 국제정세의 변천과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하여 다음의 점을 유의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첫째, 소련의 끈덕진 세계적화 기도는 대부분 무력적 침략으로서만 성취되었다는 점과 아울러 공산체제는 독재적인 탄압에 의해서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소련과 중공 또한 공산 위성국들의 공산화 기도는 전면전이기보다는 오히려 국부전이나 게릴라전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째로, 소련과 중공의 공산화 시도는 미국을 위시한 민주국가들의 반공 정책으로 저지 되었을뿐 아니라 신생국들도 소련이나 중공의 제국주의적인 팽창정책에는 반발, 공산화에 대처하였다는 점이며 예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콩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시리즈, (1 - 4), 국방대학원, 1967.
- ② 임종문, 심현, 공산주의 100문 100답, 삼일각, 1969.

- ③ 田中直吉, 米国の台湾政策, 鹿島研究所出版会, 1968.
- ④ 李範俊, 말라야共産계 릴라戰研究, 高大出版部, 1968.
- ⑤ 文公部, 소련에 있어서 공산주의, 문화공보부, 1969.
- ⑥ フイフィールド, H. R., アメリカの東南アジア政策, ダイヤモンド社, 1969.
- ⑦ 岡倉古志郎, アメリカの世界政策, 勁草書房, 1968.
- ⑧ 国際弘報社, 心理戦, 国際弘報社, 1970.
- ⑨ 防衛研修所, SEATOとアジアの安全保障, 防衛研修所, 1966.
- ⑩ Aron, Raymond. Peace and War: A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Garden City, N.Y.: Doubleday & Co., 1966.
- ⑪ Dallin, David J. The Changing World of Soviet Rus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6.
- ⑫ Dallin, David J. Soviet Foreign policy after Stalin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 1961.
- ⑬ Fitzgerald, C. P. Revolution in China, N.Y.: Praeger, 1952.
- ⑭ Graebner, Norman A. Cold War Diplomacy: American Foreign Policy, 1945-1960. Princeton, N.J. : D. Van Nostrand Co., 1962.
- ⑮ Kennan, George F. Realities of American Foreign Poli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4
- ⑯ Kissinger, Henry. The Troubled Partnership: A Re-appraisal of the Atlantic Alliance,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5.

- ⑰ Palmer, Norman D. & Howard C. Perkins. International Relations, 3rd ed, New York: Houghton Mifflin Co., 1969.
- ⑱ Pipes, R. The Formation of the Soviet Un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 ⑲ Rubinstein, Alvin Z. The Soviet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hanging Policy toward Developing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 ⑳ Schelling, Thomas C.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 ㉑ Seton-Watson, Hugh. The Pattern of Communist Revolution, a Historical Analysis, London, 1953.
- ㉒ Spanier, John W.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 2d ed. New York: Praeger, 1965.
- ㉓ Strausz-Hupe, Robert et al. A Forward Strategy for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1961.
- ㉔ Strausz-Hupe, Robert et al. The Idea of Colonialism, New York: Praeger, 1958.
- ㉕ Dallin, Alexander, Diversity in International Commun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 ㉖ Jacobs, Dan N. The New Communism, New York: Evanston, and London, 1969.
- ㉗ Mayo, Henry B. Introduction to Marxist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 ㉘ Crossman, Richard, ed. The God That Failed, New York: Bantam Books, 1962.

제 2 장 북괴의 도전

북괴는 과거 4 반세기동안 대내적으로는 김일성 일인독재체제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 적화통일을 위해 전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파시스트적 공산정권으로서 공산국가중에서도 가장 전 체주의적이고 타세제와 완전 고립된 밀폐사회로 유지되어 왔다.

이제 과거 24년간의 한반도 분단기를 북괴의 대남 정책을 중심으로 나누어보면 해방후부터 6.25 동란까지의 「남침준비 시기」 6.25 동란 도발에서 휴전까지의 「동란시기」 휴전부터 4.19전까지를 「평화통일공세시기」 4.19후 5.16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소위 「혁명역량조성시기」 또는 제반방침을 위한 「준비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이상의 순서에 따라 북괴의 도전양상이 기술된다. 북괴는 해방후부터 6.25 이전까지 주로 북한의 「혁명 기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남한에서는 지하당을 조직, 파업, 맹휴, 폭동을 조장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을 파괴하며 경제건설을 저해하는 등 사회교란에 주력하여 왔다는 점과 6.25를 계기로 남한적화통일을 꿈꾸어 온 북괴는 기습남침을 감행했으나 유엔군의 참전과 한국군의 용전분투로 패퇴하고 백수십만의 인명피해와 북한전역의 초토화를 초래케 하였다는 점, 그리고 휴전후 오늘날까지 북괴는 휴전협정을 위반하여 전력증강, 휴전선에서의 무력도발, 간첩의 남파 및 무장공비의 침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의 발전을 저해해하고 나아가서는 정부전복 음모를 계속하여 왔던 것 등이 그 주요내용이 될 것이다.

I 6. 25 이전의 도전

1 내용개요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일본에 대하여 선전 포고를 하고 한반도 북부에 진주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잠정적 협약에 따라 임시군사분계선으로 설정된 38도선 이북에 주둔하였다. 소련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반도를 적화하려는 음모를 획책, 우선 북한지역에 공산기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평양에서는 순수한 민간애국단체로서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평남건준」이 조직되어 중앙정부의 수립을 기다리며 자치활동을 계속해 왔다. 불과 10일도 못되어 소련군은 「평남건준」의 해체와 인민위원회 구성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민족진영의 「평남건준」은 해체되고 공산당원이 과반수나 되는 「평남인민정치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한편 「소련 주둔군 사령부」는 그들이 선임할 수 있는 소련군 소좌 「김일성」(본명 김성주)을 피퇴 정부의 두목으로 추대하기 위하여 모든 강압적 수단을 동원하였다.

김일성은 1946년 3월 30일 연안파 「신민당」과 합류 「북조선 노동당」을 조직하고 소위 「북조선 혁명기지 노선」을 내세우고 그 실현에 혈안이 되었다.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세해 오던 「김일성」은 1948년 9월 9일 「인민위원회」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개칭하고 본격적으로 남침준비에 착수하였다. 한편 소련은 1948년 10월 15일 북괴를 승인하고, 동년 12월 26일에는 북한지역으로 부터의 소련군 완전철수를 공포함으로써 소련군정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그러

나 실제에 있어서는 소련군 철수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소련군 간부들은 「고문」이란 명목하에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북괴의 남침준비를 도왔던 것이다.

김일성은 북괴의 수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소위 「정부정강」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여기서 그는 「남한까지의 국토의 완성」이란 것을 내걸고 한반도의 「무력적화통일」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북한에서의 제반 시책을 남한에서까지 실시하기 위하여 최대의 투쟁과 백방의 대책을 다할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최대의 투쟁과 백방의 대책이란 바로 대남한 무력침략을 적극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은 이같은 목적하에 하나의 침략 책동으로서 「남조선 인민전선」을 강화 해야 한다고 했고,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은 물론 군대, 경찰, 공장 등 각계 각층에 공산당원을 침투시켜 태업, 파업, 및 폭동을 주도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파업을 일선에서 지휘 감독하던 것이 바로 「남노당」이었다. 북괴는 많은 공작금을 보내어 이를 뒷받침했다. 유엔이 한국의 통일 정부수립을 위한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하고 1948년 1월 국제연합 「임시한국위원회」를 서울에 파견하는 한편, 북한에서의 선거실시를 감시하기 위하여 「임시한국위원회」는 입북 요청을 하였다. 이에 당황한 북괴는 소련과함께 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할 뿐만아니라 남한에서의 단독 선거를 불가능하게할 목적으로 1948년 2월 7일을 기하여 살인 방화, 파괴, 파업, 맹휴 등의 방법으로 남한 일대에 폭동을 일으킬 것을 「남노당」에 지령하였다. 이것이 소위 공산당이 「2.7 구국투쟁」이라고 부르는 폭동 사건이었다.

유엔 한국 위원단이 입국하여 선거에 따른 사무적 토의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1948년 2월 7일 아침부터 「민전」과 「남노당」의 지령하에 전 공산계 노조원들의 파업이 개시되었고 각종 공장파 교통수단은 가비 되었으며 일부지방에서는 경찰서 습격, 전신전화선의 단절, 철도 및 기관차의 파괴에 이르는 폭동이 일어났다. 또한 군대안에 침투한 공산 푸락치가 중심이 되어 제주도 「4.3 폭동사건」, 「여수, 순천반란사건」과 같은 무장폭동을 계획하였다. 즉 「남노당」은 「2.7 구국투쟁」을 전국에 파급시켜 폭동을 일으켰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자 이를 만회하려고 다시 특수한 지리적 조건하에 있는 「제주도 폭동사건」을 기도하였다. 제주도는 8.15 해방후의 혼란기를 틈타 공산당 세포조직이 가장 공고히 굳어진 곳이었다. 이들은 지하당원의 포섭확대 뿐만 아니라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폭동 및 게릴라 훈련을 하면서 모비포 주둔 9연대 「문상길」중위의 수명의 당원을 통해 무기와 탄약을 입수하고 한라산 공비의 모체를 형성하였다.

한라산 공비들은 두목 「김달삼」의 총지휘하에 4월 3일 새벽 2시에 일제히 행동을 개시,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한편 수많은 애국인사들을 살상하고 방화, 약탈, 파괴 등 갖은 만행을 제멋대로 자행하면서 도내 각지를 횡행하며 도민들을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그후 제주도 폭동의 주모자들이 공비화됨에 따라 사건발생 7개월이 지난 10월에도 완전 진압을 못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1개대대에게 제주도 공비 토벌을 명하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동연대에 침투되어 있던 공산당원들은 10월 19일 반란을 일으키고 여수시내에 돌입하여 공산분자들과 합세, 각 관공서, 은행, 경찰서등을 습격한 후 많은 애국인사와 경

찰관 및 양민을 학살하였다.

20 일에는 여수시 대부분을 장악하고 지방공산당원까지 무장시켜 약 2,000 명이 순천시에 돌입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순천에서만도 불과 수일동안에 약 400여명의 경찰관이 전투에서 전사했거나 반도에게 잡혀 학살 당했으며 약 500여명의 애국인사 관공리 및 경찰관 가족이 처참하게 살해되었다. 국군이 반란 폭동진압에 행동을 개시, 약 1개월에 걸친 노력의 결과 두목 「김지희」를 위시한 간부급 공비전원과 주력부대를 섬멸하므로써 완전 진압되었다.

이 무렵 전국 각지에서는 「적색테러」가 횡행하는가 하면 산중에는 공산 게릴라가 준동하였으며 북괴의 마수는 심지어 국회내에까지 뻗쳐 당시 국회의원인 「노일환」 「이문원」을 공산당에 입당케 하는 등 포섭공작을 벌였고 그들로 하여금 「외군철수 진언서」를 꾸며 「유엔임시한국위원단」에 전달케 하는 소위 「국회푸락치사건」을 작출시켰다.

이상과 같은 파괴공작외에도 북괴는 경제교란공작을 시도하였다. 1946년 5월 중순경 황해도 연백평야에 대한 농업용수의 통수를 돌연 거부 하겠다고 통고해 왔다. 즉 수원은 이북에서 시작하여 이남 연백평야를 거쳐 서해에 흐르게 되어있으므로 수문을 막고 물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아래 평야 부분에서는 용수부족으로 실농(失農)할 우려조차 없지 않았다. 이처럼 북괴는 시급한 영농기를 악용민심을 교란하며 농민들을 그들의 정치 목적에 이용하려고까지 한 것이다. 그리고 1946년 12월 2일경부터 대남 송전 중단을 버란간 통고함과 동시에 감전을 하였고 그 후 북괴는 14일 정오를

기하여 한국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불법적인 악랄한 처사로 북한으로 부터의 송전을 중단하였다.

이같은 행위는 정치적 책동에 있는 것으로서 남한의 선량한 국민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공산당의 지배하에 유도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는 5.10 선거 후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산업, 경제부분에 타격을 주는 한편 경제교란으로 인한 민심교란을 획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북괴는 요인 암살 및 테러공작을 수차 시도하였다. 그 예로서 1946년 9월 11일 「이승만」 박사 저격사건을 필두로 조병옥 경무부장을 살해하려 한 사건, 그후 재차로 조 경무부장과 장택상 수도 경찰총감을 살해하려고 한 사건 또한 김호익 총경 피살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북괴는 대한민국 건설초기의 약화와 혼란의 틈을 타 중 요인물들의 암살계획을 엄밀히 추진시켜 왔고, 대한민국의 정부전복과 국가발전에 방해공작을 기도키 위하여 계속 간첩을 남파시켜 왔다.

2. 교수방법

소련의 북한 공산화 과정을 제일장의 내용과 연관시켜 동구라파에서 소련이 행한 침략양상과의 유사점을 설명하여 소련의 팽창주의적 제국주의를 노출시켜야 한다.

소련은 한반도 북부를 점령한 후에 민주적이고 애국적인 단체와 인사들을 제거시키는 한편 소련에서 훈련받은 소련군 소좌이던 「김성주」를 적극 후원, 괴뢰정권 수립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는 폴란드와 유사하며 또한 김성주 소좌가 북한동포들에게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을 알고 항일 독립투쟁으로 그 명성을 떨

친 바 있는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불허 주민의 주목을 집중시키려 하였었다 이는 다른 공산위성국가들에서도 흔히 엿볼 수 없는 기만의 수작이었다는 점을 지적 북괴의 근본적인 허위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또한 38선은 일본군의 패잔병들을 해체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분개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 소련은 남북간의 교류를 방해하고 미국측의 협상방안을 구구한 구실로서 거절하였다. 이를 통해 소련이 처음부터 한반도 이북을 공산화할 의도가 있었음을 학생들로 하여금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련의 음모에 모든 국민들과 학생들의 불만이 비등 하였으니 그중 가장 극렬한 반공운동의 하나가 함흥, 신의주 등지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상기시켜 북한동포들의 반공자세를 강조함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소련군과 그의 괴뢰 김일성은 반공 민족지도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고 1945년 11월 신의주 사건에서만도 무려 사상자가 8백여명, 피검자가 약 2천여명 그리고 시베리아로 유배된자가 약 백여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반공운동을 탄압으로 억압하면서 1946년 2월 초기에 이르러서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한 「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켜 그의 권력을 조직화 시켜나갔다. 그 배후에는 이미 소련이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괴뢰정권을 수립하려는 획책이 개재되고 있었으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미국측 협상안의 거부와 유엔감시하의 남북 총선거 반대로 나타났다.

1948년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는 일당 독재 체제를 갖추기 위해 북한의 중요 기간산업을 몰수하고 토지개혁을 단행, 전국의 농토를 국유화 시켰으며 1948년 2월에는 인민군을 창설하여 남침준비에 광분하였다. 또한 남한에서의 총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김일성

이는 1948년 9월 9일을 기하여 괴뢰정부를 서둘러 비합법적으로 발족시키고 그 자리에서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다짐 하였다. 북괴는 우선 여수, 순천, 제주도 반란 사건과 같은 폭력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하였고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전면 남침을 단행할 준비를 서두르면서 소련과의 유대를 강화할 목적으로 1949년 3월에는 북괴와 소련 간에 「경제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소련으로부터 총 21억루블이 넘는 자금을 제공 받았으며 각종 항공기 150대를 비롯 군사원조와 소련 군사고문단을 유치시킬 협정도 아울러 체결 하였던 바 강사는 이상의 점을 강조하여 북괴의 치밀한 사전 남침계획을 설명함이 수강자의 이해를 돕게 될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方仁厚, 北韓「朝鮮勞動黨」의 形成과發展, 고대아연, 1967.
- ② 梁好民, 北韓의 이데올로기와政治, 고대아연, 1967.
- ③ 한국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國際聯合韓國統一委員會報告書, 1949, 1953), 국회도서관, 1965.
- ④ 韓國共產主義運動研究와 그 批判, 三省出版社, 1969.
- ⑤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戰史編纂委員會, 1967.
- ⑥ 스킨라피노, 로버트 A. 韓國共產主義運動의起源, 韓國연구·도서관, 1961.

II 6. 25 통란

1 내용개요

북괴의 괴수 김일성은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남한에서의 지하당 조직과 위장평화공세 그리고 게릴라 남파등 계속적인 대남공세를 취하여왔다. 1950년 3월에는 김일성 자신이 모스크바를 방문 「스탈린」을 만나 남침계획을 협의 승인을 얻고 그로부터 본격적인 전쟁준비를 극비리에 진행시키는 한편 위장된 평화통일 공세를 강화시켰다. 즉 1950년 3월중순부터 38선으로부터 5키로미터이내의 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후방으로 이동토록 명령하고 동지역내의 전가옥에 군대와 유격대원들을 배치시켰다.

또한 4월중순경에는 소련으로부터의 전쟁무기 및 물자가 대량화물선 7척에 의해 우라지보스토크에서 청진, 나진, 기타 어항으로 반입되었고 극비리에 38선 근처의 철원, 연천, 복계, 평강, 숙청, 등지에 배치되었다. 전투기도 때를 같이하여 소련군 조종사가 직접 조정, 신포, 이림 등의 각 비행장에 도착 북괴군에 인도되었다. 한편 북괴는 전비충당을 위하여 농민조합, 여맹, 민청 등으로 하여금 「조국보위후원회」를 조직하여 소위 「비행기, 전차, 헌남운동」등 전비염출운동을 전개하고 공장건설이니 관개공사 등의 구실하에 15억원에 달하는 공채를 발행 전비에 충당하였다. 그밖에 재봉들을 비롯하여 심지어 무명비선 도토리 등에 이르기까지 강제공출을 강요 하였다. 이러한 공출과 무기수송으로 차량은 통제되고 여행이 제한됨으로써 그제야 북한주민들은 겨우 남침준비를 인식하게 될 정도로 북괴는

은밀히에 전쟁준비를 진행시켰다.

그러면서도 북괴는 “남조선 국방군이 북한에 쳐들어 온다”고 기만 선전을 하면서 그들은 압박한 남침을 은폐하기 위해 몇가지 연막전술을 사용하였다. 그 하나는 「조국 평화통일」의 제의였으니 즉 6월7일 평양의 소위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의 방송이라 하여 ① “남북통일 최고입법기관을 설치하기 위해 총선거를 내 8월5일부터 8일사이에 실시 할 것과 ② 해방 5주년 기념일에 최고입법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 이상에 관한 모든 조건과 절차를 토의 결정키 위하여 남북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회의를 6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해주 혹은 개성에서 개최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제의하였다. 둘째로 북괴는 6월 10일 역시 방송을 통해 북한에 강금되어 있는 「조민당」 당수 「조만식」씨 부자와 「남노당」 지하공작 책임자로서 이미 경찰에 체포되어 있던 「이주하」 「김삼용」 두 사람과의 교환을 제의하여 왔다. 이 모든 제의는 남침준비를 은폐하고 압박한 침공일자를 앞두고 남한의 주의를 전환 내지 이완시키기 위한 그들의 기만 전술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북괴가 외군철수를 내세우고 “우리사람끼리의 자주적 해결” 운운 한것도 결국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소위 “축적된 혁명역량”으로서 공산통일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타산하였기 때문이다. 더우기 49년 6월 미군의 철수와 이어 50년 1월초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의 제의발표 그리고 동년 1월 26일에 체결된 「한미 군사방위원조협정」에서의 미국이 한국측의 중무기 요구에 대한 불응의 사실 등은 북괴로 하여금 더욱 호기도래의 느낌을 가지게 하였으며 「박헌영」이 「남북노동당」 합당 당시 남한에 잔존하는 당원이 50만 이라고 과장선전 함으로써 김일성으로

하여금 전면전쟁을 개시하면 남한각지의 지하당이 총궐기하여 폭동을 일으킬 것이고 따라서 전쟁은 2주일이면 끝장이 난다고 확신하게 하였다. 마침내 6월 25일 미명을 기하여 불법기습 공격을 개시하였고 북괴는 대외적으로 “한국정부의 국군복첩에 대한 인민군의 반격”이라고 선전을 하면서 일로 남진하였다. 그들의 터무니 없는 기만 선전은 자유진영국민들은 물론 우리국민의 비웃음만을 샀을 뿐이었다. 당시의 남북한 전력을 비교하여보면 6.25당시 북괴는 총군사력이 20만, 250대의 전차, 211대의 비행기 그리고 2,390여문의 각종 포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에 한국은 전차는 한대도 없었고 항공기는 연락기 22대, 총전투병력은 6만4천을 초과하지 못한 빈약한 상태이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국측은 적을 저지할 능력이 없었으며 미국과 유엔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당시 대통령 「이승만」박사와 국회는 원조를 요청하였다. 미국정부는 적의 침입이 개시되던 25일에 「맥아더」원수에게 대한(對韓) 무기원조를 명령하는 한편 유엔 사무총장에게 긴급안보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다. 이미 한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유엔은 즉시 안보회의를 열고 적에 대하여 일체의 전투를 중지하고 38선 이북까지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북괴에 통고 하였으나 북괴군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남하하였다. 6월 27일 안보회의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북괴군에 대한 군사적제재를 결의하고 7월7일에 「맥아더」원수를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하고 북괴를 격퇴시킬 것을 명령하였다. 한편 「트리그·메리이」 유엔사무총장의 제안으로 7월14일 유엔가맹 52개국 (이미 군사원조를 보낸 미국, 영국, 호주등과 이 결의를 반대한 소련, 유고 등 공산진영 5개국을 제외한 전가맹국)에 대하여 군사원조의 가부를 조회한 결과 영, 불, 호, 뉴질랜드 등 17개

국이 지상군의 파견을 신청하여 왔고 여타 40 개국이 각종의 원조 제공을 신청하였다.

전투는 초반전에 있어서 우세한 적군에 의해 국군은 일시 낙동강 유역까지 후퇴작전을 한 후, 반격작전을 개시 인천상륙작전을 개기로 38선 이남의 전역을 수복하고 9월 30일을 기해 이북추격작전을 개시 10월 26일에는 6사단 7연대가 압록강변의 초산에, 미 7사단의 일부는 갑산을 거쳐 11월 21일 함경북도의 혜산진에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당시 만주에 집결하여 있던 중공군이 대거 참전함으로써 숙원인 국토통일을 목전에 두고 유엔군과 한국군은 불가피하게 후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와 같이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하자 유엔에서는 중공 규탄의 여론이 비등하였고 드디어는 1월 20일 미국대표가 중공을 한국의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유엔 정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월 1일 정치위원회와 유엔총회를 거친 미국안은 압도적 다수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그간에 전세는 역전 아군은 일시 수원까지 후퇴하였고 연합군의 반격으로 다시 38선까지를 회복, 전세는 38선을 중심으로 일진일퇴의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고 소련과 중공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전쟁을 이끌어 나갈 여력이 없음을 깨달은 북파는 소련을 통하여 휴전을 희망하게 되었다. 휴전은 협상이 시작된후 공산주의 특유의 지연전술과 선전으로 인하여 약 3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에 한국정부와 국민의 반대속에서 조인되어 정치적 타결이 없는 오직 군사적 휴전만으로 한국동란이 종결되었다.

「김일성」은 한국전에서 두가지의 중대한 착각을 일으켰다. 그 하나는 「남로당」의 「박헌영」 일파의 과장된 정보와 「김일성」

개인의 교조적 이론에 근거한 전쟁사 “남한인민의 봉기”에 대한 헛된 기대였으며 그다른 하나는 한국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권의외에 있다는 「애치슨」성명으로써 남한의 피침시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에서 한국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오판이었다. 결과적으로 북괴는 전쟁에서 무참한 패배를 당하고 「김일성」은 북괴의 지배집단과 주민에 대한 자기의 책임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 6.25 동란의 패전 책임을 그의 라이벌인 「연안파」의 「김무정」과 「남로당」계의 「박헌영」, 「이승엽」, 「임 화」, 「이강국」, 「박광희」, 「김 열」 등에 각각 뒤집어 써워 숙청하여 버렸던 것이다.

2 교수방법

본 강의에서는 다음의 점들이 강조될 것이 바람직 하다.

첫째로 6.25 동란이 무력적화통일을 근본 신조로 삼는 북괴 괴수 「김일성」의 계획과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를 가능케한 것은 소련과 중공 특히 소련의 군사원조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북괴의 “국군북침” 운운하는 선전의 허위성을 폭로하여야 할 것이다. 동란 당시 국군이 압류한 증거품 가운데 몇가지만 열거한다면 1950년 6월 18일자 괴뢰군 최고사령부 정보본부 사령관으로 부터 제4사단장에게 보낸 정찰명령서 제1호와 50년 6월 22일자 괴뢰군 제4보병사단 사령관 「이건부」의 전투명령서 제1호 등에 의하면 북괴의 사전 남침계획을 명백히 탐지할 수 있다. 즉 위의 근거에 의하면 침공에 대한 모든 준비는 6월 22일에 완료되었고 평양에 있는 소련군 고문단은 북괴 「민족보위성」에 명하여 전투명령 제1호를 전방 사단장에게 하달하여 1950년 6월 23일

12 : 00 시까지 이른바 「 이승만 군대 」를 무찌를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 것을 지시하고 있다.

셋째로 강사는 유엔의 한국 동란에서의 역할과 그의의를 강조하여야 하겠다. 유엔이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해 발족한 이래 처음이며 또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화유지를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큰 의의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로는 6.25 동란중 북괴의 만행을 지적 공산주의자들의 비인도적 처사와 비정함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의 남한 점령지구에서의 행한 폭악한 사례는 너무나 많으므로 강사는 적당한 사례를 들거나 자료를 제공, 당시의 참상이 가져 온 민족의 비극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강사는 공산주의의 혁명적 성격이외에 북괴가 현실적으로 6.25 남침을 계획 실행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북괴의 무력남침에 박차를 가한 대내외적 여건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소련은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한반도에 대한 남하 정책이 2차대전 이후 북한의 점령 및 괴뢰정권 수립으로 나타났고 계속해서 남한까지 병합 적화시킴으로서 아시아 대륙에서의 거점을 확보하며 동시에 미국의 대공산 저지능력 및 각오를 시험하기 위하여 김일성을 사주하고 적극지원하였다는 점.

② 중공이 본토에서 국민당 정부를 축출하고 1949년 10월 1일 공산정권을 수립, 북괴의 남침 의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점.

③ 미군이 1949년 6월, 남한에서 철수하고 50년 1월초에 발표된 「 에치슨·라인 」에서 한국이 제외되었다는 발표와 50년 1월에 체결된 「 한미군사방위원조협정 」에서 미국측이 한국에서 요구한

중무기 공급을 거절함으로써 남북한 군비면에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북괴의 승전의 확신.

④ 북괴가 당시의 남한실정에 대하여 정치, 경제면에서 불안정하다고 오판하였다는 점.

⑤ 「남노당」계가 남한에 잠재하는 공산 잔당 세력을 50만으로 과장하고 전쟁발생시에는 이들이 폭동을 일으켜 호응할 것이라고 호언하고 「김일성」이 이를 또한 믿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강사는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처하여야 할 국민적 자세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근래 전개되고 있는 남북한 적십자회담 등 북괴의 미소(微笑)정책의 배경을 이해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을 설명, 「공산혁명」이라는 그들의 기본노선을 포기치 않는 공산주의자와의 대결의 어려움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朴東雲, 統一問題研究, 對外問題研究所, 1960.
- ② 한국반공연맹, 共產主義理論과 實際, 한국반공연맹, 1968.
- ③ 金潔, 北緯 40 度線, 遊擊白馬部隊戰史출판사, 1968.
- ④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2) 戰史編纂委員會, 1967.
- ⑤ 共產圈問題研究所, 混亂과 붉은魔手, 共產圈問題研究所, 1970.
- ⑥ 森田芳夫, 朝鮮終戰의 記錄, 巖南堂, 1967.
- ⑦ 江口朴郎等, 冷戰; 政治的考察, 岩波書店, 1968.
- ⑧ 李元觀, 韓國動亂 (1-5), 金星出版社, 1970.
- ⑨ 李榮信, 光復二十年 (1-4), 省音社, 1969.

Ⅲ 6. 25 이후의 도전

1 내용개요

북괴는 6.25 남침이 실패로 돌아가고 전황이 그들에게 불리하여지자 소련 등을 통하여 휴전의 의사를 표시하고 2년여의 세월을 끝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측과 잠정적 휴전협정을 맺으므로써 한국전은 일단락을 지었다. 그러나 이러한 휴전협정이 북괴공산주의의 체질적 변화나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김일성」의 야심에 어떠한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고 다만 그들의 필요에 따라 휴전하고 재침을 위한 준비기간을 벌기위해 작출한 그들의 상투적인 전략적 결정입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북괴의 흥제는 휴전이 조인된후 9일만인 1953년 8월 5일에 열린 북괴당 「제 6차 전원회의」의 결정서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즉 동 결정서에 의하면 “휴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얻어진 평화기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1분1초를 아껴가며 북반부에 강력한 요새기지를 건설, 강화하는 사업에 전당원과 전인민의 역량을 총동원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김일성」은 이 회의에서 「전후 인민경제 재복구발전 3개년계획」을 채택하고 전화로 시달린 북한 주민들을 미쳐 숨도 들릴 사이없이 일터로 몰아넣었다. 이 계획은 이미 극한 상황에 처한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 해결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남한 재침을 위한 군비확장에만 주안을 두었다.

군수공업 특히 병기생산에 주력을 두고 65호, 42호, 두 군수공장은 기존 시설로서 생산능력을 더욱 높이도록 할것과 26호 공장은 일부 시설을 다소 보강하여 1953년초의 생산계획의 2배로 증산할

것과 또한 82호 공장을 신설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괴뢰군이 사용하는 각종 탄약을 자급자족 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화약제작 및 기타 군수공업을 보강시키도록 하였다.

4.19이후 한국이 한때 정국이 어수선 해지자 「김일성」 일당은 금시 「적화통일」이라도 이루어지는 듯, 남한지역을 통괄할 인적구성까지 서둘렀고 「위장평화통일」 공세를 강화하여 연방안까지 제의하는 등 심리전 공세를 가하였다. 그러나 5.16 군사혁명으로 당황한 「김일성」은 1961년 9월 「제4차 노동당대회」에서 대남정책을 소위 「평화통일」공세에서 무력적화로 방향을 전환하고 62년 12월에는 소위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였다. 사대군사노선이란 “군의 간부화, 군의 현대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등으로 남침준비의 적극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 「4차 전당대회」에서는 4대군사노선 이외에 이른바 「인민경제 7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발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계획은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의」에서 혁명기지를 강화한다는 뜻으로 군사비를 증액하기 위하여 7개년 경제계획을 3년간 연장하였다. 한편 대남침투를 강화하고 68년의 1.21사건 푸에블로호 남북사건, 울진·삼척 공비침투사건, 69년 4월 15일의 표C. 121기의 격추 등 무력도발행위를 자행하여 제삼공화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정치적 혼란을 꾀하였다.

이들의 대남정책은 다시말해서 1961년 5.16혁명시기까지는 「평화통일」 공세로서 그기간까지는 주로 대내적으로 전쟁복구사업에 치중하였고 전당대회까지는 「통혁당」을 중심으로 한 대남침투와 무력도발을 병행시킨 시기였다. 「통혁당」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고 무력도발행위가 그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 김일성 」은 “ 남한에서의 혁명요인이 성숙되었다 ”고 주장하고 「 통혁당 」을 재건하여 남한 인민의 봉기에 의한 혁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무력자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 5 차전당대회 」에서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점은 「 김일성 」의 이상화와 이에 따른 일인 독재체제의 구축, 그리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 4 대 군사노선 」 등이다.

「 김일성 」은 소위 「 소련 2 세파 」 친중공계의 「 북만파 」 「 남만파 」 등 그의 신권화(神權化)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모든 사상교육을 이에 집중시켰으니 그 정도는 가히 「 스탈린 」과 「 모택동 」의 경우를 능가 할 정도인 것이다. 또한 북괴는 1970년까지 「 4 대군사노선 」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모든 공격수단과 방위수단을 다 갖추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군사면에서 볼 때 북괴는 세계에서 가장 군국주의적 체제를 갖추고 과거 10년간 약 39억弗에 상당한 예산을 군사비에 투입했고 현재는 국민총생산고의 약 30억弗의 24%인 7억弗 이상을 군사비에 충당하고 있다. 지금 그들은 재래식 전쟁에 필요한 무기는 탱크까지 포함해서 거의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은 “ 인민 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 군대로 만들고 전체 인민이 다 총을 쏠 줄 알며 총을 메고 있다. 또한 우리는 온 나라의 모든 지역이 철옹성같은 방위 시설들을 쌓아 놓았으며 중요한 생산 시설까지도 다 요새화 하였다. ”고 호언장담

하고 있다. 또한 산악전과 야간전투, 대부대 작전과 소부대작전, 정
기전과 유격전 훈련을 강화하여 정기 비정기전을 계속 준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괴는 과거나 현재나 다름없이 무력
적화통일 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그들은 계속 무력지상, 폭력지
상의 신조를 버리지 않고 남한에 대한 침투, 파괴공작을 추진함과
더불어 재 남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다.

북괴는 또한 휴전선을 중심으로 도발행위를 계속할 뿐만아니라 간첩
을 밀파시키고 무장공비를 파견 테러행위를 자행하는 등 지속적인
후방교란 행위를 하고 있다. 1966년 1월이후 68년 1월까지에
저지른 큰사건만 추려보더라도 25건이나 된다. 예컨대 동명호, 영
풍호 남북사건, 국군사병납치사건, 식량운반트럭습격사건, 유엔군에 대한
기습, 살상사건, 북성호 남북사건, 56함 피격사건, 판문점, 후방 막사
습격사건, 경원선 폭파사건, 임진강변에서 미경비정 피습사건, 동해 휴
전선 남방에서 어로중인 228척의 어선단을 습격 납치한 사건, 신평
호, 대광호 등 어선 7척을 납북한 사건, 해안에서 어로중인 200척
을 습격한 사건 미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PC.121기 격추사건,
KAL기 납북사건 등 휴전협정 위반사건은 오늘날까지 그 이상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뿐만아니라 북괴는 1968년 1년
동안에 326건에 1142명이 넘는 간첩을 남파 시켰다. 북괴는 아
러한 무력공세를 가하면서도 계속 평화통일의 위장 공세를 취하고
있다. 평화통일 공세의 내용은 미군의 남한 철수, 납북한 쌍방의
병력의 감축, 언커크 해체, 납북한 상호불가침조약 등등으로 주로

한국을 비무장화 하려는 계획이 중심내용으로 되어 있다. 사실상 북괴는 전지역을 요새화 하였고 한국의 배가되는 7억 5만불에 상당한 액수를 국방비로 이용하고 항공기만 해도 한국의 배인 거의 600대를 보유하면서도 평화적 통일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의 년센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2 교수방법

6.25 이후 오늘날까지의 북괴의 도발을 강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괴의 기본노선 및 공산주의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 시키는 데 있다. 북괴는 오늘날 공산제국중에서도 가장 호전적인 군사정권의 집단이다. 8.15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괴의 기본노선은 북한에 혁명기지를 공고히 구축하고 남한을 적화통일 하는데 있다.

북괴는 평화통일을 내세웠던 까닭에 “전쟁은 바라지 않지만 그것이 정의의 전쟁일 경우에는 가서라도 해야 한다”는 식의 전쟁관을 내세우고 주민의 가혹한 희생을 강요, 전쟁준비를 합리화 하고 있다.

즉 그들은 “남한의 적화통일을 위해서는 미군과 한국정부를 전복시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괴는 6.25 남침을 남한에서의 북침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남한에서의 “제2의 북침을 시도하여 전쟁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5.16 군사혁명 후 군인들이 집권함으로써 전쟁도발의 가능성이 짙다”는 등 정반대의 억지 선전으로 북한 주

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점도 교수는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북괴의 전쟁준비는 애당초 계획에서 조금도 변동없이 추진되고 있다. 전쟁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영화, 연극, 음악, 무용, 소설, 시 등 각종 문예활동까지를 동원하고 심지어 국민학교 어린이들까지도 전쟁놀이를 시키는가하면 포쏘기 연습을 시킨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북괴의 정체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로서 그들이 소위 "혁명에 의한 즉 전쟁에 의한 통일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저의를 파악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 손에 총을 들고, 또 다른 손에 망치와 낫을 들고!"라는 구호를 외치는 북괴는 통일의 유일한 방법으로서 전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오직 희망적 관측이나 그들의 허울좋은 선전구호에 현혹되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전국민의 올바른 정신자세와 방위태세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또한 교수의 요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공산주의 문제연구소, 共産主義問題研究(1), 공산주의 문제연구소, 1966.
- ② 공산주의 문제연구소, 共産主義問題研究(2), 공산주의 문제연구소, 1967.
- ③ 공산주의 문제연구소, 共産主義問題研究(3), 공산주의 문제연구소, 1968.

- ④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國際聯合韓國統一委員團報告書, (1968),
국회도서관, 1965.
- ⑤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美國의 對韓援助關係資料集(第二輯),
국회도서관, 1965.
- ⑥ 北韓總鑑刊行委員會, 北韓總鑑, 共產圈問題研究所, 1968.

제 3 장 민주 공산 대결의 전망

근래에 이르러 미·소 군축회의(SALT)의 부분적 성공과 미·중 공의 대화 및 중공의 유엔가입 등으로 국제정세의 일반적 해빙무드가 다소 조성되고는 있는듯 보이나 앞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주·공산주의의 대결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우방국가 체제내에서도 문제점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나 공산권 내부의 허다한 문제점과 취약점으로 말미암아 한때 어느정도 확고했던 소련의 지배가 차차 붕괴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의 원인으로는 공산주의 이론의 비합리성과 전제적인 독재자들이 경쟁자들과의 권력 투쟁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아전인수적으로 이용하여 왔고 일단 독재자의 지위에 오르면 독재자의 개인숭배와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합리화 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공산국가들 간의 논쟁은 물론, 동일한 공산국가 내에서도 독재자가 바뀔 때마다 이념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혼란을 일으킬 경우가 많았다. 둘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공산국가들 간의 민주주의와 국가의식이다. 공산당원들은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단결하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산국가들은 각국의 국가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분쟁을 하여왔다. 유고슬라비아와 중공이 그 가장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으나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도 그 예외는 아니다. 그뿐 아니라 정통파 공산주의 이론의 유포피아적 성격은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고 또한 독재체제의 비능률성 때문에 유고와 같은 일부 공산국가는 민주·자본주의체제를 점차로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산주의의 취약점으로 말미암아, 1950년대 부터 일기 시작한 자유화의 조류가 계속 공산권에 침투, 중국에는

그들의 공산주의 체제의 근본적 변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산 독재체제를 이루하고 있는 북괴의 경우도 그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본장에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남한과 북괴의 역량을 비교함과 동시에 그 취약점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승리를 전망하여 보고자 함이 그 중심 내용이다.

I 민주 진영대 공산진영

1 내용개요

민주진영에 있어서 미국을 주축으로 한 동맹체제는 2차대전 이후 「트르만」의 성명서가 발표된 이래 약 20여년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유령에 대한 위협이 현실적으로 감소되고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인 자유경쟁의 철학은 공산불력에 대항하는 민주동맹체제가 가끔 문제점을 자아내게 했다. 즉 북대서양 동맹의 운영에 있어서 불란서 드골의 생존시 동맹체제에 대한 비협조, 중남미에서의 큐바와 칠레의 이탈, 구주공동시장국과 미·영의 경제경쟁, 미·일의 불협화음 등은 다소 민주동맹체제에 차질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타의 자유우방국가들은 대부분이 급진적인 정치·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즉 극동에 있어서 일본이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서구라파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련지배하에 있는 동구라파의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반면에 무력으로 팽창세력을 유지해 온 공산진영의 결속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붕괴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 일부 위성국가들의 소련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위성국내부에서는 괴뢰정권에 대한 민중의 반항과 불신이 팽배하게 되었으며 특히 중·소의 이념과 국경분쟁, 그리고 공산권내에서의 주도권 쟁탈전은 더욱 공산진영의 내분을 조장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산권 각국의 국내정치면을 살펴보면 동구의 공산주의 제국은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소련자체내에서도 엄격한 의미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끈질긴 자유화의

거센 조류와 국민의 소비성향의 고조, 독재에 대한 열증, 공산주의 생산체제의 비능률성에 대한 회의 등은 더욱 공산위정자들로 하여금 공산체제를 일부 자본주의체제로 변질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였고 교리적 사회의 부조리와 적응성의 결핍으로 더욱 국민의 거센 반발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니 혼란시에는 전사회 체제가 붕괴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공산체제는 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제도의 구성이 체제의 영구적 유지의 곤란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첫째의 문제점은 공산주의 이념의 모순성에 있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공업이 가장 발달된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자본주에 대한 반발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업이 발달되지 못한 구라파의 미개지인 러시아에서 극소수의 혁명가들이 혼란과 붕괴의 틈을 타 독재적인 형식으로 이룩한 것이다. 또한 공산주의 체제내의 중추 세력이라고 일컫는 “공산당”은 노동자들로서 구성된 것이라기 보다 일부 정예 당관료로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서 「마르크스」가 찬양했던 무계급 사회가 아니고 더욱 강화된 계급사회로서, 공산당의 집권자와 지배당하는 일반국민으로 이룩된 극심한 계급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집권자들을 전 유고슬라비아의 고위 관리로 있던 「미로반 지라스」가 신계급이라고 불렀듯이 공산당은 극소수에 의한 전체주의적 독재정권을 공산주의 이념으로 합리화 시켜서 착취하는 특권계급으로 간주 할 수 있겠다. 또한 「마르크스」나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노동자에 의한 통치, 무계급사회, 나아가서는 국가가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공산사회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의 유토피아적 공상의 일종이다.

특히 발달된 공업국가일수록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도로 발달된 경

영제도나 우수하게 훈련받은 경영진들이 없이는 공업사회를 유지운영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의 문제점은 공산주의 사회의 정치적 운영의 난점이다. 헌법 제정과 지도자 선출의 방식은 오직 절차에 불과하고 모든 정치활동이 하양식이며 정권투쟁의 민주적 해결방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후계자의 계승시에는 내분과 혼란으로 정치적, 진통을 겪는것이 거의 일상적이다. 소련의 경우 「레닌」의 사망과 더불어 있었던 「스탈린」과 「트로츠키」의 대결이나 「스탈린」의 사후 「베리아」와 「후르시초프」간의 대결, 현재 중공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포」와 「주은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암투 등은 그 모두가 정치적 음모에 의한 반대파의 숙청에 의해서만 해결되었던 사실은 곧 공산주의 국가의 정권교체의 전형적 유형이라 할 것이다. 특히 그 정도가 지나쳤을 경우에는 그 여파가 사회전반에 미쳐 국민의 기본 생활마저 위협하는 수가 많았다. 1960년대 후반기의 중공의 문화혁명도 그 좋은 사례일 것이다. 또한 정치체제가 하양식이기 때문에 일단 상부에서 혼란이 생기면 하부의 체제는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반하여 민주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정권교체도 원칙적으로 민의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의 경우와는 달리 제도적 안정을 기할 수가 있다

셋째로는 공산주의자들이 인류정치사에서 증명된 독재와 탄압의 한 체성을 구분치 못하는 점이다. 공산주의가 인류역사상에 있어서 최초의 독재정치 이론도 아니고 그들의 정권이 종전에 인류사회에 군림하였던 어느 독재정권보다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의에 반한 독재정치를 강행하고 있으므로 독재정권의 시

간적 한계성과 몰락의 필연성에 따라 공산주의의 최후가 예기되기도 한다. 공산주의체제의 탄압을 피하여 자유진영으로 귀순하여 온 사례를 볼 때 1949년 9월부터 1961년 8월 15일까지(베를린 장벽이 구축될때까지) 자유를 찾아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이주해 온 수가 무려 270만에 달하고 한국에 경우에서도 1945년 당시 남북인구가 각각 1,500만으로 비등했었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북한이 1,200만, 남한이 2,500만으로 약 500만이 남하하였다는 것이니 그 얼마나 공산체제가 자유가 없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독재자 「스탈린」의 친딸인 「쉬벨릴라나」가 1967년 3월에 미국으로 극적인 망명을 하여 세계의 주목을 끈 사실이라고 가 1956년 폴란드와 헝가리의 반공의거, 체코의 자유화운동 등은 더욱 공산사회의 탄압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끝으로 20세기에 들어와 더욱 두들어지게 나타난 문제점으로 경제적 비능률성을 들 수 있다. 소련 경제전문가들은 만일 러시아에서 공산경제체제 대신 자유경제체제가 계속되었다면 현재의 생활수준을 훨씬 능가하였을 것이고 발달된 경제체제를 이룩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비능률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① 빈곤한 경영진, ② 노동자의 의욕 부진 ③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④ 중공업과 소비공업의 불균형 등을 들고 있다.

첫째로 경제의 효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경영기술이다 공산국가에서는 경영자들의 전부가 당성이 강한 국가공무원이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과는 관계없이 국한된 임무수행에 그치고 있으므로 대개의 경우 지시된 생산량을 확보하는데 급급하고 질적인 면이나 장기적 생산계획은 거의 등한시하는 경향이다.

둘째로, 노동자 개인들의 일에 대한 의욕부진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와는 달리, 공산국가의 노동자들은 개인의 생산능력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반대급부를 받음으로 자연 경쟁의식이 없어지고 따라서 생산능률이 저하된다.

세째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다. 경제체제가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급에 따라 수요를 조절하게 됨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뿐 아니라 생산을 자극하기 어렵게된다.

네째로, 중공업과 소비공업과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자유진영과의 전쟁불가피론” 혹은 “세계 혁명지원” 등의 이론하에 군수 및 병기공업 등 중공업에의 과다한 경제투자는 소비물자의 희귀현상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생활필수품의 가격상등으로 국민생활의 수순을 저하시켰으며 특히 농업정책의 실패는 더욱 국민의 생활고를 재촉하였는 바 근래에도 캐너머 등 서방국가로부터 식량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은 국내적으로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는 바, 국내적으로는 공산주의제도 및 이론상의 자체모순과 서방측으로부터 유입되는 자유화물결에 휘말려 국민들의 동요가 적지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자유화운동과 더불어 국민들은 소비경제의 질적, 양적 향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공산위정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으며 겉디다 못한 공산국가들은 유고슬라비아를 필두로 그들의 정통파 「마르크스」 경제체제를 수정, 자본주의적 요소를 배합함으로써 비능률성을 다소나마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의 구호인 “형제사회주의 국가의 단결과 공산주의에는 국경이 없다”는 이론은 점차 공염불이 되어가고 중·소간의 국경분쟁과 공산권내의 영향력 경쟁으로 나타난 적대관계는 더욱 공산·자유진영의 대결을

무색케 하고 있으며 동구와 아시아제국의 공산정권 내지 공산당들은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에 바쁜 실정이어서 공산체제의 내분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으로 볼 때 이론적 모순과 현실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공산주의국가들은 시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필경에는 몰락을 하던지 아니면 자유민주적 사회로 변질하던자간의 양자택일의 운명에 처하여 있다고 전망되는 것이다.

2 교수방법

본장의 강의는 공산주의자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라 “세계 혁명” 또는 “세계 지배”를 계속추구 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 그들의 세계적화 야욕의 비현실성을 민주주의의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우위성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또한 공산주의 자체내의 모순때문에 자유화의 방향으로 발전하던가 국민의 반발로 붕괴되던가의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의 세계혁명론은 「굿드맨」의 <하나의 세계국가를 위한 소련의 구상>에서 자세히 취급하고 있고 이데올로기와 국가이익의 상통되는 현상 또는 이념과 대외정책과의 관계는 「배링튼·무어」의 <소련의 정치전제의 함정>과 「알렉산더·달린」의 <세계문제에 있어서 소련의 역할>이라는 저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강사는 공산진영의 대표적 국가인 소련과 중공의 “세계적화” 내지 “세계지배”의 꿈은 공산주의 이론에 의한 합리화 이전에 강대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팽창주의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근거로서 목하 고조일로에 있는 중·소간의 분쟁이 겉으로는 서로가 「마르크스·레닌」주의 노선의 정통과임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수정주

의자들이라고 혈통고 비난하지만 그 실제에 있어서는 인접한 강대국 간의 영토문제 공산진영의 주도권 장악이 그 분쟁의 근본원인임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간의 국가이익을 위한 충돌은 소련과 동구제국과의 관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강사는 2차대전 직후 소련이 무력적으로 동구를 점령하고 그들의 괴뢰정권을 수립, 소련의 전후 경제복구를 위하여 동구위성국들을 착취한 수 많은 사례를 들어 공산주의의 침략의 배경을 규명하여야 한다.

특히 소련의 자국 이익추구에 반발하여 봉기한 유고, 체코, 루마니아 등의 반소운동은 이상의 사실을 이해시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공산주의의 “형제사회주의국”이론에 의하면 공산주의에는 국경이 없으며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국가의 이익을 초월하여 공산주의 신장 및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의 수립을 위해 공동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상 사문화된 점을 강조, 공산주의 이론의 허구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세계적화를 위하여 노력을 할지라도 민주체제의 제도적 우위성에 따라오지 못하고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동독과 서독간의 경제적 차이, 우리나라의 남북의 경제적 비교 등이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국가에서는 모든것이 계획에 의한 통제로 일관되기 때문에 일부 기간산업 특히 전쟁준비를 위한 군수산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국민의 막대한 희생을 강요함에 따라 자유진영의 경제체제하에서 보다 잠정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한계를 넘겨진 어느 시기에는 생산능률이 급속도로 저하되어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경제질서는 자본주의의 그것과 비해 완전히 제압되게 될 것이다.

이점을 강사는 서독의 “경제기적”, 일본의 “경제대국”으로의 성장 등의 사례를 들어 설명함이 좋을 것이다.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첨가 설명할 것은 동구 공산제국이 그들의 재래적 공산경제체제에다 서구의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기본요소들을 배합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내용개요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공산국가에서는 관료적 경영진의 빈곤한 기술과 무성의 그리고 노동자들이 고정된 반대급부를 받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하에서와 같은 경쟁의식이 전혀 결여되어 있고 따라서 생산능률이 저하되게 마련이다. 또한 공급의 부조화에서 오는 여러가지 병폐 등으로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태에 있는 반면, 국민들의 인내력은 한계점에 도달해 생활필수품의 양적·질적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자유주의의 물결이 어느정도 흘러들어가면 과거의 「스탈린」 체제와 소련의 현행 체제에서 이탈하여 공산국가의 주민들은 기본권보장을 요구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소비경제 발전 등을 강력히 요구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이를 어느정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강사는 이상의 점들을 유의하면서 공산국가들이 앞으로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민주주의적 정치제도의 방향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국내적으로 거센 반발을 받아 정권유지 불능의 사태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지적, 민주국가들의 궁극적 승리가 필연적임을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브래젠스키, 니이마이어 공저, 공산주의 비판전서(3), 한국반공연맹, 1966.
- ② 브래젠스키, 니이마이어 공저, 공산주의 비판전서(4), 한국반공연맹,

1966.

- ③ 도크, 바넷트. 中共의 오늘과 내일, 遼東社, 1964.
- ④ 지라스, 밀로반, 새로운 階級, 大學教材公社, 1957..
- ⑤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 大陸反毛思想組織與行動, 中國國民黨, 1967.
- ⑥ 국회입법조사국, 1970年代의 美國外交政策, 국회도서관, 1970.
- ⑦ 浦野起央, 現代國際政治의 課題, 有信堂, 1970.
- ⑧ John W. Spanier,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New York: Frederick A. prager. 1960.
- ⑨ American Bar Association, peaceful Coexistence:
A Communist Blueprint for Victory, A study by Richard
V Alle for the Standing on Committee on Education
Against Communism, American Bar Association.
July 1964.
- ⑩ James Barnham, Conteinment or Liberation:
The Struggle for the World
New York: John Day Company, 1953.
- ⑪ Winston S. Churchill, Triumph and Tragedy,
New York: Bantam Books, 1953.
- ⑫ Bertram D. Wolfe, "Communist Ideology and Soviet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October, 1962.
- ⑬ Herbert Fels, Between War and pea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 ⑭ Walter Lippman, The Cold War,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7.
- ⑮ A.G. Boyd, Communist China's Foreign policy, New York:

- Freuerick A. praeger, 1962.
- ⑫ Griffith, William E. ed. Communism in Europe: Continuity, Change and the Sino-Soviet Dispute, Cambridge, Mass.: M.I.T. press, 1964.
 - ⑬ Lowentha, Richard. World Communism: The Disintegration of a secular Fai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 ⑭ Barnett, A. Doak. Communist China and Asia, New York: Random House, 1960.
 - ⑮ Brzezinski, Z. The permanent purg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 ⑯ Djilas, M. The New Class, N.Y.: praeger, 1957.
 - ⑰ Friedrich, C. & Z.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 ⑱ Scalapino, Robert A.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Tactics, Goals and Achieve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Inc., 1965.
 - ⑳ Seton-Watson, Hugh. Nationalism and Communism: Essays, 1946-1963, New York: praeger, 1964.
 - ㉑ Zagoria, Donald S. The Sino-Soviet Conflict, 1956-1961,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II 대한민국 대 북괴

1 내용개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의 전망결과는 결국 한국과 북괴와의 대결의 전망과도 거의 일치할 것이다. 북괴가 현재 김일성을 주축으로 일당독재를 굳히면서 남한의 적화통일에 광분하고 있지만 북괴의 대내외적인 여건은 결코 이를 용납치 않을 것이며 중국에는 자가당착에 빠져 그들의 현행체제가 붕괴되거나 아니면 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어느 사회이고 다소간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북괴의 경우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점과는 그 성질이 너무나 다른 것이기에 우리가 기대해 볼만한 취약점인 것이다.

북괴는 괴뢰정권을 수립한 후 일당독재체제로서 오늘에 이르도록 그들의 위치를 강화만 해왔다. 그러는 동안에 김일성을 신격화시키고 그에 정적은 모두 숙청되었으며 개인의 자유는 인정치않는 무단정치를 강행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모든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 잡혀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중공과 소련의 대서방정책이 변질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관계국들은 그들의 외교노선의 방향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판국에 중·소의 틈바구니에서 실이(爽利)를 찾아 친소 혹은 친중공정책을 교차적으로 채택하여오던 김일성이가 과연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시킬 것이며 거의 강경일변도로 유지시켜 온 그의

「유일사상」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자못 의심되는 바이며 또 그의 이론적 허구성을 어떻게 호도시켜갈 것인가도 자못 궁금한 일이다.

다음으로 김일성의 일당독재체제에서 오는 후계자 문제와 당내파벌 문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베올로기의 교조적 성격 때문에 이론논쟁이 잦게되고 따라서 다른 이론을 중심으로 한 파벌이 형성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북괴는 다른 공산국가의 경우보다도 이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도 크고 그 교조적 성격이 강한 까닭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파벌주의와 권력쟁탈전은 매우 치열하였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곧 그칠줄 모르고 일어나는 숙청이며 앞으로 김일성의 후계자를 둘러싼 권력 투쟁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은 것이다.

셋째로 문제되는 것은 역시 북괴의 경제문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수요·공급에 따르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따르는 원가계산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원가계산을 근거로 이룩될 수 있는 경제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시행착오에 따른 경제계획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이는 계획의 의의를 상실하기 쉬우며 북괴가 지금까지 3차에 걸친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지만 그 목적달성도가 어느정도인가는 자못 의심되는 바이며 따라서 앞으로 있을 경제계획의 실효성이 가히 짐작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염려하는 하나가 북괴의 군사비 과다지출이다. 그러나 좀 장기적인 전망에서 평가할 때는 극히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은 후생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완전 소모에 지나지 않으며 파급효과가 거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일반 공산국가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제도의 부

인은 공산주의 경제체계의 병폐의 하나인 생산능률의 저하를 초래한다. 곧 유인(Incentive) 구조를 허용치 않으므로 해서 주민의 생산의욕을 감퇴시키고 나아가서는 생필품의 부족에 대한 주민의 감정이 격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는 것이다. 소위 북괴의 7개년 경제계획은 완전 실패로 돌아가 1967년에 완료되기로 되었던 것이 1970년도로 3년이 연장되고 공업성장률은 년 3% 내지 3.5% 이상을 넘지 못하며 인구성장률이 2.5%인데 비해 농업증산률은 년 1% 밖에 되지않아 북괴는 앞으로 식량난을 비롯 심한 경제불황을 면키 어려운 실정에 있다.

셋째로 북괴는 정치·경제상의 문제점외에도 많은 사회·문화적 측면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북괴는 현재까지 어느 공산국가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만큼 폐쇄성을 견지해 오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통·통신의 발달은 북한 사회를 그 언제까지나 폐쇄상태로 유지시킬 수는 없을 것이며 자유화의 물결이 스며들 때 사회의 혼란은 아마 걸잡을 수 없는 지경에 몰아넣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상이 근래에 들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에 있다. 그 외에도 북괴의 사회적인 취약점은 많다. 그중 획일성의 강요에 따른 창조정신의 결여라든가 노동생활의 강요에 따른 인간성의 상실 등은 특히 주목할만한 문제점인 것이다.

이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의 북괴의 문제점 중 중요한 몇가지의 사실을 지적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취약점이 되는 문제점이라도 어떤 학자가 지적했듯이 모두 공격의 취약점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적이 이 취약점을 활용할 능력과 의사가 있을 때 취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을 감안 신속한 활동으로 적의 방어선을 넘어 수비를 포기시키고 전략을 변화시켜 쓸데없이 정력을 소비하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데 북괴는 그들의 취약점을 감추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호전적 대남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북괴당 5차대회에서의 김일성의 연설에서도 밝혀졌거니와, 남북적십자사 예비회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간첩을 남파하는 사실에서 그들의 저의를 엿볼 수 있다.

우리는 북괴의 취약점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민주주의의 기치아래 민주역량을 배양하여 나간다면 민주주의의 승리는 불문가지의 사실이 되고 말 것이다.

2 교수방법

본장의 강의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 지금까지의 각 주제의 내용이였다. 강사는 지금까지 설명하고 토의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본주제의 학습능기를 유발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본강의를 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무조건 북괴의 역량보다 우리의 역량이 우세하니 민주주의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주입식은 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따라서 본 강의에 임하는 자는 강의자 자신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북괴의 취약점을 학생들과 더불어 협의 또는 토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승리가 전망되도록 풀어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다. 다음에 피교육자의 문제의식이 분명해졌을 때, 각 영역별 문제점을 중심으로 북괴의 취약점을 정리해 보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줄 믿는다.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강의자는 북괴의 정치조직, 정치과정, 정치실태 등을 전장의 자료를 활용 제시하고, 정치적 취약점이 될 수 있는, 국제적 고립성, 대내적인 입장에서 각종 숙청, 주민에 대한 생활의 강요현상을 들어 그 여파가 어떻게 진전되겠는가를 학생들로

하여금 협의토록 한다. 아울러 여기에 우리가 대처하여야 할 점을 협의하는 절차를 포함시킨다면 국민이 대처하여야 할 사명감이 도출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강의자는 북괴의 경제발전의 전망에 앞서 경제발전의 요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발전의 필요요건을 설명, 북괴의 경제상황을 이상의 경제발전의 요건에 맞추어 보고 북괴의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추정해 보도록 함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유인구조, 가격, 생산활동에 있어서의 인간관계, 파급효과, 군수산업에의 치중 등이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의 제요인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뿐 아니라 이를 보완하기에 알맞는 제도이므로 남북의 경제성장의 격차가 날로 벌어져 우리의 우수성이 전망되도록 강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강의자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시키기에 앞서 각종 북한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탐독시키는 절차가 앞서야 한다. 그 후에 강의자는 북괴의 폐쇄성, 획일성이 북괴사회에 파급될 영향을 논의시키고 그 결과가 가져올 개방의 문제점, 획일성에 따른 비참조성이 문화의 발전에 가져올 전망 등을 추정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국민 개중에는 북괴에 대한 자료부족으로 북괴능력의 과대평가를 하는 사람도 여러 없지 않는 점을 감안, 강사는 북괴의 취약성을 종합하고 북괴에 대한 방침도 금물이거니와, 북괴에 대한 과대평가도 역시 금물임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통일정책이라 볼 수 있는 1970년 8월 15일의 8.15선언의 의의를 상기시키면서 남북적십자사 예비회담의 과정을 주시, 우리가 대처하여

야 할 태도를 정립하여야 할 줄 믿는다.

3 참고문헌

- ① 문공부, 北韓要覽, 문공부, 1968.
- ② 徐南源, 北韓의 經濟政策과 生産管理,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6.
- ③ 金幸一, 惡夢 595 日 (62 次 北送僑胞의 脱出記), 寶晋齋, 1968.
- ④ 蘇貞子, わたしか叛逆者か?, 邦亜文化社, 1968.
- ⑤ 韓載德, 피의 流刑地, 한국반공연맹, 1967.
- ⑥ 韓載德, 金日成을 告發한다. 内外文化社, 1965.
- ⑦ 全斗烈,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崩壞, 新文化社, 1968.
- ⑧ 崔 錫, 한국統一問題에 對한 摸索, 新文化社, 1967.
- ⑨ 서울大商科大学 經濟問題研究所, 經濟發展과 經濟計劃, 서울大出版部, 1964.
- ⑩ 評價教授, 韓國經濟發展의 理論과 實際 (Ⅱ), 內閣企劃調整室, 1969.
- ⑪ 韓載德, 金日成과 北傀의 実相, 共產圈問題研究所, 1969.
- ⑫ 李文永, 北韓行政權力의 變質要因에 關한 研究, 1969.
- ⑬ 共產主義問題研究所, 統一에 對備한 社會의 諸問題, 共產主義問題研究所, 1969.

제 5 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사명

제 1 장 한국의 분단과 통일의 요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비극적인 남북의 분단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내외의 정세변화에 따라 통일의 요청이 오늘처럼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생생하게 느껴지는데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처럼 국토통일의 대과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해 나아가야 할 이때, 단일민족으로서의 문화전통을 대전제로, 민주적 통일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이마당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휴전선을 마치 국경선과 같이 생각하고 있고 이북 동포에 대해 외국인과 같은 소원감을 느끼고 있음은 통일의 길을 오히려 멀게 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 장에서는 조국분단의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의 통일요청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통일은 필요 불가결한 요소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분명히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우리민족은 국제무대에 나서게 된 19세기말 일본, 청, 러시아의 식민지 각축장이 되면서 한국분단의 위험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민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지만 민족의 저항이 치열하여 8.15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극동진출에의 야심이 3.8 선을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이북땅에 피뢰정권이 서게 되면서 우리민족은 국토 양단의 불행을 갖게 되었다.

이제 국토가 양단된지 4 반세기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6.25 남침에 의한 불행한 동족상잔의 전화를 겪었고 4.19 의거, 5.16 혁명을 거쳐 이제, 대한민국은 중진국의 선두를 향해 즐거운 발전의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우리의 주체적 역량이 커져가고있고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는 분단국가의 평화적 통일에의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평화적 통일과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국민적 총화를 이룩해야 한다. 이와같은 국민적 총화는 한국분단에 관련된 제반 역사적, 국제정치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비판에서 나타나야 하며, 불행한 분단을 깨고 민족적 통일을 이룩해야 하겠다는 절실한 통일의 열망에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본 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분단에 관련된 역사적, 정치적 사실과 주요개념을 이해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의 필요성 및 그 절대성을 이해케 하여 국토통일에 대한 민족적 열망을 모든 학생속에 내면화시킴에 있어서 필요한 주요내용의 골자와 이에 따르는 교수방법상의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I 한국의 분단

1 내용개요

우리나라는 통일된 문화민족으로서 길고 즐기찬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다. 특히 1,300여년전에 성취한 신라의 삼국통일이래 우리는 비록 소박한 전통적 형태이기는 했지만 금세기 초까지도 민족적 통일체로서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이렇듯 민족통일체로서의 긴 역사를 지속시키면서 경험해야 했던 허다한 위협과 시련과 분열의 위기도 우리민족의 통일에로의 열망에 의해 극복해 왔었다. 그러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민족의 오랜동안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권력정치의 냉혹한 논리는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이나라를 분단시키고 말았다.

한반도의 분단은 펴 오랜동안의 국제권력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베우라」는 1895년 일본과 러시아의 국교조정을 위하여 우리의 의사를 무시한채, 한반도의 분할관리를 제의했었고 다시 노일전쟁 직적인 1904년에는 러시아가 분할 다시 관리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러한 지난날의 분단음모는 38도선 또는 39도선을 남과 북에서 점유하자는 것으로서 38도선 이북에 대한 러시아의 야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싹튼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국가가 형성된 이래 일찌기 분단된 일이 없던 한국을 분할 점령하자는 러시아의 야욕은 부동항 정책에 대한 끈덕진 집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의 서양 열강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의 식민지 경영으로 많은 물자를 거두어 들이는 시대였고 외국의 정세에 어두웠던 구한

국은 자칫하면 서양의 제국주의에 의하여 잠식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1894년의 청일전쟁은 전통적으로 「조선」과 친교관계가 있던 청과 새로운 세력으로 밀려들어 온 일본사이의 싸움이었다. 이 두 나라는 서양문화를 도입하면서 급속도로 근대화하였고 당시의 조선을 정치적으로 지배함으로써 경제침략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특히 일본은 조선을 공업제품의 소비시장으로 삼아 일용잡품인 실, 바늘, 성냥등까지 침투시킴으로써 농촌경제를 마비시켰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선과 청나라의 무역관계가 늘어나자 일본은 자기의 시장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 청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이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고 마관조약에서 조선을 자주독립국가로 확인한다는 것이 제1조로 되어있다. 그러나 결과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간섭을 허용하는 정세로 변하였다.

그후 약 10년동안 일본은 더 심한 경제적 침략과 정치적 간섭을 자행하기 시작하여 갑오경장과 같은 근대화 작업에까지 작용하고 을미년에는 명성황후 민비의 살해사건까지 일으켰다. 그당시 온 국민들은 독립협회등의 자주정신에 호응했고 일본의 침입에서 벗어나려는 조정은 러시아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1904년에 일본과 러시아가 만주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조선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권을 결정하려는 싸움이었다. 일본은 국가의 흥망이 여기에 달려 있었으나 러시아의 목적은 한반도에 세력을 부식하자는 것이었으며 러시아의 국내 사정에 따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종식되었다.

당시 영국과 미국의지원을 얻은 일본은 외교적으로도 실패를 거두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더 강화시켰다.

1905년 전쟁이 끝날 무렵에서부터 일본에 의해 철도, 통신망, 군대 수송로가 강점되고 일본인 정치고문이 파견되는등 일방적인 외교관계가 진전되고 드디어 1905년 을사조약에는 보호 정치라는 미명하에 외교권을 빼앗아 대외관계는 일본 외무성이 담당하는가 하면 통감부를 설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교육내용에도 간섭하여 교과서까지 검열하는등 일본정책은 1910년에 완전히 국권을 강탈하기까지 우리나라 식민지화 정책을 예정대로 진행시켜 나간 것이다.

36년동안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상태에서도 민족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민족독립운동은 줄기차게 전개되었고 이것은 통일된 독립국가에로 향한 당연한 표현이었다.

민족독립을 위한 우리의 거족적인 투쟁에 대해 국제사회가 반응한 하나의 표현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한국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대전종결 이전인 1943년의 「카이로」선언에 의하여 한국의 독립은 공약되기에 이르렀으며 종전되던 1945년에 이 공약은 재확인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전의 조기종결을 노린 미국의 의도를 이용하여 소련은 대일전쟁 참전 조건으로 알타협정을 성립시켰고, 종전시 한국내에 주둔중인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하여 순수한 군사상의 필요라는 표방하에 소위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그 이남은 미군이, 이북은 소련군이 진주하여, 자기 일본군의 항복을 수리했던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일본군 항복을 수리한다는 순수한 군사적 목적을 위한 진주에

불과 한 것이었으나 소련군 사령관은 38도선을 한계로 남, 북한의 교류를 일체 단절시킴으로서 38도선은 한국국토를 양단하는 정치적 분할선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상에 약술한 것과 같이 한반도의 분단경위는 국제권력정치의 일반적 논리로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일본이 제정러시아에 제안했던 한반도 분할안이나 또 러시아가 일본에 제안했던 한반도 분할안이나 미, 소 전략가들이 판단한 한반도에 있어서의 일본군 항복수리를 위한 잠정적 분할 분담, 이러한 협정에 따라 38도선 이남까지 내려왔던 소련군이 미군의 한반도 진주와 더불어 38도선 이북까지 철수한 사실, 그리고 6.25동란시에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던 한.미 연합군이 중공의 공세에 몰려 38도선 부근까지 후퇴, 그 지점을 중심으로 휴전협정을 체결한 사실등은 모두 국제권력정치에 있어서의 세력균형이라는 개념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와같은 국제정치역동은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거쳐 한국의 신탁통치를 계획하기에 이르렀으나 공산당까지 포함하는 한국민족은 한때 한뎡어리가 되어 이에 항거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모스크바로부터 지령을 받은 남북한 공산당은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어 신탁통치를 지지하였고 소련군은 반탁운동의 선구자 「조만식」을 체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소련이 신탁통치 내지는 38도선의 조작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민족진영의 끈질긴 반대로 인하여 신탁통치 논의는 후퇴하였으나 2월에는 「북조선 임시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소련군 대위 김일성이 위원장에 취임하여 남북 분단계획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러한

기초공작이 끝난 다음 3월에 가서야 소위 미소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그결과는 소련의트집으로 난항을 거듭하다 실패로 끝났다.

미국의 「마샬」국무장관이 1947년 9월 17일 한국문제 해결을 제2차 유엔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제기한 것은 소련과의 타협이 이미 끝난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국민의 독립에 대한 긴급하고도 정당한 요구를 그이상 지체시킴을 원치 않으므로.....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국정부를 수립하는 동시에 미, 소 양군의 철수를 감시하기 위해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소련대표는 남북한 대표를 초청할것과 미, 소 양군이 동시에 철수할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이것은 부결되고 1947년 11월 14일 미국안이 43대 0으로 채택되었다.

이 통한결의안에 따라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소련은 예상했던대로 이 위원들이 38선 이북에 가는것을 거절하였다. 이에 남한에서는 단장인 인도대표 「메논」과 협의하여 이른바 "가능한 지역의 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하여 유엔의 승인을 얻어 역사적인 5.10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우리정부는 유엔결의에 의해서 수립된 정통정부이며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유엔의 승인을 얻은것이다.

이북에서는 소련 점령군 사령관이 서둘러 도, 시, 군의 「인민대표자대회」에서 날치기로 지배집단을 조직하여 소련군 대위였던 김성주를 김일성으로 개명, 김일성을 중심으로 괴뢰정권을 수립하였

다. 그후 행정조직으로 국회의원의 대역을 삼고 후백선자로 괴뢰 정권을 세우는 절차는 민주주의에의 반역이었다. 6.25 동란을 도발하려는 사전전략이 예정대로 연출되는 과정이었다.

소련은 즉각적으로 남한을 침공한다면 쉽게 적화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하에 김일성도당으로 하여금 중장비를 갖춘 군대를 조직케하여 괴뢰정권을 세운지 일년만에 6.25 동란을 도발시켰다. 예상대로 대한민국의 장비가 미비함을 틈타 북괴 공산군은 쉽게 수도 서울을 거쳐 남하케 되었다. 그러나 국제연합이 합법절차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를 도와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과 더불어 남북을 갈라 놓은 군사 분계선이 설정되어, 38선에 대치되는 새로운 분단선이 되었고, 오늘까지 이 군사분계선은 완전히 남북한을 갈라놓는 경계선 역할을 해 왔다. 그동안 한반도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은 전후 복구사업과 국가발전 과업이 큰 진전을 보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외교면에서 중진국의 선두를 바라보는 위치에까지 다달았다. 이제는 대북괴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의 길을 트는 일에서부터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제반 전략에 이르기까지 주도권을 쥐고 나갈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우리의 주체적 능력도 다각적으로 배양되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통일의 길은 멀고 험난하기만하다. 급변하는 작금의 세계정세는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복잡성을 띄고 있는 바, 70년대에 들어 신흥 강대국으로서의 일본과 중공의 등장으로 인한 동북아의 세력개편 방향은 한반도의 국제정치와 세력균형의 구조적 내용을 더욱 복잡하게 전개시킴으로서 한국의 통일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들을 가중

시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미국과 중공의 접근, 중공의 유엔 가입이라는 최근 정세와 더불어 분단국 동시 유엔가입론등 소위 분단 현실화에의 국제정치적 추세등으로 볼 때, 우리의 통일의 길은 더욱 더 험난한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게 하고 있다.

국제권력정치에서의 세력균형이라는 일반논리를 분단국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분단국의 운명은 현재의 정치적 현실을 그대로 양성화하여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연결시켜 줌으로써 분단상태를 현상·고정화 내지 안정화 시키게 되리라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강대국들의 국가이익 추구의 도는 더욱 높아져, 이념보다도 국가이익에 얽매이는 경향이 짙고, 이를 합리화하는 정경분리라는 편리한 개념까지 넓게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전략을 우리가 선택, 결정할 입장에 있으며, 우리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 노력에 의하여 성취시켜야 할 과업으로 받아들일 단계에 다가섰다.

2 교수방법

본 절에서는 첫째로 한국의 역사는 민족 단일체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 둘째로 통일을 위한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상의 권력균형 유지를 위한 희생으로 국토분단의 비극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셋째로 분단 이후의 대한민국 발전상과 그동안의 그리고 특히 작금의 국제정치 추세를 학습자에게 정확히 이해시키고, 통일에의 민족적 열망을 다시한번 불러 일으키는데 중요한 교육목표가 있다.

이와같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민족사와 국제정치사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국토통일을 위한 국민적 총화는 단순한 감정에의 호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예리한 문제 의식과 이에 관련된 제반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한 날카로운 비판력 및 미래에의 투시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주적 결정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론하에, 보다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학습경험을 피교육자들에게 주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권력정치 역동에 관한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그 개념으로 한국분단의 경위를 설명해 보도록 촉구하는 일, 독립변인으로서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세계 열강국간의 권력구조와의 관계를 설명해 보도록 하는 일,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중공의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새로운 위치 확보, 미소관계, 미중공관계, 국제정치 구조에 있어서의 일본의 새로운 부각등을 주요자료로 하는 한국통일의 장래에 관한 예측 및 우리의 통일정책의 새로운 좌표설정등의 지적 활동은 본 절의 교육목표를 달성 시키는데 크게 도움될 것이다.

○ 참고문헌

- ① 白行採. 兩斷된 國家의 統一問題. 大韓公論社, 1968.
- ② 李基白. 韓國史 新編, 서울: 一潮閣, 1966.
- ③ 장명봉. "국토통일을 위한 정치역량 배양 방안", 국토통일에 관한 논문집, 국토통일원, 1971. pp. 5-65
- ④ 玄相允. 3.1 運動 勃發의 概略. 思想界, 1967 ?

⑤ 国民偏理教育研究会。 勝共編。良書閣，1971。

Ⅱ 통일요청

1 내용개요

우리가 승공통일을 이룩하여야 하겠다는 신념은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이냐는 방법의 문제와는 다른 각도에서 중요시 되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의 통일요청에 납득이 갈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국제여론에 호소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신념을 굳게하는 이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통일의 요청은 최소한 네가지 측면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민족단일체로서의 한국역사가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한국민족의 통일국가 형성 및 보존을 위한 불가침의 열망과 결단이라는 측면에서 국토통일의 당위성이 찾아진다. 둘째로는 현대적인 민족국가 개념과 바람직한 국제정치 질서의 각도에서 통일의 요청을 찾을 수 있고, 셋째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리고 넷째로 국가발전의 필요에서 통일의 요청이 찾아질 수 있다.

한국의 분단은 첫째, 역사적으로 도저히 용인될수 없는 일이다. 우리민족은 원래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고대에는 씨족끼리 작은집단으로 뭉쳐 있다가 씨족들이 부족국가로 모이고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으로 고대국가를 형성하여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하다가 7세기에 신라가 민족통일을 이룩하였다.

민족에 의한 단일국가 성립은 고구려의 옛터를 잃은 결과가 되었지만 통일된 국가로 출발하였다는 데에 뜻있는 과정으로서 이미 그때부터 삼국의 문화전통을 이어받은 단일국가로서의 모든 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그후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면서 한번도 분단

된 일이 없이 오랜 역사를 거듭하여 왔다.

고려 시대에는 거란, 여진, 몽고의 침략 등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북진, 고구려 영토 회복의 희망을 꾸준히 실현시키려 노력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왜국이나 청국의 침략을 받았어도 국권과 영토를 유지하여 민족의 분열이나 분단은 없었다.

19세기 말에 일본과 러시아의 흥정의 대상이 된 때가 있었다 해도 단일민족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위엄이 분할 점령을 허용치 않았다.

한때 일본에게 주권을 잃었으나 통치권을 강탈당하였을 뿐 민족이 분열되지는 않았다. 일제에 아부한 친일파가 극소수 있었으나 그들도 조국과 동포에 대한 애정마저 없어진 것은 아니었고 8.15 해방 후 그들에게 커다란 보복을 가하지 않은 것도 동족으로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관용으로 대했기 때문이다.

남북의 분단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부당하고 타율적인 것인데 문제가 있다. 한국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결정된 38도선은 아프리카 분할이나 폴란드 분할을 예사로 하는 습성을 가진 강대국의 비인도적인 처사이다. 역사상에 나타난 강대국의 점령도 정치적 분할이었을뿐, 문화와 역사의 단위인 혈연 공동체를 분할하지는 않았는데 제2차 대전 이후에는 독일, 한국, 그리고 월남등 민족국가를 분할하는 것을 예사로 삼는 경향이 보인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인종과 언어와 풍습이 하나로 된 순수한 단일민족으로서 독일과 같이 여러번 분열되었던 경험도 없고 월남과 같이 여러개의 인종이 모여 사는 곳도 아니다.

이렇듯 한국의 통일은 역사적 당위성이라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일 노력을 무로 돌리고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위해 광분하는 북괴의 정치권력 지배자들은 우리의 문화전통과 민족적 정신유산에 반역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단합된 민족의 힘으로써 통일을 이룩해야 하고 또 그것은 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한국통일의 요청은 현대적 국가개념과 국제정치 질서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 된다. 유럽의 정치사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근대화 내지 정치적 근대화의 개념은 국가형성 과정과 유리시켜서 이해하기는 힘들다. 국가형성은 본질적으로 전근대적인 전제체제의 붕괴에 따르는 시민적 통합과 영토의 설정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미 한국은 현대국가 형성의 과정을 충실히 밟아왔고 민족적, 문화적 통일성을 역사적 전통으로 이룩해 놓았던 것이다. 한국은 세계 권력정치의 희생이 되지 않았던들 이미 현대적 국가로서의 역할을 세계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행히 외부세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분단을 강요당하였기 때문에 국제정치의 기본단위인 민족국가로서의 조건을 약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민족집단이 하나의 국가(Nation - State)로서의 자주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참여는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한 것이 되고 국제정치의 질서에도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한나라의 분단상태는 국제권력 정치의 잘못된 소산이며 그 분단은 항상 국제적 갈등의 불씨가 되어왔고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시민적 통합과 이에 일치되는 영토의 확보라는 견지에서

동일민족, 동일전통, 동일문화를 가지는 남북한의 통일은 당위에 속하는 과제이고 자주성과 통일성을 지닌 현대 국가의 지위와 자격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한국통일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또한 세계분쟁의 불씨를 제거한다는 관점에서도 역시 한국통일은 한국인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요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일의 요청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때도 절실하다. 너무 늦게나마 적십자사의 노력으로 가족찾기 운동을 위한 남·북한의 대화를 개시한 바 있지만, 같은민족, 단일문화, 통합된 사회특성을 가지고 오랜동안 살아온 한나라의 국민이었기에 외세에 의한 강제적인 분단은 가족의 이산, 친족의 분산, 친지 및 동료의 격리상태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더욱이나 분란것은 공산치하에 머물러 있는 부모형제가, 친척이, 동료가, 동족이 공산독재하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권리도, 자유도 박탈당한 채 공산당 독재에 굴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을 상기할 때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더 연장시킬 수 없다는 절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필요로 함은 통일된 후 우리의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 및 국가의 최저 기본단위인 가족의 융화와 번영을 보호하고, 교육받은 시민으로서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국가생활에의 참여와 공헌을 존중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에서이다. 여기에 통일의 필요가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국가통일의 요청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통일의 요청은 국가발전의 전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발전과 문화적 통합성, 국가안전의 보장은 국가발전을 위한 기본조건이며 동시에 목표이다.

경제발전의 견지에서 먼저 생각될 수 있는 것은 남·북한의 지리적 조건의 차이에서 오는 자원의 불균형적 분포이다. 남·북한에 분포된 자원은 상당한 정도로 상보적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남·북으로 분담하는데에서 오는 자원 활용상의 무리는 이미 심각하게 경험해오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자원분포와 관련되어 북한산업은 기초자원 재생산에 치중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남한산업은 최종 소비재의 가공이 중심이 된다 산업구조상 남북한은 분단과 대립적 위치에 있기보다는 상호보완과 분업화를 촉진시켜 나아갈 수 있는 지역간의 협력과 종합을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다.

국가안보의 견지에서 보면 한반도의 분단은 지속적인 긴장과 국가안전에의 심각한 위협의 원인이 되어 왔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경험해 왔듯이 북괴는 그들 공산당의 전체주의적 전략에 따라 「공산화통일」이라는 궁극목적하에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전쟁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격대 및 무장간첩의 계속 남파를 위시하여 은갓 선전과 전술을 동원, 남한의 파괴와 침공에 급급해 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적 대비태세의 확립이 요구되는 소이가 있는 것이며 나아가 통일에 대비한 국민적총화와 주체역량의 배양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긴장과 북괴의 도전은 국가발전을 적지않게 저해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우리의 통일을 위한 노력에 허다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6.25 남침으로 비롯된 북괴의 무력 도전은 군사적, 정치적, 측면을 떠나서도 한국인의 문화적 분단, 분열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남북에 언어의 장벽이 차차 나타나기 시작

하는것도 그러한 예라 하겠다.

군사적 긴장과 대립과 충돌은 남·북한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점차로 상호 적대시하는 감정을 조성시켰고 이러한 일반적인 풍토는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동족을 적으로 규정해 버리게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의 기나긴 역사적 전통을 파괴해 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그리고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한 더욱 심해질 것을 생각할때 우리는 국토통일의 시급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교수방법

한국의 현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일은 앞으로 다가올 사태에 관한 대비책도 된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사실은 현실로 아직 남아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하여서는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해방이후에 출생한 신세대는 이 사실에 대하여 너무도 간단히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타의에 의한 국토 양단이기는 하였으나 너무나 국제무대에서 발언이 없었던 무기력한 상태는 외부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점도 있다. 3.1운동 당시의 기백이 차차 감퇴되어 간 국내사정이나, 외국에 있던 망명객들의 활동도 저조했던 상황 게다가 악의에 찬 소련의 전통적 동진정책과 미국의 극동에 대한 인식부족 등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우리가 통일을 갈망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러하여야만 할 민족적 과제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도적이며 개인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

이라는 점이 북괴에서 말하는 점과 다르다. 그들도 남북이 공산주의에 의하여 통일되어야 한다고 부르짖을 것임을 고려해 놓고 그들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이 무엇이 다른가를 비교할 줄 알아야 한다. 정치의식이나 국가의식 이외에도 인간주의를 내세우는 우리들은 마음속으로부터 북한동포의 실정에 대하여 동정을 보내기에 앞서 충분한 지식이 앞서야 한다. 그들의 생활상을 구석구석 알고 한국의 민주승공통일이 가지는 세계적 의의를 이해하고 국가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투시력으로 기저를 이룬 지적기반 위에 선, 통일에의 요청이어야만 실효가 크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여 지도에 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통일요청은 복합적이고 쌍무적이다. 개인, 사회, 국가 및 국제적 입장과 역사적, 정신적, 인도적인 견지에서 정치적인 이유를 보장하고 있다. 어느 누구를 위함도 아니요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을 조리있게 요청할 따름이다. 통일이 된 다음 북쪽의 젊은 세대를 인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더 필요하다는 말도 된다.

본 절에서 취급된 내용이 철저한 역사적 이해와 현대 정치구조 및 국가발전을 둘러싼 사회과학적 탐구능력과 설득능력의 배양을 주요 목표로 하는것인 까닭에 논리적 사고, 토론, 분석, 비교, 종합의 제 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집단연구, 자발적 탐구 등 다양한 현대적 교수양식의 활용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① 공산권 문제 연구소, 북한총감, 1945 - 1968.
- ② 박동운, 북한통치기구론, 고대아시아문제연구소, 1964.
- ③ 아시아 자유문제연구소, 북한독본, 경제 생활판.
- ④ 이기백, 한국사 신론. 서울:일조각, 1966.
- ⑤ 통일원 번역,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국토통일원, 1970.
- ⑥ JUN-YOP KIM,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of korean unificatio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XI 4, Korea University, 1970.

제 2 장 우리의 통일 정책과 사명

국토양단의 원인이 어떠한 것이건 남북통일은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남북통일의 문제를 남이 해결해 주기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남북통일의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사이긴 하나 국제적인 관심에 따라 우리의 통일의 문제가 해결 되기를 기대하고 방관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도적인 입장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국제적 협조를 구함과 동시에 통일방안의 실천을 위해 계속적이고 단계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첫째 우리가 지금까지 통일을 위해 경주해 온 노력을 더듬어 봄과 동시에 북괴의 통일방안을 분석·비판해 볼 것이며, 둘째로 통일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검토하고 끝으로 통일과업 수행에 따라야 할 여건과 우리의 사명을 되새겨 보도록 한다.

본 장에서 특히 강조되는 우리의 통일정책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민주승공통일인 것이다.

국토통일을 절실히 요청하는 우리들의 대전제가 민주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현대적인 국가건설에 있기에 우리는 민주승공통일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의 통일이 민족적 통합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려는 과업이기에 민족적 주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전략을 기본원칙으로 삼지 않을 수 없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용서할 수 없는 동족의식이 우리의 통일전략 수립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기에, 평화적 통일은 양보할 수 없는

통일의 원칙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분단상태가 4반세기를 두고
굳혀져 온 것이기에 조금하고 기계적인 통일은 힘들다는 것을 우
리는 인식하여야 할 것 같다.

우선 남·북한의 긴장 완화에서 시작하여 민족문화를 기초로,
고차원적 질서와 조화를 확립하는 보다 체계적 접근을 위해서 우
리의 인내와 냉철한 지성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I 남북한의 통일정책

1 내용개요

한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국토가 38도선에 의해 분단된 그 순간부터 전개되었고 신탁통치안에 대한 거족적 반대투쟁이 한국통일운동의 현대적 출발점이 된다. 미국 정부는 해방과 함께 단일의 민족문화를 기반으로 자주적인 통일 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반탁운동을 벌인 한국민의 의사를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실현시키려고 했으나 소련의 반대로 실패하자 한국의 통일문제를 유엔에 호소하여 실현시키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1947년 11월 14일 제2차 유엔총회는 한국독립의 절차를 규정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 결의에 의거해서 한국에서의 자유선거 실시 및 그 감시를 위한 유엔임시 한국위원단의 파견이 뒤 따랐다. 이리하여 남·북한 인구비례에 따른 유엔감시하의 자유선거는 유엔에서 계속 확인되고 우리의 기본적인 통일정책으로 받아 들여졌다. 소련의 반대로 전국적인 선거의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자 유엔소총회의 재확인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자유선거가 실시되었고 동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었으며 국회구성시에는 북한을 위한 잔여의석을 예비해 둠으로써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는 태도를 밝혔다.

이러는 동안 미·소간의 대립은 심해지고, 그것이 동서간의 대립으로 확대 됨에 따라 소련은 유엔의 통한노력을 저지시키기 위한 온갖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관심이 비교적 소원했던 아시아 지역에 대해 공세를 펴고 북괴로 하여금 1950년 6월 25일 불법남침을 감행케 했던 것이다. 즉 한국을 적화통일코자 하는

공산당의 야심을 들어 낸 것이다. 휴전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전쟁에서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 계속 국가발전의 터전을 닦아 나가면서 유엔에서 결의된 대로 “남북한 인구비례에 따른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를 기반으로 한 통한정책을 줄곧 유지해온 것이다.

이러한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은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통일을 향한 구체적인 전략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대외적 인식을 중요시 하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정책적 타당성을 지닐 뿐, 우리의 통일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돕지는 못한 것 같다. 우리는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에 의한 통일을 표방하면서도 국민의 통일에의 열망을 받아 들여 대중적 토의에 입각한 민족적 차원에서의 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 탐색하는 일에 역대 정부는 성의를 다하지 못하였었다. 특히 자유당 시대에 정부가 펴던 북진통일론은 통일에 관한 논의 자체를 위협시키는 시책으로서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토론의 여지를 주지 못하였다.

4.19이후 억압되었던 통일논의의 폭발현상이 벌어져 그 당시의 현실로서는 타당성이 극히 적은 남북교류론, 중립화통일론 등이 제기 되었으나 5.16혁명으로 일단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러한 활발한 논쟁을 통해 통일방안의 문제점들이 내중앞에 부각되고 토론되었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할 70년대를 위해 중요한 경험과 교훈을 남겼다고 풀이하는 이도 있다.

5.16 이후는 통일방안의 탐색보다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자체조건 정비에 중점이 주어졌고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승공역량 배양론이 국민들 앞에 설득력을 가지기 시작 하였다. 이리하여 평화적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발전 계획의 추진, 민주역량의 배양, 국가안보체제의 확립 등 주요과업이 추진되면서 1966년에는 국회 안에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통일백서가 발표되었으며 1969년에는 「국토 통일원」이 창설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에의 접근을 위한 체제적 노력이 경주되기 시작 했다.

또한 1970년 8월 15일을 기하여 박대통령의 「8.15선언」이란 평화통일 구상이 발표 됨으로써 우리의 통일정책의 새로운 좌표가 설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통일에 관한 8.15선언은 북괴 전쟁도발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전제로 첫째, 남·북한의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는 단계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제시의 유의가 있다는것, 둘째, 유엔의 권능을 북괴가 인정할 경우 유엔에의 동시 초청도 무방 하다는것, 셋째, 민주 공산진영의 우열을 가름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적인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는 것을 그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제 이상에서 논의한 통일에의 우리의 노력과 정책에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방향을 달리하는 북괴의 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괴의 통일정책은 북괴 노동당 당규 제1조에 명시된 「조선 노동당이 먼저 달성해야 할 목표는 반제, 반봉건, 민주혁명을 전국적으로 달성하는 일이며 최종적 목표는 공산사회건설에 있다」는 그들의 기본정책목표에서 풀이된다. 북괴는 절대로는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면에서는 무력증강에 힘쓰면서 소위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으로 대한민국정부를 전복하려는 적화통일 음모를 줄곧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자주평화통일주장의 기만성은 많은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한 한국의 신탁통치 결의에 대해서 공산당을 포함한 남북한의 온 국민이 거족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이다 얼마안가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괴가 들연 신탁통치안을 찬성하고 나오면서, 북한에서 반탁운동을 전개하던 민족지도자들을 체포 투옥하는 반민족적 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들은 「자주」라는 간판을 내걸고 1947년 9월에 있었던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이미 군사력을 강화한 북괴가 손쉽게 남한을 침범할 수 있다는 제안하에 외국군대 동시 철수를 주장하고 급기야는 6.25남침으로 그들 본래의 야망을 백일하에 노출 시켰다. 휴전 이후 4.19전까지는 유엔의 통한 결의안에 대립하여 「중립국 감시하의 자유선거」(인구비례가 아닌 남북 동수의 의석)를 통한 평화통일을 주장했고, 60년 이후 약 5년간은 남·북 연방안을 주장했고, 66년에는 자주노선을 주장했으며 이에따라 「선무장 후통일」론을 내세워 동년 10월에 열린 「당 대표자 회의」에서는 종래의 평화적 통일 주장과는 정 반대로 70년대를 적화의 「결정적 시기」로 공언 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은 전쟁에 대비하여 「전인민 무장화」 「전국토 요새화」 「전인민 군대간부화」 「장비 현대화」 등 소위 4대 군사노선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결정적 시기를 능동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투쟁방안으로서 첫째, 북한혁명기지 강화. 둘째, 남한혁명 역량 강화. 셋째, 국제공산주의 유대강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이로부터 대규모의 공비 남파를 감행하기 시작했다. 1·21 무장공비 서울침입을 위시한 다양각종의 무장공비의 남파, 간첩망 조직, 프예블로호 남치, EC-121기 격추 등 온갖 도발행위와 국제계릴라 훈련 및 자유진영 전복을 위한 책동 등 공산당의 본질적 침략성을 여지없이 들어 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괴는 8.15선언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의 제시가 없다고 혈뜰고, 그들에 대한 무력도발포기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남한인민」의 부쟁이라고 뒤집어 써우면서 그들은 항상 평화통일만을 주장해 왔다고 억지쓰고 있다.

8.15선언이 있었던 같은 해 11월에 열린 북괴노동당 제5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전체인민은 모두 무장되고 북한전체가 요새화 되었다.” “전체인민이 총을 쏠줄 안다.”는 등의 언사속에서 과거 당노선을 그대로 지켜 무력적화통일을 성취시키겠다는 기본정책을, 재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도 그들의 소위 평화통일 주장의 기만성이 백일하에 들어나고 있는 것이다.

2 교수방법

우리가 제시한 남북 통일방안과 북괴가 주장해 온 여러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의 방안의 타당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본 주제의 목적이다. 따라서 양쪽에서 제시한 방안의 분석과 검토를 하면서 그 장단점을 비교 토론케 함이 좋을 것이다.

본 내용개요에 소개한 통일방안과 그 내용의 설명은 충분한 강의의 위해서는 부족할 것이며 다음 참고문헌에 소개된 문헌들을 여러각도로 분석하여 충분한 내용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일부층의 관심을 모아온 통일방안이 있었다. 「중립화 통일론」 「무조건 협상론」등이 그 예의 하나이다. 그 밖에 다른 가능한 방안을 스스로 구안케 하여 서로 토의하게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괴의 야목과 기만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북괴측의 태도를 전제로 하여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채택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방안이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임을 입증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방안의 타당성이 규명되고 나아가 이 방안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문제와 과제등이 암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참고문헌

- ①. 국토통일원, 민수통일의 길, 서울인쇄주식회사, 1970. PP.40-67.
- ②. 백행걸, 양단된 국가의 통일문제, 대한공론사, 1968. PP.81~154.
PP.254~268.
- ③. 国会国土統一研究 特別委員會報告書, 統一白書, 서울, 1967.
- ④.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의 자주적 평화통일론” 분단국가의
계문제, 대한공론사, 1971. PP.83-92.
- ⑤. 장명봉, “국토통일을 위한 정치역량 배양방안” 국토통일에 관
한 논문집, 국토통일원, 1971. PP.5-65.

Ⅱ 통일을 위한 기본원칙과 여건 및 우리의 사명

1 내용개요

격변하는 국제정치 상황은 우리나라의 분단상태를 고착화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북괴는 계속해서 그들의 무력적화 통일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지극히 힘든 상황속에서 우리는 앞서 제시한 통일의 요청을 실현시키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통일 전략을 수립,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인내와 성의와 고도로 개발된 지성으로서 국민총화를 이룩 우리의 통일과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띄고 있다. 이와같은 우리의 통일과업 완수를 위해 필요한 전략수립에 있어서 우리는 몇가지 기본적인 전체 내지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원칙은 민주승공통일이야 한다는 대전제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간 기본권리의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 들이며 조화적인 사회발전의 기본으로서의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류가 창제한 이념중 가장 우월하다는 우리의 증명된 신념이기에 우리나라 헌법에 국시로 규정된 것이고 이 이념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발전을 방향잡고 규정짓는 사상체계의 역할을 해야한다.

반면 공산주의는 그 이론적 주장의 허구성, 모순성으로 이념체제로서의 타당성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맹신적인 침략지향성과 독재성과 비인간주의적 의식구조로 인해서 인간의 기본성향을 거역하고 세계의 평화로운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일관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선택해야 할 이념적 방향은 자명한 것이다. 공산주의적 요소를 제거시키고

민주적 질서위에 통일된 우리의 조국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만이
우리민족이 영원토록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견지에서 우리는 민주승공통일을 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둘째 원칙은 한국통일은 민족주체에 의한 통일이어야 하겠다는
점이다. 우리의 국토분단이 외세에 의한 것이었고 과거 우리의
통일노력은 외세의존적인 것이 지배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특히 작금에 전개되는 국제권력정치의 추세가 우리의 분단상
태를 고정화, 영구화 시키려는 징조를 보이고 있는 이 마당에, 통
일은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대과업임을 생
각할때 우리는 단연코 민족의 주체적 노력과 역량에 의한 민족문
화의 통일과 민족의식의 통합을 기저로 하는 통일과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통일은 단순한 기계적체제 통일로서 그
근본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해
서 유지되어 왔던 단일민족문화의 동일성을 되찾는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민족적 통일은 한국통일정책의 중요
한 기본원칙이 안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원칙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자명한 원칙이다. 우리의 역대 정부 방침
이 그랬고 심지어는 북괴도 내심과는 달리 위장된 선전의 목적으
로 내세우는 슬로건은 역시 평화적 통일이라는 사실을 보아서도
이 원칙은 한국통일을 요청하는 근본목적에 일치하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통일이 긴장해소 → 건전한 경쟁 →
제한된 대화의 협조 → 의식구조의 변화를 거친 민족문화를 바탕
으로 고차원적 질서와 조화의 확립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과업은 평화적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방법과 과정은 비교적 긴 시간의 적용기간을 요한다. 본질적으로 평화를 피구하는 인간자연성으로 보나, 약간의 적용기간이 주어지면 곧 통합될 수 있는 긴 민족문화 전통에서 보나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은 당연히 기본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 전제는 높은 타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넷째 원칙은 한국통일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통일의 대전제가 민주승공통일이라는 점에서 볼때 민주주의를 국시로 받아들이고 이 나라 발전의 좌표를 민주주의에 두고 있는 우리가 통일수행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세계를 무력으로 제패하여 공산화하려는 세계공산당의 한 괴뢰에 불과한 북괴에게 우리민족의 성스러운 통일과업을 맡길 수는 결코 없으며 그들의 흉계에 말려드는 실수를 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이미 전개되고 있는 남북한 가족찾기 운동의 주도권을 우리가 쥔 것은 올바른 남북한 대화의 실마리를 제대로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주도권의 원칙은 대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우리민족의 문제이고 우리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통일문제를 열강국들의 세력균형을 위한 국제정치의 희생물로 이 이상 더 방치해 둘 수 없는 길은 민족의 식과 역사적 사명감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국제권력정치에서의 한국통일에 관한 여하한 결정도 절대로 우리의 이익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하기위해 모든 지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한국통일에 관한 한 어떠한 국제적 시도에서도 우리의 주도권이 명백히 부각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한국통일을 위한 이와같은 기본원칙이 실제 통일과업 수행에 있어서 충실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통일이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몇가지 기본적인 여건이 있다.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이고, 우리의 주도권에 의한 통일이기 위해서 필요한 여건이 허다히 있겠으나 특히 중요한 것으로서 민족적 국가관의 확립, 민주적 역량의 배양, 자립적 경제성장, 국가안보를 위한 자주국방능력의 배양, 우리 국민의 정치능력의 배양, 외교능력의 배양을 통한 국제관계의 향상 등의 제 여건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민족적 국가관 또는 국가동일성의 확립을 평화적인 한국통일의 주요한 여건으로 내 세우고 싶다. 민족적 국가관이나 국가동일성은 같은 혈통과 문화유산을 나누는 민족으로서 형성되어진 국가에의 동일화 의식 내지는 애국심을 의미한다. 복잡한 정치체 사상은 제쳐놓고라도 일국의 유지와 통일과 번영은 그 나라 국민의 소위 애국심에 예 의존하는 바 지대하다. 반공의 견고한 기반도 민주승공통일과업의 효과적 수행의 기반도 한국민이 한국에 대한 국가동일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동족 동향이라는 자연적인 내집단 감정을 초월하여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애국심 또는 국가동일의식은 쉽사리 아무렇게나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이 첫째여건의 구비에 따르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선 국가동일의식은 한국이 한국민에게 얼마나 보람있고 영광된 것으로 보이느냐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의식은 한국역사에서 얻게되든, 국제에서 얻게되든, 국력에 대한 의식에서 얻게되든, 일상적인 국가생활속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에서 얻게되건간에 그것은 일종의 국가영광관 또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발전, 보장된 국가안전, 정치적 사회적 정의의 고양은 그것이 이러한 영광된 국가심상을 길러준다는 견지에서 승공통일에 직결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국가동일성의 배양은 일정한 형식교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적 집단적 생활의 과정에서 배양된다. 이와같은 국가동일의식은 그것이 강력한 사회적 내지 국가적 결속을 추구해 줄 뿐만 아니라 국가생활을 해나가는 각 개인의 국민적 책임의식과 자신의 목적 및 행동방식의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도, 학교도, 매스·미디어도, 정당도, 경제인들도, 사회문화 일반에 걸친 지도자집단도 한결같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명심하고 전전한 민족적 국가동일의식의 배양을 위한 풍토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늘의 한국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태도로 보아 여러가지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국가영광의식의 발휘가 고조되어야 할 필요는 계속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국민의 국가동일의식은 비교적 높은편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실증적 증거도 찾을 수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한국국민의 국가동일성 확립의 문제는 그 과정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각계 지도자들의 지도형태여하에 따라서는 비교적 쉽게 성취할 수도 있는 여건인 것 같다.

둘째, 평화적통일의 여건으로서 민주역량의 배양을 내걸었다. 우리의 통일을 위한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민주승공통일인바 이는 곧 민주주의에의 동일화, 민주주의이념의 내면화 생활화를 뜻하며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과 공산주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사상에 대한 우리의 주체적 선택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우리의 사상적 동일성의 문제이다. 우리는 과거 여러해 동안 반공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전국민의

정신자세에 관한 핵심을 잡는데 노력해 왔다. 그것은 그것대로의 가치가 있었고 필요도 있었다. 그러나 반공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부정적 동일성의 모호성을 문계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반공이라는 말보다는 요사이 승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그러나 승공이라고 해도, 그것이 내포하는 사상적 동일성은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게 된다. 부정적 동일성은 긍정적 동일성보다 모호하고 방향감 실제감이 나지않는 것이 보통이다.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아무게라고 하면 실제감이 있지만 아무게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모호해진다. 마찬가지로 나는 민주주의 신봉자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나는 공산주의를 배격한다라고 하는 경우보다 실제감이 있고 방향감이 명료해진다.

북괴의 빈번한 도전에 대해 적개심을 높이고 그 비인도성에 대한 비판력을 기르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적개심과 의분과 비판은 나 자신의 출발점 또는 의거점을 가질 때 더 의미가 있어진다. 우리는 명백히 반공정신을 길러야 한다. 그러나 그 기초작업은 반공교육이기 이전에 민주주의 교육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가치수용과 이에 대한 신념과 결단이 기저가 되어 비로소 반공은 알맹이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방향감이나 실제감이 없는 반공주의자를 길러내는 것이 되고 이러한 반공주의자는 언젠가 반드시 자기동일성의 모호성과 위기를 느낄 것이며 그 위기 여하에 따라서는 그 반공정신이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다. 인간의 실존적 욕구는 나는 무엇이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다라는 적극적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더구나 사상은 청년기의 특수한 관심사다. 그리고 청년기의 중심과업은 자기동일성의 발전과 그 형성이다. 이때는

부정적 동일성이 그리 도울되지 않는다. 도리어 종래 상투적으로 부정해 왔던 것이 어떤 방향감과 실체감을 주는 것이라면 부정을 반대로 긍정해 보는 수도 있다.

이렇듯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 지향하는 이념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이념을 내면화 생활화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동일화하는 민주적이념을 설득력 있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될 때 우리는 비로소 반공 내지 승공을 위한 확고한 자기확립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형식교육을 통해서만 학습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상황에서 생활하는 긴 생활과정에서 더 용이하게 그리고 확고히 학습될 수 있다.

민주승공통일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앞에 두고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이념에 대한 근거있는 신념과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지적 정의적 능력까지도 아울러 국민일반에게 키워야 한다.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이념으로 되어 있는 까닭에 제도적으로는 민주적 풍토속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제도 그 자체에 보다도 개개인의 신앙체제와 가치지향과 일반적 생활양식에 숨어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민주적 발전이 일천한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민주주의에 대해 익숙하지 못한 점이 많으며 민주주의의 토착화의 필요를 강하게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동일성 수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주역량배양을 위한 풍토조성을 위해서 모든 국민이 노력하여야 하겠지만 특히 각 생활영역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과 그 이념 및 원칙에 따르는 생활의 시범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여건은 자주적 경제성장이다. 앞서 언급한 국가동일성의 양양을 위해서도 국민경제의 성장은 요체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지 못한 대중을 가진 우리나라에 있어서 실력으로서의 선의의 경쟁에서 국민의 호응을 받으며 승리하려면 우리의 전반적 경제수준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사상적 이념의 선택에 있어서도 그 이념이 지배하는 체제하에서의 경제적 생활의 수준여하가 대중들에게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경지에서 우리의 자주적 경제성장은 우리가 내세우는 제 원칙에 합치하는 통일과업 수행에 앞서서 반드시 이룩해 놓아야 할 기본적 조건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빈곤에서 탈피코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다. 과거에는 청빈을 미덕으로 여길만치 우리의 살림은 가난했다. 그러나 이제 빈곤타파는 못견딜 갈망으로 되었다. 과거에 우리는 주어진 여건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이제 노력만 하면 빈곤을 타파할 수 있고 또한 노력만 하면 풍요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 10년동안의 실적으로 우리사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이렇게 하여 남의 나라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자신을 얻게 된 것이다.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경제건설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고 머우기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 경제건설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가 어느정도 발전된 다음에 점차적으로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고 경제가 높은 수준으로 성숙하게

되면 그때는 소비가 미덕이 될 정도로 국민의 경제생활수준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1차 및 2차 5개년 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자립경제의 기반 구축에 성공하고 자립경제로의 전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바라는 풍요의 사회에로의 길은 멀다.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나 기타 사회복지 사업은 앞으로 제3차 5개년 계획에 보다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I>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우리의 경제성장은 날로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생산에 있어서 1961년에 21억 5300 만불에 불과하던 것이 1969년에는 203억불에 달하고 있다.

<표 I>

주요 경제 지표

부 문	단 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국민총생산	천만불	215.3	218.5	241.9	266.6	287.3	332.4	367.8	502.0	607.3
1인당 국민총생산	불	84.8	83.6	89.8	96.4	101.2	114.3	123.5	164.7	195.0
경제성장률	%	42	3.5	9.1	8.3	7.4	13.4	8.9	13.1	15.9

또한 1인당 GNP(국민총생산)를 보면 1961년에 84.8불이던 것이 1969년에는 195불로 약 2.3배가 증가되었다. 한편 경제성장률은 1962년도에 이루었던 3.5%로 부터 1966년의 13.4%에 이르러 당초 계획기간중에 년평균 7.1%를 달성하려던 것을 8.5%로 초과 달성함으로써 급속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실적은 1951년 부터 1961년까지 평균 4.8%의 성장률에 이르지 못했던 사실과 비교해 보면 거의 2배에 가까운 높은 성장이었다. 그후 1967년에는 8.9%, 1968년에는 13.1%, 1969년에는 15.9%라는 고도성장을 지속하였다.

국민총생산 가운데 각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1960년도에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36.9%이고 광공업이 15.7% 사회간접자본(도로, 철도, 항만, 서비스, 운수등)이 47.4%였다. 그러나 1960년에 와서는 2차 산업인 공·광업의 비중이 뚜렷이 커져 19.6%로 늘어났고 1차산업인 농림·수산업이 36.1%, 사회간접자본의 3차산업의 비중이 44.3%로 낮아지고 있다. 이와같이 2차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공업화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출에 있어서도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기 전해인 1961년에도 4,200만불에 불과하던 것이 수출증대를 위한 정부와 온 국민의 노력의 결과 년평균 44%씩 증가하여 제1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해인 1966년에는 6배가 넘는 2억 5천만불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수출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수출상품의 내용도 크게 달라졌다. 1961년도만 하더라도 총 수출품의 대부분이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 및 광산물이었고 공업제품은 불과 22%인 950만불이었던 것이 1966년에는 그 비율이 반대로 되어 공업제품이 63%인 1억 6,100만불에 달하여 5년간에 공업제품 수출액은 무려 17배로 증가되었다.

또한 수출 대상국도 1961년에 27개국에 불과하던 것이 1966년에는 70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수출 무역은 오늘날까지 계속 증가되어 1968년에는 5억불, 1969년에는 7억불,

1970년에는 10억불을 달성했던 것이다.

그리고 석탄, 전력 등 동력원의 확보, 철도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시멘트 비료 제철 등 기간산업의 건설, 농업생산의 증대, 국제수지의 개선등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와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국민과 정부가 일치 단결하여 인내하고 노력 했다는 점.

둘째, 정부는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기간산업이나 기타 중요부분에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고 전적으로 민간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였다는 점.

셋째, 우리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중요요인이 되고 있던 전력, 석탄, 연료등 애로부문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로 이를 타개 함으로써 다른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주었다는 점.

넷째, 농림부문에 있어 어려운 자연 조건을 극복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한 점.

다섯째, 유희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를 거둔 점.

여섯째, 5개년 계획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손을 댄 현실화 개방정책(금리현실화, 무역자유화, 변동환율제 등)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민이 계속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수출증진은 물론 외화획득으로 자립경제 확립과 풍요사회 건설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한국의 경제건설의 전망은 밝은

것이나 그 결실은 역시 노력에 의하여서만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로 우리의 통일원칙과 관련하여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국가안보체제의 확립이다. 즉 국가안보를 위한 자주적 국방능력의 배양이다. 자주국방능력의 배양을 통한 국가안보체제의 확립은 앞서 예거한 여건인 국가동일성 양양, 자립경제 성장 그리고 앞으로 설 명할 국제관계의 향상 등과 떼어놓을 수 없는 함수관계를 이루고 있다.

평화적 통일과업 수행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나가기 이전에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하는 여건으로서 안보체제 확립을 증대 시 하는것은, 70년대를 맞은 전환기적 상황에서 북괴는 소위 70년대를 「결정적 시기」로 못 박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호언 하며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고, 한편 이른바 「닉슨 독트린」의 직접적인 과묵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보태세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시키는 미국은 모든 분쟁해결의 비미국화라는 원칙아래 이 지역에서 후퇴를 서두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주국방 능력의 배양이라는 시급한 과업을 눈앞에 놓고 있는 것이다. 국군장비의 조속한 현대화가 시급히 요청되며 군수산업의 육성, 예비군 동원체제 확립 등의 문제가 당장 제기 된다. 여기에서 경제건설을 아울러 병행시켜야 할 우리의 경우 참으로 힘에 겨운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금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일반 재정규모 4,343억원 중 국방비가 23.5%를 차지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지출인 투융자는 32.3%를 점하는 바, 건설하며 국방하는 우리 정부예상의 성격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막대한 국방비 보조를 미국으로 부터

받아오고 있었지만 이제 국방비 부담증액논의 접차로 머리를 들고 나오고 있다.

경제건설에의 우리의 재정투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주국방태세를 수립하는에는 전 국민적인 안보태세 확립도 중요하고 효율적인 안보외교의 전개 등으로 새로운 정세변화에 즉응하는 창의적 안보체제의 확립이 시급한 것이 된다.

다섯째로 우리가 바라는 민주승공의 평화적 통일 여건으로서 우리는 국민의 정치적 능력 배양을 빼 놓을 수 없다. 앞서도 민주역량의 배양과 관련하여 민주주의의 우수성을 입증 방어할 수 있는 능력배양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민주승공의 평화적 통일은 그 절차에 있어서 광범위한 남북간의 정치적 대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같은 정치적 대결은 통일과정에서도, 통일후에 가서도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점에서 자유진영이 공산진영을 도처에서 휩쓸만한 정치적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필수적 여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정치적 능력이란 광의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것은 자유민주사상에의 투철성에서 시작하여 집단조직능력, 집단지도능력, 집단사고능력, 합리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강력하고 효과적인 의사표시능력, 사회문제 분석력 등을 포함한다. 대결현장에서 말주변도 없이 어물어물 댄다면 곤란할 것이며 이론적으로 공산주의의 모순성을 분석 비판해 낼 수 없다면 결과는 패배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둘론 한나라의 정치역량이란 군사력, 경제력, 문화적 수준 등 넓은 배경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통일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대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몇십년간이나

다른사상체계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도처에서 벌리게 될 개인 대 개인, 혹은 집단 대 집단의 대결장에서 개개인이 소유하는 정치능력의 누적효과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학교교육에서나 학교밖의 교육에 있어서나 허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우리의 문화풍토속에는 그것이 학교이든 일반생활장면이든 좀 더 지적분석에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하겠고 세련된 집단활동을 배울수 있는 기회를 넓게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여건은 외교능력의 배양을 통한 국제협력 체제의 확립이다. 우리민족의 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한국의 독립이 강대국들의 국제권력정치에 희생되어 분단의 비극을 맛보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통일이 어디까지나 우리민족의 과업이면서도 국제정치의 영향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을 동시에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분단에 관한 토의에서도 언급했듯이 국제정치의 움직임은 분단국들의 분단상태를 현실화하고 이를 국제적 차원에서 동결, 고정화 하려는 경향을 짙게 나타내고 있다. 이제 중공이 자유중국을 몰아내고 유엔에 가입 하였고 유엔내의 세력구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종래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겪어 온 핵심문제인 남북한 동시초청안이 앞으로는 우리의 뜻대로 해결될 것이냐가 우려되며 과거 오랜동안 계속 확인된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라는 유엔통한안의 수정도 불가피한 것이 될지 모르겠다.

이와같은 정세하에서 이미 정부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대우방 외교는 물론 대중립국 외교를 적극적

으로 전개하여 우리를 지지하는 유엔회원국들의 수를 보다 많이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다각적인 통일외교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안보외교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70년대의 우리의 경제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제외교의 적극적 전개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이와같은 적극외교의 필요에 적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비적성 공산국과의 통상의 길을 트기 시작하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는 복잡하고 격변하는 70년대의 국제정세 속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다듬어 새로이 전개되어가는 국제정치 질서속에 스스로의 위치와 방향을 정립하고 자기확장적 적극외교로서 우리의 자주적 경제발전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자주적 국가안보 체제를 굳힘과 동시에 우리가 진실로 염원하는 방향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일에 우리는 창의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개관한 통일원칙과 여건은 개인으로 혹은 집단으로서의 우리의 나아갈 길을 명확히 시사해 준다.

첫째로 우리는 확고한 민족적 국가동일성을 확립하여 민족국가로 일차적인 준거집단으로 삼는 보편정신을 기쁨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우리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에 내면화 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정신적 자세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둘째로 이와같은 우리의 정신적 자세는 공산주의 이론과 그 실제와 그것이 우리나라와 세계질서에 끼칠 해독에 대해서 근거있게 비판해 낼 수 있는 훈련된 지적능력을 갖추으로써 사상적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적근거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격변하는 복잡한 국제정세를 예리하게 분석, 파악

함으로써 강력한 설득력을 지닌 통일방안을 수립제시하고 그것을 추진함에 필요한 우리의 정치능력(개인적, 집단적, 국가적) 배양을 국민의 의무로 느끼고 이에 매진하여야 한다.

넷째로 자주적 경제발전, 국가안보체계의 확립, 자기확장적 적극의 교의 효과적인 전개를 위해 우리가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배양하는 한편 우리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이를 책임있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다섯째로 우리는 8.15 선언에서 표명된 우리들의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수립에 있어 책임있게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통일방안에 대한 보다 강력한 국민적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민족적 일체감을 가지고 통일과업 추진대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교수방법

본 주제에서 취급되어야 할 내용자료들은 광범위한 것이며 대부분 전 주제들에서 취급된 내용들이 반복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국가동일성과 관련된 자료는 본지침서 제1부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고, 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민주적제도와 과정」 그리고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등에서 취급된 내용을 간추려 그 요지를 지적하고 공산주의와 비교하여 민주주의의 장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북괴의 도전의 양상에 대한 것 역시 전 주제에서 취급된 내용을 요약하여 그 요지를 재인식 시킬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산주의 비판 및 민주·공산 대결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 제3부, 4부는 우리의 통일방안

수립을 위한 통찰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주제의 취급에 있어서 특별히 유의할 것은 설교나 주입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의 지적분석을 통한 그들 스스로의 통찰력 발휘를 추구할 것이며 그들의 주체적 사고와 판단을 통한 의지의 결정에 특히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수준이 높아 질수록 이와같은 지적 분석적 접근은 큰 교육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주제의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활용되어야 할 실증적 자료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북괴의 무력 적화통일정책을 폭로함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를 위시해서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우월성을 확인시키는 자료도 수집, 제시되면 좋다. 내용개요에 우리의 경제성장의 추세를 보이기 위한 <표>를 제시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적은 예시에 불과하고 더 많은 자료가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제시는 민주 승공통일의 가능성과 자유, 민주, 사상에 대한 우리의 국력의 신장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학습자로 하여금 민주승공통일에의 신념을 고취하고 자신감을 갖게하며 국가영광관을 높여 승공통일에의 과업에 자진 참여하는 의식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3 참고문헌

1. 국토통일원, 민주통일의 길, 서울인씨주식회사, 1970, PP. 85-93.
2. 국토통일원, 분단국가의 제문제, 대한공론사, 1971 (PP. 15~30 “국토통일과 우리의 과제”) (PP. 69~82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 ③ 국토통일원, 국토농일, 대한공론사, 1970.7. PP.15~17
 “국토통일과 우리의 자세” 1970.9. 제3호, PP.9~12
 “통일의식과 우리의 자세 확립” PP.23~25, “북괴도발행동과
 우리의 자세” 1970.12. 제6호 PP.13~17, “국토통일과 반
 공정신의 생활화” 1971.4. PP.38~41. “반공통일을 위한
 교육체계” 1971.5. PP.5~19, “북괴의 자유진영 침투현황과
 방법에 대한 분석”.
- ④ 오천석, 민주주의의 참된 모습,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8,
 PP.149~173.
- ⑤ 국토통일원, 분단국가의 제문제, 대한공론사, 1971. PP.15~30.
 “국토통일과 우리의 과제” PP.39~50. PP.64~68.
 PP.69~82.
- ⑥ 金正明, 韓國統一への道, 東京:予書房, 1968. PP.1~30.
 PP.102~118
- ⑦ 白行傑, 兩端된 國家의 統一問題, 대한공론사, 1968.
 PP.81~134. PP.168~207.